

정책보고서 2007-66

#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이삼식 박종서 윤홍식  
조영태 김필숙 최은영  
신윤정 오영희 김수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 머리말

우리나라는 인구변천이론 상 저출산·저사망의 후기균형상태에 접근하고 있다. 출산율은 1983년 이래 이미 20여 년 동안 인구대치수준 이하에서 지속되어 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0에 근접하여 세계적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초저출산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불균형은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력 부족 및 노동력 고령화가 심화되고,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가 장기간 진행된다면 사회 전반에 활기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이 변화하여, 그 결과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출산 기피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가치관 변화를 유인하고, 실제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복잡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가정의 양립 곤란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하고,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직장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많은 여성이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인프라 부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자녀양육비용 부담이다.

저출산현상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책들만으로 개인의 출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늘어나는 사회부담을 무한정으로 해소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현상 지속과 사회부담 증가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저출산현상에 따른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

년부터 저출산현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법적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시행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증가하였다.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에서 2006년에 1.1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25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기간 출산율이 감소세에 있었던 만큼, 최근 출산율 증가의 원인은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국가나 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출산율 변동원인 분석과 즉시적인 정책적 반응을 위한 출생통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출산율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제1부 그리고 출생통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각각 다루기로 한다. 이들 주제는 영역과 수준(level)이 다르고 상호 인과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두개의 부(部)로 구성하였다.

본 보고서가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의 노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학계,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관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T/F팀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 준 본 원의 조남훈 박사와 장영식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 목 차

요약 .....	17
제1부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 원인 분석 .....	43
제1장 서론 .....	45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45
제2절 연구내용 .....	48
제3절 연구방법 .....	49
제2장 외국의 출산율 증가 원인에 관한 고찰 .....	55
제1절 프랑스 사례 .....	56
제2절 스웨덴 사례 .....	60
제3절 일본 사례 .....	66
제4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	70
제3장 인구학적 요소와 2006년 출산과 관련성 .....	73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	73
제2절 혼인력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	77
제3절 결혼시기와 출산시기 .....	88
제4절 2006년 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결과의 함의 .....	96

제4장 경기변동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	98
제1절 거시적 접근: 거시경제 흐름과 혼인 및 출산 동향 .....	98
제2절 미시적 접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	125
제3절 2006년 출산에 관한 경기변동의 시사점 .....	132
제5장 정책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	134
제1절 자료 및 분석방법 .....	135
제2절 주요 분석결과 .....	140
제3절 정리 및 정책함의 .....	156
제6장 사회문화적 요인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	163
제1절 분석 개요 .....	163
제2절 사회문화적 요인과 2006년 출산 행태 .....	164
제3절 사회문화적 요인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	167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171
제1절 2006년 출산증가 원인 종합 .....	171
제2절 2006년 출산증가 원인의 함의 .....	177
제2부 출생통계시스템 개선 연구 .....	183
제1장 서론 .....	18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85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86

제2장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 현황 분석 .....	188
제1절 출생신고체계 및 관리시스템 .....	188
제2절 출생신고 내용 구성 .....	192
제3절 출생통계 작성 및 발표 .....	197
제3장 외국의 출생통계시스템 사례 .....	203
제1절 출생신고 체계 .....	203
제2절 출생신고 내용구성 .....	206
제3절 출생통계 작성체계 .....	220
제4절 출생통계 활용 .....	223
제4장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 개선방안 .....	226
제1절 출생신고체계 개선방안 .....	226
제2절 출생통계 내용 개선방안 .....	230
제3절 출생통계 활용 개선방안 .....	239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	244
참고문헌 .....	246
[부록 1] 2006년 출산동향조사 결과분석표 .....	252
[부록 2]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표 .....	311

## 표목차

〈표 1-1- 1〉 2006년 출산가구 표본추출 및 조사응답율 .....	52
〈표 1-1- 2〉 2006년 출산동향조사 대상(응답자)의 특성 .....	53
〈표 1-2- 1〉 한국, 일본, 스웨덴 및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60-2005 .....	55
〈표 1-3- 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6 .....	75
〈표 1-3- 2〉 가임기여성의 결혼규모 및 결혼률 변동 추이 .....	78
〈표 1-3- 3〉 가임기(15~49세)여성의 초혼·재혼건수, 초혼비율 및 평균초혼연령 변동 .....	80
〈표 1-3- 4〉 우리나라 여성의 이혼건수 및 조이혼률 .....	82
〈표 1-3- 5〉 2004~2005년간 출산율 변동의 인구학적 요소분해(decomposition) .....	86
〈표 1-3- 6〉 2005~2006년간 출산율 변동의 인구학적 요소분해 .....	87
〈표 1-3- 7〉 부모 동거기간별 출생아 분포 .....	88
〈표 1-3- 8〉 모의 결혼경과기간별 출생아수 분포 .....	89
〈표 1-3- 9〉 결혼경과기간별 첫째아 출산 분포 .....	90
〈표 1-3-10〉 연도별 둘째아 이상 출산의 결혼 후 경과기간별 분포 .....	91
〈표 1-3-11〉 2006년 출산여성의 직전아 출산시기 .....	92
〈표 1-3-12〉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계획출산 여부 .....	93
〈표 1-3-13〉 연도별 출생아수의 월별 분포와 차이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 .....	94
〈표 1-4- 1〉 혼인율과 연령간의 상관계수 .....	103
〈표 1-4- 2〉 혼인율과 연도간의 상관계수 .....	103
〈표 1-4- 3〉 혼인율과 당해 경제변수간의 상관계수 .....	104
〈표 1-4- 4〉 혼인율과 1년 전의 경제변수간의 상관계수 .....	104
〈표 1-4- 5〉 남성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	106
〈표 1-4- 6〉 여성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	109



〈표 1-4- 7〉 출산율과 연령간의 상관계수 .....	112
〈표 1-4- 8〉 출산율과 연도간의 상관계수 .....	112
〈표 1-4- 9〉 출산율과 경제변수간의 상관계수 .....	113
〈표 1-4-10〉 남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모형 .....	114
〈표 1-4-11〉 출산년도 1995~1997, 1998~2001, 2002~2005를 구분한 회귀분석결과 .....	116
〈표 1-4-12〉 여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모형 .....	118
〈표 1-4-13〉 연령집단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	121
〈표 1-4-14〉 출산시기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	124
〈표 1-4-15〉 2006년 출산여성의 경기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	127
〈표 1-4-16〉 경기 상황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여부 .....	129
〈표 1-4-17〉 경기상황 인식이 출산이행(1→2자녀)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	130
〈표 1-4-18〉 경기상황 인식이 출산이행(2→3자녀)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	131
〈표 1-5- 1〉 2006년 출산여성의 정책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 .....	141
〈표 1-5- 2〉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 2006년 출산자와 비출산자 .....	142
〈표 1-5- 3〉 성별분담에 관련된 차이: 2006년 출산자와 비출산자 .....	144
〈표 1-5- 4〉 출산양육지원정책 수혜(경험)여부: 2006년 출산자 대 비출산자 .....	147
〈표 1-5- 5〉 출산양육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2006년 자녀출산 요인 분석: 2006년 둘째자녀 출산 가구 대 비출산 가구 .....	150
〈표 1-5- 6〉 출산양육관련 정책지원과 2006년 자녀출산 요인 분석: 2006년 셋째자녀 출생 .....	155
〈표 1-6- 1〉 부부간 가사분담에 따른 2006년 출산 이행 .....	164
〈표 1-6- 2〉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태도 .....	165
〈표 1-6- 3〉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2006년 출산결정에 미친 영향 .....	166

〈표 1-6-4〉 부부간 육아분담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	168
〈표 1-6-5〉 부모의 육아 지원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	170
〈표 2-2-1〉 출생증명서 양식 .....	194
〈표 2-2-2〉 현행 출생신고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196
〈표 2-3-1〉 일본 출생신고서 .....	210
〈표 2-3-2〉 미국의 출생신고서(콜로라도주) .....	211
〈표 2-3-3〉 영국의 출생신고서 .....	213
〈표 2-3-4〉 캐나다의 출생신고서(온타리오주) .....	215
〈표 2-3-5〉 호주의 출생신고서 .....	216
〈표 2-3-6〉 프랑스의 출생신고서 .....	218
〈표 2-3-7〉 출생신고시 가입 안내 내용: 일본 사례 .....	224
〈표 2-4-1〉 외국의 출생신고시스템 형태 비교 .....	227
〈표 2-4-2〉 우리나라 출생신고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국내 일부 전문가의 의견 .....	229
〈표 2-4-3〉 출생신고항목 국제 비교 .....	231
〈표 2-4-4〉 전문가들이 제시한 출생신고 추가항목 .....	233
〈표 2-4-5〉 각 국의 출생 통계 발표 시기 .....	240
〈표 2-4-6〉 인구동태신고시스템 상 신고누적기간에 따른 출생아수 차이 .....	242
〈부표 1-1〉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산순위 .....	252
〈부표 1-2〉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출산순위 .....	253
〈부표 1-3〉 2006년 출산가구의 경제적 특성별 출산순위(계속) .....	254
〈부표 1-4〉 직전출생아의 성구성별 최종출산아의 성별 .....	255
〈부표 1-5〉 2006년 출산여성의 직전아 출산시기 .....	255
〈부표 1-6〉 2006년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 .....	256
〈부표 1-7〉 자녀가치관과 2006년 출산행태 .....	256

〈부표 1- 8〉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	257
〈부표 1- 9〉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	258
〈부표 1-10〉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	259
〈부표 1-11〉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	260
〈부표 1-12〉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	261
〈부표 1-13〉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	262
〈부표 1-14〉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	263
〈부표 1-1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	264
〈부표 1-1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	265
〈부표 1-1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	266
〈부표 1-18〉 2006년 출산여성의 기대자녀수 변화별 출산순위 .....	267
〈부표 1-19〉 2006년 출산여성의 기대자녀수 변화별 출산유형 .....	267
〈부표 1-20〉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	268
〈부표 1-21〉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	269
〈부표 1-22〉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육아분담 형태 .....	270
〈부표 1-23〉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육아분담 형태 .....	271
〈부표 1-24〉 부부간 가사분담에 따른 2006년 출산 이행 .....	272
〈부표 1-25〉 206년 출산여성의 성역할가치관 .....	272

〈부표 1-26〉 성역할가치관과 2006년 출산행태 .....	273
〈부표 1-27〉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모 동거 여부 .....	274
〈부표 1-28〉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부모 동거 여부 .....	275
〈부표 1-29〉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모의 육아도움 여부 .....	276
〈부표 1-30〉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부모의 육아도움 여부 .....	277
〈부표 1-31〉 부모의 지원에 따른 2006년 출산 이행 .....	278
〈부표 1-32〉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계획출산 여부 .....	279
〈부표 1-33〉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상태변화별 계획출산 여부 .....	280
〈부표 1-34〉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상태 변화별 계획출산 여부 .....	281
〈부표 1-35〉 2006년 출산중단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중단이유 .....	282
〈부표 1-36〉 2006년 출산중단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중단이유(계속) .....	283
〈부표 1-37〉 2006년 출산연기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연기이유 .....	284
〈부표 1-39〉 2006년 출산여성의 경기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86
〈부표 1-40〉 경기 상황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여부 .....	287
〈부표 1-41〉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책 영향 .....	288
〈부표 1-42〉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정책 영향 .....	289
〈부표 1-42〉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정책 영향(계속) .....	290
〈부표 1-43〉 2006년 출산여성의 정책적 영향 여부별 기대자녀수 변화 .....	290
〈부표 1-44〉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태도 .....	291
〈부표 1-46〉 2006년 출산아 양육 관련 가장 어려운 점 .....	293
〈부표 1-47〉 2006년 출산아 양육 관련 가장 어려운 점 .....	294
〈부표 1-48〉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	295
〈부표 1-49〉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계속) ..	296
〈부표 1-50〉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	297
〈부표 1-51〉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계속) ..	298
〈부표 1-52〉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	299
〈부표 1-53〉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계속) ..	300

〈부표 1-54〉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301
〈부표 1-55〉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계속) .....	302
〈부표 1-56〉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한다 .....	303
〈부표 1-57〉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한다(계속) .....	304
〈부표 1-58〉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	305
〈부표 1-59〉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계속) .....	306
〈부표 1-60〉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	307
〈부표 1-61〉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계속) .....	308
〈부표 1-62〉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	309
〈부표 1-63〉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계속) ...	310

## 그림목차

[그림 1-1-1] 연구의 기본분석틀(basic analytical framework) .....	48
[그림 1-2-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 대책 도입 시기 .....	57
[그림 1-2-2]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1970-2006 ...	62
[그림 1-2-3] 스웨덴의 경기변동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1970-2006 .....	63
[그림 1-2-4] 스웨덴의 합계출산율과 사회정책간의 관계 .....	65
[그림 1-2-5] 일본의 합계출산율 및 경기변동간의 관계, 1970~2006 .....	69
[그림 1-3-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	76
[그림 1-3-2] 가임기(15~49세) 여성의 결혼규모 및 결혼률 .....	77
[그림 1-3-3] 가임기(15~49세) 여성의 초혼 및 재혼 비율 변동 추이 .....	81
[그림 1-3-4] 연령별 이혼건수 변동추이, 1995~2006 .....	83
[그림 1-3-5] 주된 출산연령층(25~39세) 여성인구의 변동 추이 .....	85
[그림 1-3-6] 연도별 출생아수의 월별 분포 .....	95
[그림 1-7-1] 우리나라 실질GDP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변동 추이 .....	178
[그림 1-7-2] 한국, 일본, 스웨덴의 경기변동과 출산율 .....	180
[그림 2-2-1] 출생신고 정보관리체계도 .....	191
[그림 2-2-2] 동사무소-구청의 웹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을 통한 통계집계과정 ...	198
[그림 2-2-3] 읍면사무소-군청의 웹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을 통한 통계집계과정 ...	199
[그림 2-3-1] 일본의 인구동태조사출생표 수집체계 .....	221
[그림 2-4-1] 국가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비교 .....	241

## 요약

### 제1부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분석

#### 1. 서론

##### 가.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2.1명)에 도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감소. 그러나 출산율이 2006년에 1.13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출산율은 1.25 수준으로 추정
  - 1960년 이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에 출산율이 급락하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
-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에 대한 설명은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에 입각한 방식과 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에 입각한 방식으로 구분 가능
  - 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가족부양기능 변화 등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출산율이 감소함을 주장
  - 후자는 한국사회에서 유교주의의 전통적인 사고관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산을 모든 남녀의 중요한 의무로 여겼으나, 이후 서구의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의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대체된 결과로 출산율이 감소함을 주장
  - 한편 경기 변동은 가구소득에 영향을 주며, 이는 가족 형성 결정에 영향을 미침. 거시적 요소의 다른 예로 여성의 해방과 개별화같은 문화적 가치도 포함.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도 출산율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본 연구는 최근 출산율 변동의 원인을 인구학적 요인 이외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2006년 출산 증가가 장기 추

이에서 어떠한 변곡점을 갖는가를 진단

-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에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감소한 후,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선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 비교 분석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 제시
-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출산율 상승의 원인이 명백하게 규명될 경우,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적기 개선 내지 전환 가능
- 정책의 사업목표와 투입규모를 적기에 명료화하여 비용효과성 제고에 유용 기대

#### 나. 연구내용

- 출산수준 변화 측정
  - 지난 10년간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수준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주된 특징 진단
  - 이러한 변동 추이에서 2006년 출산수준(출생아, 합계출산율) 증가의 위치와 연계흐름 진단
- 인구학적 구조 분석
  - 가임여성인구 구조, 결혼 등의 인구학적 요소의 변동 추이와 그 특성 분석
  - 출생아수 변화를 인구학적 요소별로 분해(decomposition)하여 기여도와 방향성 측정
- 출산 변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소의 영향 진단
  - 경제적 요소로 경기 상황, 정책적 요소로 저출산대책, 사회문화적 요소로 남성의 육아참여와 다출산의 사회분위기 각각이 혼인 혹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 － 회귀분석(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포함) 등 심층통계기법 적용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제언



## 다. 연구방법

- ☐ 문헌조사 연구
- ☐ 인구동태통계 시계열 분석
  - 통계청 혼인통계 및 출생통계 1995~2006년 자료(원자료) 심층 분석
- ☐ 2006년 출산 여성(가구) 표본조사
  - 2006년 출산가구(완료 1,903가구) 및 일반가구(완료 694가구) 대상 전화조사 실시
- ☐ T/F팀 운영 및 세미나 개최
  - 보건복지부에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을 위한 T/F팀 운영
    - －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담당관, 서울대, 전북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등 구성

## 2. 외국의 출산율 증가 원인에 관한 고찰

### 가. 프랑스 사례

- ☐ 합계출산율은 1970년 2.47에서 1995년 1.7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 2006년 2.01명까지 다시 증가
- ☐ 출산율 회복세는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저출산대책들의 장기적·종합적 추진 결과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
  - 공공보육 지원,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제공 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가족정책 실시
  - 셋째아 정책(third policy) 등 대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취학자녀를 둔 가족 등 특정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확대
  - 세금감면, 연금 크레디트제도 등 간접적인 혜택의 적용 확대
  -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관용성을 토대로 각종 지원 확대

#### 나. 스웨덴 사례

- 스웨덴의 출산율은 여성의 노동참여 등으로 인하여 1970년대 말 1.6명까지 감소
  - 1980년대는 경제성장시기로 여성의 노동참가율 상승, 부모휴직기간, 아동수당, 공보육 확충 등 가족정책 대상 및 범위 확대는 자녀양육비용을 경감시키고 일-가정양립 수준을 높여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1980년대에 경제성장과 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로 출산율이 증가하여 1990년에 인구대치수준 도달
- 1990년대에 경제가 1930년 경기침체 이후 최악 상태를 겪으면서 출산율이 1999년에 1.52명까지 감소
  - 고용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계약직 증가 등)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일을 찾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의지 감소
    - 특히 여성 소득이 가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맞벌이가정에서 급격한 실업 증가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출산율 감소 작용
  - 당시 저생산·고실업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부모휴직의 소득대체율, 보육의 질 저하, 아동수당 감소 등 가족정책 범위 축소는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출산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 출산율은 1999년 이후 여성노동참가율과 동반 회복되었으며, 2006년에 1.85까지 상승
  - 실업률은 1990년 10%에서 2006년 5%로 급락하였으며, 여성의 노동참여는 7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
  -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지출은 2001년 기준으로 GDP대비 2.9%로 OECD평균을 상회
- 이와 같이 스웨덴의 출산율은 경기, 고용, 정책 등과 맞물려 물러코스트적 변동
  -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에는 임금 인상과 경제사회안정대책 등이 나타나고, 복지 수준이 증대되고 새로운 정책적 관심이 증가

- 이에 따라 자녀양육비용이 감소하고, 출산율도 자극을 받게 됨.
- 그러나 경제불황기에는 임금 성장이 없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복지수준이 감소하여 불안정화
  - 그로 인하여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이 증대하여 출산율이 감소
  - GDP성장률과 출산율은 약 6년간 시차(time-lag)를 두고 변화하나, 장기적으로 코호트출산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수준이하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출산수준이 변화하기보다 여성들이 소득과 혜택을 최적화함으로써 출산시기 및 간격이 이동한 것에 불과
- 출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 요소는 정부의 노력으로 간주
  - 스웨덴은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및 양성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단위의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
    -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1970년대부터 휴직제도, 부모보험제도, 아동수당, 보편적 공보육 등 각종 가족정책들을 도입
    -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완비하여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
    -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여부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

#### 다. 일본 사례

-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본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혼인건수 및 결혼률 감소가 출산율 감소를 주도
  -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출산율은 더욱 하락
    - 경기 불황으로 인해 여성 고용율이 낮아지고, 만혼화 경향이 증가하여 출산율 감소
  - 1980~1990년 기간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에 의한 고용기회 확대

로 성 평등의식이 증가하여 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였기 때문

- 1989년 출산율이 1.57까지 낮아져 이른바 ‘1.57쇼크’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정부는 1994년 엔젤플랜을 공표하여 일과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강조

□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 출산율은 더욱 감소

- 1990년대 중반 이래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평생직장 보장’이 사라지면서, 여성의 출산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간주
  - － 장기적 경기불황은 여성의 노동상태에 변화를 가져와 경영·관리직이나 파트타임직의 취업이 중단
  - － 경기불황은 임금노동자의 출산행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고용불안은 여성교육 연장과 함께 만혼화를 증가시키는 역할
-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 12월에 신엔젤플랜(1999-2004)을 공표
  - － 2000년 5월에 육아휴직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임금의 40%까지 상승하였으며, 아동수당은 3세 이하(1991년 개정)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대상 확대
- 2002년 9월에 ‘the Measures for Decreasing Children Plus One’을 발표하여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2004년 12월에 신신엔젤플랜(2004-2009)을 발표, 아동보육 지원과 성평등실현을 주요과제로 설정
  - － 젊은이의 경제적 독립을 중요시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보육 시설 장려, 젊은이의 취업 경험기회 확대 등

□ 최근의 출산율 상승(2005년 1.26 → 2006년 1.32)은 ‘경기 회복’에 기인

- 후생노동성은 경기 회복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 및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증가하고,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고용이 안정(남성고용자, 정사원 증가 등)되어 20~30대에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니혼게이지신문에 의하면, 출산율 증가는 경기회복으로 고용 사정이 좋아지면서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생)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 일본에서 GDP성장률과 출산율간에 약 4년간의 시차(time-lag) 존재

#### 라. 외국사례의 시사점

-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나 고용 수준의 변동이 여성개인의 반응과 행태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경기나 고용 추이와 연동하여 나타남.
  - 정책도 거시적인 행위주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나 고용 등 다른 거시적인 요소들과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개인의 미시적인 출산행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사회기반(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의식 변화 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경기변동 등의 충격이 가구에 완화되어 나타남.
  - 역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사회체제일수록 경기 등의 외부적 영향에서 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음.
  - 사회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될 때 정책의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사회문화는 그 자체적으로 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고용, 가족정책 등 다른 거시적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개인의 출산행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이상의 외국사례 고찰 결과
  -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 요소로는 국가발전, 경기변동, 정책, 양성평등, 문화적 가치 등이 포함
  -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소로는 가구의 경제력과 양육 비용, 결혼, 이혼, 동거 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노동력 수준) 등이 포함
  - 따라서 2006년 출산 증가의 원인은 이들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요소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규명 가능

### 3. 인구학적 요소와 2006년 출산과 관련성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로 표기)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1.6 내외에서 다소 안정적 유지
  -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출산율은 1.47로 처음으로 1.5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1999년 1.42, 2000년 1.47로 다소 안정세 유지
  - 출산율은 2001년(1.3)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1.1 수준 유지
  - 출산율은 2005년 0.08에서 2006년 1.13으로 다소 증가
- 2006년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가임기여성(15~49세) 규모와 결혼으로 구분
  - 가임기여성(15~49세)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1996~2006년)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들의 결혼은 2003년을 저점으로 증가
  -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 － 20~24세의 경우 여성규모와 결혼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 － 25~29세의 경우 여성규모는 2005년을 그리고 결혼은 2004년을 저점으로 증가
    - － 30~34세의 경우 여성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결혼은 지난 10년간 2배 증가
    - － 35~39세의 경우, 여성규모는 소폭 증가한 반면, 결혼은 지난 10년간 3배 증가
  - 초혼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였던 것이 2004년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
    - － 25~29세 여성의 초혼은 2004년 이래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30대 이상 여성의 초혼은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증가폭이 더 큼)
    - －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6년 25.5세에서 2003년 27.3세로 매년 0.2~0.4세씩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증가폭이 감소(2005~2006년 0.1세 증가)하여 만혼화 현상 둔화
  - 1997년 외환위기 이래 급격한 증가하였던 이혼은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재혼도 증가하여 최근에 가족이 안정화

-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 2006년 출산 중 83.0%가 계획되었으며, 10.4%는 연기 중(이하 ‘연기중출산’으로 표기) 그리고 6.5%는 중단 중(이하 ‘중단중출산’으로 표기)에 출산
  - 2006년도 출산 중 출산시기 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출산증가분(계획 또는 연기)이 순수한 출산증가(중단중출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출산순증가는 약 7% 수준
- 2006년 ‘쌍춘년’ 효과가 2006년 출산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효과는 이후에 발생 가능
  - 2006년 출생아 중 당해연도에 결혼한 비율은 6.8%로 과거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고, 월별 출생아수 분포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2005~2006년간 연령별출산율 변화를 여성규모, 결혼 등으로 분해한 결과
  - 20대 초반에서는 여성규모(분모)가 감소하고 결혼도 누적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출생아수(분자)가 감소하였으며, 출생아수 감소가 여성규모 감소폭보다 상대적으로 커 출산율도 감소
  - 25~29세의 경우, 2006년에 여성규모와 결혼 모두 증가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결혼 감소가 누적된 결과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출산율은 감소
  - 30~34세의 경우, 여성규모가 감소한 반면 결혼이 누적적으로 증가한 결과, 출생아수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상승
  - 35~39세의 경우, 여성규모가 증가한데다가 결혼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출생아수가 증가하였으며 출산율도 상승
  - 요컨대, 2006년 출산 증가에 30대여성은 양(+)방향으로 그리고 20대여성은 음(-)방향으로 기여하되, 30대 기여도가 20대 기여도보다 상대적으로 커 전체 출산율 증가
- 2006년 출산과 인구학적 요소간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결과의 함의
  - 2006년 출산 증가는 가임기여성의 연령구조보다 결혼(율)이 직접적 영향
    - － 특정연도에서의 결혼 증가보다 그전 수년동안 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

- 특히 최근 초혼건수 증가는 그동안 연기되었던 결혼이 활발해졌기 때문
- 이혼 감소에 따른 가족안정화와 재혼 증가는 총합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가임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출산력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
- 연기되었던 출산이 최근에 이행되었으며, 중단 후 추가 출산의 이행도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쌍춘년’ 효과가 2006년 출산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효과는 이후에 발생 가능

#### 4. 경기변동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 가. 거시적 접근: 거시경제 흐름과 혼인 및 출산 동향

-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혼인과 출산율이 연령과 기간을 통제한 후에 경제변수들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
  - 본 분석은 경제변수를 혼인의 경우 혼인시점과 1년 전의 상황, 그리고 출산의 경우 1년 전과 2년 전의 경제상황과의 관련성에 초점
- 거시적인 접근 결과, 남녀 혼인율이 2002년 이후 크게 감소한 추이에 대해 경제성장을 변화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제성장률은 기업과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남녀 대졸자 모두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었을 경우 다음해의 혼인율을 크게 높였고, 소비자물가가 높았을 때 혼인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침.
    - 요컨대,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당해연도와 1년 전의 경기 상황이 남녀의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출산율 변동에 대해 경제변수들의 영향력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
  - 경제성장률의 효과는 남성에게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반면 여성에게서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1년 뒤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은 주로 30~32세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반면 26~29세에게는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했고,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우 고용사정이 나아지면 이듬해 출산이 증가
  - － 여성 전체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때 1년 뒤의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 높은 경제활동참가(특히 대졸자의 경우, 모든 연령층)가 1년 뒤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 발생

#### 나. 미시적 접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 거시적인 접근은 경제성장률, 고용율, 혼인율, 출산율 등 총합적인 수준의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대한 가구나 개인(여성)의 체감도를 반영하는데 미흡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경기상황이 실제 여성(가구)의 의사결정과 출산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실시
  - 다범주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을 이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 자료에 적용
- 기술 통계
  - 2006년 출산여성의 16.2%가 경기상황이 2006년 출산이행에 영향 응답
    - － 20대 저연령층,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출산, 취업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다범주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
  - 2006년에 첫째아에서 둘째아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경기상황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경기 상황이라는 외적인 환경요소보다 내적인 것으로 자녀수 선호도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
  - 그러나 셋째아 출산 이행에는 경기 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 이유로는 자녀양육부담 등을 고려할 때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은 어려운 선택일 수 있기 때문으로, 최근의 경기 상황을 보통 이상이라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에 셋째아 출산을 계획하였거나 아니면 이미 둘째아에서 단산을 결정했던 여성(부부)들이 2006년에 셋째아 출산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다. 분석결과 종합

- 이상의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결혼율과 출산율은 경기상황에 의해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2002~2005년 기간에 보다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2006년의 출산 동향을 분석해보면,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추가 출산 이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
  - 결국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변화는 경기와 연동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향후 경기 상황의 호전 정도에 따라 출산율 증가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

#### 5. 정책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 정책이 2006년 출산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
  - t-검증과 Chi-square 검증, 그리고 Fisher's Exact 검증 방식을 이용해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 2006년 출산과 지원 정책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적용
- 주요 분석 결과
  - 둘째 또는 셋째 자녀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전 출생아 또는 첫째자녀의 연령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성의 연령 보다는 결혼 시기 또는 첫째자녀 출생시기가 출산행위와 더 연관
  - 2006년 출산여부와 성별분담상태와의 관련성은 출생자녀의 순위에 따라 상이
    - 출산 전 모의 취업과 이인생계부양자 여부는 둘째자녀 출산 분석에서는 출산

집단과 비출산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셋째자녀 출산과는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양육전담, 가사전담 등의 변수는 두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 정책 지원 경험과 관련되어서는 영유아보육지원정책, 방과후보육지원정책 등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발견
- 정책지원과 자녀출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모든 모형에서 영유아보육지원과 2006년 자녀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 방과 후 보육 지원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변수와 조세지원변수(2006년 셋째아동출산에만)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2006년 아동출산과 부적 관계
  - 셋째 자녀 출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둘째 자녀 출산과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 정책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지원 등과 같은 변수들이 2006년 자녀의 추가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상과 지원수준이 너무 열악한데다가 초창기로서 제도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성 존재
- 많은 정책들이 2006년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효과성이 나타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2006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 이들 정책들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또는 지원정도가 너무 낮아 일반 가구에서 체감하기에 미흡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정책별로 출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더 시간을 두고 자료를 축적한 후에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 6. 사회문화적 요인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부부간 육아분담 정도와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2006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방법으로 다범주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 자료에 적용

가. 부부간 육아분담이 2006년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 2006년 둘째아 이행에 관한 [모형1] 결과

- 남편과 육아분담 여성집단이 그렇지 않은 여성집단에 비해 이행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중단중출산, 연기중출산, 계획출산에 공통
  -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남편의 육아 참여가 단산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추가 출산

□ 2006년 셋째아 출산 이행에 관한 [모형2] 결과

- 남편의 육아참여가 2006년에 발생한 중단중출산 이행과 연기된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
- 2006년에 계획된 셋째아 출산에 대한 남편의 육아참여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력
  - 이는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이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남편의 육아 참여만으로 그 이행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 가능
- 이에 따라, 다른 모형이나 출산유형에서와 달리, 여성연령, 거주지, 교육정도 등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 2006년에 급격하게 남편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남편의 육아참여가 둘째아 출산이행에 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최근에 정부가 저출산대책에서 부부간 양성평등적 분업을 강조하고, 여성계 등에서 오랫동안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해 온 노력과 연계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를 통해, 향후 우리사회에서 성평등 증가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점을 찾을 수 있음.

나. 다자녀 출산의 사회분위기가 2006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둘째아로의 이행에 관한 [모형1] 결과
  - 다자녀의 사회분위기는 중단중출산을 증가시키는 영향( $P<0.05$  수준에서 유의미)
    - 연기중출산이나 계획중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
- 셋째아로의 출산이행에 관한 [모형2] 결과
  - 다자녀의 사회분위기는 어떤 유형의 출산이행도 통계적으로 무의미( $P<0.05$  수준)
    - 이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해도, 추가출산의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추가 출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
    - 환언하면, 홍보활동 등에 의한 사회분위기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자녀양육 부담이 국가나 사회에 의해 적절하게 분담되지 않는다면, 사회분위기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

## 7. 2006년 출산 증가 원인과 함의

- 우리나라의 2006년 출산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 경제적 측면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결혼율과 출산율은 경기상황에 의해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2003년 이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2002~2005년 기간에 보다 가중
    - 경기회복의 영향은 3년 후인 2006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시적 분석 결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2006년 추가 출산 이행에 긍정적인 기여
  - 저출산정책 시행기간이 충분히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거나 2006년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 사회문화적으로 다출산 가치관과 남성의 육아 참여도 2006년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불경기를 겪은 스웨덴과 일본의 경우 경기 변동은

일차적으로 고용과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혼과 출산에 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경기-고용-출산의 순환 고리 형성

○ 스웨덴은 매 10년마다의 경기순환시, 출산율은 경기순환과 연동하는 물리코스트 변화

－ 1970년대 중반 경기침체에 출산율이 1.6명까지 하락하였으며, 1980년대 경제회복기에는 2.13(1990년)까지 증가. 다시 1990년대 초 이래 경제위기 시기에는 출산율이 1.52(1999년)까지 감소,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출산율이 1.85(2006년)까지 상승

○ 일본은 1990년 중반 이래 장기적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 보장’이 사라지면서, 출산율이 1.36까지 하락

－ 2002년부터 경기가 회복하면서 약 4년 후인 2006년에 출산율이 1.32(2005년 1.26)로 처음 증가

□ 정책은 이러한 경기-출산의 순환고리에서 충격 완충제로서의 역할 수행

○ 스웨덴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출산율의 변동이 아주 탄력적이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정책적 노력에 의해 양성평등문화에 기초한 자녀양육의 사회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진 데에 기인

－ 경기회복 초기에 여성고용 안정과 가족에 대한 사회투자가 확대,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스웨덴은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불경기에도 출산율의 하락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

－ 이러한 배경에는 보육인프라 확충, 일-가정양립 제고,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 1990년대 초이래 10여 년 동안 저출산대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

－ 지난 약 10년 동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가 경기불황기에도 완충 역할 수행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경향이 강한 사회인데다

가 가족에 대한 사회투자가 극히 미흡한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은 가족생활 영역에 직접적인 충격

-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1.6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출산율은 1998~2000년 기간의 약 3년간 잠복기를 거쳐 2001년부터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로 급락

-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할 자녀양육의 사회안전망이 전혀 구축되지 못했던 결과

- 결론적으로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은 극히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요소(경기, 정책, 사회문화, 세계경제 등)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변동

-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이 외부 충격의 영향에 덜 좌우되면서 안정적인 가족생활 특히, 결혼, 출산, 자녀양육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 도입 등 자녀양육부담의 사회적 분담체계를 공고화하는 사회복지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만으로 출산율 제고에 한계성 존재

- 경기 호전과 정책적 노력을 토대로 가사의 양성평등적 분담, 다양한가족의 포용, 이민자의 통합적 수용 등 사회문화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이 인구대치수준의 출산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구체적으로 성평등적 역할의 가족문화 조성,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
  - 다양한 가족(미혼모·부, 동거부부, 재혼가정 등)에 대한 포용 및 차별 해소, 이민에 대한 사회통합적 수용 필요

## 제2부 출생통계시스템 개선방안

### 1. 서론

- ☐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산율 변동 추이와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됨.
  - 그러나 현 출생통계체계 하에서는 내용측면에서 출산변동원인 파악과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불충분하며, 이용가능시기측면에서는 시의성 부족
-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출생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둬.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 출생신고시스템에 관한 현황 진단을 토대로 개선방안 도출
  - 출생신고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출생통계 발표시기(이용가능시기)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출생신고담당 일선행정기관 담당자 면담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연구방법으로 적용
  - 문헌조사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와 일부 국가의 사례 고찰
  - 출생통계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출생통계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일선 행정기관(읍·면·동, 시·군·구, 시·도)의 담당공무원과 면담
  -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 2.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 현황 분석

#### 가. 출생신고시스템

- ☐ 출생신고는 인구동태신고와 주민행정을 위한 주민등록신고로 구분
  - 출생신고는 호적법(제25조, 제49조)에 의거 출산 후 1개월 이내 부모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나 시·구청에 신고 의무화
  - 신고접수 담당공무원은 출생신고서 상 호적관련 정보를 호적정보시스템(PC)에,



인구동태관련 정보를 인구동태통합시스템(PC)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및 관련 사항을 주민등록시스템(PC)에 각각 입력

- 한명의 출생신고에 대해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분산적 구조

□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은 호적정보시스템, 인구동태통합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의 상호 연관관계로 구성

- 호적정보시스템은 대법원에서,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은 통계청에서, 그리고 주민등록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두면서 각각 관리

#### 나. 출생신고 내용 구성

##### □ 현황

- 출생신고서는 상단의 호적부문과 하단의 인구동태부문으로 구성
  - 호적부문에는 이름, 성별, 혼인중·외, 출생일시, 출생장소,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부모 성명, 신고인 등 포함
  - 인구동태부문에는 부모의 생년월일·직업·최종졸업학교, 결혼연월일, 임신주수, 다태아여부, 출생순위, 신생아체중, 모의 출산수 및 사망아수 등 포함
- 출생증명서는 출생아의 의료적 특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
  - 출생아의 부모의 성명, 연령,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장소와 그 명칭, 출생일시, 임신기간, 출생아 성별 및 성명, 태수, 다태출산 중의 출산순위, 다태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출생, 사산), 산모의 산아수(생존자, 사망자, 사산자), 신생아의 신체상황 및 체중, 출생아의 건강상황 포함
  - 전체 항목 중 임신주수, 다태아여부, 출생순위, 신생아 체중, 모의 출산수 및 사망아수 등의 항목만 시스템에 입력

##### □ 문제점

- 현 항목들만으로는 출산을 변동의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
- 현재 항목으로 산모나 영유아의 보건의료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보건정책

차원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

### 3. 출생통계 작성 및 발표

- ☐ 출생통계는 신고인에서 시작하여 통계청으로 취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
  - 동사무소 또는 시·구청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여 신고서의 정보를 웹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통계청 인구동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 다른 한편으로 매월 입력현황을 지방자치단체 각급 상위기관에 보고
- ☐ 통계청에서는 일정기간(월, 분기 또는 연간)의 신고건수 누적, 이 신고내용(전산자료)에 대한 일정한 자료처리 및 분석 후 공표
  - 해당연도와 다음 해 4월까지 접수된 신고서를 해당 발생연도 기준으로 집계하고, 다음 해 5월 이후에 지연되어 신고된 출생건수는 집계에서 완전히 제외
  - 통계청은 전산입력된 신고자료의 내용을 검토 및 보완
    - － 전산자료의 중복, 누락 및 입력오류를 확인하고 보완 작업 실시
- ☐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연말에 발간하는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를 통해서 발표
  - 보고서 수록 자료를 통계청의 통계데이터베이스(KOSIS)에 수록한 후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에 제공하며 원자료 제한적 제공

### 3. 외국의 출생통계시스템 사례

#### 가. 출생신고체계

- ☐ 일본에서 신고의무자는 출생아의 부모로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와 통합형태) 이외 출생신고관련 사항을 기입하여 출생신고서 작성
- ☐ 미국에서 출생신고는 내과 의사, 조산사 등 출산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부모와 상담하여 표준출생신고서(U.S. standard certificate of birth) 작성 제출

- 출산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 부과
- 영국에서 출생신고는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부 또는 모 모두 가능
  -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부에 관한 정보의 기입 여부에 따라 신고방법이 상이
    -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기관이 출산장소 소유자, 출산장소에 있었던 사람, 아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통해 등록

#### 나. 출생신고 내용구성

- 일본의 출생신고항목은 적출자 여부, 출생일자, 출생지, 부모의 연령(생년월일)과 본적지(외국인의 경우 국적), 결혼일자(동거일자), 부모의 직업, 신고인, 출생시각, 출생장소(병원, 진료소, 조산원, 자택, 기타) 및 시설명, 체중, 신장, 태수, 임신주수, 모의 출생아수 및 사망아수 등 포함
- 미국은 주(州)마다 출생신고서가 다소 차이
  - 콜로라도주의 신고항목은 아동의 출생지, 출생장소와 시설명, 출생일자 및 시각, 조력자와 증명인; 부모의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부와 아이와의 관계, 부모의 인종(미국인, 인디언, 흑인, 백인)과 태생(히스패닉) 및 최종졸업학교, 사회보장번호; 모의 임신력, 결혼여부, 지난월경시작일자, 출생아, 생존아수, 사망아수, 기타임신결과, 산전관리 시작달, 산전관리횟수, 출생아 몸무게, 임신기간, 최종 출생아 출생일자, 최종임신종료일자, 출산형태(다태아여부), 출생순위, 아프가점수, 태아혈액검사일자, 분만전 모의 이송여부, 임신 중 의학적 위험요소, 임신 중 다른 위험요소, 검진절차, 분만시 문제, 분만방법, 영아의 이송여부, 신생아의 비정상 건강상태, 선천적 예외 아동 등 포함
    - － 미국의 출생신고 항목 중에는 보건의료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
- 영국의 출생신고항목은 직업, 주소(본적), 출생장소, 결혼전후 성(모), 모의 재혼여부, 국민건강보험번호, 모의 이전 자녀(출생자녀수, 사산아수), 혼인 중 출산의 경우 결혼일자 등 포함

- 캐나다의 출생신고항목은 부모와 관련해서 연령(출생일자), 주소(본적), 출생장소, 결혼전/후 성(모), 임신기간(주수) 등 그리고 아동과 관련해서 성별, 출생일자, 출생장소, 시설/병원이름, 몸무게, 다태아여부, 출생순위, 사망아(수), 출생아(수), 조력자 등 포함
- 호주의 출생신항목
  - 부모에 관한 연령(출생일자), 직업, 주소, 출생장소, 결혼일자, 태생, 결혼전/후 성(모), 임신기간(주수), 아이와의 관계 등 포함
  - 아동관련 항목으로는 성별, 출생일자, 출생장소, 출생시간, 생존여부, 시설/병원 이름, 몸무게, 조력자, 다른 자녀의 세부사항(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등 포함
- 프랑스의 출생신고항목
  - 부모관련 항목으로 연령(출생일자), 직업, 주소, 출생장소, 결혼일자, 최종출생아출산일자, 국적 등이 포함
  - 아동관련 항목으로는 성별, 출생일자, 출생장소, 다태아여부, 출생아(수), 조력자, 법률상신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출생통계 작성체계

- 일본의 출생통계작성 체계
  - 인구동태조사출생표(届書)는 부 또는 모, 동거인, 입회이사, 조산부, 기타 입회자가 의무를 가지고 발생일 다음 날로부터(발생 익일부터) 7일 이내 시·구·정촌장에 신고
  - 시·구·정 촌장은 접수된 신고의 내용을 기초하여 인구동태조사출생표 작성
  - 시·구·정 촌장은 작성한 인구동태조사출생표를 관할구역 보건소(장)에 송부
  - 보건소장은 시·구·정 촌장이 제출한 조사표를 취합하여, 매월 도도부현 지사에 송부
  - 도도부현 지사는 보건소장이 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심사하여, 후생대신에게 송부

- 후생노동성에서 출생통계 작성 및 발표
- 미국의 출생통계작성 체제
  - 내과의사 또는 다른 전문적인 참석자는 부모와 상담하여 신고서 작성
    - － 작성된 신고서를 선거구의 지방 호적사무원에게 제출
  - 지방호적사무원은 지방의 사용목적에 위해 신고서의 색인 또는 원장기입과 사본작성
  - 지방 보건부 또는 정부 호적사무원에게 신고서 송부
  - 시 또는 군 보건부에서는 신고서를 프로그램 개발, 사업효과 측정, 전염병 사후점검, 의료·보육서비스 등 분야에 활용
  - 주(State) 호적사무원에게 사례 보고서와 신고서 발송
  - 주 보건국 인구동태통계국에서는 불완전하거나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보 재조사
    - － 출처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신고서 사본을 파일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보관
  - 연방정부보건부 인구동태통계국에서는 민간 수요자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전국적인 출생, 죽음, 영아사망, 결혼, 이혼과 신고해야 하는 질병 발표
- 호주의 경우 지방정부 보건당국에서는 신고서에 의거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를 작성, 보고서로 발간
  - 항목간 연관관계를 체크하여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병원이나 의원에 회송하여 정정토록 요구
  - 지방정부는 최종적인 단계로 일종의 최소자료세트(minimum data set) 기준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집계하여 중앙정부에 제출
  - 중앙정부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통계 생산

#### 4.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 개선방안

##### 가. 출생신고체계 개선방안

- 중장기 방안: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신고체계 구축 방안

- 모든 병의원 및 조산소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출산에 대해 일정 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제도화
  - － 의료기관은 일차적 보고자인 부모에게 출생신고 시 필요한 정보 의무 제공
- 현재 출생아 대부분이 의료기관 등 시설에서 분만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나 법제화, 의료기관 협조,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인력 훈련 등 사전적 준비 필요에 상당 기간 소요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 필요
  - － 출생신고는 등록 목적 이외 사회정책이나 국민의 평생건강관리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적인 목적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
- 단기적 방안: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선 노력
  - 현 신고체계를 유지하면서 통계발표시기와 신고항목 개선 내용을 부분적으로 신고체계에 반영

#### 나. 출생통계내용 개선방안

- 정책 수립-모니터링-평가-환류, 학술연구,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합한 일부 항목 추가 및 변경 필요
  - 부모의 국적을 새로운 출생신고항목으로 추가
    - －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고용, 보건, 복지, 사회보장, 교육 등 제 영역에서의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 － 부모의 사용언어 또는 모국어, 입국시기, 인종 등을 새로운 출생신고항목으로 추가
  - 현재 출생신고서에 포함된 학력 항목을 더욱 세밀하게 고안
    - － 대학교를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석사, 박사)으로 세분화
  - 부모의 혼인상태(초혼, 재혼) 추가
    - － 다양한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중요
  - 이전에 모가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정보 추가

- 출산템포 등을 분석하기 위해 자녀간 출산시기 간격과 각 자녀의 성별 등이 중요
- 산전진찰시기, 진찰회수, 임신결과(인공유산, 자연유산), 임신방법(자연임신, 인공수정 등), 출산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 산모의 건강상태, 출생아 이상발견 여부 등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항목 추가
- 출생신고체계 개선과 연동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 출산전후 경제활동상태 변화는 출생신고항목으로 고려

#### 다. 출생통계 활용 개선방안

- ☐ 현재 출생통계에 반영하고 있는 4월(cut-off date)까지 지연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되, 출생통계 잠정결과의 발표시기를 현재 익년 5월에서 익년 2월로 앞당기는 방안
- ☐ 현행 출생통계에 반영되고 있는 지연신고 건수를 익년 2월(cut-off date)까지만 허용하는 방안
- ☐ 현행 출생통계 작성 및 발표시기 등을 그대로 유지하되, 외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월별(일본 사례) 또는 분기별(영국 사례)로 발표하는 방안
- ☐ 다소 다른 차원이긴 하나 상세자료는 익년 연말경에 보고서(paper-print)로 발간하는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잠정치와 확정치의 상세자료(지역, 연령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생아수 등)를 전산자료형태(digital)로 보고서 발간 전에 KOSIS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안

#### 5. 결론 및 정책적 건의

- ☐ 통계는 합목적성, 정확성, 시의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 출생이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향후 경기, 교육, 고용, 사회보장 등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생통계체계는 매우 중요한 영역
  -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의 한계성들은 출생통계체계의 다원화 구조에 다른

복잡성, 일반국민의 직접신고체계 도입에 따른 비전문성 및 부정확성, 출생신고 항목의 종류 및 개수의 제약으로 인한 함목적성 또는 활용도 미흡, 그리고 발표시기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요약됨.

- ☐ 현실적으로 출생통계 개선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필요
  - 방대한 민간조직의 협조 필요
  - 인력, 예산 등 인프라 구비에 충분한 지원과 협조 필요



## 제1부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 원인 분석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출산율<sup>1)</sup>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초 만해도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당시 정책가들 사이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폭발적인 인구증가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으며, 이에 따라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 수립부터 출산억제정책이 주요한 국가과제로 도입되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그 효과로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치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에 도달하였다. 이후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내외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 시기에 저출산현상이 한국사회에서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은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국사회는 ‘제2의 출산율 감소기’를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출산율은 2001년에 1.3명으로 급락하여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났으며, 2005년에는 1.08명까지 낮아져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실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약 1세기에 걸쳐 경험한 출산율 변천을 우리나라는 약 20년의 단기간에 경험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수준은 전통적 가톨릭문화권에서 속하면서 장기간 출산율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남부유럽국가(이탈리아, 스페인 등)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동유럽국가들(체코, 폴란드 등)에 비해서도 낮다. 또한, 2003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은 출산억제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출산율이 낮았던 일본에 비해서도 낮아졌다.

---

1)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을 의미하며, 이하에서는 ‘출산율’로도 표현하기로 한다.

저출산현상은 시간 경과에 따라 학령기인구, 노동인구 등 집단별 인구규모의 감소를 가져오며, 구조적으로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작용을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서구사회나 일본 등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출산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2050년경에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와 더불어 노동력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 이동성을 감소시켜 직업간·산업간·지역간 노동력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회보장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이를 부담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연금, 건강보험 등)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재정 부족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세대간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노동력 부족과 재정수지 악화는 자본스톡증가율 둔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요컨대, 저출산현상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복지 실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저출산현상이 미래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중대함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2006년에 1.13명으로 증가하였으며(통계청, 2007), 2007년에는 1.25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7). 출산율의 장기간 추이에서 단기간 변동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60년 이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에 출산율이 급락하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출산율 증가와 그 원인은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출산율 증가 원인은 저출산 원인의 약화와 연계되어, 향후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국가나 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의 원인은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

에 입각한 방식과 사회문화 변화에 입각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신가정경제이론에 따르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가족부양기능 변화(남성1인생계 부양에서 부부2인생계부양으로의 전환) 등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송다영, 2005; 장혜경, 2003 등). 한편,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 주장은 과거 유교주의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산을 모든 남녀의 중요한 의무로 여겼으나(Kwon, 1977), 1960년대 이후 서구의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의 근대적인 가치관으로 대체된 결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사회에서도 1960년대 이래 인구대치수준 이하로의 출산력 변천 즉, “제2인구전환(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의 주된 원인을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sup>2)</sup> 이삼식 외(2005, 2006)는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동을 가치관체계의 변화와 경제사회현상의 급격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Esping-Andersen(1990)은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한 나라의 정치적, 산업적 성격이 출산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거시적인 요소로 경기변동, 여성해방,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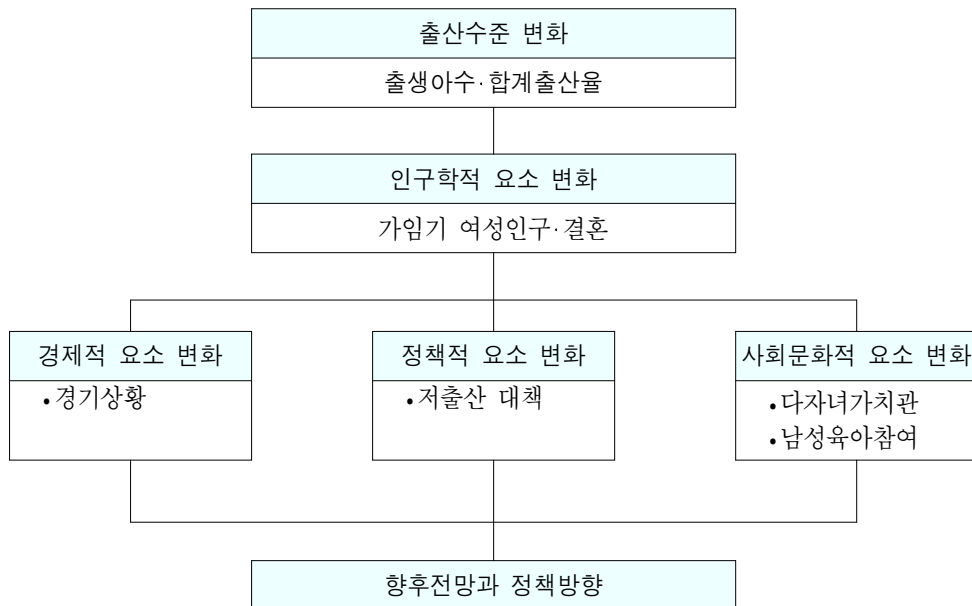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06년 출산율 상승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출산율과 경기변동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중반 경기불황기에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선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출산율 상승의 원인이 명백하게 규명될 경우, 저출산관련 정책 및 제도의 적기 개선 내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저출산정책의 사업 목표와 투입 규모를 적기에 명료화하여 비용효과성도 제고시킬 것이다.

2) 반드카와 룬레스티지는 자율성과 자기실현을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 및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가치관체계가 변화하면서 자아실현 등을 추구할 수 없는 경우에 결혼연기·포기, 동거, 이혼, 혼외출산 등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은기수, 2005).

##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그 영역에는 출산수준 변화 측정, 인구구조 분석, 사회경제적 영향 진단, 향후전망과 정책방향이 포함된다. 이들 대 영역은 다시 세부영역들로 구성되어,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이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별도의 장을 구성하여 출산 증가의 원인에 관한 이론과 외국 사례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기본틀은 [그림 1-1-1]에 제시하였다.

[그림 1-1-1] 연구의 기본분석틀(basic analytical framework)



첫 번째 영역의 출산수준 변화는 지난 10년간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수준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주된 특징을 진단한다. 이러한 변동 추이에서 2006년 출산

수준(출생아, 합계출산율) 증가의 위치와 연계 흐름을 진단한다.

두 번째 영역은 인구학적 구조 분석이다. 출산수준은 인구학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인구, 특히 주된 출산연령층의 여성인구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출산 대부분은 법률혼관계에서 발생하므로, 결혼과 이혼의 변동은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가임여성인구 구조, 결혼 등의 인구학적 요소의 변동 추이와 그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출생아수 변화를 인구학적 요소별로 분해(decomposition)하여 요소 각각이 기여하는 정도와 방향성을 측정하도록 한다.

세 번째 영역은 출산(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제적 요소로서 혼인) 변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경제적 요소들은 경제적 요소로서 경기 상황, 정책적 요소로서 저출산대책, 사회문화적 요소로서 남성의 육아참여와 다출산의 사회분위기이다. 사회문화적 요소 중 남성의 육아참여는 극히 부분적이긴 하나, 우리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의 척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출산의 사회분위기는 자녀가치관으로서 소자녀가치관에 대비한 다자녀가치관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각각의 세부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혼인 혹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귀분석(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포함) 등 심층통계기법이 적용된다. 한편,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 모두를 적용하며, 이는 각 접근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네 번째 영역은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를 종합화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망을 하며,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인구동태통계 시계열 분석, 2006년 출산여성 표본조사, T/F팀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 1. 문헌조사 연구

우선 문헌조사에서는 국내외를 망라하여 출산 증가에 대한 이론들을 고찰하는 한편, 최근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사례로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보고서 등을 고찰한다.

### 2. 인구동태통계 시계열 분석

통계청에 작성한 인구동태통계 중 본 연구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혼인통계와 출생통계를 1995~2006년 자료(원자료)를 이용하여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다양한 인구학적 및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2006년 출산율 증가에 대한 직·간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 3. 2006년 출산 여성(가구) 표본조사

출산행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2006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이라 할 때, 2006년 출산가구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출산가구 및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출산동향에 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 파악된 각 가구의 출산동향은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 출산의 동기 및 배경, 그리고 영향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될 것이다. 그 결과는 2006년 출생아수 증가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조사 내용은 출산동향 및 출산행태에 대한 일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출산전후의 직업, 종사상지위, 직장형태, 근무시간과 같은 특성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가구 구성원의 연령이나 성별, 학력, 가구소득, 혼인상태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체 자녀에 대한 인구학적 기본특성도 포함되었다. 특히 본 조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출산전후 가구특성의 변화가 포함되었

다. 이는 출산에 따른 가구특성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인, 남편, 부모의 역할 분담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도 포함되어 있다. 자녀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 변수들도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하게 분석될 것이다. 그리고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변동, 정책효과, 사회분위기 등도 본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 출산가구에 대한 접근이 가장 용이한 방법은 출생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출생신고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구동태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호적정보부분이다. 출생신고서의 인구동태에 관한 정보는 현재 통계청에서 취합하고 있으며, 호적정보 부분은 법원 행정처에서 취합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인 주소, 연락처 등은 법원 행정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본 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어 2006년 전국 출산 가구 중 4,997가구의 명부를 확보하였다.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4,997가구는 2006년 전국 출생건수 457,953건의 1.1%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2006년 출생건수의 약 1%를 일정 간격으로 추출하여 4,997가구 명부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다시 2,000가구를 추출하여 최종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일반가구는 전국 20~30대 연령층 여성 중에서 지역별로 취업여부와 자녀수를 고려하여 전화번호부에서 1,000명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2006년 출산가구 표본 중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1,903가구이며, 비출산가구의 경우에는 694가구가 최종 조사되었다. 자료처리 후, 분석에는 SPSS for Windows 12.01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표 1-1-1〉 2006년 출산가구 표본추출 및 조사응답율

구분	'06년 출산	구성비율	표본 풀	최종표본	추출간격	최종 표본	조사완료	조사완료율
계	457,953	1.0000	4,997	2,000		2,000	1,903	95.1
서울 시부	94,376	0.2061	1,033	412	3	412	413	100.0
부산 시부	26,609	0.0581	283	113	3	113	105	92.9
군부			8	3	3	3	3	100.0
대구 시부	20,668	0.0451	207	83	2	83	83	100.0
군부			17	7	2	7	7	100.0
인천 시부	23,635	0.0516	253	101	3	101	100	99.0
군부			6	2	3	2	1	50.0
광주 시부	13,730	0.0300	150	60	3	60	59	98.3
대전 시부	14,560	0.0318	158	64	2	64	63	98.4
울산 시부	10,900	0.0238	100	40	2	40	42	105.0
군부			19	8	2	8	2	25.0
경기 시부	113,040	0.2468	1,046	423	2	423	421	99.5
군부			176	71	2	71	46	64.8
강원 시부	12,647	0.0276	86	35	2	35	35	100.0
군부			50	20	2	20	17	85.0
충북 시부	13,647	0.0298	95	38	2	38	38	100.0
군부			54	22	2	22	13	59.1
충남 시부	18,979	0.0414	87	37	2	37	38	102.7
군부			110	46	2	46	39	84.8
전북 시부	16,039	0.0350	129	47	3	47	48	102.1
군부			62	23	3	23	20	87.0
전남 시부	16,703	0.0365	82	30	3	30	34	113.3
군부			116	43	3	43	32	74.4
경북 시부	24,046	0.0525	163	63	3	63	69	109.5
군부			107	42	3	42	29	69.0
경남 시부	31,517	0.0688	197	81	2	81	78	95.1
군부			136	56	2	56	37	66.1
제주 시부	6,857	0.0150	48	21	2	21	22	104.8
군부	19		19	9	2	9	9	100.0

〈표 1-1-2〉 2006년 출산동향조사 대상(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응답여성의 경제적 특성				남편 경제상태	
	빈도	비율		2006년출산전		2006년출산후		2006년출산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903	100.0	취업여부						
지역			취업	1,077	56.6	513	27.0	1,828	96.8
시부	1,642	86.6	비취업	825	43.4	1,389	73.0	61	3.2
군부	255	13.4	직업						
연령			고위임직전문가	179	9.4	115	6.0	137	7.2
20~24세	56	3.0	준전문가	232	12.2	94	4.9	186	9.8
25~29세	468	24.7	사무종사자	363	19.1	170	8.9	649	34.2
30~34세	909	47.9	서비스종사자	132	6.9	48	2.5	256	13.5
35~39세	399	21.0	판매종사자	80	4.2	41	2.2	180	9.5
40세 이상	64	3.4	단순노무종사자등	91	4.8	45	2.4	426	22.5
			무직	825	43.4	1,389	73.0	61	3.2
학력			종사상 지위						
중졸이하	45	2.4	비임금근로자	147	7.7	109	5.7	428	22.6
고등학교	755	40.2	상용근로자	745	39.2	322	16.9	1252	66.3
대학(교)	997	53.1	임시일용근로자	184	9.7	81	4.3	149	7.9
대학원이상	80	4.3	무직	825	43.4	1,389	73.1	61	3.2
혼인상태									
초혼	1838	97.6							
재혼	43	2.2							
사별 중	1	0.1							
이혼 중	1	0.1							
가구소득									
60%미만	815	45.1							
68~80%미만	257	14.2							
80~100%미만	302	15.9							
100~150%미만	323	17.9							
150%이상	109	6.0							
출산순위									
첫째아	881	46.3							
둘째아	813	42.7							
셋째아	187	9.8							
넷째아 이상	22	1.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표 1-1-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시지역에 86.6%가, 나머지 13.4%가 군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응답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4세가 4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5~29세 24.7%, 35~39세 21.0%이었다. 20~24세와 40세 이상은 3.0%와 3.4%로 각각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출산여성의 53.1%가 대학(교), 고등학교 40.2%, 대학원 이상 4.3% 그리고 중학교 이하가 2.4%로 구성되어 있었다. 출산여성의 조사당시 혼인 상태로는 97.6%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2.2%는 재혼, 0.1%는 이혼 그리고 0.1%는 사별로 각각 나타났다. 2006년 출생한 아이의 출산순위로는 첫째아 46.3%, 둘째아 42.7%, 셋째아 9.8%, 넷째아 이상 1.2%이다.

출산여성의 조사당시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73.0%는 비취업 그리고 나머지 23.0%는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출산여성의 직업별 분포는 고위임직 전문가 6.0%, 준전문가 4.9%, 사무종사자 8.9%, 서비스종사자 2.5%, 판매종사자 2.2%, 단순노무종사자등 2.4%, 무직 73.0%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출산여성의 종사상지위는 비임금근로자 5.7%, 상용근로자 16.9%, 임시일용근로자 4.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여성의 가구소득으로는 2007년 2/4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60%미만인 소득계층이 45.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60~80%미만의 소득계층은 14.2%, 80~100%미만의 소득계층 15.9%, 100~150%미만의 소득계층 17.9%, 그리고 150%이상 소득계층이 6.0%로 나타났다.

#### 4. T/F팀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본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준비 단계부터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본 연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정부기관의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담당관, 전문가로서 서울대와 전북대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들이 T/F팀에 참여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연구결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기관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제 2 장 외국의 출산율 증가 원인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에 들어 급락하던 것이 2006년에 처음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에 처음으로 증가하였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2000년경에 1.5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1.85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출산율도 1990년경에 1.7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2.0 수준으로 인구대치수준에 근접하고 있다(표 1-2-1).

〈표 1-2-1〉 한국, 일본, 스웨덴 및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60-2005

년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5.67	4.53	2.83	1.59	1.47	1.30	1.17	1.19	1.16	1.08	1.13
일본	2.00	2.14	1.75	1.54	1.36	1.33	1.32	1.29	1.29	1.26	1.32
스웨덴	2.17	1.94	1.68	2.13	1.54	1.57	1.65	1.71	1.75	1.77	1.85
프랑스	2.73	2.48	1.94	1.78	1.88	1.89	1.88	1.89	1.90	1.92	2.01

자료: World Bank, 2007 The World Bank Group(HNPStats), 2007.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6.

프랑스는 지난 약 1세기에 걸쳐 인구정책을 강력히 펼쳐왔다.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낮아지자,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를 우려하여 80년대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였다. 스웨덴은 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적자 재정 등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계기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쟁이 점화되자, 정책기조를 변경한 바 있다. 즉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성평등 기반을 구축하여 일-가정 양립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90년대에 들어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이룬 복지국가 모형으로 평가받은 스웨덴모델도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나 내부적 노동환경 등의 변화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이경아, 2001).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가부장적인 문화가 유지되어 온 동아시아국가 중 하나로서, 1989년 “1.57쇼크” 이래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스웨덴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일본은 시작 시기는 다르지만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프랑스를 제외하면 경기불황을 겪었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간 비교의 관점은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다른 저출산 요인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어느 정도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최근 출산율 증가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와 함께 관련 이론을 고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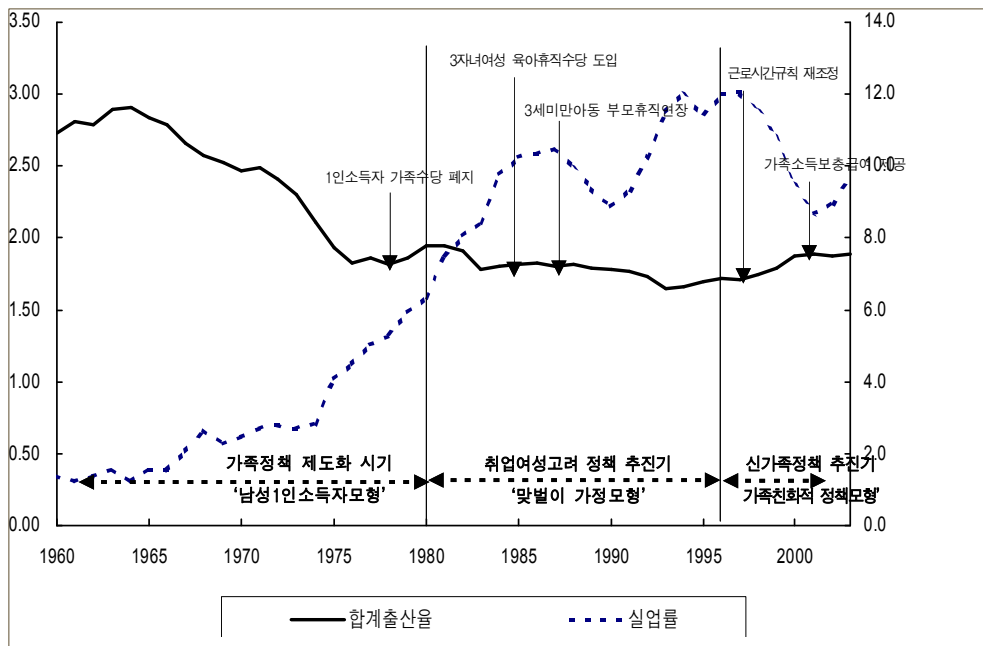
## 제 1 절 프랑스 사례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2.47에서 1980년 1.95, 1990년 1.78, 1995년 1.7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88, 2005년 2.00, 그리고 2006년에 2.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유럽에 위치한 OECD국가들 대부분이 인구대치수준 이하의 저출산현상을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였으며, 특히 1.3명 이하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확산된 것과 대조적이다. 프랑스의 출산율 회복세는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모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책으로 간주되는 프랑스의 정책은 인구학적 성취(인구수 증가)를 위한 결과만은 아니며, 가구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에 본질을 둔 사회적 동기 부여에 기초한다. 자녀수를 선택할 자유가 일상생활의 조건들(양육비용, 보육지원 등)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아, 가족을 확대하기보다 가족형성을 연기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아이를 갖도록 한다는 새로운 윤리원칙을 따랐다.<sup>3)</sup>

[그림 1-2-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 대책 도입 시기



자료: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국가 개입의 수단으로서 정책이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출산력 변천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프랑스의 초기 출산장려정책 시기 이전),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3.17로 프랑스의 출산율 2.60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후 1950년대에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17로 영국보다 높았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26% 감소), 프랑스의 출산율은 소폭의 변동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1940년 전후 프랑스에서 발생한 베이비붐의 영향이

3) 1960년대 이후 ‘개인이 자녀의 수와 시기를 통제할 자유’라는 개인 자유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난다 (Chesnais, 2005).

지대했기 때문이다. 베이비붐은 가족수당 비율의 증가에 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2자녀 갖기’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2자녀가정은 부가수입(여성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였다(이는 전쟁 전 한자녀가정을 모델로 한 정책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차별적 유인 체계와 출산율 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1인 소득자 수당이 정착된 이후 자녀가 없는 부부나 1자녀를 둔 부부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금전적 급여 제공은 교환경제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Chesnais, 2005).

1946~1973년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28개 코호트는 이전 코호트들에 비해 1/3 이상 더 많은 자녀수를 출산하여,<sup>4)</sup> 1980년대 출생아 감소에 완충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현상에 대해 사회가 면역력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산력은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회복하였다. 제일 처음 출산력 회복을 보인 집단은 공무원이었으며 그 다음이 민간기업 근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대부분 농업 종사자)였다(Chesnais, 2005). 그러나 이후 가족정책은 포피두 정권의 영향으로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젊은 부모를 위한 금전적 이전이 물가에 상응하지 못하였다. 가족정책은 당초 자녀수 차이만을 인정하였으나, 급여이전 체계가 수평적에서 수직적으로 전환되면서 특수한 집단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다(Chesnais, 2005).

오늘날 프랑스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은 직접지원책과 간접지원책으로 구분된다. 직접지원체계는 유아환영정책(PAJE :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sup>5)</sup>에 기반을 둔 것으로 ① 아이를 출생하는 모든 가족에 대해 기본지원금(allocation de base) 제공, ② 소득별·계층별·선택적(complément de libre-choix) 추가 지원, ③ 양육시스템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지원금으로 임신지원금을 임신 후 7번째 달에 800유로를 지급하며, 유아출산지원금으로 한자녀 당 매월 160유로씩 3세까지 지급하고 있다.<sup>6)</sup> 보충

4) 프랑스에 비해 서유럽의 베이비붐 기간은 20년 정도로 더 짧고, 베이비붐 효과로서 출산 증가 수준은 10% 정도로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5) 프랑스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출산장려제도를 유아환영정책(PAJE)이라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원제도로는 양육비(libre-choix du mode de garde) 지원과 직업활동보전(libre-choix d'activité) 지원 그리고 산모의 산후휴가 후 6개월 동안 지불되는 보조금 지원을 들 수 있다. 양육비 지원은 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약 200만 가구)의 근로여성에게 대해 소득 중 일정부분으로 지불한다. 이는 자녀를 탁아소(creche)에 보내거나 양육 보조원(babysitter)을 고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직업활동보전 지원은 어린자녀(0~3세)의 양육을 위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매월 340유로씩 6개월간 제공한다.<sup>6)</sup> 또한 첫 자녀에 대해서는 산후 법정휴가 후 6개월 동안 34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간접지원제도로는 가족보험 급여와 세금 경감을 들 수 있다. 가족보험의 기본급여는 2명 이상의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게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보험 기금(Caisse d'Allocation Familiales)으로부터 지급한다. 급여액은 2자녀를 가진 경우 매월 115.07유로, 3자녀를 가진 경우 매월 262.49유로, 3자녀 이상을 가진 경우 추가 자녀 1명당 매월 147.42유로이다. 자녀가 11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는 급여액이 추가된다(11~16세 32.36유로, 16세 이상 57.54유로 추가). 보충급여로 3명의 자녀를 가진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월 149.76유로를 제공한다. 세금경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에 대해 소득세 및 주거세 등을 경감 및 공제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거세는 2자녀의 경우 21세까지(학생인 경우 25세) 한 자녀 당 10%씩 경감해주며, 셋째 자녀부터는 한 자녀 당 15%씩 경감해준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성인은 1명, 첫 2자녀는 1/2명, 셋째자녀부터는 1명의 할당분으로 계산,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공제 혜택을 더 제공해 준다.

프랑스의 출산율 회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 
- 6) 2004.1.1 이전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최저 생계소득(SMIC)이 3,200유로 이상인 경우)은 상기 기초지원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2004.1.1부터 지원범위를 고소득층에게도 확대, 가계당 최저생계소득이 4,600유로이하인 경우 상기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 7) 수혜자격은 2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최근 4년간 최소 2년 취업, 3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최소 2년을 취업해야 가능하다.



둘째, 공공보육 지원,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제공 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율을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수당은 모성의 대가가 아닌 출산으로 인한 임금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다. 셋째, 셋째아 정책(third policy) 등 대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취학자녀를 둔 가족 등 특정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확대하였다. 넷째, 세금감면, 연금 크레딧제도 등 간접적인 혜택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산전 및 모성수당을 모든 출생아에 대해 지급하며,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자녀수에 대한 소득비율인 가족지수를 적용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제도에서 37.5년 가입이 완전연금수령의 필요조건이나, 여성의 경우 1자녀마다 2년을 연금가입기간에 합산하며, 3자녀 이상을 양육한 경우는 부부 각각의 연금가입기간에 2년을 합산하여 보상하고 있다. 끝으로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가족에 대해 사회적 관용성을 토대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제 2 절 스웨덴 사례

스웨덴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인구문제를 광범위한 개혁정책으로 확장시키고, 기혼여성의 취업과 연결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sup>8)</sup> 우선 스웨덴의 출산율 변동을 살펴보면, 1900~1930년대 중반 기간에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1930년대 경제침체기 이후 다시 상승하였다. 1940년대 중반 베이비붐 이래 1950년대까지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1960년대에는 2.5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1970년 말에 출산율은 1.6까지 감소하였다. 1970년대에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여성의 노동참여와 함께 동시에 주춤하였다.

8) 당시 불황으로 보수진영에서는 여성들이 실업남성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비판하였지만, 미르달부부는 양립지원의 결과로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공공사업을 늘리고, 건전한 경제계획을 세우고,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으로 모든 성인들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Hass,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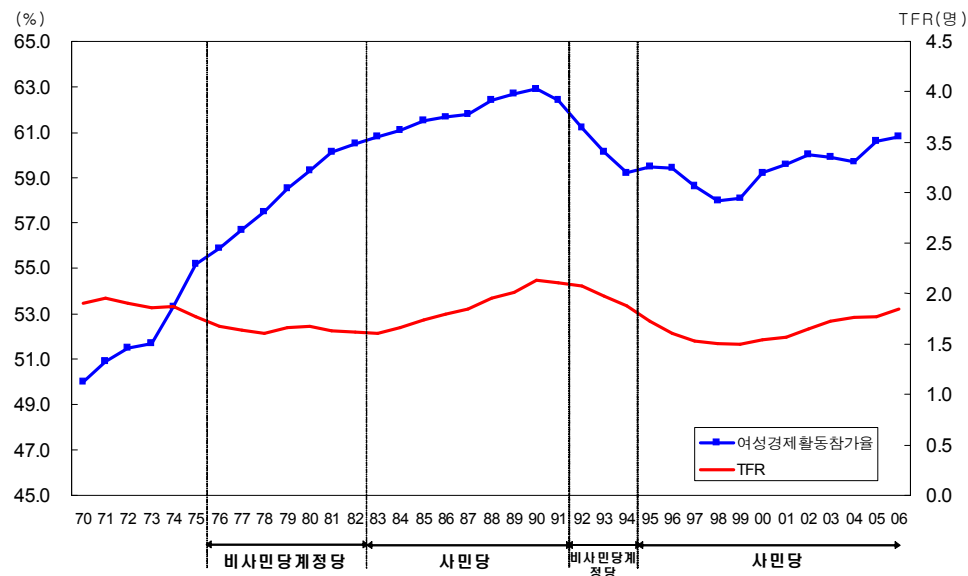
1985년 이후 제2차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여 1990년에는 인구대치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1980년대에 스웨덴의 경제는 성장 시기로 실업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았고 부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기간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증가하여 1990년에는 81%까지 높아졌으며, 합계출산율도 같이 증가하여 1990년에 2.13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정부는 미망인연금(widow's pensions)의 자격조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으며, 그 영향으로 1988~1989년 사이 결혼건수가 44,000명에서 109,000명으로 증가하여 결혼률이 한해에 거의 250% 상승하였다. 부모휴직기간, 아동수당, 공보육시설의 질 및 이용가능성 증가 등 가족정책 대상 및 범위의 확대는 부모의 자녀양육비용을 경감시키고 일-가정 양립 수준을 높여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 1980년대 출산율 증가는 경제 성장과 정책 확대의 두 요인이 상호작용한 효과로 간주되고 있다(Hoem, 2005).

그러나 1990년대에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여 1999년에는 1.52까지 급락하였다. 1990~1993년 사이 스웨덴의 GDP는 5%나 떨어졌으며, 고용 수준도 약 10%가 감소하였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의 경제위기는 1930년대 경기침체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다. 낮은 생산과 높은 실업률로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 이와 동시에, 출산율과 여성노동참가율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출산율 하락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관계가 있다. 스웨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계약직 증가 등)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찾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하였다. 경기침체에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가족정책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 부모휴직의 소득대체율, 보육의 질 및 아동수당 수준 등의 감소는 직·간접적으로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출산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Hoem 등, 1996). 여성의 소득이 가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맞벌이가정에서 급격한 실업률 증가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출산 전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휴직수당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경기침체에 따른 여성 실업률 증가, 직업

교육참가자 증가, 교육기간 연장에 의한 노동시장진입시기 지연<sup>9)</sup>, 그리고 저임금여성 증가는 출산력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기간 연장은 경제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 낮은 혜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 결과 저임금여성의 첫째아 출산율이 고임금여성의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났다(Andersson, 2000).

1999년 이후에 여성노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회복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업률은 1990년 10%에서 2006년 5%로 급락하였으며,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75%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다.<sup>10)</sup>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지출 비율은 2001년 GDP대비 2.9%로 OECD평균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스웨덴의 출산율은 2006년에 1.85까지 상승하였다(그림 1-2-2).

[그림 1-2-2]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197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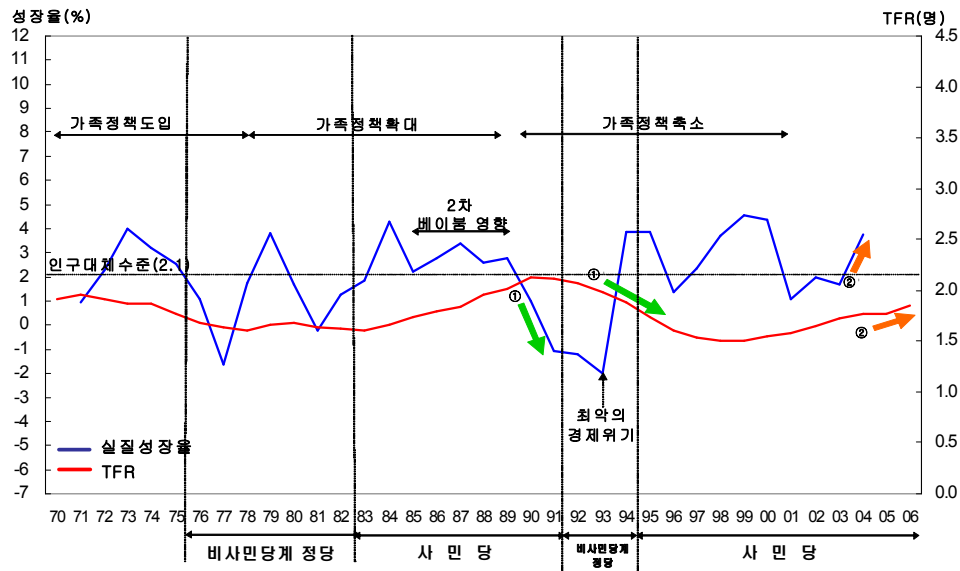


9) 무자녀 젊은여성의 교육프로그램참가율이 20%(80년대)에서 30~40%('93~'95년) 감소하였다.

10) 참고로 스웨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89-1990년 31.0%, 1995-1996년 42.0%, 2001-2002년 50.0%이다(스웨덴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이와 같이, 스웨덴의 출산율 변동 추이는 롤러코스트 특성을 가지며(그림 1-2-3), 이는 출산율이 경기 순환, 고용, 정책 등과 맞물려 변동하기 때문이다(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sup>11)</sup> 기존의 문헌(Becker, 1960, 1981; Becker and Lewis, 1973; Butz and Ward, 1979)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공급은 여성의 임금과 함께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증가는 출산율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출산율과 경기순환과의 관계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부흥기에는 임금이 상승하고 경제사회 안정화 대책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2-3] 스웨덴의 경기변동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1970-2006



이 시기에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정책적 관심이 생겨난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용이 감소하고, 출산율도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제 불황기에는 임금 성장이 없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복지수준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로 인

11) 덴마크, 프랑스 등은 90년대 노동시장쇼크와 출산율간의 연관성이 미약하지만, 스웨덴은 가족정책의 특징(예: 부모휴직수당의 소득대체수준)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자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이 증가하여 희망자녀수는 늘어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실로 직업 안정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dersson(2005)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출산율이 낮음을 밝히고 있다. Stanfors(2003)는 여성의 노동 참여와 시간제 노동 참여에 관한 연관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날 여성 고용 중단은 주요한 이유는 출산이지만, 시간제 노동은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스웨덴의 노동 시장은 재구조화되고 성 역할도 변화되어, 노동력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과 비슷하며, 임금 수준도 거의 동등해 졌다. 여성 노동 참여의 상대적인 임금 효과가 커져감에 따라 여성의 노동 참여는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 출산율은 여러 경제적 요인과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물러코스트 같은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그림 1-2-3>에서 GDP성장률과 출산율은 약 6년간의 시차(time-lag)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코호트출산율이 대치 수준 이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출산수준 자체가 변화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소득과 혜택을 최적화함으로써 출산시기 및 출산간격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Andersson, 2005).<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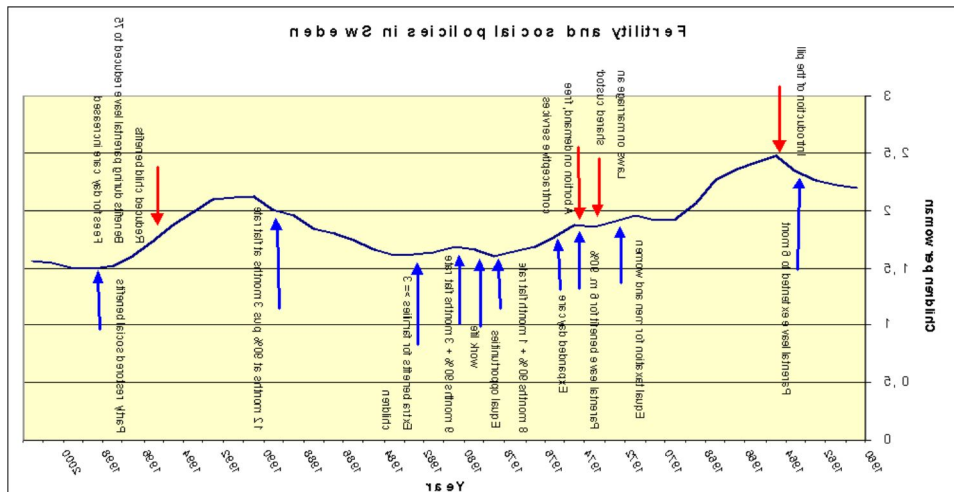
최근 들어 스웨덴의 결혼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아(1997년 천명당 3.6명), 가족 형성에 대한 결혼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결혼률 하락과 동시에 동거율이 상승하였으며, 아이들의 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미혼모는 5~10% 정도). 스웨덴에서는 일하는 어머니와 한부모가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이다. 즉 스웨덴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성 평등적인 역할관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정확하지 않으나 아이를 키우는 행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로 정책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가족 형성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

12) Andersson(2003)은 출생코호트 변동분석을 통해 물러코스터의 급변한 출산율이 단조롭게 변화함을 제시하여, 출산율의 물러코스트 변화가 출생코호트와 단기간의 합계출산율 변동 결과로 간주하였다.

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1970년대부터 휴직제도, 부모보험제도, 아동수당, 보편적 공보육 등 각종 가족정책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질 높은 아동보육, 다양하고 선택 가능한 휴직제도(부성휴가 포함), 휴직시 높은 임금대체율 등이 포함된다. 즉 스웨덴은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및 양성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단위의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림 1-2-4〕 스웨덴의 합계출산율과 사회정책간의 관계



출처: Sundstrom(2001), Björklund(2002) and Eurostat NewCronos database (2002), (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에서 인용).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완비하여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로, 스웨덴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2001)은 28.9%로 일본(16.9%)과 한국(6.1%)은 물론 OECD 평균(20.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소득보장 이외에도 육아휴직제를 활성화 하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화하여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왔다.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여부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사회가 제

공하고 있다. 관대한 육아휴가,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여 여성의 직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아동수당의 특징은 일-자녀양육 양립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6세 이하의 모든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비과세 현금 혜택이다.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월 950SEK을 모에게 지급하며, 셋째아의 경우 254SEK, 넷째아의 경우 760SEK, 그리고 다섯째 이상의 경우에는 950SEK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특별아동수당은 부모의 비혼, 별거 또는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한부모가정에 지원된다. 이러한 아동수당은 효과는 적지만 출산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ohler 등, 2005). 아동수당이 출산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일-가정 양립에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Andersson, 2005). 한편 세제정책은 ‘맞벌이가족’모형 및 성평등을 유지시키는 주된 요소이나, 1971년 이후 세제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정책들의 변화로 인해 독립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들 정책적 요소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 제 3 절 일본 사례

전후 베이비붐 기간(1947~1949)에 일본의 출산율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1957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947년 4.54명에서 1957년 2.04명으로 약 50%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출산율 급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 등에 기인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들어서도 일본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혼인건수 및 결혼률 감소가 출산율 감소를 주도하였다.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였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여성 고용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만혼화 경향이 증가하여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Retherford & Ogawa, 2005).

1980~1990년 기간에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여 고용기

회가 확대되었고 또한 성 평등의식이 증가하여 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까지 낮아져 이른바 ‘1.57쇼크’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정부는 1994년 12월에 5년간의 엔젤플랜(Angel Plan)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엔젤플랜은 일과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premium)의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 1997년에는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주요 골자로 아동복지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1971년부터 시작되어, 일정한 소득 범위 내 가정의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5세까지 지급하였다. 이후 1985년에는 둘째아 그리고 1990년에는 첫째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나이로 보면, 1974년에는 모든 미취학아동에게 제공되었으나 1985년에는 3세 이하로 기준이 낮아졌다. 1992년에 두 아이를 가진 가정에 월 5,000엔을 지급하였고 셋 이상 아이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월 10,000엔을 지급하였다.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였다.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bubble economy) 붕괴 이후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평생직장 보장’이 사라지면서, 여성의 출산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Ogawa, 2003).<sup>13)</sup> 장기적인 경기불황은 여성의 노동상태에 변화를 가져와 경영·관리직이나 파트타임직의 취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14)</sup> 경기불황은 임금노동자의 출산행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용불안은 여성교육연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만혼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sup>15)</sup>

13) Mainichi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2000) 결과, “일본의 최근의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녀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영향을 받았다(11%), 다소 영향을 받았다(18%), 영향을 받지 않았다(33%),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3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불황이나 경제위기로 인하여 회사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받아 출산시기나 자녀수를 조절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566) 중 30%(472)가 경제적 불황이 그들의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Ogawa, 2003).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본의 경제 불황이 고용구조 조정 및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4)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6.6%에서 1990년 49.1%, 1996년 49.3%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2006년에는 47.9%로 나타난다.

15)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 33.3%에서 1990년 37.4%, 1996년 47.6%, 2006년 51.0%로 상승하였다(文部科學省 文部科學統計要覽). 또한,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1995년 25.4세, 2000년 26.5세, 2006년 27.8세로 증가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 12월에 신엔젤플랜(1999-2004)을 공표하였다. 2000년 5월에는 육아휴직법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육아휴직급여가 임금의 40%까지 상승하였으며, 아동수당은 3세 이하(1991년 개정)에서 미취학아동(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2년 9월에 'the Measures for Decreasing Children Plus One'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4년 4월에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9세)까지 확대하였다.<sup>16)</sup> 2004년 12월에는 신신엔젤플랜(2004-2009)을 발표하였다. 이는 아동보육 지원 및 성평등 실현과 함께 젊은이의 경제적 독립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보육 시설 장려, 젊은이의 취업경험 기회 확대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가족정책에 있어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GDP 대비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을 보면 일본은 한국, 미국, 스웨덴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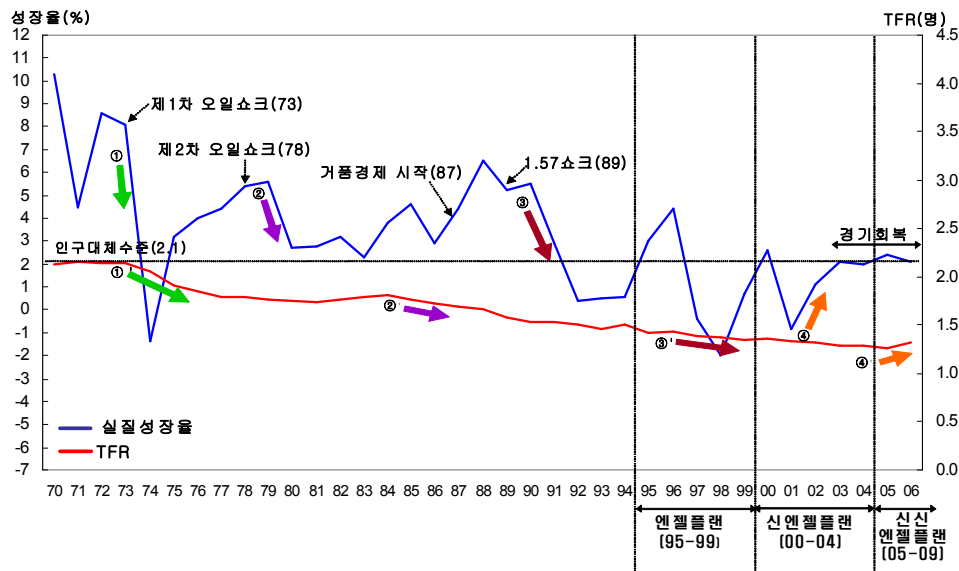
2006년에 들어 일본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6에서 2006년 1.32로 높아졌다. 최근의 출산율 상승을 '경기 회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www.wowkorean.jp](http://www.wowkorean.jp), 2007. 2. 22). 일본 후생노동성은 경기 회복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 및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증가하고,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고용이 안정(남성고용자, 정규직 증가 등)되어 20~30대에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출산율 증가세는 경기 회복으로 고용 사정이 좋아지면서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생)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거품경제 붕괴 후 불황이 지속되었던 '취직 빙하기'엔 젊은 남녀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을 연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풍조가 강했으나, 최근 고용 환경 개선으로 뒤늦게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커플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일본에서 출산율 감소 추이는 거시적으로 1940년대 전쟁, 1973년 오일쇼

16)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6,880,786명의 아이가 아동수당을 받았고 이는 미취학아동비율의 85%이다. 나머지 15%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기준보다 많은 아이들이다.

크, 1990년대 경기불황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Ogawa, 2003). 특히 1973년 오일쇼크와 1990년대 경기불황 등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초혼연령 상승(만혼화)과 혼인율 감소 등을 야기하였다. 최근의 출산율 상승은 장기적인 경기불황 이후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GDP성장률과 출산율 변동 간에 약 4년간의 시차(time-lag)가 관찰된다(그림 1-2-5).

[그림 1-2-5] 일본의 합계출산율 및 경기변동간의 관계, 1970~2006



자료: The World Bank Group(HNPStats), 2007.

- 1) 일본 경제기획청, 「경제백서」, 평성 11년판, 최성일, 1999에서 재인용.
- 2) 일본 내각부, 「연차별 실질 성장률」, 2007.
- 3) 내각부, 「경제요람」, 헤세이 15년판.

한편 일본에서 출산에 대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학자나 정책가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다. Yamagami(1999)는 아동수당이 없을 경우 0.0167명 그리고 Oyama(2004)는 0.0057명의 자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uzuki(2005)는 일

본에서 아동수당, 세금경감, 육아휴직 등이 폐지되면 합계출산율은 0.0226~0.0861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웨덴과 달리 정책 개입에 대한 일본의 출산율 탄력도가 적어 효과성이 낮으며, 설사 정책 개입이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싱가포르의 경험처럼 그 효과성이 반드시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Suzuki(2005)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출산율 회복이 더딘 이유로 출산에 대한 문화 결정론적 관점(Cultural Deterministic View on Fertility)을 제시하고 있다. McDonald(2005)도 오늘날 완만한 저출산 양상을 보이는 국가들이 성 평등 그리고 일-양육 양립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매우 견고한 혼인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 혼외출산율이 극히 낮다. 결국 일본인들이 결혼을 통한 출산을 고집하는 한, 아이의 과잉보호와 양육비의 지속적 증가, 부모와의 동거 연장 신드롬을 없애고 아동양육을 사회화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Suzuki, 2005).

#### 제 4 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피임법이 보급된 이래 출산은 개인 또는 부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선택은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사회 전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 외국 사례에서 출산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요소로 경기, 고용,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경기변동은 가구 소득에 영향을 주며, 이는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시적 요소의 다른 예로 여성의 해방과 개별화와 같은 문화적 가치가 포함된다(Hoorens, Parkinson, and Grant, 2006). 이러한 거시적 구조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론적 메커니즘은 스웨덴의 예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나 고용 수준의 변동이 여성 개인의 반응과 행태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경기나 고용 추이와 연동하여 나타난다. 정책도 개인과 관련된 거시적 측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나 고용 등 다른 거시적인 요소들과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개인의 미시적인 출산행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스웨덴의 출산율 상승은 이인소득자가족모형 채택, 소득 안정, 낮은 실업률 및 고용조건 개선, 가족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결과이며, 1990년대 출산율 변동은 경기순환과 가족정책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스웨덴에서 경기 회복과 고용환경 개선에 따라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회복된 이유는 그 동안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사회기반(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의식 변화 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경기변동 등의 충격이 가구에 보다 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사회체제일수록 경기 등의 외부적 영향에서 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래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젊은층(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아주 어려웠다. 그로 인하여 1990년대 초부터 정책적 노력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을 중단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회복과 고용환경 개선에 따라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될 때 정책의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편 프랑스와 스웨덴 그리고 일본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로 각국의 출산율은 거시적으로 사회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문화는 그 자체적으로 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고용, 가족정책 등 다른 거시적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개인의 출산행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는 이미 1960년대에 유럽사회에서 ‘제2 인구전환기(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당시 유럽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출산율 감소가 젊은이들의 동거, 혼외출산 등과 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 변동에 대한 문화의 영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즉 가부장적 문화에서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와 노동참여 증가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젊은층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문화의 영향은 남유럽국가들의 전통적인 가톨릭문화권에 비교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외국사례 고찰 결과를 토대로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앞선 외국사례 고찰에서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선택에는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사회 제반 영역의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시적 요소는 국가발전, 경기변동, 정책, 양성평등, 문화적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경기 변동은 여성고용과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은 부부의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출산력을 상향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sup>17)</sup>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소는 가구의 경제력과 양육비용 등이 포함된다. 결혼, 이혼, 동거 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노동력 수준)도 출산율을 변동시키는 미시적 요소들이다. 따라서 2006년 출산 증가 원인은 이들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요소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분석에서는 미시적 요소로 결혼(인구학적 요소), 그리고 거시적인 요소로 사회문화(부부의 가사분담), 경기변동, 정책 및 사회분위기가 출산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분석에 초점을 둔다. 제4장에서는 경기 변동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5장에서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제6장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한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이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006년 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명료화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17) Chesnais(2005)에 의하면, 새로운 생활방식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더 많은 장벽을 만들어 냈고, 비용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적절하게 규명되고 완화된다면, 부모들은 원하는 가족규모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출산력도 상향이동할 것이다. 정책의 주된 목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부모 휴직, 보육, 아동수당, 세제, 인프라 구축 등이 해당된다.

## 제 3 장 인구학적 요소와 2006년 출산과 관련성

이 장에서는 2006년 출산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출산 행태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유럽에서는 법률혼이 지배적이지 않아 동거부부나 미혼모가 출산한 이른바 혼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혼이 지배적인 사회로서 대부분 출산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서 태어나고 있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혼인력(nuptiality)은 출산력(fertility)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장에서는 혼인력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 제 1 절 출산율 변동 추이

출산력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게 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로 측정된다. 우리나라 출산율 변천은 크게 세 기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는 정부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1961년부터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1996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는 정부가 인구 자질과 복지 향상을 강조하는 인구정책을 공식 발표한 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2004년 2월)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기(2004~현재)는 정부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로드맵(roadmap)을 설정한 2004년부터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기구분에 맞추어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을 진단하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초 만해도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1961년 군사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 인구증가가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시책으로 채택되었다. 1960년대 인구증가억제정책은 주로 홍보와 계몽을 통하여 피임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래식 피임방법으로 자궁내장치, 정관수술, 젤리 및 콘돔을 무료로 보급하였다. 한 해 출생아수가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1971년에 정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여 한 가족 2자녀 운동을 강력히 펼쳤다. 산아제한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도 이 당시였다. 1974년부터 출산 억제를 위한 정책은 인구집단별로 차별화하여 실시되었다. 이때부터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며, 1977년에는 여성 불임시술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와 경제사회발전 및 이에 따른 의식 변화에 힘입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sup>18)</sup>으로 감소했으며, 그 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1.6명 미만까지 낮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1989년에 무료피임보급사업 대상을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시키고, 대신 본인 부담에 의한 피임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1.6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정부(보건복지부)는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파 그리고 인구정책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토록 하였다. 정부는 1996년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 증진정책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국사회는 ‘제2의 출산율 감소기’를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율은 1998~2000년 기간 1.5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1년에 1.30명,

18)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될 경우 이를 인구대치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의 출산율이라 부른다. 저출산이란 한 국가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치수준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2002년에 1.17명으로 더욱 낮아졌다.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현상이 급격히 나타난 데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저출산현상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저출산으로 연금재정이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고 2003년에 통계청에서 2002년 합계출산율을 1.17명으로 발표하자,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아졌다.

〈표 1-3-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06

(단위: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자녀수, 만명)

구분	출생아수(명)	합계출산율	연도	출생아수(명)	합계출산율
1970	1,006,645	4.53	1993	723,934	1.67
1975	874,869	3.47	1994	728,515	1.67
1980	865,350	2.83	1995	721,074	1.65
1981	880,310	2.66	1996	695,825	1.58
1982	858,832	2.42	1997	678,402	1.54
1983	778,362	2.08	1998	642,972	1.47
1984	682,217	1.76	1999	616,322	1.42
1985	662,510	1.67	2000	636,780	1.47
1986	641,644	1.60	2001	557,228	1.30
1987	629,432	1.55	2002	494,625	1.17
1988	637,462	1.56	2003	493,471	1.19
1989	646,197	1.58	2004	476,052	1.16
1990	658,552	1.59	2005	438,062	1.08
1991	718,279	1.74	2006	451,514	1.13
1992	739,291	1.78	2007(p)	480천명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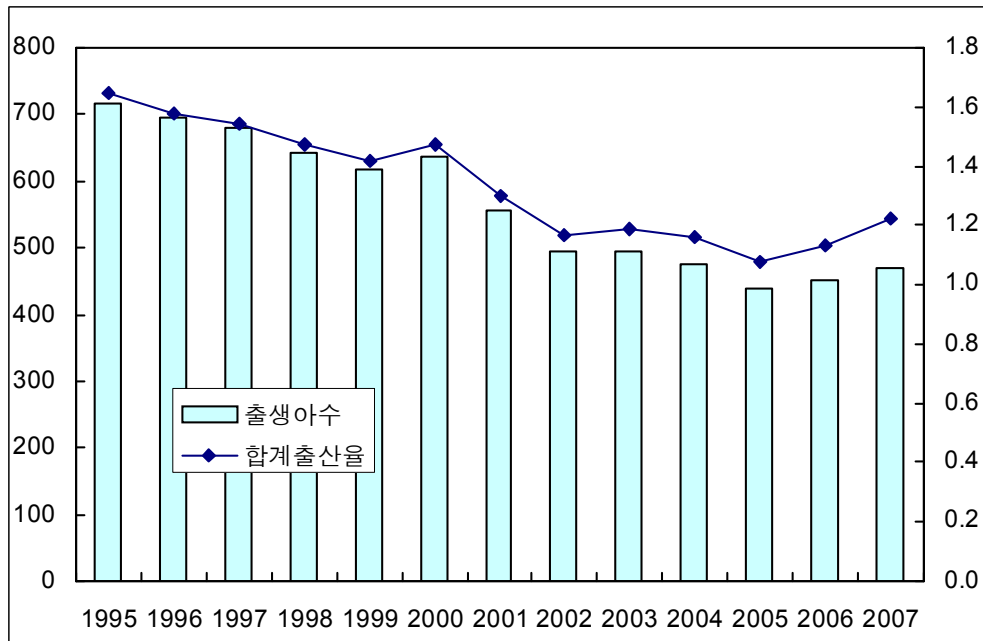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 출생, 사망 편)』, 각 연도; 2007년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정(2007. 11 보도자료).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추진체로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2004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9월 1일 시행)되었다. 이어서 2005년에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발족되었으며, 그 실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2005년 하반기에 설치되었다.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 와중에도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 2004년 1.16, 2005년 1.08로 더욱 낮아졌다.

[그림 1-3-1]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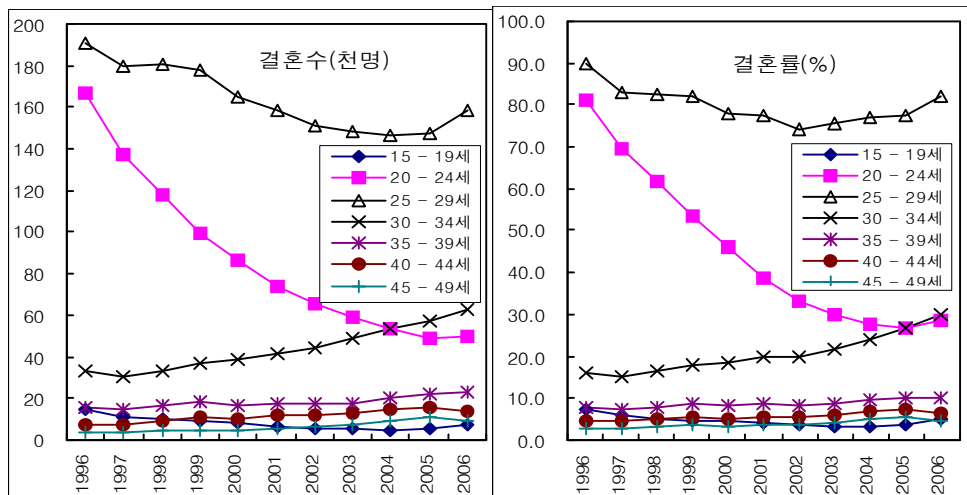
그러나 2006년에 출생아수가 452천명으로 2005년 438천명에 비해 14천명(3.2%)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 새천년베이비붐을 제외하면 1994년 이후 감소세에서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다. 출생아수 증가에 따라 2006년 합계출산율도 1.13명으로 2005년 1.08명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출생아수가 480천명(2006년 대비 6.3%)으로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25로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제2절 혼인력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 1. 결혼규모와 결혼률

가임기 연령층에서 발생한 결혼은 1996년 431천명(이하 여성 기준)에서 2003년 299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후 2006년까지 가임기연령층의 결혼은 계속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의 결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주된 출산연령층인 25~29세의 결혼은 1996년 191천명에서 2004년 146천명까지 감소하였다. 이 연령층의 결혼은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59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2천명이 증가하였다. 또 다른 주된 출산연령층인 30~34세에서의 결혼은 1996년 33천명에서 2006년에 63천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20~24세에서의 결혼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 그 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그림 1-3-2] 가임기(15~49세) 여성의 결혼규모 및 결혼률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주된 연령층은 여전히 25~29세로 전체 가임기연령층의 결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6년 44.2%에서 2006년 48.9%로 높아졌

다. 30~34세에서의 결혼은 7.7%에서 19.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결혼은 여성인구의 증감에 반드시 비례하여 변하지는 않는다. 일부 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임여성인구 규모보다 결혼 규모가 출산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는 결혼의 증감이 단순히 여성인구의 증감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라 변동하였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령별 결혼률을 계산하였다.

〈표 1-3-2〉 가임기여성의 결혼규모 및 결혼률 변동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결혼건수											
전체(15-49)	431	385	371	358	330	316	302	299	304	308	325
15 - 19세	14	11	10	9	8	7	6	5	5	6	8
20 - 24세	167	137	118	100	86	74	65	59	54	49	49
25 - 29세	191	180	180	178	165	158	151	148	146	147	159
30 - 34세	33	31	34	37	38	42	45	49	54	58	63
35 - 39세	16	15	16	18	17	18	17	18	20	22	23
40 - 44세	7	7	9	11	10	12	12	13	15	16	14
45 - 49세	3	4	4	5	5	6	6	7	10	11	9
결혼률(%)											
전체(15-49)	3.3	2.9	2.8	2.7	2.5	2.3	2.2	2.2	2.3	2.3	2.4
15 - 19세	0.7	0.6	0.5	0.5	0.4	0.4	0.4	0.3	0.3	0.4	0.5
20 - 24세	8.1	7.0	6.2	5.4	4.6	3.9	3.3	3.0	2.8	2.7	2.8
25 - 29세	9.0	8.3	8.3	8.2	7.8	7.7	7.4	7.6	7.7	7.7	8.2
30 - 34세	1.6	1.5	1.7	1.8	1.8	2.0	2.0	2.2	2.4	2.7	3.0
35 - 39세	0.8	0.7	0.8	0.9	0.8	0.9	0.8	0.9	1.0	1.0	1.0
40 - 44세	0.5	0.4	0.5	0.6	0.5	0.6	0.5	0.6	0.7	0.7	0.7
45 - 49세	0.3	0.3	0.3	0.4	0.3	0.4	0.4	0.4	0.5	0.6	0.5

자료: 통계청, KOSIS(단, 2001년 이전 결혼률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

우선 전체 가임기여성의 결혼률(특정연도 여성인구 100명 당 결혼여성 수)은 1996년 3.3%에서 2003년 2.2%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06년에 2.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4세 여성의 결혼률은 1996년 8.1%에서 2005년 2.7%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2006년에 2.8%로 다소 상승하였다. 25~29세 여성의 결혼률은

1996년 9.0%에서 2001년 7.4%로 감소하였으나,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8.2%로 나타났다. 30~34세 여성의 결혼률은 1996년 1.6%에서 2006년 3.0%로 지난 10년간 두 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거 매년 0.1~0.2%p 증가한 것이 2004년부터는 매년 0.3%p씩 증가하여 최근 보다 급격하게 결혼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세 이상 고연령층 여성의 결혼률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1% 이하의 낮은 수준이다.

결혼률은 결혼건수(분자)와 가임기 여성인구 규모(분모)에 따라 변화한다. 결혼건수가 단순히 가임기 여성인구 규모에 따라 변동한다면, 결혼률은 거의 일정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건수와 결혼률이 유사하게 변동한다는 사실은 결혼건수가 단순히 가임기 여성인구 규모와 연동하지 않고, 최근의 결혼행태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로 다소 시차가 존재하나 가임기여성의 결혼이 대체적으로 2003년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부분 출산은 법률혼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3년까지 가임기여성의 결혼이 왜 위축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임기여성의 결혼이 왜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가의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 결혼 유형

결혼건수 변동은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결혼형태(초혼, 재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초혼은 출산 시작의 의미를 갖지만, 재혼은 이미 출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거나 완료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19)</sup> 따라서 출산수준에 대한 재혼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즉 출산력에 대한 결혼력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혼건수 변동을 결혼형태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임기여성의 초혼건수는 2004년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는 증가한 것으로 나

19)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44세 기혼여성 중 초혼인 경우에 평균출생아 수는 1.77명인데 반해, 재혼인 경우에는 1.85명, 이혼 중인 경우 1.7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5).

타났다. 초혼건수 변동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20~24세 여성의 초혼건수는 2005년 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우리나라 여성의 상당 비율은 25~29세에 결혼(초혼)하였으나, 그 건수는 2004년에 139천명까지 감소하였다.

〈표 1-3-3〉 가임기(15~49세)여성의 초혼·재혼건수, 초혼비율 및 평균초혼연령 변동  
(단위: 천명,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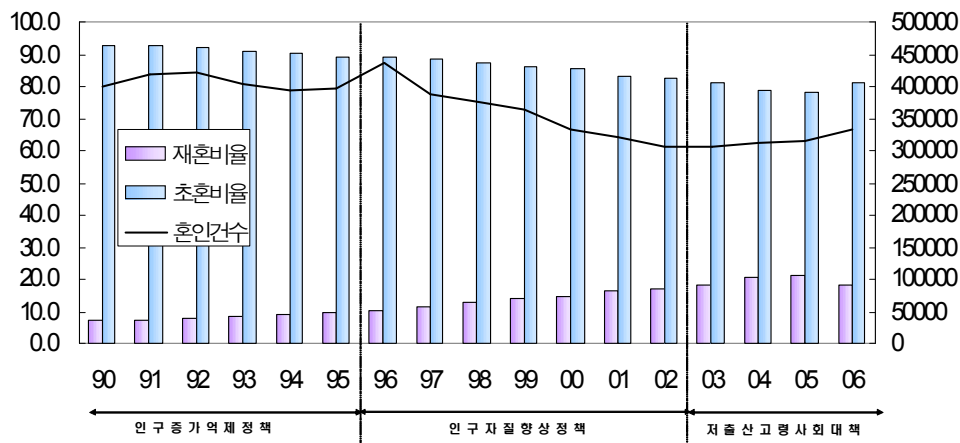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초혼(천명)	372	332	318	301	276	259	247	242	240	241	263
15 - 19세	14	11	10	9	8	7	6	5	5	6	8
20 - 24세	163	134	116	98	85	72	63	57	52	47	48
25 - 29세	181	172	173	170	157	150	144	141	139	140	153
30 - 34세	21	19	22	25	26	29	32	36	40	44	50
35 - 39세	5	4	5	5	5	5	5	5	6	7	9
40 - 44세	2	1	2	2	2	2	2	2	2	2	2
45 - 49세	1	1	1	1	1	1	1	1	1	1	1
재혼(천명)	59	53	54	57	54	56	55	57	64	68	62
15 - 19세	0	0	0	0	0	0	0	0	0	0	0
20 - 24세	4	3	2	2	2	2	2	2	2	2	2
25 - 29세	9	8	8	8	8	8	7	7	7	7	6
30 - 34세	12	11	11	12	12	13	12	13	14	14	13
35 - 39세	11	11	11	13	12	12	12	12	14	15	14
40 - 44세	6	6	7	9	8	10	10	11	13	14	12
45 - 49세	3	3	4	4	4	5	5	7	9	10	9
초혼율(%)	86.2	86.1	85.6	84.1	83.7	82.1	81.8	80.9	78.9	78.1	80.9
15 - 19세	96.8	96.3	98.3	99.0	99.1	98.1	98.0	97.0	97.6	98.0	98.7
20 - 24세	97.6	97.7	98.3	98.2	98.0	97.4	96.7	96.2	96.0	95.6	96.7
25 - 29세	95.0	95.5	95.7	95.6	95.4	95.0	95.2	95.2	95.2	95.1	96.3
30 - 34세	63.0	63.6	66.0	67.1	69.1	69.9	72.7	73.9	74.7	75.9	79.8
35 - 39세	31.6	29.4	30.4	29.9	30.4	29.9	30.0	30.7	30.5	32.6	39.2
40 - 44세	21.2	20.2	18.9	18.3	17.2	14.8	13.1	12.9	12.2	12.1	15.1
45 - 49세	16.1	15.7	14.4	14.3	13.1	12.3	10.5	9.1	8.1	8.6	8.8
초혼연령(세)	25.5	25.7	26.1	26.3	26.5	26.8	27.0	27.3	27.5	27.7	27.8

자료: 통계청, KOSIS(단, 2001년 이전 결혼률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

그 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2006년에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30~34세 여성의 초혼건수는 2002년까지 매년 1~3천명씩 증가하였으며, 그 후에는 매년 4천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요컨대 20대 여성의 초혼건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 여성의 초혼건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20대에서의 감소폭이 30대 이상에서의 증가폭보다 상대적으로 커, 전체 초혼건수는 감소하였다. 30대를 포함한 고연령층 여성의 초혼건수는 2005년부터 20~24세 여성의 초혼건수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령별 초혼 패턴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가진다. 하나는 여성의 만혼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6년 25.5세에서 2006년 27.8세로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996년 이래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매년 0.2~0.4세씩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증가폭이 0.2세(특히 2005~2006년간 0.1세)로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저연령층에서 초혼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한국사회에서 만혼화현상이 다소 주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3-3] 가임기(15~49세) 여성의 초혼 및 재혼 비율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새로운 결혼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 모든 연령층에서 초혼건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가임기 여성의 전체 초혼건수는 2006년 263천명으로 2005년에 비해 22천명(9.1%)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동 추이는 그 동안 억제되었던 결혼이 최근에 들어 활발해졌기 때문이며, 특히 2006년에 초혼건수 증가는 ‘쌍춘년 효과’로도 간주될 수 있다.

가임기 여성의 재혼건수는 2003년까지 5만명 수준에서 이후 6만명 수준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주로 3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재혼이 증가하였을 뿐, 20대 저연령층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다. 결국 최근 결혼건수 증가는 개혼보다 초혼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출산력 상승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표 1-3-4〉 우리나라 여성의 이혼건수 및 조이혼률

(단위: 천명, 총인구 1,000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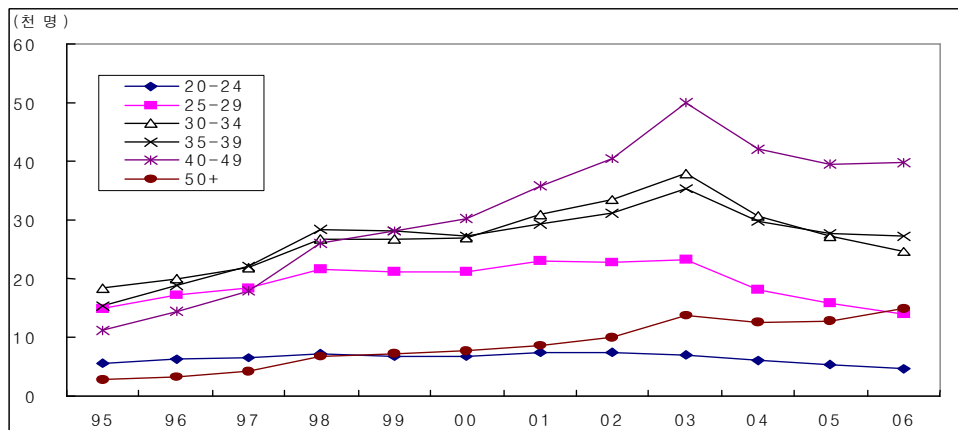
구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45.7	68.3	79.9	91.2	116.7	118.0	120.0	135.0	145.3	167.1	139.4	128.5	125.0
20-24	5.4	5.6	6.3	6.6	7.1	6.7	6.8	7.5	7.5	6.9	6.0	5.4	4.7
25-29	13.5	15.0	17.2	18.3	21.6	21.1	21.2	22.9	22.8	23.2	18.1	15.7	13.9
30-34	12.8	18.4	19.9	21.9	26.7	26.7	26.9	30.8	33.4	38.0	30.8	27.3	24.6
35-39	7.2	15.4	18.9	22.2	28.5	28.1	27.1	29.4	31.1	35.3	29.8	27.6	27.1
40-49	5.4	11.1	14.3	17.9	26.1	28.1	30.3	35.8	40.5	50.1	42.2	39.5	39.8
50+	1.4	2.8	3.3	4.2	6.7	7.3	7.6	8.6	10.1	13.6	12.6	12.9	14.9
조이혼율	1.10	1.50	1.70	2.00	2.50	2.50	2.50	2.80	3.00	3.50	2.90	2.60	2.60

자료: 통계청, KOSIS.

한편 재혼건수는 이혼 추이와 연동하여 변화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와 달리 이혼의 상당비율이 재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성의 전체 이혼건수는 1990년대 중반 이래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3년 167천명(조이혼률 3.5)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연령별 이혼건수도 전체 이혼건수의 변동 패턴과 유사하여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된 출산 연령층인 25~29세와 30~34세 여성의 이혼건수는 2003년 이후 다소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한편 50세 이상 여성의 이혼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40대 여성의 이혼도 잠시 주춤했을 뿐 2006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주된 가임기 연령층에서의 이혼건수 감소는 가족의 안정성을 의미하여,

출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의하면, 20~44세 초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는 1.77명인데 반해, 이혼여성의 경우 1.73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5).

[그림 1-3-4] 연령별 이혼건수 변동추이, 1995~2006



자료: 통계청, KOSIS.

### 3. 혼인력 변동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출생아수와 출산율(합계출산율)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출생아수가 증가하여도 출산율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출생아수가 감소하여도 출산율은 증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출산율을 산정하는 공식에서 분자인 출생아수가 분모인 가임여성 규모와 증감 방향이나 정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출생아수 증가와 출산율 증가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진단하여 2006년 출산율 증가의 인구학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 국가의 출산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 동안 낳게 되는 평균자녀수로 측정된다. 여기에서 ‘가임기’는 생리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기간 즉, 인구학적으로 15~49세의 기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합계출산율은 기간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기간합계출산율은 일정 기간 동안(보통 1년) 서로 다른 연령코호트들이 경험하였던 출산율을 마치 한 여성이 전체 가임기 동안 경험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다. 따라서 기간합계출산율은 실제 한 여성이 개인적으로 전체 가임기 동안 경험한 출산율인 코호트출산율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코호트출산율 대신 기간합계출산율을 이용하는 이유는 한 여성(또는 여성집단)의 출산경험이 완료되는 시기가 너무 길기 때문이다.

연령별출산율은 연령별(1세별 또는 5세별) 여성인구(기혼과 미혼 모두 포함)를 분모로 하고, 1년 동안 이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를 분자로 하여 산출한다. 합계출산율은 이들 연령별출산율을 합하여 구한다. 이를 단순 도식화하면, 출생아수(B)를 전체 여성인구(P)로 나눈 값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출산 대부분은 법률적으로 결혼한 여성들(M)로부터 발생하며,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출생아수(B)를 유배우여성(M)으로 나눈 유배우출산율(B/M)을 적용한다. 합계출산율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도 감안하므로, 유배우출산율에 기여할 전체여성 중 결혼한 여성의 비율인 유배우율(M/P)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20)</sup> 따라서 합계출산율은 식1과 같이 유배우출산율과 유배우율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frac{B}{P} = a\left(\frac{B}{M} \times \frac{M}{P}\right) + (1-a)\left(\frac{B}{S} \times \frac{S}{P}\right) \dots\dots\dots(\text{식 1})$$

(여기에서 B는 출생아수, P는 가임여성수, M은 유배우부인수, S는 미혼여성수, a는 총출생아수 중 유배우부인이 낳은 출생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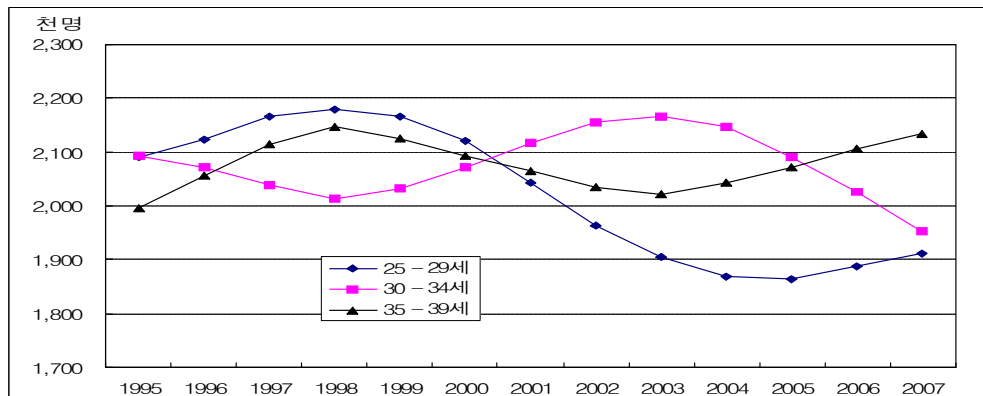
가임여성인구 증가가 반드시 출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출산 대부분이 법률혼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임여성 인구보다 결혼 규모가 출산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 증가해도 출산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높아지면 출산은 증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근 결혼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소들을 위 공식에 의거하여 분해(decomposition)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인구학적 요소 분해는 2004~2005년간 출산 감소와 2005~2006년간 출산 증가에 모두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가임기 동안 결혼과 출산은 연령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인구학

20) 유럽국가사례를 보면, 향후 미혼모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혼여성에 의한 출생아수는 2006년 1.5%(통계청)로 미소한 수준이다.

적 요소분해는 연령별로 실시하였다.

2004~2005년간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인구학적 요소들을 살펴보면, 우선 가임 기여성(15~49세) 규모는 2004년 1,343만명에서 2005년 1,329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35~39세와 45~49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주된 출산연령층인 30~34세 여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30~34세 여성의 규모는 2004년 215만명에서 2005년 209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또 다른 주된 출산연령층인 25~29세 여성의 규모는 2004년 187만명에서 2005년 186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폭은 아주 미미하였다. 35~39세 여성인구는 2004년 204만명에서 2005년 207만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1-3-5] 주된 출산연령층(25~39세) 여성인구의 변동 추이



최근 출산은 결혼 후 5년 이내에 약 85%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04년 출생아수는 1999~2003년(5년)간에 발생한 결혼으로부터 그리고 2005년 출생아수는 2000~2004년(5년)간에 발생한 결혼으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04년 또는 2005년에 도달했을 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요소분해 결과는 <표 1-3-5>에 제시하였다.

20~24세의 경우 여성규모는 83.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누적결혼건수는 14.6천명이 감소하는데 그쳐, 결과적으로 출생아수는 6.6천명만이 감소하였다. 30~34세의 경우에도

여성규모가 54.8천명이 감소하였으나 누적결혼건수는 1.2천명이 감소하는데 그쳐, 결과적으로 출생아수는 8.8천명만이 감소하였다. 반면 25~29세의 경우 여성규모는 3.6천명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누적결혼건수가 56.2천명이나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출생아수는 23.5천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35~39세의 경우 여성규모는 29.5천명이 감소하였으나 누적결혼건수는 오히려 9.9천명이 증가하여 출생아수도 1.3천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령별출산율도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3-5〉 2004~2005년간 출산율 변동의 인구학적 요소분해(decomposition)

(단위: 천명, 여성 1천명 당 출생아수)

구분	여성인구			결혼			출생아수			출산율		
	2004년	2005년	증감	99-03년 결혼 코호트	00-04년 결혼 코호트	증감	2004년	2005년	증감	2004년	2005년	증감
15-19	1510.6	1491.8	-18.8	4.5	4.3	-0.2	3.4	3.1	-0.3	2.3	2.1	-0.2
20-24	1893.3	1809.4	-83.9	113.4	98.8	-14.6	39.5	32.9	-6.6	20.4	17.9	-2.5
25-29	1867.6	1864.0	-3.6	650.4	594.3	-56.2	199.1	175.6	-23.5	104.6	92.3	-12.3
30-34	2145.9	2091.1	-54.8	565.3	564.0	-1.2	187.6	178.8	-8.8	84.2	82.4	-1.8
35-39	2042.1	2071.7	29.5	135.2	145.1	9.9	39.8	41.0	1.3	18.6	19	0.4
40-44	2110.2	2079.0	-31.2	76.5	78.1	1.6	5.4	5.2	-0.2	2.5	2.5	0.0
45-49	1863.7	1948.6	84.9	45.1	50.4	5.2	0.4	0.4	-0.0	0.2	0.2	0.0
전체	13433.4	13355.6	-77.7	1590.4	1534.9	-55.5	475.1	437.0	-38.1	1.16	1.08	-0.08

주: 미상 처리 및 반올림으로 인하여 요소 간 계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요컨대 주된 출산연령층인 25~29세와 30~34세 그리고 20~24세에서 가임여성인구뿐만 아니라 누적결혼건수가 감소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예외 없이 이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가 감소하였다. 예외적으로 35~39세의 경우 가임여성인구뿐만 아니라 누적결혼건수 모두 증가하여, 이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도 소폭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부분 연령층에서 가임여성인구와 누적결혼건수 모두 감소하고, 그로 인하여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전체 출생아수도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아수 감소는 가임여성인구 감소보다는 누적결혼건수 감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25~29세 연령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6년간 출산변동에 대한 인구학적 요소분해의 결과는 <표 1-3-6>에 제시하

였다. 여기서 2005년 출산은 2000~2004년 그리고 2006년 출산은 주로 2001~2005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1-3-6〉 2005~2006년간 출산율 변동의 인구학적 요소분해

(단위: 천명, 여성1천명당 출생아수)

구분	여성인구			결혼			출생아수			출산율		
	2005년	2006년	증감	00-04년 결혼 코호트	01-05년 결혼 코호트	증감	2005년	2006년	증감	2005년	2006년	증감
15-19	1491.8	1489.1	-2.8	4.3	4.7	0.4	3.1	3.2	0.1	2.1	2.2	0.1
20-24	1809.4	1718.3	-91.1	98.8	89.3	-9.5	32.9	30.8	-2.1	17.9	17.7	-0.2
25-29	1864.0	1887.0	23.0	594.3	554.0	-40.3	175.6	173.7	-1.8	92.3	89.9	-2.4
30-34	2091.1	2025.4	-65.7	564.0	565.1	1.1	178.8	189.5	10.7	82.4	90.2	7.8
35-39	2071.7	2106.2	34.5	145.1	159.2	14.2	41.0	47.6	6.6	19	21.5	2.5
40-44	2079.0	2041.5	-37.5	78.1	81.2	3.1	5.2	5.4	0.2	2.5	2.6	0.1
45-49	1948.6	2022.9	74.3	50.4	57.1	6.7	0.4	0.4	0.0	0.2	0.2	0.0
전체	13355.6	13290.4	-65.2	1534.9	1510.5	-24.4	437.0	450.6	13.6	1.08	1.13	0.05

주: 미상 처리 및 반올림으로 인하여 요소간 계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20~24세에서 가임여성인구는 91.1천명이 감소하고 누적결혼건수도 9.5천명이 감소하여 이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는 2.1천명이 감소하였다. 25~29세에서 가임여성인구는 23.0천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결혼건수가 40.3천명이나 감소하여 이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도 1.8천명이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30~34세의 경우에는 가임여성인구가 65.7천명이나 감소했으나 누적결혼건수는 오히려 1.1천명이 증가하고 이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도 10.7천명이 증가하였다. 35~39세의 경우에는 가임여성인구가 34.5천명이 증가하고 누적결혼건수도 14.2천명이 증가하여, 이들로부터 태어난 출생아수가 6.6천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2005~2006년간에는 가임여성인구 규모보다 누적결혼건수에 따라 출생아수가 변동하고 있다. 20대에서는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30대 이상에서는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30대의 양의 기여정도가 20대의 음의 기여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결과적으로 2006년에 출산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 제 3 절 결혼시기와 출산시기

#### 1. 출산 지연에 대한 검토

부모의 동거기간별 출생아수 분포를 살펴보면(표 1-3-7), 동거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은 1996년 20.8%에서 2003년 17.4%로 감소한 후 2006년에 20.7%로 상승하였다. 동거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비율은 1990년대 말 2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 19.9%로 낮아졌다. 동거기간이 3년 그리고 4년인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5년 이상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1-3-7〉 부모 동거기간별 출생아 분포

(단위: %)

구분	동거기간									계
	1년미만	1년	2년	3년	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이상	
1996	20.8	23.1	14.9	12.8	9.2	15.9	2.8	0.5	0.1	100.0
1997	20.3	23.5	15.3	12.3	8.7	16.4	2.9	0.5	0.1	100.0
1998	19.9	23.4	15.5	12.7	8.6	16.4	2.9	0.5	0.1	100.0
1999	20.8	23.1	15.2	12.6	8.8	16.0	2.9	0.5	0.1	100.0
2000	18.8	22.3	15.5	13.1	9.7	17.1	3.0	0.5	0.1	100.0
2001	18.1	22.7	15.3	13.2	9.6	17.5	3.1	0.4	0.1	100.0
2002	18.0	22.5	15.4	12.9	9.7	17.9	3.1	0.4	0.1	100.0
2003	17.4	22.7	14.6	13.4	10.0	18.4	3.0	0.4	0.1	100.0
2004	19.5	20.5	14.3	12.5	10.3	19.3	3.1	0.4	0.1	100.0
2005	20.1	20.1	14.3	12.2	9.6	19.9	3.2	0.5	0.1	100.0
2006	20.7	19.9	13.8	12.2	9.6	19.9	3.2	0.5	0.1	100.0

자료: 통계청, KOSIS.

결혼경과기간별 출생아수 비율은 <표 1-3-8>에 제시하였다. 출산순위와 상관없이 2006년도 출생아수 중 모의 결혼연도가 2005년(출산연도-1년)인 비율이 24.5%(약 1/4)로 가장 높고, 2000년 이전(출산연도-6년 이상)인 비율은 20.5%로 다음으로 높다. 2006년에 결혼한 비율은 6.8%에 불과하였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결혼 후 빠른 기간 내에 출산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다 늦추어 결혼한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앞선 부모동거기간별 분석결과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율의 값은 다르다. 그 이유는 동거기간은 결혼일자와 해당 출생아의 출산일자를 비교하여 정확하게 산출한 반면, 결혼경과기간은 결혼월일과 상관없이 연도만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은 2006년도 출산과 관련된 것으로, 이하에서는 동거기간별 분석을 생략하고 결혼경과기간별로 분석하였다.

〈표 1-3-8〉 모의 결혼경과기간별 출생아수 분포

(단위: %)

출생년도	결혼연도						출생연도=결혼연도	전체
	출생연도-6년이상	출생연도-5	출생연도-4	출생연도-3	출생연도-2	출생연도-1		
1996	16.1	7.3	11.3	13.9	16.0	29.8	5.6	100.0
1997	16.4	7.7	10.2	13.8	17.0	29.8	5.1	100.0
1998	16.8	7.0	10.6	14.2	17.6	28.7	5.0	100.0
1999	16.6	7.2	11.1	14.3	17.6	28.7	4.5	100.0
2000	17.3	8.3	11.6	14.5	18.7	25.3	4.3	100.0
2001	17.9	8.3	11.5	14.6	17.7	26.0	4.0	100.0
2002	18.3	8.4	11.6	14.1	18.7	24.7	4.2	100.0
2003	18.5	8.7	11.7	14.4	18.4	23.8	4.5	100.0
2004	19.5	8.6	12.0	13.1	16.4	24.6	5.7	100.0
2005	20.0	9.0	10.7	13.5	16.3	24.2	6.3	100.0
2006	20.5	8.3	11.1	13.2	15.6	24.5	6.8	100.0

주: 연도별 출생아 중 결혼 이전의 출산은 그 규모가 아주 미미하여 전체에만 포함.  
자료: 통계청, 1996~2006년 출생통계자료(원자료).

결혼경과기간별 출산행태는 출산순위별로 분석할 때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첫째아의 출산시기가 결혼 당해연도인 비율은 1996년 11.2%에서 2001년 8.1%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6년에 12.3%까지 증가하였다. 첫째아 출산시기가 결혼 이듬해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50%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시기가 결혼 후 2년째가 되는 해에 결혼한 비율은 2003년 25.9%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21.6%로 나타났다. 첫째아의 출산시기가 결혼 후 3년째 되는 해인 비율은 다소 감소세에 있으나, 1996년 5% 수준에서 2006년 1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요컨대 초산 대부분이 결혼 2년차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

으나, 최근에는 초산시기마저 미루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그러나 2006년에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 부모의 결혼시기가 출산 당해 연도인 비율과 출산 1년 전인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직후 초산 이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 후 6년 이상이 지난 시기에 첫째아를 두는 경향이 2006년에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비자발적인 출산연기(불임 등)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9〉 결혼경과기간별 첫째아 출산 분포

(단위: %)

출생년도	결혼연도							전체
	출생연도-6년이상	출생연도-5	출생연도-4	출생연도-3	출생연도-2	출생연도-1	출생연도=결혼연도	
1996	2.3	1.2	2.4	5.4	18.8	58.9	11.2	100.0
1997	2.3	1.3	2.2	5.4	20.3	58.5	10.1	100.0
1998	2.4	1.2	2.5	6.4	21.9	55.8	9.9	100.0
1999	2.6	1.4	3.0	7.2	23.0	54.2	8.7	100.0
2000	2.8	1.8	3.4	8.0	24.5	50.7	8.8	100.0
2001	3.0	1.9	3.7	8.3	23.4	51.5	8.1	100.0
2002	3.3	2.2	4.0	8.8	25.7	47.8	8.2	100.0
2003	3.5	2.3	4.3	10.1	25.9	45.3	8.7	100.0
2004	3.7	2.4	5.0	9.6	23.1	45.6	10.5	100.0
2005	3.9	2.9	4.8	10.0	22.9	44.0	11.6	100.0
2006	4.2	2.7	5.0	9.9	21.6	44.4	12.3	100.0

자료: 통계청, 1996~2006년 출생통계자료(원자료).

둘째아의 출산 시기는 결혼 후 3~4년차에 집중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결혼 후 6년 이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첫째아 출산을 연기한 결과 둘째아의 출산시기가 늦추어졌거나, 둘째아의 출산을 망설이다가 뒤늦게 출산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셋째아 이상은 주로 결혼 후 6년 이상이 지난 시기에 출산되었는데, 그 비율이 2006년에 다소 상승하였다. 이는 연기하였거나 포기한 셋째아 이상의 출산을 2006년에 이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3-10〉 연도별 둘째아 이상 출산의 결혼 후 경과기간별 분포

(단위: %)

출생년도	결혼연도						출생연도= 결혼연도	전체
	출생연도- 6년이상	출생연도-5	출생연도-4	출생연도-3	출생연도-2	출생연도-1		
둘째아								
1996	19.3	13.4	22.3	25.8	15.9	3.0	0.4	100.0
1997	19.3	14.0	20.2	26.0	16.8	3.3	0.5	100.0
1998	20.2	12.9	20.9	26.1	16.2	3.3	0.4	100.0
1999	20.1	13.6	22.2	25.8	14.8	3.2	0.4	100.0
2000	19.9	14.7	21.7	24.4	16.0	2.9	0.3	100.0
2001	21.4	14.8	21.5	24.4	14.7	3.0	0.3	100.0
2002	22.8	15.1	21.7	23.0	14.1	2.8	0.5	100.0
2003	24.1	16.1	21.8	22.1	12.7	2.8	0.4	100.0
2004	26.5	16.3	22.3	20.1	11.2	2.9	0.7	100.0
2005	27.9	16.8	19.8	20.7	11.1	3.1	0.7	100.0
2006	28.7	15.8	20.7	20.2	10.7	3.1	0.7	100.0
셋째아 이상								
1996	74.5	11.6	7.6	3.1	1.6	1.3	0.3	100.0
1997	74.4	12.0	6.7	3.4	1.8	1.5	0.3	100.0
1998	74.3	11.1	7.4	3.5	2.0	1.5	0.3	100.0
1999	74.1	11.2	7.5	3.1	1.8	2.0	0.3	100.0
2000	72.2	11.6	7.1	3.1	3.8	1.9	0.3	100.0
2001	73.1	11.0	6.6	3.3	3.5	2.2	0.3	100.0
2002	72.5	10.6	6.9	3.3	4.0	2.4	0.4	100.0
2003	72.4	10.3	6.8	3.3	4.1	2.6	0.5	100.0
2004	74.5	10.2	6.7	2.7	2.4	2.8	0.7	100.0
2005	74.4	10.4	5.4	3.3	2.5	3.2	0.8	100.0
2006	75.2	8.9	6.0	3.0	2.5	3.4	1.0	100.0

자료: 통계청, 1996~2006년 출생통계자료(원자료).

출산 지연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에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첫째아 출산시기는 2004년 28.6%, 2003년 25.5%로, 2002년 이전 24.7%로 둘째아 출산이 지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셋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둘째아의 출산연도가 2000년 이전인 비율이 31.8%로 아주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2년 17.9%, 2003년 15.6%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아와 셋째아간 터울이 2~3년(2003~2004년 둘째아 출산) 28.9%, 4년 이상



(2002년 이전 출산) 67.6%로 나타나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자녀터울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2006년에 넷째아 이상을 출산한 여성은 사례수가 적어 직전 출산연도의 분포는 대표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3-11〉 2006년 출산여성의 직전아 출산시기

(단위: 명, %)

직전 출생아 출생연도	출산순위 이행		
	첫째아→둘째아	둘째아→셋째아	셋째아→넷째아이상
2000년 이전	9.1	34.1	22.7
2000년	7.0	7.5	9.1
2001년	8.6	8.1	-
2002년	14.2	17.9	-
2003년	25.5	15.6	18.2
2004년	28.6	13.3	31.8
2005년	5.0	1.2	-
2006년	2.0	2.3	18.2
계	100.0(745)	100.0(173)	100.0(22)

주: 직전출생아의 출생연도별 출산이행 여부는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 2007. 10.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에서 출산 연기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2006년 출산 여성의 상당 비율이 그 동안 연기하였거나 중단하였던 출산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6년 출산의 83.0%가 계획되었으며, 10.4%는 연기 중(이하 ‘연기중출산’으로 표기) 그리고 6.5%는 중단 중(이하 ‘중단중출산’으로 표기)에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출산 증가는 연기되었거나 중단된 출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연기중출산은 출산시기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출산의 순증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중단중출산이 출산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2006년도 출산 중 출산시기 조정에 따른 단기적인 출산증가분이 순수한 출산증가(중단중출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2006년 출산순증가는 약 7%로 산정할 수 있다.<sup>21)</sup>

21) 출산순증가분=중단중출산분/(연기중출산비율+계획출산비율)×100(%).

〈표 1-3-12〉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계획출산 여부

(단위: %, 명)

구 분	계획출산	연기중출산	중단중출산	계(n)
전체	83.0	10.4	6.5	100.0(1,880)
연령***				
20~24세	79.6	20.4	-	100.0( 54)
25~29세	81.2	16.6	2.2	100.0( 463)
30~34세	85.0	9.9	5.1	100.0( 903)
35~39세	82.2	4.3	13.5	100.0( 394)
40세 이상	75.4	3.3	21.3	100.0( 61)
출산순위***				
첫째아	89.0	10.6	0.3	100.0( 874)
둘째아	82.5	11.4	6.0	100.0( 795)
셋째아	60.7	5.5	33.9	100.0( 183)
넷째아이상	54.5	0.0	45.5	100.0( 22)
결혼연도***				
2001년 이전	77.3	2.8	19.9	100.0( 423)
2001년	82.5	7.2	10.2	100.0( 166)
2002년	81.7	13.7	4.6	100.0( 219)
2003년	87.4	10.2	2.4	100.0( 254)
2004년	89.0	9.3	1.7	100.0( 300)
2005년	85.7	14.3	-	100.0( 428)
2006년	67.2	32.8	-	100.0( 67)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2006년 출산 여성의 연령별 연기중출산 비율은 20~24세에서 20.4%로 가장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중단중출산 비율은 저연령층에서 거의 무시할 수준이나, 35~39세 13.5%, 40세 이상 21.3%로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2006년 출생아의 출산순위별 중단중출산 비율은 셋째아의 경우 33.9%, 넷째아 이상의 경우 45.5%로 고순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결혼연도별 연기중출산 비율은 최근에 결혼한 여성일수록 높은 반면, 중단중출산 비율은 오래 전에 결혼한 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고순위 출산은 단산 이후에 출산한 경우로서 이들을 출산한 여성은 오래 전에 결혼한 고연령층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여성들의

비중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연기중출산 여성들은 주로 최근에 결혼한 저연령층으로서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 2. ‘쌍춘년 효과’에 대한 검토

앞선 분석 결과에서 결혼(특히 초혼)이 2006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혼분이 2006년 당년에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은 과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당해연도에 첫째아를 출산한 비율은 1996년 11.2%에서 2001년 8.1%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2.3%로 나타났다.

〈표 1-3-13〉 연도별 출생아수의 월별 분포와 차이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ID
1995	9.7	9.2	8.7	7.3	7.4	7.3	7.7	8.4	8.6	8.8	8.3	8.6	100.0	-
1996	9.8	8.9	8.8	7.7	7.3	7.0	7.8	8.3	8.7	9.2	8.2	8.3	100.0	0.9
1997	9.3	8.4	8.8	7.9	7.7	7.3	8.1	8.3	8.7	8.9	8.2	8.5	100.0	1.3
1998	9.6	8.9	9.0	8.0	7.5	7.3	7.9	8.2	8.8	8.6	8.1	8.2	100.0	1.1
1999	13.2	8.3	8.7	7.8	7.5	7.0	7.6	7.8	8.2	8.2	7.8	7.9	100.0	3.5
2000	10.0	9.0	9.1	8.0	7.7	7.0	7.6	8.1	8.5	8.6	8.2	8.0	100.0	3.2
2001	10.1	8.8	9.2	8.1	7.9	7.2	7.7	8.0	8.5	8.5	8.0	7.9	100.0	0.8
2002	10.0	8.7	9.2	8.3	8.0	7.3	8.1	8.3	8.3	8.3	7.9	7.7	100.0	1.1
2003	9.3	8.5	9.0	8.3	7.9	7.3	7.7	8.0	8.7	8.9	8.4	8.2	100.0	2.0
2004	9.6	8.5	9.2	8.0	7.7	7.3	8.2	8.3	8.5	8.8	8.1	7.7	100.0	1.4
2005	9.6	8.2	9.2	8.0	7.7	7.3	7.9	8.4	8.7	8.7	8.4	7.9	100.0	0.7
2006	9.2	8.4	8.9	8.0	7.8	7.5	7.8	8.5	8.6	8.7	8.4	8.1	100.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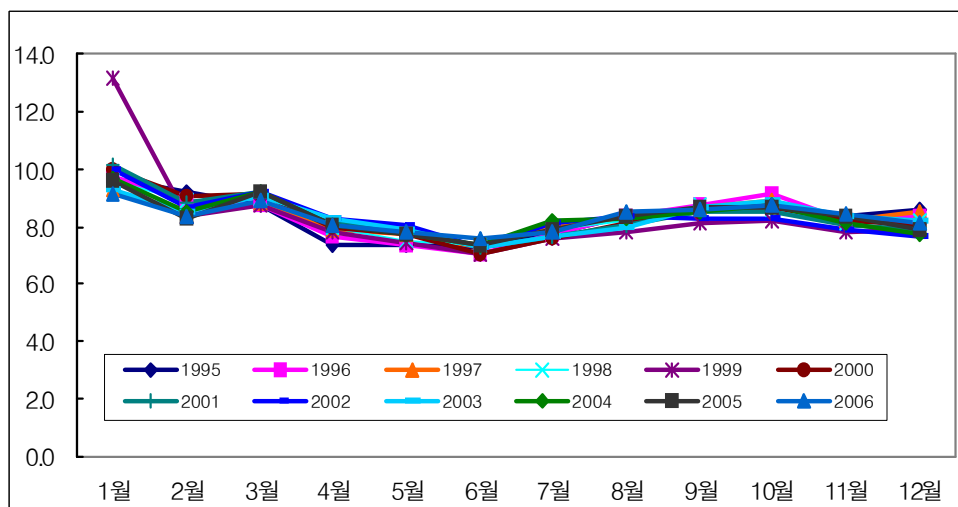
자료원: 통계청, 출생통계자료(원자료)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사이에 결혼 직후의 출산을 기피한 경향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그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져 2005년부터는 1990년대 중반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 2006년도 결혼 당해연도에 첫째아를 출산한 비율은

1996~1997년 그리고 2004~2005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을 뿐이다. 요컨대, 2006년 ‘쌍춘년’의 결혼붐의 효과는 당해연도의 출산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출산에 대한 ‘쌍춘년 효과’는 2006년 보다는 2007년 및 그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결혼붐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06년 월별 출생아수 분포와 이전 연도의 월별 출생아수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6년에 결혼한 여성이 2006년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후에 임신하는 것을 가정할 때 연초에 결혼하여 그 해 하반기(주로 10~12월)에 출산을 하여야 한다. 그 경우 2006년 10~12월 사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 2006년 1~9월의 출생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2006년 10~12월의 출생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림 1-3-6] 연도별 출생아수의 월별 분포



그러나 <그림 1-3-6>에서 볼 수 있듯이, 2006년 출생아의 월별 분포는 과거 (1996~2005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량적으

로 증명하기 위해서 인접연도간 월별 분포 차이의 절대치를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2로 나눈 차이성지수(Index of Dissimilarity, ID)를 산출하였다. 차이성지수가 클수록 전년도 출생아수의 월별 분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05~2006년간의 차이성지수는 0.9로 2000~2001년과 2004~2005년에 비해서만 다소 높을 뿐, 과거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이는 2006년 결혼률이 2006년 월별 출생아수 분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제 4 절 2006년 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결과의 함의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우선적으로 인구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 인구학적 요소들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출산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요소 중에는 직접 출산을 하는 가임기여성의 규모가 포함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대부분 가임기여성은 법률적 결혼을 통해 출산하므로, 결혼수준의 변동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인구학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임기여성의 규모와 결혼수준을 들 수 있다. 혼인력이나 출산력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요소들의 영향력은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6년에 출생아수와 출산율 증가는 가임기여성의 연령구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 결혼(율)이 2006년 출생아수와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특정 연도의 출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년 동안 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야 가능하다. 환언하면, 최근의 출산 증가는 그 동안 결혼 증가가 누적되어 왔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초혼건수 증가는 그동안 연기되었던 결혼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이혼 감소에 따른 가족안정화와 재혼 증가는 총합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가

임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출산력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06년 출산 증가는 그 동안 연기되었던 출산이 최근에 이행되었으며, 중단 후 추가 출산의 이행도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획되었거나 연기되었던 출산을 2006년에 이행하는 것과 중단된 출산을 2006년에 추가로 이행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시기를 조절(tempo effect)한 것으로 실제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추가적인 출산이행은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추후 분석에서 출산유형(계획중출산, 연기중출산, 중단중출산)을 구별하여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2006년 ‘쌍춘년’ 효과가 2006년 출산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효과는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제 4 장 경기변동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경기과 출산율의 변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개인이나 부부는 경기가 가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체감정도에 따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행 정도를 달리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경기변동과 2006년 출산과의 보다 정밀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 모두를 적용하도록 한다.

### 제1절 거시적 접근: 거시경제 흐름과 혼인 및 출산 동향

#### 1. 개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부터 크게 낮아지고 또한 혼인건수도 매년 줄어왔다. 비록 2006년에 출산율과 혼인건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목할 만큼 낮아진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 등에 대하여 인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설명이 시도되어 왔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인 요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열악한 보육환경, 사회제도 및 가족 내에 만연하는 젠더불평등 등을 혼인 및 출산 변화의 원인으로 지적해 왔는데, 그동안 저출산력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2006년 합계출산율이 2005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고, 출산아 수도 전년에 비해 증가한 사실은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위 요소들 가운데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것으로 예측된다. 비록 통계청에서 2006년 합계출산율을 발표하면서 2006년 쌍춘년과 2007

년 황금돼지해 등 다소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을 증가한 출산력과 혼인건수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학계와 언론에서는 거시경제상황의 변화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시경제상황이 실제로 증가한 출산과 혼인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경험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비단 최근 출산 동향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IMF 경제위기와 함께 크게 낮아진 출산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산 동향과 경제상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화된 검증은 아직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다.

물론 합계출산율이 다소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예전에 출산력이 매우 높았을 때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측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선불리 1~2년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검증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출산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 시점이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노동시장 및 가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던 때였으므로, 거시경제 지표와 출산 동향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인 자료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그 학문적 정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단지 2006년의 높아진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를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거시경제 흐름과 혼인 및 출산과의 관계를 계량화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어 오지 않았던 바, 이러한 시도는 지난 10년간의 국내 출산 동향을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이후 저출산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위기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연구들이 존재한다.<sup>22)</sup> 이들 연구는 경제위기를 우리나라의 출산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선정하고 출산과 관련된 위험요소들이 이전 시기와 달라지게 된 점 등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출산과 혼인의 동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만이 아닌 다른 복합적인 요소들의 공통적인 작용의 결과

22) 김두섭(2007a; 2007b), 이성용(2006), 공선영(2006) 등을 참조한다.



로서 출산력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출산 동향의 직접적인 혹은 계량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된 분석이 cross-sectional한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실제 출산 동향은 코호트를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분석하는데 당연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단순히 IMF이전과 이후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관련 위험요소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록 김두섭(2007)의 저서가 거시경제 흐름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경험적인 자료의 분석 없이 2차자료 위주의 간접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어 경제와 출산 관계의 큰 흐름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가능했지만, 상호간 미세한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논의에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거시적인 경제 동향과 남녀의 혼인 및 출산 동향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인 자료를 근거로 계량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으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변화의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분석에 이용된 주된 자료는 1995~2005년 사이의 혼인과 출산 원자료이다. 분석은 월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성과 연령별로 나누어 이루어 졌는데,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로부터 가장 차별되는 특징은 바로 연령, 코호트, 그리고 기간효과를 모두 고려하고자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가임기 여성 모두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세 후반에서 30세 초반에 거의 모든 출산이 이루어진다. 그 이전과 이후의 연령대는 비록 가임기에 있지만 출산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마찬가지로 혼인의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상황의 변화에 둔감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합계출산율이 2002년부터 갑자기 떨어지게 된 데에 대해 IMF세대의 출산 동향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IMF 직후의 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코호트의 출산 경험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코호트의 일생에서 출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세 후반에서 30세 초반까지 이므로 이 이외의 연령대는 경제 상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분석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제위기가 출산 동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당시의 모든 가임기 여성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보다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대에 특별히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경우 역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대의 혼인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95~2005년 사이에 26~35세를 경험한 모든 코호트의 월별 출산율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연령, 기간, 그리고 코호트 효과를 동시에 분석에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혼인과 출산 동향의 파악은 성/연령 그리고 월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사용하였다. 혼인과 출산 원자료는 혼인과 출산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이 제시되어 있다. 만일 혼인건수와 출산건수를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한다면 이 두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할 수 있지만, 혼인과 출산은 각 연령대의 인구 크기에 의해 그 건수가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건수 보다는 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분석 방법이다. 그런데 혼인과 출산은 매월의 동향 정보가 가능한 반면 율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분모인 각 성과 연령의 전체 인구 크기는 현재 월별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추계인구를 그 해에 포함된 12개월의 분모로 사용하여 월별 혼인 및 출산율을 산출하였다. 비록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26~35세의 연령대에 사망률이 높지 않다는 점과 인구의 해외로의 입출입이 혼인율과 출산율 산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제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지만, 1995년부터 월별 혹은 최소 분기별 정보가 존재하는 변수들로 대상을 한정하였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각 연령대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주는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①전체연령과 성을 모두 포함하는 경제활동참가율, ②전체 연령을 포함하지만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③분기별 경제성장율, ④소비자물가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각 연령대가 경험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별, 연령별 ⑤실업율과 ⑥고용율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이 여섯 개 변수들이 모

두 한 시점의 경제 상황을 표현하는 정보들을 나타내므로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만일 실제로 그렇다면 뒤에서 실시되는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남녀 각각 경제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록 전체연령과 특정연령의 비교이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 실업률이 0.6이 넘는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고, 또한 고용율과 실업률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고졸 및 대졸 경제활동참가율과 매우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비록 통계적으로 다중공선성이 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편기(bias)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efficiency)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와 연령, 성 및 계층의 경제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이루어졌다.

분석은 먼저 남녀 별도로 혼인율과 출산율의 연령, 연도, 각 경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혼인과 출산율이 연령과 기간을 통제 한 후에 경제변수들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출산의 경우 임신시간을 고려할 때 당해의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출산으로부터 최소한 10개월 이전의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출산 1년 전의 경제상황과 2년 전의 경제상황을 분석에서 고려하였다. 혼인의 경우 당해 경기상황이 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혼인의 결정 역시 일정기간의 연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의 경제 상황이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혼인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은 경제변수를 혼인의 경우 혼인시점과 1년 전의 상황, 그리고 출산의 경우 1년 전과 2년 전의 경제상황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 2. 혼인율 분석 결과

### 가. 혼인율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우선 혼인율과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상관계수는 크고 양의 수 일수록

그 연령대의 혼인율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1995~2005년을 종합하여 볼 때, 남성은 27~29세에 혼인이 크게 몰려 있으며 그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여성은 26세에 혼인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29세 이후 그것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표 1-4-1〉 혼인율과 연령간의 상관계수

구분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남성	0.13*	0.22*	0.23*	0.23*	0.09*	-0.03	-0.14*	-0.22*	-0.26*	-0.28*
여성	0.52*	0.37*	0.16*	0.03	-0.09*	-0.15*	-0.19*	-0.22*	-0.22*	-0.23*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표 1-4-1>은 남녀 각각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혼인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율과 연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혼인율만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은 1995년과 1996년에 혼인율이 높았지만 이후 다소 떨어지기 시작하여 2004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혼인율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연도별 혼인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1-4-2〉 혼인율과 연도간의 상관계수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남성	0.15*	0.10*	0.04	0.04	-0.01	-0.01
여성	0.02	-0.01	-0.02	-0.01	-0.00	-0.01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성	-0.03	-0.05	-0.04	-0.06*	-0.13*	
여성	0.00	0.01	0.03	0.02	-0.03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표 1-4-2>는 혼인이 이루어진 시점의 경제상황과 혼인율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혼인율과 음 및 양의 서로 다

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남녀 유사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1-4-3〉 혼인율과 당해 경제변수간의 상관계수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연령·성별 실업률	연령·성별 고용률
남성	-0.37*	-0.02	-0.21*	0.24*	-0.41*
여성	0.34*	-0.13*	0.02	0.41*	-0.47*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표 1-4-3>에서 전반적으로 남녀 혼인율의 경제변수들과의 관계가 혼인 당시의 시점과 1년 전의 시점이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서 확인된 혼인과 경제변수들과의 관계가 1년 전 경제변수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남성의 혼인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의 관계, 여성의 경제성장률과 혼인율의 관계 또한 실업률과 혼인율의 관계 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지만 본 분석은 혼인연령, 연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원상관관계이므로 본 결과에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기 어렵다.

〈표 1-4-4〉 혼인율과 1년 전의 경제변수간의 상관계수

구분	전체경황율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연령·성별 실업률	연령·성별 고용률
남성	-0.39*	-0.02	-0.22*	0.22*	-0.41*
여성	0.37*	-0.13*	0.01	0.34*	-0.4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 나. 회귀분석 결과: 남성

남성의 [기본모형A](연령은 30세 기준, 연도는 2002년 기준)는 분석에 포함된 연령군의 남성 연령별 혼인율을 연령과 혼인시점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준화계수의 크기는 혼인율과의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고, 음과 양의 표시는 관계의 방

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t통계와 유의확률은 모두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게 하는데, 만일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그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연령의 경우 30세에 비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연도의 경우 2002년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에 season이라는 변수가 포함되었는데, 우리나라의 혼인은 4, 5, 10 그리고 11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계절성(seasonality)을 보정하기 위하여 포함된 더미변수로서 그 계수는 위 4개월에 나머지 8개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혼인이 더욱 많이 이루어졌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인의 시점과 계절성(seasonality)을 보정할 때, 남성의 혼인은 30세를 기점으로 상승하다가 크게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의 경우, 연령과 seasonality를 통제한 후 2002년 대비 1990년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혼인율을 보인 반면 2002년 후에는 2005년 크게 낮아진 혼인율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상대로 혼인이 집중된 4개월 동안에는 매우 높은 혼인율이 나타났다.

[모형B-1]에서 당해 경제변수(경제성장률,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성·연령별 실업률)의 고려가 2002년과 비교하여 2000년대 대부분 연도의 혼인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만들었다. 이는 2002년 이후 혼인율이 크게 낮아지는데 있어 경제 상황의 역할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분석에 포함된 경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로부터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 egr)의 회귀계수는 -0.067로서 그 효과의 크기는 작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즉 연령과 혼인시기를 통제하였을 때, 남성들의 혼인은 혼인시점의 경제성장률과 역의 관계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sobija)와 실업률(unemploy)은 모두 혼인율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률이 높을수록 당해 혼인도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다. 즉 경기 상황이 좋을 때 오히려 혼인율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시장이 계층별로 상황의 변화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혼인율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계층별 경기 상황의 혼인율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1-4-5〉 남성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기본모형(A)	B-1	B-2	C-1	C-2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상수)	14.65**	-1.935†	-0.981	-6.988***	-0.452
26세	0.03 ( 1.29)	-0.02 ( -0.70)	0.03 ( 1.35)	0.05 * ( 2.08)	0.03 ( 1.35)
27세	0.12 *** ( 5.05)	0.07 * ( -2.15)	0.12 *** ( 5.30)	0.14 *** ( 5.89)	0.12 *** ( 5.31)
28세	0.13 *** ( 5.43)	0.08 * ( -2.44)	0.13 *** ( 5.70)	0.14 *** ( 6.27)	0.13 *** ( 5.70)
29세	0.12 *** ( 5.35)	0.07 * ( -2.38)	0.13 *** ( 5.61)	0.14 *** ( 6.19)	0.13 *** ( 5.62)
31세	-0.11 *** ( -4.86)	-0.11 *** ( -4.88)	-0.11 *** ( -5.1)	-0.34 *** ( -7.89)	-0.11 *** ( -5.10)
32세	-0.21 *** ( -8.84)	-0.21 *** ( -8.89)	-0.21 *** ( -9.28)	-0.43 *** ( -10.05)	-0.21 *** ( -9.29)
33세	-0.28 *** ( -12.02)	-0.28 *** ( -12.08)	-0.28 *** ( -12.61)	-0.51 *** ( -11.77)	-0.28 *** ( -12.62)
34세	-0.31 *** ( -13.34)	-0.31 *** ( -13.37)	-0.31 *** ( -14.01)	-0.53 *** ( -12.57)	-0.31 *** ( -14.02)
35세	-0.32 *** ( -13.97)	-0.30 *** ( -13.25)	-0.32 *** ( -14.67)	-0.53 *** ( -12.92)	-0.32 *** ( -14.67)
1995년	0.12 *** ( 5.42)	0.48 *** ( -3.50)	0.06 ( 0.96)	0.04 ( 1.34)	0.12 † ( 1.72)
1996년	0.10 *** ( 4.48)	0.41 *** ( -3.43)	0.07 ( 1.33)	0.05 † ( 1.69)	0.08 ( 1.02)
1997년	0.08 *** ( 3.45)	0.33 *** ( -3.19)	0.06 ( 1.17)	0.04 ( 1.34)	0.08 ( 1.18)
1998년	0.08 *** ( 3.28)	0.12 † ( -1.76)	0.09 ** ( 2.65)	0.02 ( 0.57)	0.08 ( 1.32)
1999년	0.05 * ( 2.25)	0.14 * ( -2.35)	0.14 *** ( 5.01)	-0.17 *** ( -4.38)	0.04 ( 1.0)
2000년	0.03 ( 1.35)	0.11 * ( -2.40)	0.13 *** ( 4.31)	-0.06 † ( -1.92)	0.08 ** ( 2.89)
2001년	0.01 ( 0.53)	0.04 ( -1.44)	0.04 ( 1.42)	-0.01 ( -0.59)	0.09 *** ( 3.39)
2003년	0.00 ( -0.16)	-0.06 * ( -1.96)	-0.08 ** ( -2.78)	0.02 ( 0.84)	-0.01 ( -0.38)
2004년	-0.02 ( -0.72)	-0.15 ** ( -2.83)	-0.04 † ( -1.66)	-0.01 ( -0.44)	-0.13 *** ( -4.63)
2005년	-0.07 *** ( -3.11)	-0.24 *** ( -3.50)	-0.14 *** ( -4.37)	-0.05 * ( -2.01)	-0.14 *** ( -5.69)
season	0.47 *** ( 26.97)	0.47 *** ( 26.14)	0.51 *** ( 25.10)	0.47 *** ( 27.54)	0.52 *** ( 25.68)
경제성장률		-0.07 ** ( -2.94)	0.00 ( 0.13)	-0.07 ** ( -2.91)	0.01 ( 0.54)
소비자물가지수		0.52 * ( 2.41)			
실업률		0.14 ** ( 2.58)		0.23 *** ( 4.33)	
초졸경험률(1년전)			-0.23 *** ( -9.85)		-0.24 *** ( -10.24)
중졸경험률(1년전)			0.06 ( 1.06)		-0.05 ( -0.87)
고졸경험률(1년전)			-0.32 *** ( -6.10)		-0.29 *** ( -5.31)
대졸경험률(1년전)			0.41 *** ( 4.04)		0.42 *** ( 3.67)
경제활동참가율				0.58 *** ( 7.79)	
Adj R <sup>2</sup>	0.611	0.615	0.647	0.630	0.647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B-1) 당해 경제변수 포함(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성·연령별 실업률)

B-2) 당해 경제변수 포함(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C-1) 1년 전 경제 상황(경제성장률, 전체연령 경제활동참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성·연령별 실업률)

C-1) 1년 전 경제 상황(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모형B-2](당해 경제변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포함)는 교육수준별로 다른 노동시장의 상황이 혼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먼저 연령의 경우 앞선 모형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혼인 연도의 혼인율에 대한 효과는 크게 변하였는데, 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상황의 반영이 연도의 효과를 크게 축소하였으며 특히 2002년 이전 연도의 효과가 더욱 그러하였다. 경제 변수들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초졸자들과 고졸자들의 노동시장은 당해 혼인과 역의 관계가 있었지만 대졸자들의 노동시장은 매우 큰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당해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좋은 것이 연령과 연도를 보정한 후 혼인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혼인의 결정이 혼인 당시의 경기 상황보다는 선행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 1년 전의 경제 상황이 당해의 혼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형C-1](1년 전 경제 상황 경제성장율, 전체연령 경제활동참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성·연령별 실업률 포함)은 혼인 시점으로부터 1년 전 경제 상황이 혼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본 모형에는 1년 전 경제 상황변수로 전체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율 그리고 연령·성별 실업률이 포함되었다. 연령의 경우 앞서 혼인 시점의 경제 상황이 고려되었을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도의 효과는 그 크기와 방향은 변화가 없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이 거의 사라져 1년 전 경제 상황이 연도의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1년 전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았던 것이 남성들의 혼인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혼인을 한 연령대의 1년 전 실업률도 기대와 달리 혼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지만 실업률이 어떠한 계층의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육수준별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형 C-2](1년 전 경제상황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포함)에서 교육수준별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연령의 효과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혼인 시점의 효과에는 이전 모형과 비교할 때 변화가 보이는데, 2000년 이후 연도의 회귀계수가 200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2002년에 비교할 때 2004년과 2005년의 남성 혼인율은 교육수준별 노동시장의 여건



이 고려되자 혼인율에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의 교육수준별 노동시장은 대졸 이상자의 고용이 활발할 때 혼인율에 영향을 크게 끼쳤음을 알 수 있는데, 회귀계수의 크기를 보아도 혼인의 seasonality 다음으로 대졸자들의 1년 전 고용상황이 1년 후 26~35세의 혼인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

[모형A] 즉, 혼인연령과 연도, 그리고 seasonality가 포함된 기본모형에서 여성의 경우 26세 때 가장 높은 혼인율을 보이고 이후 점차 줄어들다가 30세를 기준으로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는 어떠한 연도도 2002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여성의 혼인에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4월, 5월, 10월, 11월은 여성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모형B-1]에서 당해 경제변수로서 경제성장률,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성·연령별 실업률 등 혼인 시점의 경제상황변수들이 동시에 고려되자, 연령효과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지만 혼인연도의 효과는 크게 변화하였다. 1995~1997년은 혼인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고, 반면 2004년과 2005년은 2002년에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준으로 여성의 혼인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모형에 포함된 경제상황변수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성·연령별실업률과 소비자물가지수인데, 높은 여성의 실업률이 혼인율도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인으로 실업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행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았던 시점에 혼인율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B-2](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의 당해 경제변수 포함)에서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여건이 고려되자 연령과 연도의 혼인율에 대한 효과는 앞선 모형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연도의 회귀계수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다.

〈표 1-4-6〉 여성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기본모형(A)	B-1	B-2	C-1	C-2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상수)	7.695***	-3.026**	-3.409***	-2.266*	-4.249***
26세	0.55 *** (26.38)	0.51 *** (18.13)	0.55 *** (27.30)	0.55 *** (26.47)	0.55 *** (27.75)
27세	0.41 *** (19.64)	0.37 *** (13.14)	0.41 *** (20.35)	0.41 *** (19.70)	0.41 *** (20.66)
28세	0.23 *** (10.91)	0.19 *** (6.69)	0.23 *** (11.35)	0.23 *** (10.95)	0.23 *** (11.48)
29세	0.10 *** (4.91)	0.06 * (2.26)	0.10 *** (5.16)	0.10 *** (4.92)	0.10 *** (5.16)
31세	-0.06 ** (-2.82)	-0.06 ** (-2.98)	-0.06 ** (-2.95)	-0.02 (-0.54)	-0.06 ** (-3.04)
32세	-0.10 *** (-4.59)	-0.10 *** (-4.75)	-0.10 *** (-4.80)	-0.05 † (-1.86)	-0.10 *** (-4.87)
33세	-0.12 *** (-5.86)	-0.12 *** (-6.03)	-0.12 *** (-6.13)	-0.08 ** (-2.81)	-0.12 *** (-6.19)
34세	-0.13 *** (-6.57)	-0.14 *** (-6.68)	-0.13 *** (-6.79)	-0.09 *** (-3.34)	-0.14 *** (-6.94)
35세	-0.14 *** (-7.02)	-0.10 *** (-4.27)	-0.14 *** (-7.11)	-0.10 *** (-3.60)	-0.14 *** (-7.37)
1995년	-0.04 † (-1.83)	0.39 *** (3.23)	0.12 *** (4.14)	0.27 * (2.23)	0.14 *** (4.78)
1996년	-0.03 † (-1.65)	0.35 *** (3.25)	0.06 * (2.37)	0.26 * (2.34)	0.11 *** (3.90)
1997년	-0.03 (-1.35)	0.30 *** (3.21)	0.01 (0.40)	0.23 * (2.34)	0.04 (1.32)
1998년	-0.01 (-0.54)	0.08 (1.50)	0.11 *** (3.61)	0.18 * (2.41)	-0.02 (-0.66)
1999년	-0.01 (-0.49)	0.08 (1.61)	0.11 *** (3.82)	0.02 (0.46)	0.09 *** (3.19)
2000년	-0.01 (-0.51)	0.10 * (2.38)	0.06 * (2.51)	0.02 (0.48)	0.09 *** (3.58)
2001년	-0.00 (-0.16)	0.04 (1.63)	0.03 (1.34)	0.04 (1.47)	0.04 * (1.99)
2003년	0.02 (0.92)	-0.05 † (-1.77)	0.03 (1.06)	-0.01 (-0.55)	-0.02 (-0.83)
2004년	0.02 (0.74)	-0.13 ** (-2.76)	-0.00 (-0.04)	-0.07 † (-1.74)	-0.02 (-0.53)
2005년	-0.03 (-1.58)	-0.23 *** (-3.78)	-0.07 * (-1.71)	-0.17 ** (-2.88)	-0.10 * (-2.55)
season	0.33 *** (21.62)	0.33 *** (20.83)	0.37 *** (21.42)	0.33 *** (20.80)	0.37 *** (21.84)
경제성장율		0.00 (-0.03)	0.01 (0.63)	0.01 (0.42)	0.10 (0.68)
소비자물가지수		0.67 *** (3.41)		0.46 * (2.36)	
실업율		0.16 *** (3.51)		0.14 ** (2.93)	
초졸 경합율(1년전)			-0.25 *** (-10.61)		-0.26 *** (-11.36)
중졸 경합율(1년전)			0.08 * (2.16)		0.07 * (1.97)
고졸 경합율(1년전)			-0.07 (-1.28)		-0.06 (-1.21)
대졸 경합율(1년전)			0.18 *** (4.59)		0.23 *** (5.53)
경제활동참가율		-0.056 * (-1.70)		-0.00 (-0.13)	
Adj R <sup>2</sup>	0.695	0.699	0.721	0.697	0.725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B-1) 당해 경제변수 포함(경제성장율, 소비자물가지수, 성·연령별 실업율)

B-2) 당해 경제변수 포함(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율)

C-1) 1년 전 경제 상황(경제성장율, 전체연령 경제활동참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성·연령별 실업율)

C-1) 1년 전 경제 상황(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교육수준의 당해 혼인율에 주는 영향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고용은 혼인에 음의 영향력을 미쳤고, 반대로 대졸자들의 노동시장은 혼인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인 당시의 경제 상황보다 선행하는 경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1년 전의 경제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형C-1]에는 1년 전의 경제상황 가운데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성·연령별 실업률이 고려되었다. 이전 모형들과 비교하여 볼 때, 연령과 연도의 혼인율에 대한 효과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앞서 남성들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활동참가율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혼인율에 매우 큰 양의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남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였다.

[모형C-2]에서는 혼인 시점 1년 전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어주는 변수 가운데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여건을 나타내는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성장률과 함께 모형에 포함되었다. 연령과 혼인 연도의 효과에 다소 변화가 보였지만 이전 모형들과 비교할 때 크게 주목할 만한 것들은 아니었다. 앞서 남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졸업자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날 시점에는 1년 뒤 혼인이 줄어드는 반면 대졸자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1년 뒤의 시점에는 혼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주요 결과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해 및 1년 전의 경기 상황은 남성과 여성의 혼인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첫째, 남성은 28-29세 혼인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여성은 26세 혼인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남녀 모두 1995-1997년의 혼인율이 가장 높았고, 2002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2005년의 혼인율은 매우 낮게 떨어졌다.

셋째, 당해 혹은 1년 전의 경제 상황의 고려는 위의 연령과 혼인 연도의 혼인율에

대한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였고, 이는 경제 상황의 혼인에 대한 영향력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adjusted R-squared는 본 분석에 포함된 모형들이 지난 10년 간 26~35세 연령층의 월별 혼인율의 변화를 매우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특히 경제 변수들 가운데에서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모형의 설명력을 더욱 높여주었는데, 남녀 모두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었을 경우 다음해의 혼인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가장 일반적인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은 혼인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성장률이 기업과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주로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짐작된다.

일곱째,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반대로 물가가 높았을 때 혼인율을 낮추는 결과로 나왔는데, 이는 비록 소비자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1995년부터 200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액면가대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본 연구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포함하지 않는 모형도 확인해 보았는데, 위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출산율 분석 결과

#### 가. 출산율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출산율과 연령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성의 경우 28세까지 출산율이 낮다가 29세 이후 32세까지 출산이 증가하고, 이후 34세부터 다시 출산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여자는 26세부터 28세까지 출산이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줄어드지만, 31세 이후 크게 감소하여 출산율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출산과 연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성의 출산율은 1995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는데, 1999년에 그 폭이 매우 컸으며, 이후 더욱 감소하여 2005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4-7〉 출산율과 연령간의 상관계수

구분	26세	27	28	29	30	31	32	33	34	35
남성	-0.47*	-0.21*	0.01	0.19*	0.31*	0.29*	0.20*	0.04	-0.13*	-0.27*
여성	0.21*	0.35*	0.37*	0.27*	0.12*	-0.04	-0.19*	-0.32*	-0.39*	-0.44*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여성의 출산율은 남성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지만 1995~96년에 다소 출산이 많았지만, 이후는 2001년까지 관련성을 보이지 않다가 2002년부터 역방향의 관련성 즉 출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통해 알려진 우리나라의 출산 동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표 1-4-8〉 출산율과 연도간의 상관계수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남성	0.29*	0.22*	0.14*	0.13*	0.04	0.07*
	2001	2002	2003	2004	2005	
	-0.06*	-0.17*	-0.17*	-0.19*	-0.25*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여성	0.17*	0.10*	0.04	0.04	-0.00	0.04
	2001	2002	2003	2004	2005	
	-0.03	-0.08*	-0.07*	-0.07*	-0.11*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출산은 출산 당시의 경제 상황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출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변수들과 남녀의 연령별, 월별 출산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남성의 경우 출산은 1년 전 전체인구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성·연령별 실업률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1-4-9〉 출산율과 경제변수간의 상관계수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연령·성별 실업률	연령·성별 고용율
남성	0.34*	0.02	-0.50*	-0.20*	0.04
여성	0.29*	-0.13*	-0.20*	0.41*	-0.65*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여성의 경우도 출산율은 1년 전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이 현재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성·연령별 실업율과 고용율은 남성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 여성의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반면 고용율은 떨어질수록 1년 뒤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출산으로 인해 고용에서 탈락하여 실업이 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 나. 회귀분석 결과: 남성

[모형A]의 기본모형(연령은 30세 기준, 연도는 2002년 기준)에서 출산 시점을 고려한 후 연령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의 표준화 계수가 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이 되는 30세에 비교해서 모두 출산율이 낮았음을 의미하므로, 남성은 지난 10년간 출산 연도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30세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고, 이를 기점으로 낮은 연령과 높은 연령 모두 30세에서 멀어질수록 출산율이 더욱 낮았다. 한편 출산 연령을 보정한 후 출산 연도의 경우 2002년에 비해 199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나타났고, 2004년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결과는 출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크게 다름이 없었다.

[모형B-1](1년 전 경제변수 경제성장율,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성·연령별 실업률 포함)에서는 앞서 혼인율의 분석에서와 달리 소비자물가지수를 분석에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비록 약간의 예외가 존재하지만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반면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회귀계수가 이 변수의 출산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보다는 추세를 반영할 가능

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출산시점보다 1년 빠른 시점의 경제 상황의 고려는 연령과 출산 연도의 효과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표 1-4-10〉 남성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모형

구분	기본모형(A)		B-1		B-2	
	$\beta$	(t)	$\beta$	(t)	$\beta$	(t)
(상수)	58.445***		-13.367***		5.939***	
26세	-0.69 ***	(-43.25)	-0.66 ***	(-45.61)	-0.69 ***	(-46.74)
27세	-0.46 ***	(-28.94)	-0.44 ***	(-29.88)	-0.46 ***	(-31.28)
28세	-0.27 ***	(-16.60)	-0.24 ***	(-16.32)	-0.27 ***	(-17.95)
29세	-0.11 ***	( -6.66)	-0.08 ***	( -5.38)	-0.11 ***	( -7.19)
31세	-0.01	( -0.80)	-0.35 ***	(-12.97)	-0.01	( -0.86)
32세	-0.09 ***	( -5.73)	-0.43 ***	(-15.87)	-0.09 ***	( -6.19)
33세	-0.23 ***	(-14.64)	-0.58 ***	(-21.12)	-0.23 ***	(-15.82)
34세	-0.35 ***	(-22.33)	-0.69 ***	(-25.79)	-0.35 ***	(-24.13)
35세	-0.45 ***	(-29.01)	-0.77 ***	(-29.80)	-0.45 ***	(-31.35)
1995년	0.37 ***	( 24.05)	0.23 ***	( 12.73)	0.59 ***	( 14.31)
1996년	0.32 ***	( 20.28)	0.22 ***	( 11.56)	0.54 ***	( 12.24)
1997년	0.28 ***	( 17.15)	0.19 ***	( 10.57)	0.49 ***	( 12.33)
1998년	0.27 ***	( 16.46)	0.17 ***	( 9.97)	0.48 ***	( 12.57)
1999년	0.19 ***	( 11.60)	-0.08 ***	( -3.20)	0.27 ***	( 11.05)
2000년	0.21 ***	( 13.08)	0.10 ***	( 5.34)	0.27 ***	( 14.79)
2001년	0.09 ***	( 5.76)	0.06 ***	( 4.06)	0.13 ***	( 7.61)
2003년	0.00	( 0.02)	0.02	( 1.04)	0.02	( 1.43)
2004년	-0.03	( -1.56)	-0.01	( -0.90)	-0.08 ***	( -4.47)
2005년	-0.08 ***	( -4.81)	-0.04 *	( -2.39)	-0.13 ***	( -7.78)
경제활동참가율1			0.81 ***	( 17.27)		
실업율1			0.25 ***	( 7.44)		
경제성장율1			-0.04 **	( -3.09)	0.00	( 0.10)
초졸 경황율(1년전)					-0.19 ***	(-13.44)
중졸 경황율(1년전)					-0.12 **	( -3.07)
고졸 경황율(1년전)					-0.20 ***	( -5.58)
대졸 경황율(1년전)					0.01	( 0.07)
Adj R <sup>2</sup>	0.817		0.852		0.843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B-1) 1년 전 경제변수 포함(경제성장율,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성·연령별 실업율)

B-2) 1년 전 경제상황(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분석에 포함된 세 가지 경제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1년 뒤 남성들의 연령별 출산율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실업율과 경제성장률은 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각 연령대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1년 뒤 출산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의 양적인 측면 이외에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인데, 어떠한 계층의 실업률이 높아졌는지 반대로 어떠한 계층의 고용 사정이 좋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만 다른 두 경제변수에 비해 표준화 계수가 매우 작아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B-2](1년 전 경제 상황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포함)에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분석에 포함되자, 연령과 출산연도의 효과가 더욱 명확해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자체 효과이다. 다른 변수들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연령별 출산율과 각 교육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과의 상관관계는 초등학교 졸업 0.199, 중학교 졸업 0.415, 고등학교 졸업 0.427, 그리고 대학교 졸업 0.454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1년 전 각 교육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과 1년 뒤 남성들의 출산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남성의 연령과 출산연도가 분석에 반영되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1년 전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별 출산율에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졸업자의 효과는 0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령과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출산연도와 참가율을 각각 따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령이 포함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특히 대졸자의 경우 더욱 극명하게) 양의 방향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산 연도만이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함께 분석이 이루어지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결국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우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출산연도를 매년으로 고려하지 않고 1995~1997년, 1998~2001년, 그리고 2002~2005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1-4-11〉 출산년도 1995~1997, 1998~2001, 2002~2005를 구분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남성		여성	
	$\beta$	(t)	$\beta$	(t)
(상수)	-1.809 <sup>†</sup>		7.699 <sup>***</sup>	
26세	-0.69 ***	(-42.91)	0.08 ***	( 5.29)
27세	-0.46 ***	(-28.71)	0.21 ***	( 13.77)
28세	-0.27 ***	(-16.47)	0.22 ***	( 14.53)
29세	-0.11 ***	( -6.60)	0.13 ***	( 8.66)
31세	-0.01	( -0.79)	-0.17 ***	(-11.21)
32세	-0.09 ***	( -5.69)	-0.30 ***	(-19.82)
33세	-0.23 ***	(-14.52)	-0.42 ***	(-27.46)
34세	-0.36 ***	(-22.63)	-0.47 ***	(-31.46)
35세	-0.46 ***	(-29.19)	-0.49 ***	(-33.32)
1995년-1997년	0.06 **	( 2.64)	0.11 ***	( 6.82)
2002년-2005년	-0.43 ***	(-22.46)	-0.19 ***	(-11.13)
초졸 경향율(1년전)	-0.13 ***	( -9.17)	-0.11 ***	( -7.30)
중졸 경향율(1년전)	0.08 **	( 2.70)	0.01	( 0.54)
고졸 경향율(1년전)	-0.27 ***	( -8.12)	-0.09 ***	( -3.69)
대졸 경향율(1년전)	0.37 ***	( 10.90)	0.06 **	( 2.52)
경제성장율1	0.06 ***	( 4.22)	0.12 ***	( 9.65)
Adj R <sup>2</sup>	0.814		0.838	

주: <sup>†</sup>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표에서 출산연도를 위 3개로 구분한 후 1998~2001년까지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전과 달리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여의 연령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제활동참여는 1년 뒤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반면 대학교 졸업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1년 뒤 출산율을 크게 늘리는 작용을 하였다. 중졸자의 경제활동참여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위낙 계수가 작아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 힘들다.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이다. 연령의 효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의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시기별로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IMF 외환위기의 효과가 모든 교육수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것이 아닌 것과 유사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 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

[모형A](기본모형: 연령은 30세 기준, 연도는 2002년 기준)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출산연도를 통제한 후 27세, 28세 그리고 29세에서 가장 많은 출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준이 되는 30세 이후에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출산연도는 2002년 이전 시기의 모든 년도의 계수가 양수로 나왔는데, 이는 2002년에 비해 출산이 더욱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후 시점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2002년에 비해 변화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모형B-1](1년 전 경제변수 경제성장률,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성·연령별 실업률 포함)에 의하면, 출산의 1년 전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그리고 연령 성별 실업률이 고려된 결과가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출산의 1년 전 시점의 경제상황이 고려되자, 연령 효과는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연도의 효과는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바로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95년의 여성 연령별 출산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고, 반면 2003년 이후 출산율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기본 모형에서와 정반대의 결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계출산율이 2002년 급격히 하락하게 된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경제 변수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의 표준화 계수는 그 크기가 매우 커서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가 낮을수록 1년 뒤에 출산을 더욱 많이 경험했던 것을 시사한다. 이는 남성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모형B-2](1년 전 경제상황으로서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률 포함)에서 계층별 경제상황의 변화와 출산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려된 경우 연령 효과의 변화는 없었지만 출산연도의 효과도 처음 기본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초등학교 졸업과 고졸의 참가가 많을수록 1년 뒤 출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긍정적으로 1년 뒤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원상관분석의 결과가 남성과

는 달리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와 1년 뒤 출산율은 음의 상관계수(-0.147)로 나왔는데, 표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출산연도를 집단화하여 추가 분석을 했으므로 여기서도 충분히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4-12〉 여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모형

구분	기본모형(A)	B-1	B-2
	$\beta$ (t)	$\beta$ (t)	$\beta$ (t)
(상수)	41.254***	31.403***	6.349***
26세	0.08 *** ( 5.05)	0.08 *** ( 6.37)	0.08 *** ( 5.43)
27세	0.21 *** ( 13.15)	0.21 *** ( 16.59)	0.21 *** ( 14.14)
28세	0.22 *** ( 13.88)	0.22 *** ( 17.51)	0.22 *** ( 14.93)
29세	0.13 *** ( 8.28)	0.13 *** ( 10.44)	0.13 *** ( 8.90)
31세	-0.15 *** ( -9.16)	-0.26 *** (-15.95)	-0.17 *** (-11.50)
32세	-0.28 *** (-17.53)	-0.42 *** (-25.18)	-0.30 *** (-20.34)
33세	-0.39 *** (-24.95)	-0.54 *** (-32.15)	-0.42 *** (-28.18)
34세	-0.45 *** (-29.08)	-0.61 *** (-36.47)	-0.47 *** (-32.05)
35세	-0.49 *** (-31.69)	-0.64 *** (-38.58)	-0.48 *** (-33.92)
1995년	0.14 *** ( 9.42)	-0.04 * ( -2.29)	0.18 *** ( 8.44)
1996년	0.13 *** ( 8.08)	-0.02 ( -1.21)	0.18 *** ( 8.75)
1997년	0.11 *** ( 7.18)	0.04 * ( 2.43)	0.18 *** ( 8.91)
1998년	0.12 *** ( 7.29)	0.10 *** ( 7.42)	0.21 *** ( 8.46)
1999년	0.08 *** ( 4.75)	-0.04 * ( -2.47)	0.07 *** ( 3.35)
2000년	0.12 *** ( 7.51)	0.02 ( 1.44)	0.10 *** ( 5.64)
2001년	0.05 *** ( 3.26)	0.02 † ( 1.78)	0.05 *** ( 3.28)
2003년	0.02 ( 1.11)	0.06 *** ( 4.48)	0.02 *** ( 1.07)
2004년	0.08 ( 1.05)	0.10 *** ( 7.61)	0.01 ( 0.56)
2005년	-0.02 ( -1.00)	0.09 *** ( 6.55)	0.02 ( 0.66)
경제활동참가율1		-0.47 *** (-24.82)	
경제성장율1		0.01 ( 0.77)	0.12 *** ( 9.75)
실업율1		0.04 ( 1.33)	
초등졸			-0.13 *** ( -8.08)
경제활동참가1년전			
중등졸			0.04 ( 1.42)
경제활동참가1년전			
고졸 경제활동참가1년전			-0.16 *** ( -4.19)
대졸 경제활동참가1년전			0.02 ( 0.65)
Adj R <sup>2</sup>	0.822	0.888	0.846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b-1) 1년전 경제변수 포함(경제성장율,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성·연령별 실업율)

b-2) 1년 전 경제상황(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표에서 대졸자의 경제활동참여는 1년 뒤 출산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아 남성과는 달리 여성에서 경제활동참여와 혼인은 그리 큰 관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출산은 경제활동기회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출산은 또한 경제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난 10년 간 남성은 30세에 여성은 28세 전후에 가장 많은 출산을 경험하였다. 이후 연령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30대 중반으로 갈수록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였다.

둘째, 남성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전에 출산율이 가장 높았고 이후로 점차 낮아져서 2005년에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제 변수를 고려한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셋째, 여성의 경우 출산 연도와 출산율의 관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경제변수가 고려되기 전에는 미약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이 이후시기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경제변수(특히 전체인구 경제활동참여율)가 고려된 이후 오히려 1995년의 출산율이 2002년에 비해 낮아지고 2005년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경제변수가 고려될 때 이러한 양상은 사라졌고, 그 표준화 계수도 매우 작아 여성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의 효과는 경제변수와 큰 관련성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경제변수들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과 여성에서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남성에게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특히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는 1년 뒤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 반면, 여성에게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때 1년 뒤의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경제성장률의 효과도 남성에게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반면 여성에게서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1년 뒤 출산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다.

여섯째,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상황이 먼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출산에 투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연령집단별 출산율 분석

본 분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특한 연구 설계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거의 26~35세에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최근의 출산 연기로 인해 36세 이후 연령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지난 10년 간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출산 동향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 26~35세의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의 기간 동안에 이 연령대를 경험하였던 모든 코호트의 월별 연령별 출산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밝혀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고, 지금까지의 분석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경제적인 상황의 전 연령대에 걸친 효과를 밝혀내고자 하였는데, 분명히 경제적인 상황, 특히 노동시장의 상황에 매우 민감한 연령대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의 민감도는 그들의 출산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떠한 연령대에서는 민감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석은 전체 10년의 연령대를 26~29세, 30~32세 그리고 33~35세의 연령대로 나누어 각각의 연령집단의 출산율에 지난 10년 간 경제적인 상황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위함이다. 사실 매 연령층을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지만,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볼 때 몇 개의 연령층이 유사한 출산 동향을 나타내었으므로 그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는데, 첫 번째 모형(모형1)은 출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의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성장율, 그리고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출산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정하여 각 경제 지표가 그 연령대의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형(모형2)은 경제 상황 변수를 1년 전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로 치환하여 계층적 노동시장 상

황이 각 연령대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출산 연도는 연령과 마찬가지로 앞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출산 동향을 공유한 연령끼리 묶어서 분석에 포함하였고, 표에서는 1999~2001년이 다른 두 기간에 대한 준거 시점이다. 표의 계수는 모두 표준화 회귀계수(베타)이다.

〈표 1-4-13〉 연령집단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남자			여자		
	모형 1			모형 1		
연령	26-29세	30-32세	33-35세	26-29세	30-32세	33-35세
경제활동참가율1	0.44*	0.04	-0.01	-0.65*	0.38*	-0.12
경제성장률1	0.04	0.00	0.07	-0.07	0.58*	-0.07
실업률1	0.06	0.13*	0.04	-0.01	0.09	0.49*
1995년-1997년	0.11	0.30*	0.21*	-0.03	0.26*	-0.06
2002년-2005년	-0.21*	-0.60*	-0.17	-0.16*	-0.04	0.00
Adj R <sup>2</sup>	0.46	0.58	0.09	0.60	0.42	0.23
	모형 2			모형 2		
초졸 경합율(1년전)	-0.13*	-0.24*	-0.16*	-0.29*	-0.19*	-0.09
중졸 경합율(1년전)	0.10	0.10	0.06	0.03	0.04	0.15*
고졸 경합율(1년전)	-0.19*	-0.49*	-0.53*	-0.28*	-0.20	-0.19
대졸 경합율(1년전)	0.39*	0.58*	0.46*	0.21*	0.11	-0.01
경제성장률	0.03	0.10*	0.15*	0.05	-0.22*	0.55
1995년-1997년	0.10	0.01	0.07	0.43*	-0.09	0.05
2002년-2005년	-0.45*	-0.80*	-0.38*	-0.56*	0.12	0.00
Adj R <sup>2</sup>	0.46	0.64	0.13	0.58	0.08	0.24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먼저 남자의 경우 [남성모형1]에서, 첫 번째 연령 집단은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다른 연령 집단에는 거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2002~2005년 사이에 26~29세를 경험한 남성은 다른 시점에 이 연령대를 경험한 남성에 비해 출산확률이 더 낮았다. 30~32세의 경우 그 연령대의 실업률이 다음해의 출산율을 다소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5~1997년 사이에 이 연령대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기준이 되는 기간인

1998~2001년 사이에 이 연령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 출산을 더욱 많이 경험했었고, 반면 더욱 최근 기간인 2002~2005년에 이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출산확률을 기록하였다.

[여성모형1]에 의하면, 여자의 각 연령대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 변수와 그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은 남성의 경우와 다른 것들이 발견되었다. 26~29세 여성의 출산율에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영향을 준 것은 같은 연령대 남성의 경우와 일치하지만, 방향성이 정반대였다. 즉 이 연령대의 여성들에게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이 다음해의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음 연령대인 30~32세의 여성에게는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가 다음해 이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령대의 여성에게는 경제성장률도 다음해의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33~35세 연령대의 여성에게 본인 연령대의 실업률은 1년 뒤 출산율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출산 준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 정도 연령대에는 자녀가 벌써 1명 정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 두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과 출산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 기간 효과는 가장 낮은 연령대에서는 2002~2005년이 이전 시기에 비해 출산율이 낮았고, 중간 연령층에게는 1995~1997년의 출산이 다른 기간에 비해 매우 높았다. 마지막 연령대에서는 출산의 연도가 그리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경제변수로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하고 있다. [남성모형2]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공히 유사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즉 낮은 교육수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년 뒤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를 지녔던 반면, 대졸자 이상의 경제활동참가는 1년 뒤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가장 낮은 연령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뒤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의 남성은 2002~2005년 사이에 출산율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는데, 특히 이 기간에 30~32세를 경험한 사람들의 출산이 이전 시기에 이 연령대를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모형2]의 경우, 26~29세 연령 집단에서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초졸과 고졸의 노동시장 확대는 1년 후 출산을 낮추는데 기여하였고, 반면 대졸자 이상의 노동시장이 확대되면 1년 뒤 출산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2세의 여성들은 초졸자의 노동참여 확대와 경제성장률이 이듬해 이들 연령대의 출산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usted R-squared가 매우 작아 이 연령대의 출산율의 동향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의 효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두 모형에서 어떠한 경제 상황 변수가 포함되는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남자들의 경우 출산의 시기가 보정된다면,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로 확인할 수 있는 노동시장 상황은 26~29세 연령대 즉 대학을 졸업하고 막 노동참여를 시작하는 연령 집단의 출산 동향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둘째, 여성들의 경우 역시 출산의 시기가 보정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로 확인할 수 있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은 주로 30~32세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반면 26~29세에게는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셋째,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로 볼 때, 남성에게는 모든 연령대에서 대졸자들의 고용사정이 나아지면 이듬해 출산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에게는 26~29세 연령대에서만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5. 출산 시기별 출산율 분석

출산의 시기별로 26~35세 연령집단의 출산이 출산 1년 전의 경제적인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출산의 시기를 크게 1995~1997년, 1998~2001년, 그리고 2002~2005년으로 나누었고, 위 연령별 분석에서 사용한 연령 집단을 이번 분석에서 차용하였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물론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 시기들은 서로 유사한 출산 동향을 공유하는 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적절한 시기 구분이라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준거 연령집단



은 30~32세 집단이다.

먼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usted R-squared 값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모형들이 훨씬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변수들만을 분석에 포함할 때에 비해 연령변수가 분석에 포함되면서 이 계수들의 값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성들의 각 시기별 출산율이 경제적인 변수보다는 연령에 의해 크게 결정되어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은 연령의 효과도 크지만 여성에 비해 경제 변수에 의해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모형]에서 각 시기별로 남성은 2002~2005년 시기에 경제적인 변수들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는 이듬해 남성들의 출산경험을 크게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도 1995~1997년 시기와 2002~2005년 시기에 출산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4〉 출산시기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남자			여자		
	모형 1			모형 1		
년도	95-97년	98-01년	02-05년	95-97년	98-01년	02-05년
경제활동참가율1	-0.02	0.14	0.46*	-0.04*	0.08*	-0.052
경제성장율1	0.32*	0.05	0.30*	-0.00	-0.01	0.08*
실업율1	0.10*	-0.02	0.08*	0.24*	0.13*	0.42*
26-29세	-0.64*	-0.57*	-0.78*	0.58*	0.44*	0.00
33-35세	-0.58*	-0.69*	-0.43*	-0.28*	-0.48*	-0.60*
Adj R <sup>2</sup>	0.41	0.40	0.60	0.91	0.84	0.75
구분	모형 2			모형 2		
	모형 2			모형 2		
초졸 경활율(1년전)	-0.24*	-0.18*	-0.05	-0.09*	-0.11*	-0.11*
중졸 경활율(1년전)	0.01	-0.06	0.07	0.02	-0.06	0.01
고졸 경활율(1년전)	-0.28*	-0.16*	-0.14*	-0.12*	0.05	-0.16*
대졸 경활율(1년전)	0.14*	0.43*	-0.01	0.04	0.02	0.05
경제성장율1	0.11*	0.11*	0.08*	0.00	0.05*	0.01
26-29세	-0.45*	-0.65*	-0.89*	0.72*	0.52*	0.21*
33-35세	-0.65*	-0.67*	-0.38*	-0.33*	-0.52*	-0.71*
Adj R <sup>2</sup>	0.42	0.47	0.59	0.89	0.84	0.72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각 년도.

한편 [남성모형2]에서는 대졸자들의 노동시장확대는 처음 시기와 두 번째 시기에 이듬해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마지막 시기에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세 번째 시기에 대졸자들의 노동참여가 출산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연령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된데서 찾을 수 있다. 즉 30~32세에 비하여 낮은 연령은 출산의 확률이 더욱 낮아졌고, 높은 연령은 차이가 이전의 시기보다 축소되었다. 결국 33~35세의 출산이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의 많은 부분이 1년 전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의 출산에 대한 효과를 상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모형1]에 의하면, 여성은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실업률이 1년 뒤 출산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 시기를 통틀어 모두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2002~2005년의 시기에는 26~29세의 연령 효과가 거의 영(0)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시기의 이 연령대와 기준이 되는 30~32세 연령대의 많은 여성들이 1년 전 실업을 경험하였고 그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모형2]에서 초졸자와 고졸자 여성의 노동시장 확대는 1년 뒤 출산율 감소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확실히 여성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실업률을 제외하고) 26~29세에 출산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30~32세와의 차이가 근래에 올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 제2절 미시적 접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 1. 분석 개요

이 절에서는 경기상황에 대해 여성이 받은 영향력이나 체감정도가 자신 또는 부부의 출산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동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제1장 연구방법을 참조하도록 한다.

이 조사는 2006년에 직접 출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경기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2006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다고 느꼈습니까?”로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좋았음, 보통이었음, 안 좋았음, 모르겠음(무응답)으로 설계되었다. 2006년 출산의 유형은 계획된 출산(계획출산), 중단(단산)하였으나 출산한 경우(중단중출산)와 연기하고 있었으나 출산한 경우(연기중출산)로 구분된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2006년에 출산한 여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6년에 출산하지 않은 기혼여성도 조사하였다. 이들 여성에 대해 2006년 ‘출산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앞선 2006년 출산이행과 대비시켰다.

여기에서 분석의 목적은 경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종속변수는 2006년 출산 및 비출산 여성의 출산형태 즉, 출산불이행, 계획출산, 연기중출산, 중단중출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4개의 범주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multinomial logistic model)을 적용하였다.<sup>23)</sup>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면서, 선택안이 이항로지스틱모형과 달리 3개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sup>24)</sup> 모형에서 출산불이행을 종속변수의 준거범주로 설정하여, 나머지 출산이행형태(계획출산, 연기중출산, 중단중출산)의 범주에 대한 로그승산비를 구하였다.

모형에서 주된 독립변수로 주관적 경기인식은 좋다 또는 보통, 안좋다(=준거집단)로 구분하였다. 한편, 여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 즉, 거주지역(도시, 농촌=준거집단), 연령(20대, 30~34세, 35세 이상=준거집단), 교육정도(고졸이하=준거집단, 대학이상), 경제활동(취업, 비취업=준거집단), 가구소득(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80% 미만, 80~100%미만, 100% 이상=준거집단)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 분석에는 통계패키지 SAS(version 6)가 이용되었다.

## 2.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2006년 출산행태

### 가. 경기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2006년 출산여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기상황은 좋음 1.8%, 보통 40.8%, 안좋음

23) 로짓모형(logit model)은 독립변수가 분류변수일 경우 그리고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은 독립변수가 연속변수일 때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호환하여 사용되고 있다. 다범주로지스틱회귀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두섭·강남준(2000)을 참조하도록 한다.

24) 이 연구에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는 SAS의 PROC CATMOD가 이용되었다.

57.4%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보통’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간주하여 ‘보통이상’(좋음+보통)과 ‘안좋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표 1-4-15〉 2006년 출산여성의 경기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구분	경기인식			계(n)	구분	경기인식			계(n)
	좋음	보통	안좋음			좋음	보통	안좋음	
전체	1.8	40.8	57.4	100.0(1,821)	직업				
연령**					고위·전문가	2.8	51.4	45.9	100.0( 109)
20~24세	3.8	50.0	46.2	100.0( 52)	준전문가	-	42.9	57.1	100.0( 91)
25~29세	1.6	48.0	50.5	100.0( 444)	사무종사자	2.5	45.1	52.5	100.0( 162)
30~34세	1.7	39.2	59.0	100.0( 874)	서비스종사자	-	47.8	52.2	100.0( 46)
35~39세	2.1	37.3	60.6	100.0( 383)	판매종사자	2.6	28.2	69.2	100.0( 39)
40세 이상	-	25.8	74.2	100.0( 62)	단순노무 등	2.2	33.3	64.4	100.0( 45)
출산순위***					종사상지위**				
첫째아	1.6	46.2	52.3	100.0( 834)	비임금	-	30.5	69.5	100.0( 105)
둘째아	2.0	37.5	60.5	100.0( 784)	상용	2.6	47.4	50.0	100.0( 306)
셋째아	1.7	32.6	65.7	100.0( 181)	임시일용	1.3	47.5	51.3	100.0( 80)
넷째아 이상	0.0	22.7	77.3	100.0( 22)	가구소득**				
경제활동상태					60%미만	1.0	36.6	62.4	100.0( 784)
취업	1.8	43.9	54.3	100.0( 492)	60~80%미만	2.0	40.3	57.7	100.0( 248)
비취업	1.7	39.7	58.6	100.0(1,329)	80~100%미만	1.3	40.6	58.1	100.0( 298)
					100~150%미만	3.3	43.6	53.1	100.0( 305)
					150%이상	2.0	55.0	43.0	100.0( 100)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보통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비관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자녀수(2006년 출생아수 포함)별로는 다자녀가정일수록 경기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며, 소자녀가정일수록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취업 여부나 직업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는 종사상지위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상용직이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경기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이고, 비임금근로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소득계층별로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경기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저연령층, 소자녀여성, 상용근로자나 임시일용근로자 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층, 다자녀여성, 비임금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비관적이었다.

#### 나. 경기상황에 관한 주관적 인식과 2006년 출산행태

이러한 경기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2006년 출산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경기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2006년 출산여성 응답자는 16.2%(큰 영향 1.3% 포함)이며, 나머지 83.8%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역구분이나 여성의 연령별, 출산순위별 그리고 종사상지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경기상황이 2006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높아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고학력 출산여성일수록 그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일하지 않은 출산모의 경우 경기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17.4%로 일하는 출산모의 1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등에 이른바 하위직종에 종사하는 출산모의 경우 경기상황의 영향이 21.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한 출산모의 경우에는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2007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346만 8천원) 보다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경기상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응답하였다(80% 미만의 경우 20% 다소 상회). 이와 달리 평균 이상의 고소득층의 약 7.4%만이 경기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경기상황이 2006년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16% 수준이며, 이는 일부 계층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일하지 않는 여성, 취업중인 경우에는 임시일용직과 비임금 근로여성, 저

소득층 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계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즉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와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 즉, 경기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영향 여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4-16〉 경기 상황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여부

(단위: 명, %)

구 분	큰 영향	다소 영향	영향 없음	계(n)	구 분	큰 영향	다소 영향	영향 없음	계(n)
전체	1.3	14.9	83.8	100.0(1,881)	취업여부*				
지역					취업	0.6	12.2	87.2	100.0( 508)
시부	1.3	14.6	84.1	100.0(1,626)	비취업	1.5	15.9	82.6	100.0(1,372)
군부	1.2	16.9	81.9	100.0( 249)	종사상지위*				
부인연령					비임금	-	16.5	83.5	100.0( 109)
20~24세	2.0	20.0	78.0	100.0( 50)	상용	0.6	9.1	90.3	100.0( 318)
25~29세	1.3	16.5	82.2	100.0( 461)	임시일용	1.3	18.8	80.0	100.0( 80)
30~34세	1.6	14.0	84.5	100.0( 903)	가구소득***				
35~39세	0.5	14.4	85.1	100.0( 397)	60%미만	2.0	19.1	79.0	100.0( 808)
40세 이상	-	15.6	84.4	100.0( 64)	60~80%미만	1.2	18.5	80.3	100.0( 254)
출산순위					80~100%미만	1.0	11.3	87.7	100.0( 300)
첫째아	1.5	14.0	84.5	100.0( 866)	100~150%미만	0.3	7.7	92.0	100.0( 323)
둘째아	1.4	15.5	83.1	100.0( 807)	150%이상	-	7.4	92.6	100.0( 108)
셋째아	-	16.1	83.9	100.0( 186)					
넷째아 이상	-	18.2	81.8	100.0( 22)					

주: 1) 가구소득은 '07년 2분기 도시가구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346만8천원) 기준

2) 고위전문가(고위임직·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종사자 등(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임업직,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자)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 3.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우선 연령별로 보면, 35세 이상 고연령층에 비해 20대에서 2006년에 계획된 또는 중단 중인 둘째아 출산을 이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다. 이와 반대로, 35세 이상 고연령층에 비해 20대와 30~34세에서 2006년에 연기 중인 둘째아 출산을 이행할 확률은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낮다. 이는 35세 이상 연령층에서 2006년 둘째아 출산은 연기된 출산율, 그리고 3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2006년 둘째아 출산은 계획되었거나 중단한 출산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육정도와 경제활동참가여부는 계획된 둘째아 출산의 이행에만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대학 이상 고학력 또는 취업 여성의 경우 고졸이하나 비취업 여성에 비해 둘째아 출산을 이행하지 않을 확률보다 2006년에 계획된 둘째아 출산을 이행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둘째아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출산 유형(연기중, 중단중, 계획중)과 상관없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7〉 경기상황 인식이 출산이행(1→2자녀)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구 분	중단 중 출산		연기 중 출산		계획 출산	
	B	(S.E)	B	(S.E)	B	(S.E)
상수	-2.37	0.44 ***	-1.1578	0.2773 ***	0.4985	0.1643 **
지역(도시=1, 농촌=0)	-0.43	0.38	-0.14	0.25	-0.16	0.14
연령						
20대	0.54	0.26 *	-0.50	0.22 *	0.27	0.12 *
30~34세	0.21	0.18	-0.58	0.20 **	-0.06	0.09
35세 이상						
교육정도(대이상=1, 고이하=0)	0.15	0.17	0.19	0.14	0.21	0.09 *
경제활동(취업=1, 비취업=0)	0.20	0.19	0.11	0.15	0.39	0.09 ***
가구소득						
80% 미만	-0.18	0.24	-0.01	0.19	0.07	0.11
80~100% 미만	-0.03	0.26	0.22	0.21	0.14	0.12
100% 이상						
경기인식(보통이상=1, 안좋음=0)	0.15	0.17	0.21	0.14	0.08	0.08

주: n=973 /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임.

이는 2006년에 둘째아 출산을 이행한 여성들과 이행하지 않은 여성들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나 소득계층집단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2006년 둘째아에서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의 결과는 앞서의 2006년에 첫째아에서 둘째아로의 이행에 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거주지별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2006년에 계획된 둘째아 출산을 이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는 2006년에 연기 중이거나 연기 중인 둘째아 출산에 적용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5세 이상 고연령층에 비해 30~34세 여성들이 2006년에 중단중이거나 계획된 둘째아 출산을 이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8〉 경기상황 인식이 출산이행(2→3자녀)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구 분	중단 중 출산		연기 중 출산		계획 출산	
	B	(S.E)	B	(S.E)	B	(S.E)
상수	-2.65	0.44 ***	-5.25	215.20	-1.52	0.30 ***
지역(도시=1, 농촌=0)	0.04	0.24	0.28	0.45	0.38	0.17 *
연령						
20대	0.52	0.33	-1.17	0.53 *	0.27	0.24
30~34세	0.48	0.15 **	-0.15	0.47	0.38	0.13 **
35세 이상						
교육정도(대이상=1,고이하=0)	0.20	0.14	0.71	0.55	0.48	0.13 ***
경제활동(취업=1, 비취업=0)	0.22	0.17	-0.53	0.43	0.35	0.15 *
가구소득						
80% 미만	-0.31	0.18 †			-0.11	0.16
80~100% 미만	0.36	0.25			-0.05	0.18
100% 이상						
경기인식(보통이상=1,안좋음=0)	0.31	0.14 *	0.10	0.38	0.34	0.12 **

주: n=540 /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임.

이와 반대로, 35세 이상 고연령층에 비해 20대 여성들이 2006년에 연기 중인 둘째아 출산을 이행할 확률은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



정도나 경제활동참가여부에 따른 2006년 셋째아 출산 이행 정도는 2006년 첫째아에서 둘째아로의 이행에 대한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고학력이거나 취업 중인 여성은 저학력이나 비취업 여성에 비해 2006년에 계획된 셋째아 출산을 이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았다.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2006년 첫째아에서 둘째아로의 이행에서와 달리, 둘째아에서 셋째아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상황이 보통 이상으로 인식한 두자녀 여성들이 좋지 않다고 인식한 두 자녀 여성에 비해 2006년에 중단중이거나 계획된 셋째아 출산을 이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 제3절 2006년 출산에 관한 경기변동의 시사점

거시적인 접근 결과, 우리나라 남녀의 혼인율은 1995~1997년에 모두 높았으나, 2002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혼인율 감소 추이에 대해 경제성장률 변화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기업과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녀 대졸자 모두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었을 경우 다음해의 혼인율을 크게 높였고, 소비자물가가 높았을 때 혼인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당해연도와 1년 전의 경기 상황이 남녀의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출산율은 남성의 경우 IMF경제위기 이전에 가장 높았고 이후 점차 낮아져서 2005년에 가장 낮았으며, 여성의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이 이후시기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출산율 변동에 대해 경제변수들의 영향력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 경제성장률의 효과는 남성에게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반면 여성에게서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1년 뒤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은 주로 30~32세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반면 26~29세에

게는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우 고용사정이 나아지면 이듬해 출산이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높은 경제활동참가(특히 대졸자의 경우, 모든 연령층)가 1년 뒤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여성 전체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때 1년 뒤의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은 지난 10년 동안 경기상황이 결혼율과 출산율의 변동 추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거시적인 접근은 경제성장률, 고용율, 혼인율, 출산율 등 종합적인 수준의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대한 가구나 개인(여성)의 체감도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경기상황이 실제 여성(가구)의 의사결정과 출산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 첫째아에서 둘째아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경기상황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경기 상황이라는 외적인 환경 요소보다 내적인 것으로 자녀수 선호도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셋째아 출산 이행에는 경기 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자녀 양육부담 등을 고려할 때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은 어려운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경기 상황을 보통 이상이라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에, 이전에 셋째아 출산을 계획하였거나 아니면 이미 둘째아에서 단산을 결정했던 여성(부부)들이 2006년에 셋째아 출산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결혼율과 출산율은 경기상황에 의해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2002~2005년 기간에 보다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의 출산 동향을 분석해보면,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추가 출산 이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변화는 경기와 연동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향후 경기 상황의 호전 정도에 따라 출산율 증가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제 5 장 정책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본 분석은 그 동안 정부가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해 수행했던 정책들이 2006년 출산 증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시도이다. 2006년부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었다는 측면에서 2006년 출생동향과 지원정책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분석들이 출산요인에 대한 일반적 분석에 집중한 것에 비해 본 분석이 출산율이 증가한 2006년이라는 특정시점과 지원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본 분석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과 대응수준을 결정하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분석의 주요 연구문제는 첫째, 2006년 이전에 한 자녀를 가진 여성 중 2006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간의 차이를 출산과 아동양육지원 관련 정책과 연관 지어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첫 번째 문제의식과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 이전에 두 자녀를 가진 여성 중 2006년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간의 차이를 같은 방식을 통해 2006년 출산실태와 지원정책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저출산 현상이 첫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후속 출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효과는 한 자녀 또는 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추가 출산문제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절은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로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역할분담, 정책수혜 여부 등에 대해 기술했다. 두 번째 절에서는 정책변수와 2006년 출산행위간의 관계에 대해 6개의 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 및 정책함의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연구결과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출산 및 아동양육관련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함의를 정리했다.

## 제 1 절 자료 및 분석방법

### 1. 분석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이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 자료이다. 2006년 출생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 자료는 2개이다. 하나는 2006년 이전에 한 자녀를 두었던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2006년에 두 자녀를 두었던 집단이다. 2006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첫째 자녀 출산 여부는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성이 없고, 정책효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 출산은 아동보육문제 같은 일과 가족생활 양립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둘째 자녀 출산부터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Hank and Kreyenfeld, 2001). 첫 번째 분석 자료는 2006년 이전에 한 자녀를 둔 가구로, 여기에는 2006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집단과 출산하지 않은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원 자료에서는 2006년에 자녀를 출산한 사례와 출산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2,597사례였다. 이중 2006년 출산 이전에 자녀수가 1명인 가구는 1,009사례였다. 이중 804사례는 2006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고, 205사례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6년 자녀출산 이전에 두 자녀를 둔 집단을 대상으로 2006년에 출산한 사례와 출산하지 않은 사례를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2006년에 출산한 사례는 총 출생아동수가 3명이고, 출산하지 않은 사례의 총 아동 수는 2명임). 두 번째 분석 대상은 총 581가구이며 이중 2006년에 셋째자녀를 출산한 사례는 186사례이고 출산하지 않은 사례는 395사례였다.

### 2. 분석방법

#### 가. 출산가구 대 비출산가구 특성 비교

기술통계에서는 본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인구사회학적특성은 먼저 출산 여부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집단과 출산하지 않은 집단 간의 기존 자녀의 연령,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총가구소득을 조사했다. 다음으로

기존 출산 자녀수가 한 명인 경우와 두 명인 경우를 구분해서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검증과 Chi-square 검증을 사용했다. 성별역할분담과 관련된 특성은 앞서 언급한 출산 여부와 출산자녀의 서열에 따라 구분해 출산 전 취업상태, 이인생계부양자가구 여부, 아동양육에 있어 여성 전담 여부, 가사노동여성 전담 여부를 비교했다. 아동양육여성전담은 최종출생아 출산 후 남편과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를 질문한 것으로 ‘전적으로 부인’과 ‘대체로 부인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여성전담으로 정의했다.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이외의 다른 사람’ 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여성전담으로 분류했다. 가사노동여성전담 여부도 같은 방식으로 ‘전적으로 부인이’와 ‘대체로 부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여성전담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여성전담으로 분류해서 비교했다. 분석방법으로는 Chi-square 검증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경험 여부에 관한 분석은 정책의 필요여부에 대해 질문한 이후에 수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여덟 가지 정책<sup>25)</sup>변수 각각에 대해 ‘수혜를 받은 적 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 수혜경험이 있다고 분류했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와 모르겠다고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수혜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류했다. 정책수혜 여부에 대한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비교는 일부정책(불임부부지원, 주거안정지원)의 경우 Chi-square 분석에 필요한 최소사례(5사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대안으로 Fisher’s Exact 검증 방식<sup>26)</sup>을 이용해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했다.

25) 영유아 보육비 또는 교육비 지원,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혜택 확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확대,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보육시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예방접종,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불임부부지원(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용), 일-가정 양립 환경(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형태 유연화, 여성고용차별 해소, 탄력적 근무, 파트타임, 출산육아 후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 수혜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원 자료에는 ‘유아교육 시설 확충 및 지원서비스 확대’가 포함되었으나 첫 번째 항목과 혼동했을 우려가 있고, 유사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분석에서 제외했다.

26) Fisher’s exact test는 chi-square test를 하고 싶으나 분석대상 자료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셀에서 사례수가 5 이하인 경우에 사용한다. 왜냐하면 chi-square test에서 각 셀의 최소 사례 수는 5개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UCLA Academic Technology Service, 2007). 그러나 Fisher’s exact test는 이러한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셀의 사례수가 아무리 작아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Fisher’s exact test에는 test statistic을 제시하지 않고 직접 유의미성을 보여주는 p-value를 제시한다.

#### 나. 2006년 출산과 지원 정책 관련성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2006년 출산행위와 정책지원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모형은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3개 모형[가 모형], [나 모형], [다 모형]은 2006년 출산 전에 1명의 자녀를 둔 가구 중 2006년에 출산한 가구와 출산하지 않은 가구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3개의 모형 중 첫 번째 모형은 정책변수만을 사용했고, 두 번째 모형은 정책변수에 성별역할분담과 관련된 변수들을 투입했다. 해당 변수로는 남녀 간 가사분담, 자녀돌봄분담, 생계부양형태, 출산 전 여성의 취업 여부이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출산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 한 후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2006년 셋째아동 출산행위와 정책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세 가지 모형(라 모형, 마 모형, 바 모형) 또한 앞서 언급한 세 모형과 같은 분석틀을 사용했다. 다만 분석대상은 2006년 이전에 두 자녀를 두었던 사례 중 2006년에 셋째 자녀를 출산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연관성에 대해 분석했다.

### 3. 분석변수의 특성

#### 가. 종속변수

분석모형에 따라 분석대상이 상이하지만 모든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2006년 자녀출산여부이다. 가, 나, 다 모형의 경우 2006년 이전 자녀수가 1명인 여성이 2006년에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둘째아동을 출산했을 경우)는 1, 출산하지 않았을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라, 마, 바 모형의 경우 2006년 이전 자녀수가 2명인 여성이 2006년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셋째아동을 출산했을 경우)는 1, 출산하지 않았을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 나. 독립변수

### 1) 저출산 대응정책 관련 변수

독립변수는 세 집단으로 구분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변수는 8개로 구성되어 있다.<sup>27)</sup> 첫 번째 정책변수는 ‘영유아보육지원’으로 영유아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분류한 답변은 “수혜 받지 않았음, 모르겠음, 무응답, 해당 없음”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혜 받지 않았음”이 응답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분석모형 가, 나, 다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총 사례 833사례 중 ‘혜택 받지 않았음’ 816사례, ‘모르겠음’ 1사례, 무응답 5사례였다. 정책효과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수혜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비수혜 집단으로 분류했다. 두 번째 정책변수는 ‘방과후사교육경감’ 변수이다. 이 변수는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련된 지원을 수혜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변수이다. 수혜를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분류하였다. ‘조세혜택’은 세 번째 정책변수인데, 자녀양육가정에 대해 조세 혜택과 관련되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다. 네 번째 정책변수는 ‘사회보험혜택’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보았는지를 질문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1’, 나머지 경우를 ‘0’으로 가변수 처리했다. 다섯 번째 정책변수는 ‘주거안정지원’변수이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주거 안정지원을 받았는지 경험여부를 묻고 있는데, 지원 받았을 경우 ‘1’, 나머지 경우를 ‘0’으로 가변수 처리했다. 여섯 번째 정책변수는 ‘모성영유아건강관리’변수로 아동예방접종,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

27) 본 분석에서 사용된 정책변수들은 그 동안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지원정책들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대상은 보편적이기 보다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고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불임부부지원, 주거안정지원 등은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조세혜택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방과후지원도 실제로는 저소득층만을 지원하고 있고, 비저소득층 가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일부정책은 수혜자의 비율이 너무 낮아 유의미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는 그 간 정부에서 언급한 저출산 대응정책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상기 정책들을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분석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변수를 통제변수로 로지스틱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에 관련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지원 경험 여부를 묻고 있다.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그 밖의 경우는 ‘0’으로 분류했다. 일곱 번째 정책변수는 ‘불임부부지원’ 변수이다. 이 변수는 시험관 아기 등 불임부부에게 필요한 시술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부호화했다. 마지막 ‘일-가족양립환경’ 정책변수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형태 유연화, 여성고용차별 해소, 탄력근무 시간제 근무, 출산육아이후 재취업 등 일과 가족 생활 양립과 관련된 질문에 이 중 한 가지라도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처리했다.

## 2) 성별분업과 관련된 변수

성별분업과 관련된 변수는 남녀(부모)간에 가사노동, 아동양육, 생계부양의 분담 등이 2006년 자녀의 추가 출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포함된 변수들이다. 먼저 ‘출산전모취업’은 여성의 2006년 출산(출산하지 않은 경우 2006년 이전) 이전 직업을 묻는 질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비경제활동, 무응답의 경우 ‘0’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경우(어떤 형태로든 취업한 경우)를 ‘1’로 분류했다. 취업자로 분류된 직업에는 전문가, 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 등 13개의 직업상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인생계부양가구’ 변수는 ‘출산전모취업’변수와 ‘출산전부취업’변수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변수이다. 부모 모두 2006년 자녀출산 전 취업한 경우를 1로 분류했으며, 나머지 경우를 0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경우에는 모만 취업하고 부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 부만 취업하고 모는 취업하지 않은 경우, 부모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sup>28)</sup>. 다음은 아동양육과 관련된 변수(아동양육여성전담)로 마지막 출생자녀 이후 자녀 돌봄 분담 정도를 질문한 것이다. 전적으로 부인이 전담한 경우와 대체로 부인이 전담하는 경우를 부인전담 경우로 분류하고(1),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 이외 다른 사람 등이 담당한 경우를 ‘0’으로 분류했다<sup>29)</sup>. 마지막으로 ‘가사노동여성전담’은 최종(가장 최근)출산한 이후 남편과 집안일

28) 552 비취업 사례 중 실업자는 5명, 비경제활동자는 546명, 무응답은 1명이었다.



분담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아동양육여성전담’과 같은 이유로 직전출생아와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최종출생아동 이후 가사를 전적으로 부인이 또는 대체로 부인이 담당한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부호화하였다.

### 3)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첫째자녀의 연령, 출산여성의 연령, 가구총소득, 출산여성의 교육수준이 사용되었다. 첫째자녀의 연령은 자녀출산에 있어 연령 터울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고, 첫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출산여성의 연령은 만 연령을 의미하며, 가구총소득은 가구의 모든 소득을 포함한 연속변수이다. 출산여성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과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1’로,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0’으로 부호화하였다.

## 제 2 절 주요 분석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우선 조사결과로서 2006년 출산여성 중 4.3%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정책별로는 일-가정양립지원(2.1%), 보육교육비지원(1.2%), 사회보험확대(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출산여성의 특성별로는 고연령층(35~39세), 높은 출산순위(셋째아 이상), 중산층 이상, 취업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이들 2006년 출산여성 및 비출산여성간의 특성들을 비교하기로 한다.

29)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첫째자녀 출생이후 양육분담실태를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자료의 제한으로 이러한 변수를 사용할 수 없었다. 설문지에 “최종 출생아 출산 후 남편과 자녀돌봄 분담”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있지만, 2006년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 현재 1명의 자녀가 최종 출생아동이 되기 때문에 2006년에 출산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된 답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출생아동 이후와 관련한 변수를 사용했지만 해당 변수가 남녀 간의 역할 분담을 반영하는 변수이고, 개인의 행위가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변수를 프락시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1〉 2006년 출산여성의 정책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

(단위: %, 명)

구 분	보육교육비 지원	사회보험 확대	건강관리 지원	양립환경 조성	기타	없었음	Total
전체	1.2	0.2	0.1	2.1	0.7	95.7	100.0(1,888)
부인연령							
29세 이하	0.6	-	-	2.1	0.6	96.7	100.0( 518)
30~34세	1.0	-	0.1	2.1	0.7	96.1	100.0( 902)
35~39세	1.8	0.8	-	2.3	1.0	94.2	100.0( 398)
40세이상	3.1	1.6	1.6	-	1.6	92.2	100.0( 64)
출산순위							
첫째아	0.5	0.2	0.1	2.9	0.2	96.1	100.0( 877)
둘째아	1.5	0.1	0.1	1.6	0.6	96.0	100.0( 802)
셋째아이상	2.9	0.5	-	0.5	3.3	92.8	100.0( 209)
취업여부							
취업	1.8	-	-	7.3	1.0	90.0	100.0( 510)
비취업	0.9	0.3	0.1	0.1	0.7	97.8	100.0(1,377)
가구소득							
60%미만	1.5	0.2	0.1	0.2	0.7	97.2	100.0( 811)
60~80%미만	0.4	-	0.4	0.8	1.6	96.9	100.0( 255)
80~100%미만	1.0	-	-	1.0	0.7	97.3	100.0( 298)
100~150%미만	0.9	0.3	-	5.9	0.3	92.5	100.0( 322)
150%이상	0.9	0.9	-	11.9	0.9	85.3	100.0( 10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임.

##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

<표 1-5-2>는 2006년 이전에 한 자녀를 두었던 가구 중 2006년 출산한 가구와 출산하지 않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첫째 자녀(기 출생자녀)의 연령을 보면 비출산 가구가 2.9세로 출산가구 4.3세에 비해 1.4세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녀 간 나이 터울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여성의 연령을 보면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둘째자녀 출산은 여성의 연령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6년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첫째 자녀의 연령이 비출산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미루어 2006년에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일찍 자녀(첫째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늦은 출산이 둘째자녀 2006년 출산여부와 밀접한 관련

성이 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006년에 둘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2006년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득을 보면 2006년에 출산한 가구의 가구소득이 출산하지 않은 가구소득 보다 낮았다. 자녀출산 문제가 단순히 가구소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구소득수준이 일정수준만 되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소득은 출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표 1-5-2〉 인구사회학적 특성비교: 2006년 출산자와 비출산자

구 분	둘째자녀출산여부		t-검증 Chi-square 검증
	출산가구(여성)	비출산가구(여성)	
첫째자녀연령(년)	4.3	2.9	7.14***
여성연령(년)	32.3	32.0	1.10
여성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및 이하	44.4	32.8	8.94**
대학재학이상	55.6	67.2	
총가구소득(만원)	277.2	315.7	2.74*
셋째자녀출산여부			
	출산가구(여성)	비출산가구(여성)	
둘째자녀연령	6.3	4.2	6.87***
여성연령	34.6	34.1	1.69
여성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및 이하	69.5	47.4	24.86***
대학재학이상	30.5	52.6	
총가구소득	263.7	269.5	2.61*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다음으로 2006년 이전 두 자녀를 두고 2006년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보면 2006년 셋째자녀 출산여부와 같이 직전 출산자녀(둘째 자녀)의 연령은 출산가구가 6.3세로 비출산가구 4.2세에 비해 2.1세 많았다. 둘째자녀와 비교해보면 나이차가 더 벌어졌다. 연령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준은 비출산가구의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여부와 같이 2006년 비출산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여성의 교육수준보다 높았다. 출산과 여성의 교육수준과의

부적 관계를 추정하게 하는 결과다. 가구소득은 비출산가구가 출산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불과 58천원에 불과했다. 둘째아동출산의 경우 그 차이가 385천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셋째자녀출산 여부에 따른 가구소득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2006년에 둘째자녀와 셋째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2006년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첫째 또는 둘째자녀를 일찍 출산했고(두 집단의 연령차이가 없음으로), 학력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구소득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성별분담에 관한 차이

<표 1-5-3>은 가구의 생계부양, 가사 및 아동양육 등과 관련해 부부간 분담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06년 이전 한 자녀가 있던 가구를 보면 둘째 자녀 출산 전 (또는 비출산가구여성의 경우 2006년 이전) 직장을 가지고 있던 비율은 출산여성이 비출산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출산가구여성이 출산 전 취업상태에 있던 비율이 42.1%인데 반해 비출산여성은 절반이 넘는 57.4%로 나타났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취업과 출산은 부적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은 남편의 취업상태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출산 전 여성의 취업상태와는 다른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비출산여성가구의 이인생계부양자 가구 비율이 출산여성가구의 이인생계부양자 가구 비율보다 14.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비출산가구의 경우 부부가 함께 생계부양을 분담하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출산가구는 남편이 생계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최종자녀 출산 후 아동양육 분담과 가사분담실태를 보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아동양육과 가사분담을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절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양육을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은 출산가구가 73.9%, 비출산가구가 67.2%였고,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은 출산가구가 82.3%, 비출산가구가 76.5%였다.

〈표 1-5-3〉 성별분담에 관련된 차이: 2006년 출산자와 비출산자

구 분	둘째자녀출산여부		Chi-square 검증
	출산가구(여성)	비출산가구(여성)	
출산 전 취업			
취업	42.1	57.4	15.31***
비취업	57.9	42.7	
이인생계부양가구여부			
이인생계부양가구	41.7	56.4	14.21***
비이인생계부양가구	58.3	43.6	
아동양육여성전담여부			
여성전담	73.9	67.2	2.69
비여성전담	26.1	32.8	
가사노동여성전담여부			
여성전담	82.3	76.5	3.60†
비여성전담	17.7	23.5	
셋째자녀출산여부			
	출산가구(여성)	비출산가구(여성)	
출산 전 취업			
취업	36.4	32.8	0.71
비취업	63.6	67.2	
이인생계부양가구여부			
이인생계부양가구	35.8	31.8	0.93
비이인생계부양가구	64.2	68.2	
아동양육여성전담여부			
여성전담	73.3	80.8	4.20*
비여성전담	26.7	19.2	
가사노동여성전담여부			
여성전담	82.4	86.4	1.64
비여성전담	17.7	13.6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아동출산과 양육 및 가사노동의 성별분담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셋째자녀출산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분담실태를 보면 아동양육의 여성전담 항

목을 제외한 3가지 항목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2006년 셋째 자녀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두 집단 모두 이미 (둘째 자녀 출산이후)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출산여성의 경우 절대다수인 63.6%가 비취업상태에 있었고, 비출산여성의 경우도 비취업비율이 67.2%에 이르렀다. 여성에게 자녀 둘을 두고 있는 조건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다. 비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도 두 집단 모두에서 1/3정도에 머물렀다. 아동양육을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은 출산가구가 73.3%, 비출산 가구가 80.8%로 비출산가구에서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비율은 출산가구가 82.4%, 비출산 가구가 86.4%로 나타났다. 2006년 이전 한 자녀를 두고 있던 가구에 비해 현격히 높아진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수와 여성의 가사 및 육아전담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게 한다.

#### 다. 출산양육지원 관련 정책 수혜 실태

<표 1-5-4>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 수혜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수혜경험여부는 2006년 자녀출산 이전(자녀 출산하지 않은 경우 2006년 이전까지의 경험) 경험을 분석한 것이다. 총 8개의 정책수혜경험여부를 질문했다. 먼저 2006년 이전 한 자녀를 둔 가구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비지원과 관련된 수혜비율은 출산가구가(19.1%) 비출산가구(11.8%) 보다 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다수가 영유아보육비지원을 수혜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 후 아동보육과 관련된 지원은 더 심각한데 두 집단 모두 해당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출산가구는 그 비율이 0.4%에 불과했고, 비출산가구는 이 보다는 조금 높은 5.4%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자녀의 연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방과 후 보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최소 만6세가 되어야한다.

<표 1-5-4>에서 보면 출산가구의 첫째 자녀 평균 연령은 4.3세, 비출산가구는 2.9

세로 나타나 다수의 가구에서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출산·양육 지원정책이라고 지칭되는 방과 후 보육 서비스 이용경험이 비출산가구가 더 높았다는 점이다. 첫째 자녀의 연령이 비출산가구가 출산가구에 비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만6세 이상이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기 출생 자녀의 연령이 더 어린 비출산가구에서 더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예상외의 결과이다.

이어서 아동양육과 관련된 조세혜택, 사회보험혜택, 주거안정지원, 모성영유아건강관리지원, 불임부부지원, 일-가족생활 양립지원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조세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비율은 2006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47.5%, 비출산가구가 48.5%로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사회보험 수급 경험 여부는 두 집단 각각 36.2%, 39.7%로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상당수 가구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2006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0.1%, 비출산가구는 0%였다. 아동이 있는 거의 모든 가구가 주거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실상 아동양육과 관련된 주거안정지원 정책은 제도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구가 수혜경험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산한 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원은 다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정책에 비해 비교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가구의 63.7%가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출산가구도 62.8%가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지원과 관련된 경험은 출산가구가 0.1%, 비출산가구가 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전체 부부 7~8쌍 중 1쌍이 불임이라는 현실(매일경제, 2005년 4월 12일)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물론 불임지원 대상이 2006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80%이하 이어야하고 연령도 부인 기준으로 만 44세 미만이며, 불임진단서를 첨부해야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06),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치이다.

〈표 1-5-4〉 출산양육지원정책 수혜(경험)여부: 2006년 출산자 대 비출산자

구 분		둘째자녀출산여부		Chi-square 또는 Fisher's exact test
		출산가구(여성)	비출산가구(여성)	
영유아보육비지원	수혜	19.1	11.8	5.99 *
	비수혜	80.9	88.2	
방과후학교지원	수혜	0.4	5.4	30.31 ***
	비수혜	99.6	94.6	
아동양육조세혜택	수혜	47.5	48.5	0.07
	비수혜	52.5	51.5	
사회보험혜택	수혜	36.2	39.7	0.88
	비수혜	63.8	60.3	
주거안정지원	수혜	0.1	0.0	p=0.799
	비수혜	99.9	100.0	
모성영유아건강관리지원	수혜	63.7	62.8	0.07
	비수혜	36.3	37.3	
불임부부지원	수혜	0.1	1.0	p=0.096
	비수혜	99.9	99.0	
일-가족생활양립지원	수혜	12.7	14.2	0.34
	비수혜	87.3	85.8	

셋째자녀출산여부				
		출산가구(여성)	비출산가구(여성)	
		출산가구(여성)	비출산가구(여성)	
영유아보육비지원	수혜	29.4	20.3	5.58 *
	비수혜	70.6	79.5	
방과후학교지원	수혜	2.7	12.8	15.09 ***
	비수혜	97.3	87.2	
아동양육조세혜택	수혜	38.5	53.8	10.38 **
	비수혜	61.5	47.2	
사회보험혜택	수혜	30.0	38.7	4.23 *
	비수혜	70.1	61.3	
주거안정지원	수혜	0.5	0.5	p=0.445
	비수혜	99.5	99.5	
모성영유아건강관리지원	수혜	66.3	67.7	0.11
	비수혜	33.7	32.3	
불임부부지원	수혜	0.5	0.8	p=0.401
	비수혜	99.5	99.2	
일-가족생활양립지원	수혜	6.4	10.3	2.27
	비수혜	93.6	89.7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다른 측면으로 보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임치료를 받아야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일과 가족생활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출산가구의 12.7%, 비출산가구의 14.2%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출산여부와 관계없이 절대다수가 일과 가족생활양립을 위한 정책지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6년 이전에 두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경험 여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둘째자녀출산여부의 분석대상과 같이 영유아보육비용을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에서 출산가구가 비출산가구에 비해 8.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출산과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리고 2006년 이전에 한 자녀를 둔 가구에 비해 2006년 이전에 두 자녀를 둔 가구가 영유아보육비를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과 후 보육을 지원 받은 경험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가구의 2.7%, 비출산가구의 12.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2006년 이전 한 자녀만 있던 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비율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출산가구의 이용경험이 출산가구보다 4.7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첫째 자녀의 경우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연령이 되었을 가능성이 출산가구가 더 높는데 비출산가구의 이용율이 더 높다는 것은 연령변수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서비스 이용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녀들의 연령을 조사해보면 2006년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평균자녀 연령은 첫째 자녀가 8.9세, 둘째 자녀가 6.3세였으며, 셋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는 6.9세, 둘째 자녀는 4.1세였다<sup>30)</sup>. 출산가구의 첫째 자녀는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정연령이 되었음에도 방과 후 서비스를 비출산가구에서 더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예상외의 결과로 추가적인 분석과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조세지원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와

30) 본 수치는 표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별도의 분석을 통해 두 집단 자녀들의 평균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출산하지 않은 가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출산가구의 수혜 경험비율은 38.5%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비출산가구는 52.8%로 출산가구에 비해 14.5%포인트나 높았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조세지원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2006년에 셋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는 결과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가 요구되는 결과다. 사회보험 수급 경험도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수급을 경험한 비율은 2006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예방접종,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시험관 아기 등과 관련된 불임부부 지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등을 경험한 비율은 2006년 둘째 자녀 출산 분석 결과와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정지원은 앞선 분석과 같이 2006년 셋째 자녀 출산여부와 관계없이 절대다수(99%이상)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sup>31)</sup>

### 가. 2006년 둘째 아동 출산과 지원정책

<표 1-5-5>는 2006년 둘째자녀 출산과 정부의 8개 주요 지원정책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06년 이전에 한명의 자녀를 둔 여성(가구)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2006년 둘째 자녀 출산여부와의 관계를 보면 영유아보육비지원 정책이 2006년 둘째자녀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유아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받은 경험이 없는 가구에 비해 2006년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Odds ratio)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

31) 정책변수 중 대상이 제한적인 불임부부지원, 주거안정지원 등을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에도 현재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소득을 연속변수가 아닌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명목변수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보육지원 수준이 해당사회의 출산력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비지원 수혜여부와 2006년 둘째 자녀 출산과의 유의미한 관계는 성간역할분담 변수들을 추가한 [나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간역할분담 변수들을 추가했을 때 정책변수들만으로 구성된 모형보다 영유아보육비지원 여부가 출산과 관련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비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2006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1.9배(가 모형)에서 2.0배(나 모형)로 증가했다.

〈표 1-5-5〉 출산양육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2006년 자녀출산 요인 분석: 2006년 둘째자녀 출산 가구 대 비출산 가구

구 분	[가 모형]		[나 모형]		[다 모형]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절편	1.402***		1.811***		1.919*	
영유아보육지원	0.617*	1.854	0.703**	2.020	0.573*	1.773
방과후사교육경감	-2.780***	0.062	-2.713***	0.066	-4.051***	0.017
조세혜택	0.051	1.053	0.032	1.033	-0.000	1.006
사회보험혜택	-0.202	0.817	-0.253	0.777	-0.159	0.853
주거안정지원	11.272	a	10.951	a	10.627	a
모성영유아건강관리	0.018	1.019	-0.050	0.951	-0.104	0.901
불임부부지원	-1.733	0.177	-1.540	0.214	-1.912	0.148
일-가족양립환경	-0.109	0.897	0.382	1.465	0.589*	1.802
출산전모취업			-1.364	0.256	-0.533	0.507
이인생계부양가구			0.723	2.061	-0.046	0.955
아동양육여성전담			-0.103	0.903	-0.152	0.859
가사노동여성전담			-0.312	0.732	-0.122	0.885
첫째자녀연령					0.387***	1.473
출산여성연령					-0.044	0.957
가구총소득					0.001	0.999
여성교육수준					0.300	1.345
-2 Log L	1004.015		992.874		913.008	
Model $\chi^2$	33.385***		52.606***		140.472***	
df	8		12		16	
N	1,009		1,009		1,009	

a: 95% wald confidence limits <0.001 >999.999

주: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비 지원 변수와 둘째 자녀 출산과 관련성은 인구사회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물론 두 집단 간에 출산가능성의 차이는 [나 모형]의 2.0배에서 1.8배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보육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 결과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표 1-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관련된 수혜경험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특정계층과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직까지 영유아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방과후학교지원'도 2006년 둘째 아동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 기대와 상이한 점은 방과 후 학교지원 서비스를 이용한(수혜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006년 둘째아동을 출산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적 상관관계는 성역할 분담 변수들과 인구사회학적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 모형에서는 지원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출산할 가능성이 93.8%나 낮게 분석되었다 ( $b=-2.780$ ,  $p < 0.001$ ). 통계적으로는 <표 1-5-5>에서 보듯 비출산가구의 방과 후 보육 지원에 대한 이용경험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집단에서 지원서비스의 정책목적과 같이 행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추론 가능한 설명은 방과후학교가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부모가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는데 반해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설학원과 같이 (장소만 학교에서 운영될 뿐) 아동1인당 주 1시간 참여시 매달 4만원 내외의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주 5일 2시간씩으로 계상하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또한 원어민 강사의 영어수업의 경우 매월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한다). 일반적 기대와 달리 부모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유

발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아동출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정책변수 중 2006년 둘째 자녀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마지막 변수는 일과 가족생활양립 지원과 관련된 변수이다. <표 1-5-5>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성간역할분담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육아 휴직, 산전후휴가, 탄력근무제 등 일과 가족생활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은 2006년 둘째 자녀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b=0.589$ ,  $p < 0.05$ ). 일과 가족생활 양립 정책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경험이 있는 집단이 지원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에 비해 2006년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1.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과 정책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변수이외에 나머지 5개 정책변수는 2006년 둘째 아동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표 1-5-4>에서 보듯 대부분의 지원정책의 수혜경험이 매우 낮았고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산가구의 99.9%, 비출산가구의 100%가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는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지원과 99.9%, 99.0%가 지원 받은 경험이 없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자녀출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기대이다. 정책관련 변수들 이외에 2006년 둘째 아동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변수는 첫째아동연령 변수였다. 첫째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2006년에 둘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의 연령이 한 살 높아질 때 2006년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1.47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이러한 현상은 최근 고 연령대 여성의 출산이 늘어나고, 한 가구에서 출생아동간 터울이 길어지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2006년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간의 연령 터울은 2.6세인데 비해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간의 연령 터울은 5.4로 분석되었다.

32) 물론 이러한 관계가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두 변수간의 관계가 직선형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부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 나. 2006년 셋째 아동 출산과 지원정책

<표 1-5-6>은 2006년 이전에 두 자녀를 둔 여성(가구) 중 2006년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출산하지 않은 경우를 출산양육과 관련된 지원정책, 성별역할분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지원정책만을 포함한 [라 모형]을 보면 ‘영유아보육지원’, ‘방과후사교육경감’, ‘조세혜택’, ‘사회보험혜택’ 경험 등이 셋째아동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유아보육지원 및 교육비 지원과의 관련을 보면, 정책 지원을 경험한 여성(가구)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2006년 셋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1.5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b=0.433$ ,  $p < 0.05$ ). 성별역할분담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한 [마 모형]에서도 영유아보육지원 변수는 2006년 셋째 자녀 출산행위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b=0.415$ ,  $p < 0.05$ ).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다 모형]에서도 둘째아동 출산과 영유아보육비 지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유지했다. 오히려 지원을 경험한 집단이 2006년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가능성이 1.61배로 높아졌다 ( $b=0.479$ ,  $p < 0.05$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동보육비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방과후사교육경감 변수는 둘째자녀 출산분석 모형과 같이 세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간의 관계 또한 2006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출산하지 않은 경우를 분석한 <표 1-5-4>와 같이 모든 모형에서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더불어 방과후보육 지원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006년 셋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라 모형]에서 84.3%, [마 모형]에서 85.1%, [바 모형]에서 92.4% 낮았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과 같이 해당 가구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가능성(Odds ratio)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이용경험과 출산과의 관계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는 결과이다.

둘째자녀 출산분석 모형과 달리 조세혜택의 경험여부가 2006년 셋째아동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모형]에 따르면 조세혜택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2006년 셋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40.2%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b=-0.514$ ,  $p < 0.01$ ). [마 모형], [바 모형]과 같이 젠더역할분담변수를 추가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조세혜택경험여부와 2006년 셋째자녀 출산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바 모형]에서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가능성은 30.0%로 [라 모형]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조세혜택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아동을 위해 지출된 일부만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즉 아동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 비용은 조세혜택이 있더라도 그 수준은 가구가 체감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세혜택이 아동에 대한 비용지출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2006년 셋째자녀 출산과 부의 관계로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조세혜택이라는 것이 자녀 양육 당시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출이 이루어지고 난 한참 후에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라 정책적 지원이 아동양육비용에 대한 직접적 비용보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체감도가 낮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경제사회적 지위를 통제하는 변수를 투입했을 때 ‘가능성’이 변화했다는 것은 조세지원혜택 역시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효과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조세지원혜택을 받는 주 대상자는 중산층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납득이 가는 설명이다.

둘째자녀 출산과 비교해 주목할 또 다른 결과는 일과 가족생활정책지원에 대한 경험과 2006년 셋째자녀 출산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과 일의 양립이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지만, 이미 두 자녀가 있고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표 1-5-3>을 보면 둘째 자녀 출산여성의 경우 출산 전 42.1%가 취업상태에 있었던 반면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이 보다 낮은 36.4%만

이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기존에 두 자녀 이상을 가진 여성에게 일과 가족생활의 문제는 양립의 과제이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이미 하나의 대안을 선택한 사례가 절대 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표 1-5-6〉 출산양육관련 정책지원과 2006년 자녀출산 요인 분석: 2006년 셋째자녀 출생

구분	[라 모형]		[마 모형]		[바 모형]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절편	-0.276		-0.483*		-0.248	
영유아보육지원	0.433*	1.542	0.415*	1.514	0.479*	1.614
방과후사교육경감	-1.851***	0.157	-1.906***	0.149	-2.583***	0.076
조세혜택	-0.514**	0.598	-0.532**	0.587	-0.357**	0.700
사회보험혜택	-0.459*	0.632	-0.375	0.687	-0.011	1.011
주거안정지원	-0.196	0.822	-0.181	0.835	-0.041	1.042
모성영유아건강관리	-0.025	0.995	-0.018	1.018	0.050	0.951
불임부부지원	-0.564	0.569	-0.333	0.716	-1.915	0.147
일-가족양립환경	-0.514	0.598	-0.833*	0.435	-0.388	0.679
출산전모취업			-0.612	0.542	-0.580	0.560
이인생계부양가구			0.890	2.436	0.567	1.764
아동양육여성전담			0.403	1.497	0.441	1.555
가사노동여성전담			0.164	1.179	0.463	1.588
둘째자녀연령					0.242***	1.274
출산여성연령					-0.046	0.955
가구총소득					-0.001	0.999
여성교육수준					0.555*	1.743
-2 Log L	703.180		703.723		639.176	
Model $\chi^2$	41.741***		49.198***		121.745***	
df	8		12		16	
N	581		581		581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젠더역할분담과 관련된 변수는 2006년 둘째아동출산 모형들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2006년 둘째아동출산을 분석한 [다 모형]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직전 출생아동의 연령(둘째자녀연령)은 2006년 셋째아동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b=0.242$ ,  $p < 0.001$ ). 2006년 이전에 출산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2006년에 셋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주목해야할 변수는 2006년 둘째아동출산 모형과 달리 여성교육수준 변수가 2006년 셋째 자녀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b=0.555$ ,  $p < 0.05$ ).

여성의 교육수준이 대학 재학 이하인 경우 2006년에 셋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여성의 교육수준이 대학재학 이상인 집단에 비해 1.7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 수준과 2006년 셋째 자녀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다자녀 출산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연관성을 추정하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아동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정책이 실제적으로는 아동출산행위와는 무관하거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는 현재 아동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의 필요를 증명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정책의 효과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다.

### 제 3 절 정리 및 정책함의

#### 1. 주요결과 정리

본 연구는 2006년 둘째 또는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가구)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가구)의 비교분석을 통해 2006년 자녀 출산과 출산양육과 관련된 지원정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기술통계 결과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또는 셋째 자녀 출산여성과 비출산여성의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전 출생아 또는 첫째자녀의 연령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성의 연령 보다는 결혼 시기 또는 첫째 자녀 출생시기가 출산행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음으로 2006년 자녀 출산 여부와 성별분담상태와의 관련성은 2006년 출생자녀의 순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산 전 모의 취업과 이인생계부양자 여부는 둘째자녀 출산 분석에서

는 출산집단과 비출산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셋째자녀 출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나머지 양육전담, 가사전담 등의 변수는 두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책 지원 경험과 관련되어서는 영유아보육지원정책, 방과후보육지원정책 등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정책지원과 자녀출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주요한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모형에서 영유아보육지원과 2006년 자녀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비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방과 후 보육 지원 등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변수와 조세지원변수(2006년 셋째아동출산에만)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2006년 아동출산과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정책지원이 단순히 출산행위와 관련 없는 수준을 넘어 출산행위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런 결과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해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자녀 출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둘째 자녀 출산과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 정책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자녀출산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되는 정책변수들, 예를 들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지원, 불임부부지원 등과 같은 변수들이 2006년 자녀의 추가 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들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정책의 효과성은 해당 정책의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분석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상과 지원수준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지 못해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할 뿐이지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33)</sup>.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많은 정책들이 2006년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효과성이 나타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2006년 출산에

33)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가 적게 나타났지만 해당 정책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못한 집단으로 구분해 별도의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 정책들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또는 지원정도가 너무 낮아 일반 가구에서 체감하기에 미흡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책별로 출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자료를 축적한 후에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분석결과에 기반 한 정책함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지원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모형에서 아동보육지원이 2006년 출산행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그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아동보육과 관련된 지원이 2006년 출산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출산양육과 관련된 지원 정책 중 아동보육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가장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확대를 이루어낸 결과를 방증하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 1-5-3>에서 보듯이 아동보육지원 정책의 수준과 범위가 전체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같이 계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에 지원 대상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보육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단순히 부·모의 양육부담을 사회화시키는 전통적 정책과제를 넘어 현재와 미래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한국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실화시키는 주요한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보육은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학 후 아동의 학업성취와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Esping-Andersen, 2005). Cunha, Heckman, Lochner, Masterov(2005)의 연구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이후 어떤 시기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아동보육정책은 서로 다른 사회·가족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차이를 최소화시켜줌으로써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동보육에 대한 보편적 확대는 한국사회의 양극화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개입이 될 것이다. 보편적이고 질 높은 아동보육을 제공하는 스웨덴은 지난 20세기 동안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직업이동에서 아동의 출신배경의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rikson and Goldthorpe 1992; Shavit and Blossfeld 1993). 이를 위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질이 담보되는 보편적 아동보육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단순한 평가인증을 통해 ‘나쁜 시설’을 선별하는 소극적인 방안 대신 좋은 시설을 발굴하고 확대하며, 열악한 시설은 퇴출시키는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질이 담보되는 공적보육시설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는 바다.

둘째, 정책대상의 보편적 확대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출산행위와 정책지원 간의 상관관계는 단순한 지원 여부의 문제가 아닌 지원의 수준 및 대상의 보편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아동보육 지원정책이 출산행위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방과 후 아동보육지원이 부·모의 아동출산과 양육과 부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방과 후 아동보육지원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저소득층을 제외한 가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과목당 월 4만원 내외를 지출하고 일주일에 1회 1시간을 수업을 받고 있고, 영어원어민 교실 같은 경우는 주5회 일1시간에 월 12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술적 단순 계산을 하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원어민영어교실과 추가적인 1시간의 방과 후 교육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월 3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모가 부담해야한다. 매우 큰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저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지출을 의미하고, 이러한 결과가 출산행위와 부적 관계를 갖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과후보육을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야하며, 비용 또한 무상으로 함으로써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웨덴과 같이 방과후보육을 학교시스템에 통합시키고 (문무경, 2006) 부·모들의 직장스케줄에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이 제한적인 사후적 지원에서 보편적인 사전적 지원으로 지원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 조세지원도 방과후교육과 같이 2006년 둘째아동과 셋째아동 출산행위와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동양육 비용에 대해 사후에 일부만을 보존해주는 제도의 비효용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동양육비용은 매일매일 현실에서 생활비를 쪼개가며 지출하는 일상적인 과제인데 반해 조세환급 등 지원제도는 나중에 그 것도 한 번에 지원된다. 아동양육을 위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의 곤란을 겪고 난후에야 사후적으로 그것도 일부만 보존해주는 형태를 통해서는 아동양육비 보존이라는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조세환급이 임금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임금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세지원 제도의 계층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 일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 제도의 정책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sup>34)</sup>. 이러한 조건에서 조세지원이 아동양육비용을 보존해주는 실질적 지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고, 아동 양육에 대해 일상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계층적으로 제한적인 조세환급 등의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아동에 대한 투자가 미래 한국사회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에 대한 투자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한국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적 될 것이다. 지난 20세기 동안 스웨덴에서 아동의 학업성취도와 직업이동에 있어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감소시키는데 보편적이고 질 높은 아동보육과 함께 관대한 가족 관련급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sping-Andersen, 2005). 그렇기 때문에 Esping-Andersen (2002)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보장이 교육

34) OECD 주요 국가들의 자영업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27%에 이르러 매우 높은 수준임. 반면 호주 13.4%, 영국 14%, 일본 10.8%, 독일 10%, 스웨덴 9.5%, 미국 7.1% 수준임이다(ILO, 2003, 정책기획위원회, 2006: 94, 재인용).

에 대한 투자에 우선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과 아동양육 양립을 위한 보편적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도가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본적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용의 제한성이 2006년 출산행위와 일과 가족생활양립 지원이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둘째자녀 출산을 분석한 [다 모형]에서는 자녀 출생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던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이 셋째 자녀 출산과 관련 된 [바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한국의 일-가족양립정책이 두 자녀 가구를 준거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결과이다. 일과 가족생활양립정책을 단순히 동질적인 집단을 상정하고 수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의 필요에 조응할 수 있도록 지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이를 실현하기에는 실질적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04년 현재 출생아수는 476,052명이고 (통계청, 각 연도), 기혼여성의 48.7%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현재 출산을 한 취업여성의 단지 3.9%만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홍식, 2007).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의 26.4%)로 한정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비율은 15.2% 내외가 된다.<sup>35)</sup> 그러므로 지난 2006년 6월 20일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하여 합의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을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하고, 이후 자영업, 농어민 등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또한 정책 당사자로서 실제적 책임(재정적 지원)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책임 확대를 통해 현재 정책의 사

35) 4.0%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2004년 출생아수(476,052)를 구하고 여기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0.487)을 곱해서 231천 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으로부터 출산했다고 추정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육아휴직 이용자 9,122 명(남성 204명은 제외)을 앞서 구해진 231천명으로 나누어 3.9%라는 수치를 구했다. 출산여성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은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인 2,556,648명을 기혼과 미혼 경제활동 여성 수(9,668천명)로 나누어 26.4%를 구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출산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비율인 15.3%는 전체출산아동수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을 곱하고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율을 곱해서 출산을 한 고용보험 피보험여성 수를 61,205명으로 추정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육아휴직 이용자 수를 61,205명으로 나누어 15.2%라는 수치를 추정한 것이다.

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제도 내로 포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등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낮은 급여수준을 휴직 전 실질적 임금을 보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낮은 급여를 받아도 생계가 가능한 여성, 즉, 배우자(남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할 수 있는) 여성으로 제도의 이용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책이 목적인바와 달리 육아휴직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임금수준을 보존하는 방식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아동양육기간까지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Hiilamo, 2004) 적절한 수준에서 최저수준이 보증되는 하한선과 고소득군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해 남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가족 내 아동양육의 성별분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과 함께 육아휴직제도내에 아버지할당기간이 도입되면 육아휴직 제도는 명실상부하게 부·모 모두의 아동양육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적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결국 문제는 제도의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정책지원 대상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가와 그 질(지원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정책성패의 보편적 준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과 보완을 통해서만이 저출산 시대에 출산양육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제 6 장 사회문화적 요인과 2006년 출산과의 관련성

### 제 1 절 분석 개요

한국사회에서 출산과 그 전제가 되고 있는 결혼은 경제적, 정책적 등 다른 요소 못지않게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경기상황이나 정책보다 오히려 그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적인 문화나 가치에 의해 결혼율과 출산율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주의적인 가부장사회로 이는 남녀 모두의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초저출산현상의 이유로 여성의 교육수준 신장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가 전통적인 문화 및 가치와 양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편, 2002년 이래 우리사회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거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소자녀관이 점차 변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어느 정도이고, 이러한 변화가 출산행위로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출산과 관련한 사회문화요인으로서 부부간 육아분담과 다자녀의 가치관 변화가 2006년 출산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2절을 참조하도록 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로는 앞서 언급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최종출생아(2006년 출생아 포함) 출산 전에 남편과 가사의 분담 정도를 질문하였다. 응답 내용은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변수에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부인이 가사를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부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또한, 조사에서는 ‘지금보



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러한 다자녀의 사회분위기에 대한 찬성(매우찬성 포함), 보통 그리고 반대(매우 반대 포함)로 구분하였다.

## 제 2 절 사회문화적 요인과 2006년 출산 행태

### 1. 가사분담과 2006년 출산이행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부부가 가사 또는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 점은 특히 출산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에 둘째아를 출산한 경우, 계획출산한 여성 중에서 2006년 출산 전에 부인이 육아를 전담한 비율이 8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6-1〉 부부간 가사분담에 따른 2006년 출산 이행

(단위: 명, %)

구분	2006년 출산 전 육아분담 형태	계획출산	연기중출산	중단중출산	계
둘째아*	부인전가	84.0	9.9	6.0	100.0(583)
	부부분담	80.6	14.2	5.2	100.0(155)
	타인의뢰	66.0	24.0	10.0	100.0( 50)
셋째아	부인전가	56.6	5.6	37.8	100.0(143)
	부부분담	66.7	6.7	26.7	100.0( 30)
	타인의뢰	100.0	-	-	100.0( 7)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부가 분담한 비율은 80.6%, 타인에게 의뢰한 비율은 66.7%였다. 연기중에 출산한 여성 중에서는 2006년 출산 전에 타인에게 의뢰한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2006년에 이전에 육아를 타인에게 의뢰했던 여성들은 부인이 전담하거나 부부가 분담하던 여성들에 비해 연기중 출산 비율(24.0%) 또는 중단중 출산 비율

(10.0%)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6년 출산 이전에 육아를 타인에게 의뢰하고 직장생활이나 사회 활동 중이던 여성들이 다른 육아형태 여성들보다 연기중 또는 중단 중 출산 이행율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 2. 다출산의 사회분위기와 2006년 출산행태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2006년 출산여성의 태도는 찬성 37.9%, 보통 42.6%, 반대 19.5%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며, 보통을 긍정적인 태도로 간주할 경우 그 비율은 80%로 아주 높다.

〈표 1-6-2〉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태도

구 분						(단위: 명, %)
	매우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반대	계(n)
전체	4.4	33.5	42.6	18.3	1.2	100.0(1,871)
부인연령						
20~24세	-	35.2	46.3	18.5	-	100.0( 54)
25~29세	4.1	34.2	41.6	19.5	0.6	100.0( 462)
30~34세	4.1	31.3	43.6	19.6	1.3	100.0( 892)
35~39세	5.1	36.9	41.7	14.8	1.5	100.0( 393)
40세 이상	10.9	37.5	35.9	12.5	3.1	100.0( 64)
출산순위						
첫째아	3.7	33.1	43.3	18.2	1.6	100.0( 861)
둘째아	4.9	33.0	42.5	18.7	1.0	100.0( 804)
셋째아이상	5.8	36.9	39.8	17.0	0.5	100.0( 206)
취업여부*						
취업	5.1	39.3	38.5	16.4	0.8	100.0( 507)
비취업	4.2	31.3	44.2	19.0	1.4	100.0(1,363)
가구소득*						
60%미만	3.5	30.6	44.8	19.8	1.3	100.0( 797)
60~80%미만	3.1	33.1	39.0	22.0	2.8	100.0( 254)
80~100%미만	5.0	37.8	40.1	16.7	0.3	100.0( 299)
100~150%미만	5.3	36.9	41.9	15.0	0.9	100.0( 320)
150%이상	9.2	38.5	33.9	17.4	0.9	100.0( 109)

주: 가구소득은 '07년 2분기 도시가구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346만8천원)기준. 고위전문가(고위임직·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종사자 등(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자) /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이러한 사회적분위기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06년 출산여성의 지역구분, 연령, 학력, 총자녀수, 직업, 종사상지위 등의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계층을 넘어서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표 1-6-3〉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2006년 출산결정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 분	큰 영향 미침	다소 영향 미침	영향 없음	계(n)
전체	0.5	10.1	89.4	100.0(1,882)
부인연령				
20~24세	-	11.5	88.5	100.0( 52)
25~29세	0.4	7.8	91.8	100.0( 463)
30~34세	0.4	10.3	89.2	100.0( 902)
35~39세	0.3	11.4	88.4	100.0( 395)
40세 이상	3.1	15.6	81.3	100.0( 64)
총자녀수				
첫째아	0.2	8.2	91.6	100.0( 868)
둘째아	0.2	9.6	90.2	100.0( 806)
셋째아이상	2.4	20.2	77.4	100.0( 208)
취업여부*				
취업	0.2	11.0	88.8	100.0( 508)
비취업	0.6	9.8	89.7	100.0(1,373)
가구소득*				
60%미만	0.6	10.5	88.9	100.0( 803)
60~80%미만	0.8	12.1	87.2	100.0( 257)
80~100%미만	-	10.6	89.4	100.0( 302)
100~150%미만	-	9.0	91.0	100.0( 322)
150%이상	1.8	3.7	94.5	100.0( 109)

주: 가구소득은 '07년 2분기 도시가구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346만8천원)기준. 고위전문가(고위임직·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종사자 등(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자) /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다출산의 사회분위기가 2006년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는 <표 1-6-3>에 제시되어 있다. 2006년 출산여성(응답자) 중 10.6%(큰 영향 0.5% 포함)가 다출산의 사회분위가 본인의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역구분이나 학력별로 영향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나, 다른 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고연령층일수록 다출산의 사회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30대 후반과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11.7%, 18.7%로 평균을 상회하였다. 또한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셋째아 이상의 출산인 경우 그 영향력은 22.6%로 높았다. 그리고 경제적 특성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전문직종이나 서비스·판매직등 종사한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나 임시일용직인 경우,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절 사회문화적 요인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 1. 부부간 육아분담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모형1]은 첫째아 출산 여성의 둘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간에 육아를 함께 분담하는 여성집단이 그렇지 않은 여성집단에 비해 2006년에 둘째아 출산으로 이행한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출산 유형 즉 중단 중 출산, 연기 중 출산 그리고 계획된 출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남편의 육아 참여가 단산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추가 출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모형1]에서 남편의 육아참여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다른 통제변수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셋째아 출산 이행에 대한 [모형2]에서는 남편의 육아참여가 2006년에 발생한 중단중출산 이행과 연기된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6년에 계획된 셋째아 출산에 대한 남편의

육아참여는 음의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이는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이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남편의 육아참여만으로 그 이행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모형이나 출산유형에서와 달리, 여성연령, 거주지, 교육정도 등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표 1-6-4〉 부부간 육아분담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구 분	중단 중 출산		연기 중 출산		계획 출산	
	B	(S.E)	B	(S.E)	B	(S.E)
모형1(첫째아→둘째아 이행)						
상수	-1.93	0.46 ***	-0.68	0.30 *	0.95	0.20 ***
지역(도시=1, 농촌=0)	-0.46	0.40	-0.18	0.26	-0.18	0.17
연령(준거집단=35세 이상)						
20대	0.38	0.27	-0.63	0.23 **	0.10	0.13
30~34세	0.19	0.19	-0.60	0.21 **	-0.09	0.11
교육정도(대이상=1, 고이하=0)	0.15	0.18	0.19	0.15	0.21	0.10 *
경제활동(취업=1, 비취업=0)	-0.13	0.20	-0.17	0.16	0.08	0.11
가구소득(준거집단=100% 이상)						
80% 미만	-0.04	0.25	0.12	0.20	0.21	0.13
80~100% 미만	0.04	0.27	0.30	0.22	0.22	0.14
부부육아분담(부부공동=1)	1.49	0.20 ***	1.30	0.16 ***	1.47	0.11 ***
모형2(둘째아→셋째아 이행)						
상수	-2.67	0.45 ***	-5.31	217.30	-1.27	0.30 ***
지역(도시=1, 농촌=0)	0.02	0.24	0.28	0.45	0.35	0.17 *
연령(준거집단=35세 이상)						
20대	0.49	0.33	-1.17	0.53 *	0.25	0.24
30~34세	0.46	0.15 **	-0.14	0.47	0.37	0.13 **
교육정도(대이상=1, 고이하=0)	0.21	0.14	0.71	0.55	0.49	0.13 ***
경제활동(취업=1, 비취업=0)	0.19	0.17	-0.53	0.43	0.36	0.15 *
가구소득(준거집단=100% 이상)						
80% 미만	-0.34	0.18 †	-4.62	.	-0.16	0.16
80~100% 미만	0.31	0.25	-4.50	.	-0.13	0.18
부부육아분담(부부공동=1)	0.18	0.20	0.10	0.55	-0.28	0.14 *

주: 모형1 n=973, 모형2 n= 540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2006년에 급격하게 남편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의 육아참여가 둘째아 출산이행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최근에 정부가 저출산대책에서 부부간 양성 평등적 분업을 강조하고, 여성계 등에서 오랫동안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온 노력과 연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쉬넨이 언급한 페미니스트패러독스와 연계하여 보면, 향후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수준의 증가가 출산을 제고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점을 찾을 수 있겠다.

## 2. 다자녀 출산의 사회분위기가 2006년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다자녀의 사회적 분위기는 [모형1]에서 중단중 출산에만 양의 방향으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다자녀의 사회분위기에 찬성하는 여성집단이 반대하는 여성집단에 비해 단산하기로 결정한 둘째아 출산을 이행한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기중출산이나 계획중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또한, 둘째아에서 셋째아로의 출산이행에 대한 [모형2]의 결과에서도, 다자녀의 사회분위기는 어떤 유형의 출산 이행도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해도, 추가출산의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추가 출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언하면, 홍보활동 등에 의한 사회분위기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자녀양육부담이 국가나 사회에 의해 적절하게 분담되지 않는다면, 사회분위기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준다.

〈표 1-6-5〉 부모의 육아 지원이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결과

구 분	중단 중 출산		연기 중 출산		계획 출산	
	B	(S.E)	B	(S.E)	B	(S.E)
모형1(첫째아→둘째아 이행)						
상수	-2.65	0.46 ***	-1.23	0.29 ***	0.47	0.17 **
지역(도시=1, 농촌=0)	-0.49	0.39	-0.18	0.25	-0.17	0.14
연령(준거집단=35세 이상)						
20대	0.61	0.26 *	-0.47	0.22 *	0.28	0.12 *
30~34세	0.23	0.18	-0.57	0.20 **	-0.05	0.09
교육정도(대이상=1, 고이하=0)	0.16	0.17	0.19	0.14	0.21	0.09 *
경제활동(취업=1, 비취업=0)	0.15	0.20	0.10	0.15	0.39	0.09 ***
가구소득(준거집단=100% 이상)						
80% 미만	-0.19	0.24	-0.02	0.19	0.06	0.11
80~100% 미만	-0.02	0.26	0.24	0.21	0.15	0.12
사회분위기(준거집단=반대)						
찬성	0.58	0.22 **	0.14	0.18	0.10	0.12
보통	0.33	0.20	0.16	0.19	0.03	0.12
모형2(둘째아→셋째아 이행)						
상수	-2.53	0.44 ***	-5.31	211.30	-1.37	0.30 ***
지역(도시=1, 농촌=0)	0.01	0.24	0.26	0.46	0.36	0.17 *
연령(준거집단=35세 이상)						
20대	0.50	0.33	-1.23	0.54 *	0.24	0.24
30~34세	0.45	0.15 **	-0.18	0.47	0.36	0.12 **
교육정도(대이상=1, 고이하=0)	0.21	0.14	0.72	0.55	0.49	0.13 ***
경제활동(취업=1, 비취업=0)	0.21	0.17	-0.55	0.44	0.32	0.14 *
가구소득(준거집단=100% 이상)						
80% 미만	-0.35	0.18 *	-4.6411#	.	-0.15	0.16
80~100% 미만	0.30	0.25	-4.5257#	.	-0.12	0.17
사회분위기(준거집단=반대)						
찬성	-0.12	0.19	0.31	0.53	-0.15	0.17
보통	-0.06	0.19	-0.08	0.47	-0.09	0.17

주: 모형1 n=973, 모형2 n= 540

주: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 제 7 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제 1 절 2006년 출산증가 원인 종합

#### 1. 인구학적 원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초 6.0명에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급감하여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2.1명)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1.6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출산율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급락하여 최근에는 1.1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2006년에 들어 출생아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에서 1.13으로 높아졌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우선적으로 인구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 인구학적 요소들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결국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경제적 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2006년 출산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 요소로는 가임기(15~49세) 여성 규모와 법률적 결혼이다. 후자는 한국사회에서 출산 대부분(2006년 98.5%)이 법률혼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임기여성(15~49세) 전체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1996~2006년)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들의 혼인은 2003년을 저점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0~24세 여성의 인구수와 결혼 모두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였다. 25~29세 여성의 인구수는 2005년을 저점으로, 혼인수는 2004년을 저점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30~34세 여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들의 결혼은 10년 동안 2배정도 증가하였다. 35~39세 여성인구는 작은 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의 결혼은 10년 동안 3배 증



가하였다.

초혼만으로 한정해보면, 초혼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였던 것이 2006년에 처음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20~24세 여성초혼은 계속 감소했고, 25~29세 여성초혼은 2004년을 저점으로 최근 증가하였다. 30대 이상 초혼여성은 계속 증가했으며, 점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초혼연령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초혼연령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다. 이는 최근 25~29세 여성초혼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와 같이 고연령층에서의 초혼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그 동안 연기되었던 결혼이 최근에 들어 활발해졌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혼은 2003년 이후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혼여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산모의 결혼시기는 2006년 6.8%, 2005년 24.5%, 2004년 15.6%, 2003년 13.9%, 2002년 11.1%, 2001년 8.3%, 2000년 이전 20.5%이다. 첫째아만 보면, 지난 10년 동안 결혼 이듬해(결혼연도+1년) 출산 비율이 가장 높으나, 지난 10년 동안 58.9%에서 44.4%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결혼연도+2년 비율이 20% 내외에서 점차 낮아졌다. 결혼연도+3년 이상인 비율은 1996년 11.3%에서 2006년 21.8%로 급상승하였다. 요컨대, 초산 대부분이 결혼 2년차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 결혼 후에도 초산을 미루는 경향이 점차 높아졌다. 그러나 2006년에 결혼 당해연도와 이듬해에 초산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 결혼직후 초산으로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 후 6년 이상이 지난 시기에 첫째아를 두는 경향이 2006년에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 당해연도에 초산을 한 비율은 1996년 11.2%에서 2001년 8.1%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2004년 10.5%, 2005년 11.6%, 2006년 12.3%로 점차 증가하였다. 즉, 2006년 결혼해서 출산한 비율은 1990년대 중반이나 2004~2005년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을 뿐, 장기적으로 결혼 직후 출산경향이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출생의 월별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6년에 결혼한 여성이 2006년에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임신기간을 고려할 때, 연초(1~3월)에 결혼하여 연말경에(10~12월)에 출산하여야 하나, 그 비율은 과거추이와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다. 2006년 ‘쌍춘년’ 효과가 2006년 출산 증가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효과는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결혼 증가가 출산 증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즉시적이기보다 2~3년의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임신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결혼 당해연도에 출산하는 비율이 결코 높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 긴 기간 동안 결혼 증가가 누적된 후에 출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가임여성규모, 결혼률, 혼인유형, 이혼 등 인구학적 요소들을 종합하면, 30대 여성은 2006년 출산 증가에 양(+)의 방향으로 기여한 반면, 20대 여성은 음(-)으로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30~34세 여성의 규모(분모)가 감소한 반면, 결혼률 상승에 따른 출생아수(분자) 증가로 연령별출산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5~29세 여성의 경우 당해연도에 인구규모(분모)와 결혼 모두 증가했으나,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결혼 감소가 누적된 결과 출생아수(분자)가 감소하여 연령별출산율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30세 이상 출산율의 플러스(+) 기여도가 20대 출산율의 마이너스(-) 기여도보다 상대적으로 커 전체 출산율이 다소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06년 출산행태를 살펴보면, 2006년에 둘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첫째아 출산시기가 2002년 이전인 비율은 24.7%, 셋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둘째아의 출산시기가 2002년 이전인 비율이 67.6%로 나타나, 2006년 출생아 중 상당 부분이 그 동안 연기되었거나 중단되었던 출산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06년 출산의 83.0%가 계획되었으며, 10.4%는 연기 중 그리고 6.5%는 중단 후 출산한 경우이었다. 연기중출산의 비율은 저연령층일수록 높고, 중단중출산 비율은 고연령층일수록 높다. 중단중출산은 고순위 출산일수록, 연기중출산은 첫째아와 둘째아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 2. 경제적 원인

거시적인 접근 결과, 우리나라 남녀의 혼인율은 1995~1997년에 모두 높았으나, 2002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혼인율 감소 추이에 대해 경제성장률 변화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은 기업과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녀 대졸자 모두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었을 경우 다음해의 혼인율을 크게 높였고, 소비자물가가 높았을 때 혼인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당해연도와 1년 전의 경기 상황이 남녀의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출산율은 남성의 경우 IMF경제위기 이전에 가장 높았고 이후 점차 낮아져서 2005년에 가장 낮았으며, 여성의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이 이후시기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출산율 변동에 대해 경제변수들의 영향력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 경제성장률의 효과는 남성에게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반면 여성에게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1년 뒤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은 주로 30~32세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반면 26~29세에는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우 고용사정이 나아지면 이듬해 출산이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높은 경제활동참가(특히 대졸자의 경우, 모든 연령층)가 1년 뒤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여성 전체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때 1년 뒤의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시적 접근은 지난 10년 동안 경기상황이 결혼율과 출산율의 변동 추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거시적인 접근은 경제성장률, 고용율, 혼인율, 출산율 등 총합적인 수준의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대한 가구나 개인(여성)의 체감도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경기상황이 실제 여성(가구)의 의사결정과 출산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2006년 출산여성의 16.2%가 경기상황이 2006년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항로지스틱분석 결과, 2006년에 첫째아에서 둘째아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경기상황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경기 상황이라는 외

적인 환경 요소보다 내적인 것으로 자녀수 선호도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셋째아 출산 이행에는 경기 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자녀양육부담 등을 고려할 때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은 어려운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경기 상황을 보통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 이전에 셋째아 출산을 계획하였거나 또는 이미 둘째아에서 단산을 결정했던 여성(부부)들이 2006년에 셋째아 출산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 3. 정책적 원인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 세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1~1995)는 정부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1961년부터 출산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1996년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는 정부가 인구의 자질과 복지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공식 발표한 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2004년 2월)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2004~현재)는 정부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로드맵(roadmap)을 설정한 2004년부터이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추진체로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2004년 2월에 설치되었으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9월 1일 시행)되었다. 이어서 2005년에는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으로 격상·발족하였으며, 그 실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본부가 2005년 하반기에 설치되었다. 2004년 이래 중앙부처별로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저출산대책이 실시되었으며, 2006년에 들어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에서 저출산대책은 보육지원, 육아휴직, 아동보육과 같은 일과 가족생활양립 지원, 산모나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등을 포함한다. 2006년 출산여성 중 4.3%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적 영향은 고연령층(35~39세), 고순위출산(셋째아 이상), 중산층 이상, 취업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영유아보육지원이 2006년 자녀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 출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둘째 자녀 출산과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 정책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들은 2006년 출산과의 관계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많은 정책들이 2006년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효과성이 나타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2006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 정책들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또는 지원정도가 너무 낮아 일반 가구에서 체감하기에 미흡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책별로 출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더 시간을 두고 자료를 축정한 후에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해당 정책이 출산과 양육지원에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4. 사회문화적 요인

다항로지스틱분석결과, 남편의 육아참여는 2006년 둘째아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육아참여가 첫째아 출산 후 종료했던 것을 추가 출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2006년에 급격하게 남편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의 육아참여가 둘째아 출산이행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최근에 정부가 저출산대책에서 부부간 양성 평등적 분업을 강조하고, 여성계 등에서 오랫동안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온 노력과 연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쉬넨이 언급한 페미니스트패러독스와 연계하여 보면, 향후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수준의 증가가 출산을 제고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점을 찾

을 수 있겠다.

2006년 출산여성(응답자) 중 10.6%(큰 영향 0.5% 포함)가 다출산의 사회분위가 본인의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다자녀의 사회적 분위기는 단산했던 둘째출산을 추가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6년 셋째아 출산이행에 대해 다자녀의 사회분위기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해도, 추가출산의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추가 출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언하면, 홍보활동 등에 의한 사회분위기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자녀양육 부담이 국가나 사회에 의해 적절하게 분담되지 않는다면, 사회분위기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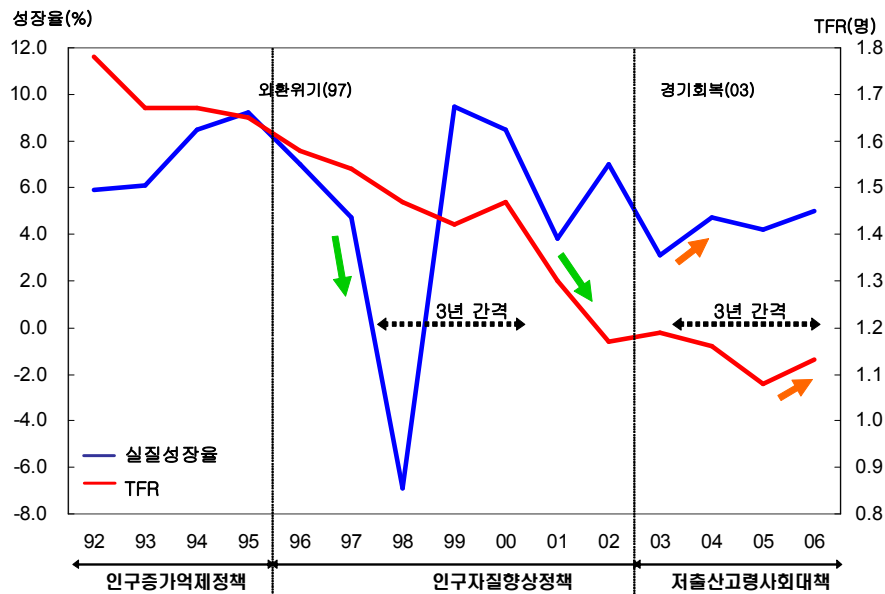
## 제2절 2006년 출산증가 원인의 함의

경제적 원인 분석에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결혼율과 출산율은 경기상황에 의해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은 2002~2005년 기간에 보다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의 출산 동향을 분석해보면,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추가 출산 이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거시적 및 미시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실질GDP성장률)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7-1]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에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출산율이 바로 낮아지기보다, 실제로는 2001년부터 1.30 이하로 급강하하여 이른바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실질GDP성장률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로 최저 수준에 이른 후 2006년 1.13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전자의 출산율 급락 시기와 후자의 출산율 반등 시기는 경제성장률 급락과 경제성장률 증가 시기와 약 3년간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경기상황과 출산율간의 연동은 약 3년 시차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과 고용불안정 및 소

득불안정이 가구에 영향을 미쳐 결혼연기와 출산축소의 의사결정을 거쳐 전체적인 출산율 급락으로 이어지는데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7-1] 우리나라 실질GDP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변동 추이



이러한 경기-출산간의 순환고리는 경제성장률 상승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실질경제성장률이 증가하여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안정화되면, 이는 개인이나 가구의 결혼 및 출산 이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행위로 이행하는데(특히 결혼에서 출산으로의 이행과 임신기간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경제성장률 증가는 약 3년 시차를 두고 전체적인 출산 수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저출산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거나 2006년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다출산 가치관과 남성의 육아 참여도 2006년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정책과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경제적 영향간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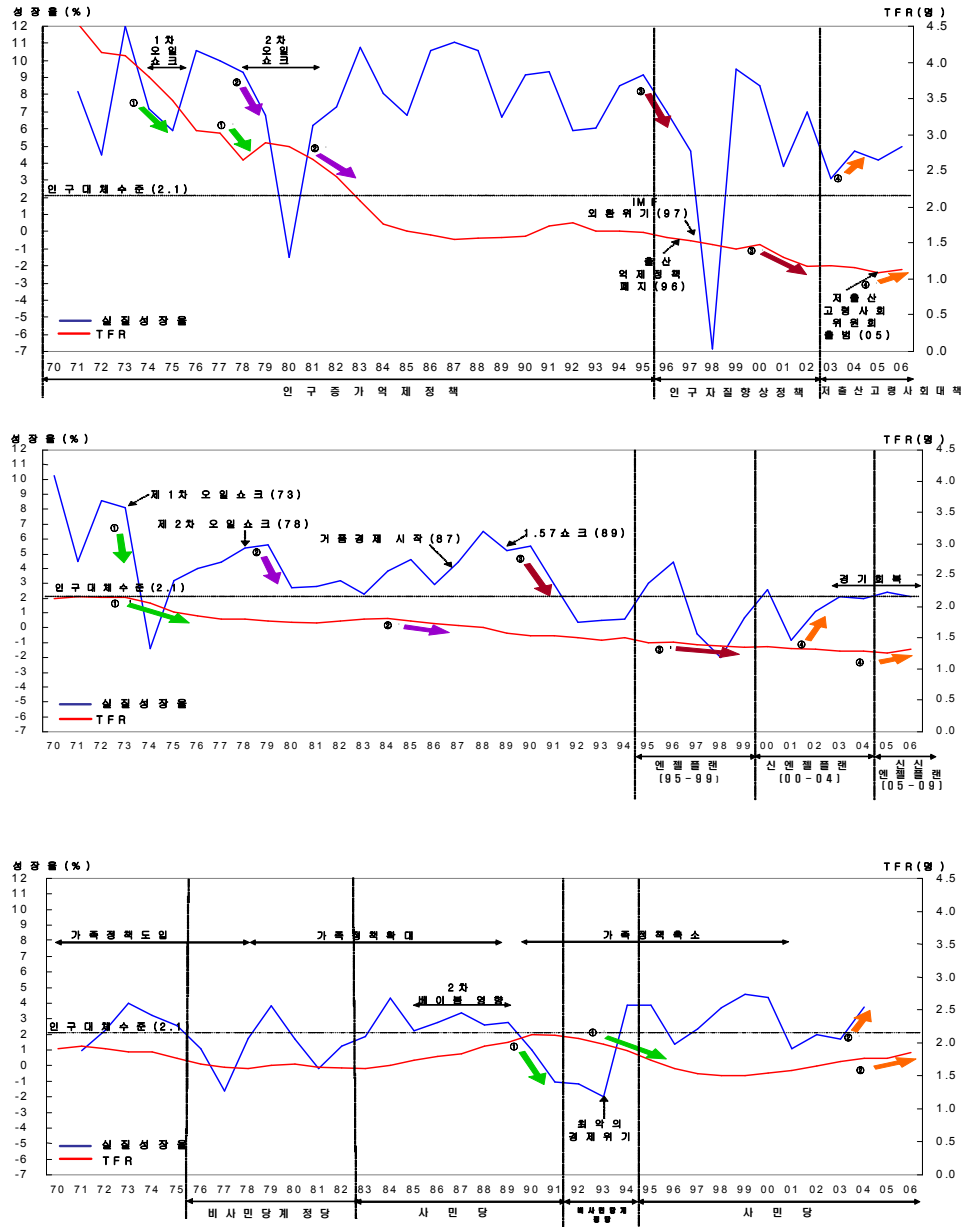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990년대 경기불황을 경험한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스웨덴은 거의 매 10년마다의 경기순환이 나타나는데, 출산율은 경기순환과 연동하는 톨리코스트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1970년대 중반 경기침체에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하락하였으며, 1980년대 경제회복기에는 2.13(1990년)까지 증가하였다. 다시 1990년대초 이래 경제위기기에는 합계출산율이 1.52(1999년)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합계출산율이 1.85(2006년)까지 상승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출산율이 더욱 하락하였으며, 1990년 중반이래 장기적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평생직장 보장’이 사라지면서, 출산율이 1.36까지 하락하였다(Ogawa, 2003). 그러나 2002년부터 경기가 회복하면서 약 4년 후인 2006년에 출산율이 1.32(2005년 1.26)로 처음 증가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경기 변동은 일차적으로 고용과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혼과 출산에 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경기-고용-출산의 순환고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은 이러한 경기-출산의 순환고리에서 충격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출산율의 변동이 아주 탄력적이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정책적 노력에 의해 양성평등문화에 기초한 자녀양육의 사회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진 데에 기인한다. 특히, 경기회복기 초에는 여성고용 안정과 가족에 대한 사회투자가 확대되어 자녀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스웨덴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7-2] 한국, 일본, 스웨덴의 경기변동과 출산율



일본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하락세에 있으나, 그 속도는 아주 완만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990년대에 거품경제 붕괴 후 불경기에도 출산율의 하락은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육인프라 확충, 일-가정양립 제고,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 1990년대 초 이래 10여 년 동안 저출산대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지난 10여년 동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경기불황기에도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 일본의 출산율이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경향이 강한 사회이며 가족에 대한 사회투자가 극히 미흡한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은 가족생활 영역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동안 1.6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합계출산율은 1998~2000년 기간의 약 3년간 잠복기를 거쳐 2001년부터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로 급락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할 자녀양육의 사회안전망이 전혀 구축되지 못했던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투자가 OECD 국가의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개인이나 가구에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일은 해당 개인이나 가구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 및 자녀양육은 극히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요소(경기, 정책, 사회문화, 세계경제 등)들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변동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이 외부 충격의 영향에 덜 좌우되면서 안정적인 가족생활 특히, 결혼, 출산, 자녀양육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제2부 출생통계시스템 개선 연구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학적으로 출생은 사망 및 인구이동과 함께 인구변동요인에 포함된다. 출생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인구동태 사상(event)으로 추후 학령인구, 노동력, 가임인구, 노인인구 등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출생(live birth)이란 인구학적으로 “모체에서 분리될 때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상적인 경우”를 말한다(Henrys, et al., 1976). 임신 중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유산되는 태아는 출생에서 제외된다. 정상적인 임신주수를 채우고 모체에서 분리되었지만,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사산(stillbirth)도 출생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대로 모체에서 분리될 때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상적인 아이가 출산 직후 또는 일정한 기간 후에 사망한 경우는 출생에 포함한다.

국가 차원에서 출생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 변동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구규모가 국가의 힘을 함축하던 전통적 인식의 측면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인구가 갖고 있는 함의는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통치 기반이 지배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라는 차원에서 국가는 국민(인구)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되고, 정책의 정확한 대상은 인구동태에 의해서 변화한다. 여기서 정확한 인구 동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근대에 들어 인구동태 제도는 국가의 중요한 업무로 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 출산율(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3년 2.1의 인구대치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1.1 수준까지 감소하여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유럽국가들이 100년 이상 기간에 걸쳐 출산력이 변천되어온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불과 수십년 동안에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하였으며, 그 수준은 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저출산현상은

압축성장과 외환위기의 경제적인 굴곡,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간의 혼재,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재편과 지나친 경쟁사회 구도,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증가 등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최근 전사회적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저출산현상의 본질과 함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산율 변동 추이와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그리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변동과 원인 분석에 근간이 되는 출생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출생통계와 관련된 정부의 시스템(호적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인구동태통계시스템) 중에서 인구동태시스템에 초점을 맞춘다. 세 가지 다른 시스템이 출생통계와 연관되지만 이중에서 인구동태시스템이 공인된 출생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 ‘출생통계’는 인구동태시스템에 의거하여 통계청에서 국가공식통계로 작성하고 있는 통계를 지칭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를 출생통계로 간주하고, 다른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각종 출생관련 행정자료는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리나라 출생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은 출생통계 생성과정, 출생통계 내용구성, 출생통계 발표시기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주된 이유는 이들 세 가지 측면이 출생통계의 정확성, 충분성 그리고 시의성 제고에 전제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출생신고담당 일선행정기관 담당자 면담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연구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선 문헌조사에서는 국내의 선행연구와 일부 국가의 사례를 고찰한다. 일찍 근대화를 시작한 서구 국가들은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출생통계시스템을 오래 전에 확립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외국 사례를 고찰하여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출생통계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출생통계 생산과정에 개입하는 일선 행정기관(읍·면·동, 시·군·구, 시·도)의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한다. 이러한 면담은 행정단위 특성별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의 광역시-자치구-동 단위의 담당공무원을 각각 방문하여 면담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은 도-시군-읍면동 단위의 담당공무원을 각각 방문하여 면담한다. 그리고 비자치구(행정구)의 특성을 별도로 파악해볼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특정 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고 관련자와 면담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각 연구방법에서 주된 분석의 초점은 출생통계의 시의성과 구성내용 및 활용시기에 관한 것이다.

## 제 2 장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 현황 분석

### 제 1 절 출생신고체계 및 관리시스템

#### 1. 출생신고체계

출생신고는 출생아의 신분(이름과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것으로 호적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인구동태신고와 주민행정을 위한 주민등록신고와 구분된다.<sup>36)</sup> 이러한 출생신고는 호적법(제25조, 제49조)에 의거 의무화되었다. 모든 출생아에 대해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나 시·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그리고 군청에서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출생신고서는 호적정보와 인구동태정보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출생신고서 상 호적 관련 정보를 호적정보시스템(PC)에, 인구동태관련 정보를 인구동태통합시스템(PC)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및 관련 사항을 주민등록시스템(PC)에 각각 입력한다. 이들 시스템 각각은 호적을 관할하는 사법부(법원행정처와 지방법원지원)와 통계 전반을 관할하는 통계청, 주민등록시스템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한다. 주민등록신고도 호적(출생)신고 시 동시에 처리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이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부모의 주민등록부에 등재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한명의 출생신고에 대해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분산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출생신

---

36)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구동태통계는 1938년 조선총독부 총독령 제161호 조선인구동태조사규칙이 발효되면서 시작된다. 1962년에는 통계법 및 인구동태조사규칙에 의거 인구동태통계가 지정통계(3호)로 지정되었다(현 통계법 제4조 등). 1970년에는 호적신고항목과 인구동태조사항목을 통합하여 두 신고체계가 일원화되었으며, 이때부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에서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의 일부로서 출생통계를 작성하여 왔다.

고의 호적등재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인구동태통합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출생신고체계에서 호적정보는 신고장소가 본적지가 아닐 경우 한 단계를 더 거쳐야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호적시스템은 본적지에서만 호적부 편제·교합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적지가 아닌 현거주지에 신고하면, 전산입력은 현거주지에서 실행하지만, 실제 호적부 편제·교합작업은 본적지에서 실행한다.<sup>37)</sup> 따라서 출생신고서가 등기우편으로 본적지에 도착한 이후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은 호적부 편제·교합 작업을 하게 된다. 호적부 편제·교합 작업은 다시 행정기관 단위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동사무소·구청 편제일 경우에는 구청에서만 호적부 편제·교합 작업을 할 수 있다. 동사무소는 호적부 편제·교합 작업의 권한이 없다. 읍면동사무소·군청 편제일 경우에는 호적부 편제·교합 작업을 군청이 담당하지 않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한다.

한편 1991년부터 의료기관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부착이 의무화되었다.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2000.05.15. 호적예규 제583호)은 호적법 제4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증명서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출생증명서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8조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38조가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할 것이다. ③ 의사나 조산자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④ 출생신고 사건본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도 위와 같은 서식에 의한다. ⑤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사본이 첨부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동장 포함)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시

37) 호적 처리 절차가 현거주지와 본적지로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남아있다. 신고장소 어디에서나 호적부를 편제·교합 할 수 있다면 신고행정이 보다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부합여부를 대조·확인한다. 확인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의 적당한 여백에 인증문을 부기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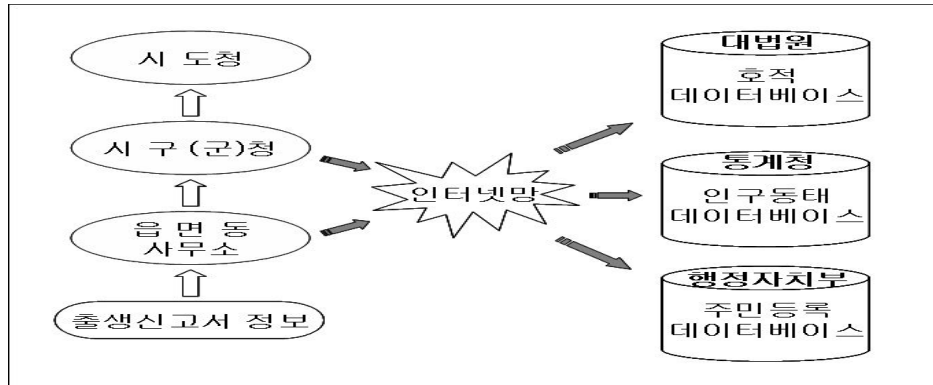
## 2. 출생신고 정보관리체계

### 가. 시스템 구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생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출생신고서 상 호적정보는 호적정보시스템에, 인구동태정보는 인구동태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주민등록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출생신고 입력체계는 <그림 2-2-1>에 도식화하였다. 출생신고서 상 호적정보인 ① 출생자, ② 부모, ③ 기타사항, ④ 신고인 사항은 호적정보시스템에 입력된다. 출생신고서 상 인구동태정보인 ⑤ 부모의 생년월일 ⑥ 부모의 직업 ⑦ 부모의 학력 ⑧ 부모의 실제결혼연월일 ⑨ 임신주수 ⑩ 다태아여부 ⑪ 출생순위 ⑫ 모의 출산아수 ⑬ 모의 출산수 항목은 인구동태통합시스템에 입력된다. 한편, 호적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호적정보 중 일부(① 출생자 정보 중에서 주소, 성별, 혼인 중 출생 여부, 출생일시)는 동시에 인구동태통합시스템에도 입력된다. 통계청에서는 이들 호적정보 일부를 활용하여 총 출생아수와 지역별, 월별, 혼인중여부별 출생통계를 생산한다.

이와 같이 호적정보시스템과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시스템은 별개의 것으로 출생 시 주민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신고하면서 출생이 집계되는 방식이다. 각 시스템은 해당 부처에 데이터베이스를 두면서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호적정보시스템은 대법원에서,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은 통계청에서, 그리고 주민등록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출생신고 접수 후 출생신고 정보의 전산 입력에 약 10분이 소요된다. 인구동태통합시스템에서 인구동태정보와 일부 호적정보는 전산 입력 즉시 통계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림 2-2-1] 출생신고 정보관리체계도



#### 나. 웹(web)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 메뉴

정부 출생통계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이다. 1997년에는 출생신고 내용을 인구동태신고시스템 개발에 따른 현지 즉, 출생신고 접수기관인 읍·면·동·시·구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어서 2004년부터는 호적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웹(web)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이는 출생신고를 전산자료로 생성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인구동태통합시스템 모니터 화면의 주요 메뉴를 살펴보면, <자료올리기> <자료입력> <내용검토(1차)> <내용검토(2차)> <입력현황> 등으로 구성된다. <자료올리기> 메뉴는 호적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인구동태정보를 인구동태통합시스템으로 불러들인다. <자료입력> 메뉴는 인구동태통합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각종 서식에 따라서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한다. 이 메뉴를 이용하여 호적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정보를 불러들이고, 나머지 인구동태부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입력을 끝낸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오류가 없는 상태일 경우 저장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는 창이 열려 수정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다. <내용검토> 메뉴는 모두 2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최초입력단계인 출생신고서 정보입력 단계에서 2차례 내용검토를 실

행하는 것이다.

<입력현황> 화면은 하위로 5개의 메뉴가 있는데, 자료조회, 생성파일보기, 입력현황, 호적건수입력, 집계표출력 메뉴이다. 먼저 자료조회 메뉴는 호적정보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누락이나 중복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다. 생성파일보기 메뉴는 입력하여 등록한 파일의 목록을 보여준다. 이 메뉴는 월단위로 파일목록이 조회되기 때문에 당 월 말일을 기점으로 정리하지 않은 목록이 드러난다. 이 메뉴를 이용하면 호적정보를 입력하고 인구동태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입력현황은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입력현황을 구분 내용에 따라서 표로 볼 수 있다. 구분은 지자체, 사건(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생성, 입력, 검토1차, 검토2차 등으로 나뉘며, 각 구분 항목 별로 건수를 보여준다.

호적건수입력 메뉴는 월 단위로 월 단위로 호적 건수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메뉴를 이용하여 호적건수와 인구동태 입력건수를 비교하여 정보 누락을 확인할 수 있다. 집계표 출력 메뉴는 월 단위로 해당 행정기관의 인구동태 전체건수 집계결과를 보여주고,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모든 행정단위는 각각의 접속 고유번호(ID)를 가지고 있다. 읍·면·동이나 시·구 단위는 모든 메뉴에 접근 가능하지만, 군 단위나 시·도 단위는 시스템의 <자료올리기>와 <자료입력> 메뉴에 접근할 수 없다. 이는 군 단위와 시·도 단위에서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군단위나 시·도단위에서는 관할 신고접수기관의 정보입력과정을 점검하고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 제 2 절 출생신고 내용 구성

신고의무자는 소정 양식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출생증명서를 부착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출생신고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상단

의 호적부문과 하단의 인구동태부문이다. 호적부문에는 이름, 성별, 혼인중·혼인외, 출생일시(시간), 출생장소(주택, 병원, 기타, 주소),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부모 성명,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이메일, 전화) 등이 포함된다. 인구동태부문에는 부와 모의 생년월일, 부와 모의 직업, 부와 모의 최종졸업학교(무학, 초, 중, 고, 대학이상), 부모의 결혼연월일(사실혼 기준), 임신주수, 다태아 여부, 출생순위, 신생아체중, 모의 출산수 및 사망아수가 포함된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아의 의료적 특성에 관한 사항으로 출생신고서의 또 다른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출생증명서의 모든 내용이 전산 입력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인이 출생신고서 양식을 작성할 때, 임신주수, 다태아여부, 출생순위, 신생아 체중, 모의 출산수 및 사망아수 등의 항목만 출생증명서를 참고하여 기입한다. 그리고 행정기관 담당자는 출생신고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할 때, 위의 항목을 출생증명서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경우 등록을 완료한다. 출생증명서에는 출생아의부모의 성명, 연령,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장소(① 자가 ② 병원 ③ 의원 ④ 모자보건센터 ⑤ 조산원 ⑥ 기타)와 그 명칭, 출생일시, 임신기간, 출생아 성별 및 성명, 태수, 다태출산 중의 출산순위, 다태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출생, 사산), 산모의 산아수(생존자, 사망자, 사산자), 신생아의 신체상황 및 체중, 출생아의 건강상황이 포함된다(표 2-2-1 참조).

호적신고는 출생아와 부모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목적을 가지며, 주민등록신고는 주민행정의 목적을 가진다. 이와 달리 인구동태신고는 통계 작성 및 활용도 제고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생통계는 생산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충분한 내용을 포괄하여야 한다. 자칫 현 출생신고서를 등록 목적에만 집중하고 출생통계의 기능을 도외시킬 경우, 비용에 비해 얻어지는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많은 신고항목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신고항목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출생신고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실제로 출생통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한정하였다.

〈표 2-2-1〉 출생증명서 양식

출생증명서									
1	출생아의 부 모	부	성명		연령	년 월 일생(만 세)		직업	
		모	성명		연령	년 월 일생(만 세)		직업	
2	산모의 주소								
3	출생장소	번지							
		①자가 ③의원 ⑤조산원 ②병원 ④모자보건센터 ⑥기타( )							
4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의함)				출 생	성별	남 · 여 · 불상	
5	임신기간	주				아	성명		
6	다태	①2태 ②3태 ③ 태	다태아출산중의 본아의 출산 순위			①제1아 ③제3아			
			다태의 출산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인(남 인, 여 인)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			
7	산모의 산아 수	명중 생존자 명, 사망자 명, 사산자 태							
8	출생아의 신체상황					몸무게		□.□□kg	
9	출생아의 건강상황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의료기관 주소</p> <p style="text-align: center;">명칭</p> <p>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p> <p>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p> <p>※주의 : 출생신고는 1월 이내에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31312-00811일

210mm×297mm

94.6.17 승인

(신문용지 54g/m<sup>2</sup>)

출생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실제 이용도가 낮은 전문가들의 경우, 조사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된 응답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로서 인구학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현행 출생신고서 내용 상 한계점들은 <표 2-2-2>에 정리·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과 여러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들 그리고 최근의 사회현상을 감안할 때, 현재 출생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현재 통계청의 출생통계는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및 출산율, 연령별 출생 구성비, 모의 평균 출산연령, 출산순위별 출생, 동거기간별 첫째아 출산, 출생성비, 쌍둥이 이상 출생, 임신기간별 출생, 출생아의 체중, 출생장소별 출생,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의 내용 등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것은 인구학적 기본 사항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의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기, 고용, 교육 등 사회구조적인 요소와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화 추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있다. 현 항목들만으로는 출산율 변동의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물론 출산율 변동의 원인을 다른 거시적인 지표들과 연계하여 분석이 가능하나, 보다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원인 규명은 출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야 명료화될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그리고 출산시 산모나 영아의 건강상태 등은 보건의료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평생건강관리체계에서 시발점이 된다. 그러나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는 전문적인 사항보다는 인적사항과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에 한정하여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모나 영유아의 보건의료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보건 정책 차원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많은 지적 내용이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8) 실제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던 출생아수가 2006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집단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주된 원인으로는 출생신고항목의 제약으로 인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2-2-2〉 현행 출생신고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전문가 구분	전문가 의견(현행 출생신고서 상 부족 또는 미흡 항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증·혼인의 출생여부 문항 삭제(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 타당)</li> <li>◦ 출생아 이상발견 여부 항목 추가</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 진행과 달리 부 및 모의 국적 파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신고서 상 본적란에 외국인 부·모의 국적을 표기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이곳에 국적을 표기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실정</li> </ul> </li> <li>◦ 출생장소(주택, 병원, 기타) 이외 외국에서의 출생 여부 및 해당국가에 대한 신고항목 부재</li> <li>◦ 최종졸업학교 기입시 작성지침에 재학·중퇴는 그 이하의 학력에 표시토록 지침이 되어 있으나, 뒷면의 지침대로 작성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실정</li> <li>◦ 이혼과 재혼도 늘고 있지만, 농촌 저학력, 저위신 직업의 남성들은 만혼도 많다. 즉, 출산력 분석에 필요한 부모결혼정보(예로 자녀 출산시 부모의 결혼차수 등)가 미흡한 실정</li> <li>◦ 현 출산아의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순위 및 출생시기에 대한 항목 불포함</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과 이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모의 인종(race)에 대한 정보 파악 곤란</li> <li>◦ 모의 산전관리에 대한 정보 불포함(예로 산전진찰시기, 진찰회수)</li> <li>◦ 산모의 신장, 임신 전 체중 및 출산직전 체중에 대한 항목 부재</li> <li>◦ 산모의 임신 및 분만 합병증 등에 대한 항목 부재</li> <li>◦ 출산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 등)에 대한 항목 부재</li> <li>◦ 신생아 임신주수, 출생체중, 선천성 기형에 대한 정보 파악 불가능</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국적, 부모의 출생지, 부모의 사용언어(외국 출생의 경우), 부모의 혼인상태에 대한 정보 파악 불가능</li> </ul>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과거 국적, 인종, 입국시기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에 의한 출생아수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li> <li>◦ 모의 과거 출생아수와 생존아수를 성별로 파악할 수 없어, 자녀성에 따른 세부 분석 곤란.</li> <li>◦ 출생 전후시기에 부부의 경제활동상황 변화에 관한 항목 부재</li> <li>◦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수 규모 파악 곤란.</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증·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li> <li>◦ 출산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 등)과 임신방법(자연임신, 인공수정 등)에 대한 항목 부재</li> </ul>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아의 출생당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미국에서는 APGAR score<sup>39)</sup>를 많이 사용. 이것은 출생아의 출생 당시 건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 지금까지 우리는 출생 시 체중과 임신주수로만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는데, 이보다 더욱 정확한 측정지표 APGAR score 필요.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delivery에 간여한 의료진이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출생증명서에 함께 기재되도록 유도하고, 또 출생신고서 작성 시 같이 기입되면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li> </ul>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중절수술 및 자연유산 경력에 대한 항목 부재</li> <li>◦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관한 항목 부재</li> </ul>

39) APGAR score는 신생아의 심장 박동수·호흡 속도 등 신체 상태를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최근 국제화 추이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조류로 아시아여성들은 빈곤 탈출 등을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결혼을 하지 못한 한국남성들이 외국 신부들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공급에 따라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생신고항목들이 세계화 흐름과 연동하여 변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 대부분은 관련 항목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 제 3 절 출생통계 작성 및 발표

#### 1. 출생통계 집계과정

2004년 웹(web) 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 운용이전에는 출생통계 집계과정이 다단계 과정을 거쳐야 했다. 출생신고를 접수한 읍·면·동사무소는 출생신고건수를 집계하여 매월 시·군·구청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시·군·구청에서는 관할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출생신고건수를 취합하여 관할 시·도청에 제출하였다. 다시 시·도청에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제출받은 출생신고건수를 통계청에 제출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동안 통계 집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2004년 인구동태통합시스템 운용 이후부터 출생통계의 집계과정은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출생통계는 신고인에서 시작하여 통계청으로 취합되는 일련의 생성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다. 정보의 흐름은 행정기관의 단위에 따라 차이 가 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로로 구분된다. 첫째는 동사무소와 시·구청을 통한 정보 흐름, 둘째는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통한 정보흐름이다. 비자치구의 경우는 첫째 정보흐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정보 흐름의 구분은 출생신고 접수기관과 관계가 있다. 즉 동·시·군 행정체계에서는 동사무소와 시·구청 모두 출생신고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이 이중적인 반면, 읍·면·군의 행정체계에서는 읍·면사무소에서만 출생신고서를 접수하고 군청에서는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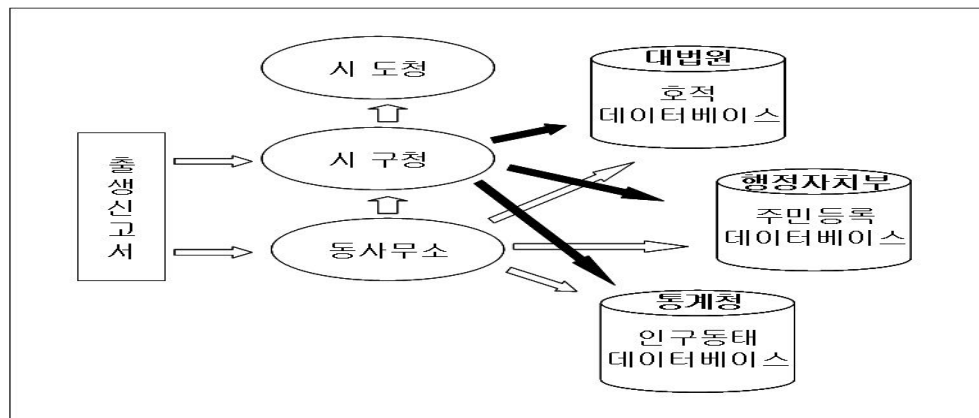


않기 때문에 단선적 정보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 가. 동사무소-시·구청

동사무소-구청의 행정체계인 경우에는 출생통계 정보가 복합적으로 취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이유는 동사무소와 시·구청 모두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대도시 동사무소와 구청의 경우, 중소도시의 도농통합시의 경우, 비자치구의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곳이 최초의 전산입력 출발점이 된다. 동사무소 또는 시·구청에서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여 신고서의 정보를 웹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에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통계청 인구동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는 점이 이전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이다. 통계청에서는 전국의 동사무소와 시·구청의 입력상황을 입력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2-2] 동사무소-구청의 웹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을 통한 통계집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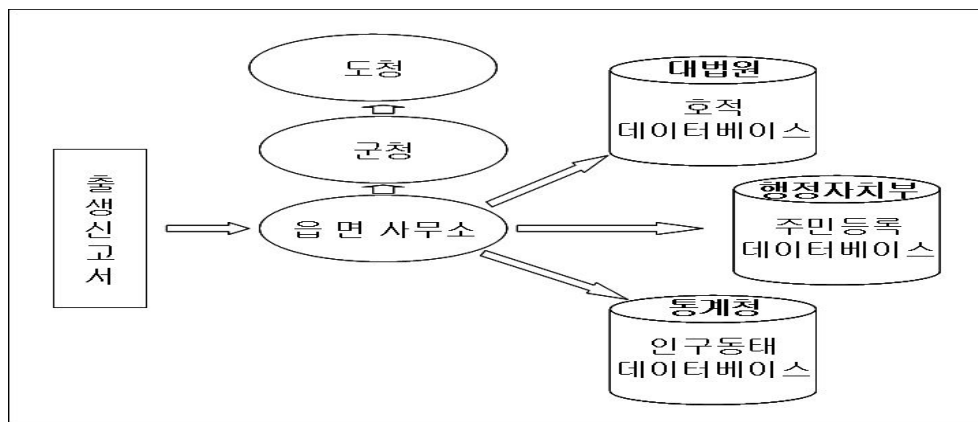
다른 한편 매월 입력현황을 각급 상위 기관에 보고한다. 이과정은 2004년 웹기반 시스템 이전과 동일하지만 이 집계가 통계청에 보고를 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이미 입력과 동시에 출생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급 기관 보고체계는 일종의 입력과정 지도·감독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동사무소에서 최초

입력한 상황을 매월 구청에 보고하고, 시·구청은 이 입력현황을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구청이 시·도청에 보고한 내용 역시 시·도의 지도·감독을 위한 것이다. 시·도는 각 시·구청의 집계자료를 보고받아 보완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동사무소나 시·구청의 입력이 모두 끝난 것을 확인하는 즉시 통계청은 취합이 가능한 상태이다.

#### 나. 읍·면사무소와 군청

통계정보의 흐름이 읍·면·군 행정체계에서는 단선적이다. 그 이유는 군청이 출생 신고서를 접수받지 않는 반면 읍·면사무소에서만 출생신고서를 접수받기 때문이다.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서 양식을 전산입력하는 즉시 정보는 통계청 인구동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그림 2-2-3] 읍면사무소-군청의 웹기반 인구동태통합시스템을 통한 통계집계과정



그러나 도청, 군청은 출생신고를 접수받지 않기 때문에 전산입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통계생산과정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에서 매월 1회 입력현황을 집계 후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입력 상황을 점검할 뿐이다. 통상 읍·면동사무소는 당월의 출생건수를 모두 입력하여 2차

레 점검을 마친 후 입력현황을 집계하여, 익월 첫 주 이내로 시·구청에 보고한다. 시·구·군청은 다시 관할지역의 모든 출생건수를 집계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청은 역시 관할지역의 모든 출생건수가 집계되면 통계청으로 입력완료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 2. 출생통계 발표과정

현재 일반국민이 일선 행정기관에 접수한 출생신고서를 담당공무원이 약 20분에 걸쳐 신고내용(항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즉시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된다.<sup>40)</sup> 그러나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출생통계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월, 분기 또는 연간)의 신고건수가 누적되어야 하며, 이들 신고내용(전산자료)에 대한 일정한 자료처리와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통계청은 지연하여 신고된 출생건수에 대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간을 소요하고 있다. 1970~1998년까지의 출생통계는 과거 10년 동안 접수한 신고서를 계속하여 해당 발생연도에 누적 집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연도를 지나 신고되는 지연 신고분이 추가되어 동일 연도에 대한 출생건수가 매년 다르게 나타났다. 이때까지 출생통계는 신고되지 않은 영아사망아수 등을 추정해 추정치가 있는가 하면, 신고된 출생아수를 그대로 집계한 신고치가 매년 달라져 이용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는 해당연도와 다음 해 4월까지 접수된 신고서를 해당 발생연도 기준으로 집계하고, 다음 해 5월 이후에 지연되어 신고된 출생건수는 집계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통계청, 2006).

또한 통계청은 전산입력된 신고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전산자료의 중복, 누락 및 입력오류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신고서 전산자료 상 누락된 출생건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의 호적사건 건수표와 비교하여 누락건수를 확인하여 보완한다. 또한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출생

40)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단위별로 하위단위에서 상위단위로 집계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건수의 취합기능이 아니라 입력절차의 확인 기능에 해당한다.

아의 누락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에서 화장 처리한 영·유아 사망자에 관한 자료를 연 2회에 걸쳐 수집한다. 동 자료를 또 다른 인구동태사건인 사망에 관한 신고자료와 대조하여 누락된 사망아 등을 출생통계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이러한 자료처리과정은 연중 실시될 것이나, 출생통계 집계에 포함되는 익년 4월까지의 신고건수도 자료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익년 5월에 이르러서야 잠정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년 출생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sup>41)</sup> 2006년도 출생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출생통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잠정결과는 2007년 5월에 발표하고 이어서 동년 8월에는 확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발표 내용은 보도자료 형태로 주요 일부 통계에 대해서만 발표한다. 출생 현황에 더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연말에 발간하는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고서 수록 자료를 통계청의 통계 데이터베이스(KOSIS)에 수록한 후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에 제공하며 원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현 출생통계 작성체계에서 좀 더 출생통계 이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출생통계는 각종 보건의료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를 근거로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예산이 책정·집행된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관련 사업의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수 및 출산율 변동에 따라 국가 정책 내지 사업 등을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차기 예산이 거의 연초에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반년 이상에서 1년(상세 보고서 자료)이나 늦게 보고되는 출생통계의 활용도는 낮아질 수

41) 법원행정처에서는 매년 출생을 수록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이는 호적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시·구·읍·면으로부터 보고받은 통계를 집계한 것이다. 통계청에서도 국가통계포털(KOSIS)웹사이트에서 지방법원별 혼인중 출생, 혼인외 출생 등의 연도별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2007년 1~9월까지 출생현황을 2007년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을 토대로 출생통계를 발표하고 있다(예로 서울시는 2007년 1월 18일 발표).

밖에 없다. 요컨대, 출생통계의 시의성(timeliness) 부족은 정책대상 선정 및 예산 집행의 부정확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제 3 장 외국의 출생통계시스템 사례

서구의 여러 국가들은 근대화초기부터 통치의 차원 또는 정책적 차원에서 인구관리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 후 각 국가의 제도는 현대 사회 조건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인구동태 관련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 단계 우리나라 인구동태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교구(para)에의 한 인구동태기록을 발전시켰던 유럽국가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는 다문화국가(multi-cultural country)라는 특성을 가지며, 일본은 아시아국가로서 인구동태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 제 1 절 출생신고 체계

출생신고체계는 출생신고의무자(legally responsible informants), 출생신고장소(place of registration), 출생신고기간(time of registration)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이들 사안에 대해 UN의 권고사항(United Nations, 2002)과 일부 국가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1. UN 권고사항

인구동태(vital) 기록에 대한 법률상의 사용을 위해 그리고 뚜렷한 사건(event)에 관한 통계적인 특성 그리고 개인에 관계된 정확한 정보가 보고자에 의해 지방공무원에게 제공된다. 법률(우리나라의 경우 호적법을 지칭)을 명시하는 것과 각 인구 동태를 위해 우선적인 정보를 명백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고자는 인구동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구두로 증언한다. 법률은 인구동

태의 각 종류에 따라 보고자를 선정해야한다. 적합한 보고자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구동태를 위하여 제안된 대리인으로 (1)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는 병원의 대표, (2) 모, (3) 부, (4) 분만 출석자(the attendant at the delivery), (5) 엄마와 가장 가까운 친척, (6)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진 다른 성인 등이다.

출생이나 사망은 보통 병원 또는 의료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은 그 시설(호적 등록 사무소)의 행정가(administrator)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다. 왜냐하면 출생은 검시관 또는 담당 내과 의사에 의한 실제 의학증명서와 보고자(informant)에 의한 신고가 서로 연계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동태는 일상의 거주 장소 또는 발생 장소에 따라 기록될 수 있다. 발생 장소를 통해서 수집된다면, 신고서에는 일상의 주거 장소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 유사하게 만약 일상 주거 공간에 의한 수집이라면, 보고자는 발생 장소에 대해 수집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통계는 발생 장소와 일상 주거 장소에 의한 양쪽 모두에 대해 준비할 수 있다. 아마도 발생 장소는 의료와 보건 시설(health facilities)의 분포를 분석하는 조사원에게 중요하다. 주거통계는 조사원이 수집하는 인구학의 자료에서 중요하다.

법률은 인구동태의 각 유형 보고를 위해 기한(time period)을 정해야 한다. 이 기한은 보고 의무와 연계되어야 하고, 법률은 불복종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해야 한다. 이 기한은 가능한 한 단기간이어야 한다. 이것은 보고자가 사소한 사항을 간과하거나 또는 어떤 사건(event)을 등한시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많은 나라들은 출생의 경우 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지체등록(late registration)은 법률적으로 상술된 기간 후에,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인구동태를 등록한 것이다. 지연등록(delayed registration)은 유예기간이 소멸된 후의 인구동태의 등록이다. 이러한 지체등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호적등록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인구동태등록에 대한 시의적절한 공동체 자각이 생기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체 또는 지연된 등록의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각국 사례

일본에서는 호적법 제49조, 제54조, 제55조에 의거하여 아이가 출생하면 호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동은 출생신고에 의해서 호적에 기재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아의 부모로서, 출생신고의무자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와 통합형태) 이외 출생신고관련 사항을 기입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한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출생신고서(전국 공통) 왼쪽 란에 아이의 이름, 부모의 이름 등 필요사항을 기입한다. 신고서의 신고인 서명란에는 부친 또는 모친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우선순위는 부), 조부모 등 제3의 서명으로는 수리되지 않는다.<sup>42)</sup> 서면에 의한 신고수속이 가능한 자(대리인 포함)는 적출자의 출생 신고의 경우, ① 아버지 또는 어머니(아이의 출생전에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는 어머니), ② 동거자, ③ 출산에 입회한 의사, 조산부, 그 외의 입회자 등의 순으로 신고할 수 있다(창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적출이 아닌 아이의 출생 신고의 경우에는 ①모, ②동거자, ③출산에 입회한 의사, 조산부, 그 외의 입회자 등의 순으로 신고수속을 할 수 있다. 신고 장소는 출생지, 아이의 본적지(아이가 입적해야 할 부모 또는 어머니의 본적지), 신고인의 소재지(주소지 또는 일시 거주지) 등의 시구정촌이 된다. 신고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이다(국외에서 출생했을 때는 3개월 이내). 신고 할 때 첨부서류는 부모의 신분증명서(호적등본, 호적초본), 출생신고서(출생신고기재사항 증명서), 모자수첩, 신고인의 인감,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 등이다. 신고 후에는 출생 신고를 제출한 관공서로부터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신고서는 수시로 접수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동사무소 폐청시에도 일직 담당자가 접수 받는다.

미국에서 출생신고는 The Model State Vital Statistics Act에 의거하여, 내과 의사, 조산사 등 출산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부모와 상담하여 표준출생신고서(U.S. standard certificate of birth)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는 출생 후 72시간 이내에 증명서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산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42) 단 사망의 경우에는 신고 가능하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출생 보고의 조건은 주마다 다르고, 태어난 지 24시간 이후부터 10일 내에 반드시 보고해야만 한다. 증명서는 출생이 발생하면 행정직의 지방 호적사무원에게 반드시 정식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영국에서 출생신고는 출생사망신고법(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과 관련 규칙에 의거한다.<sup>43)</sup> 신고자는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부 또는 모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부에 관한 정보의 기입 여부에 따라 신고방법이 상이하다.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기관이 출산장소(집 또는 병원)의 소유자, 출산 장소에 있었던 사람, 아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통해 등록을 주관한다. 이외 지역 보건국 또는 병원에서 등록소에 출생관련 정보(주로 의료관련)를 통보한다.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2005년 2.4%), 지역보건국에서 의사, 조산사 등을 파견하여 관련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출생신고의 기간은 42일 이내이며, 신고장소는 출생지역 등록사무소(Registration Office) 또는 기타지역 등록사무소이다. 출생지역 이외의 등록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신고서는 출생지역 등록사무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지역에 등록사무소가 없을 경우에는 일부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단, 산모가 병원 퇴원 이전에만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다.

## 제 2 절 출생신고 내용구성

### 1. UN 권고

호적법(civil registration law)은 인구 등록 신고서의 내용을 상술해야 한다. 이는 출생증거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을 상술해도 좋고 혹은 추가 사항을 포함해도 좋다. 법은 통계적 목적을 위한 추가 자료 수집을 요할 수 있다. 수집된 자

43) the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Regulations 1987(as amended), the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Welsh Language) Regulations 1987(as amended)

료의 일부는 법적, 통계적 목적 모두에 쓰일 것이다. 국제연합(UN)에서 발간된 호적법 초안은 출생, 사망, 혼인 신고 기록을 담은 내용을 보여준다. UN은 출생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출생아의 성명·성별·출생일시·출생장소·국적,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출생장소·국적, 모의 일상 거주지, 등록일시·장소, 호적 공무원의 신원 증명·서명·인장을 권고하고 있다.<sup>44)</sup> 또한 UN은 출생신고 서류를 통해 취합하여야 할 주제 목록을 권고하고 있다. 정상출산 기록으로 등록신고 사항(지역 등재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코드, 등록번호, 등록일), 출생아 사항(이름, 성별, 개인식별번호), 발생 사항(발생일시, 발생장소, 출산종류, 출산 시 출석인), 모친 및 부친 사항(이름, 개인식별번호, 생년월일이나 연령, 상주지, 국적·인종집단이나 시민권, 출생지, 혼인 여부), 보고자 사항(이름, 개인식별번호, 상주지, 출생아와 관계), 보고자에 의해 제시되는 서류(내과의사나 조산원이 발행한 의학증명서 혹은 이를 대체하여 출생 사건 증인의 이름과 개인 식별 번호), 소견과 서명(보고자와 지역 호적공무원 서명)이 해당된다.

## 2. 각국 사례

일본의 출생신고항목은 <표 2-3-1>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적출자 여부, 출생일자, 출생지, 부모의 연령(생년월일)과 본적지(외국인의 경우 국적), 결혼일자(동거일자), 부모의 직업, 신고인, 출생시각, 출생장소(병원, 진료소, 조산원, 자택, 기타) 및 시설통, 체중, 신장, 태수, 임신주수, 모의 출생아수 및 사망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신고항목과 유사하다. 특징적인 것은 신고인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동거자, 의사, 조산부, 기타 입회인 등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신고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력에 관한 사항도 신고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체중뿐만 아니라 신장과 신고항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44) *Handbook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s: Preparation of a Legal Framework*, para. 403, draft law, article 70.

미국은 주(州)마다 출생신고서가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콜로라도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고서(표 2-3-2)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동의 출생지, 출생장소와 시설명, 출생일자 및 시각, 조력자와 증명인; 부모의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부와 아이와의 관계, 부모의 인종(미국인, 인디언, 흑인, 백인)과 태생(히스패닉) 및 최종졸업학교, 사회보장번호; 모의 임신력, 결혼여부, 지난월경시작일자, 출생아, 생존아수, 사망아수, 기타임신결과, 산전관리 시작달, 산전관리횟수, 출생아 몸무게, 임신기간, 최종 출생아 출생일자, 최종임신종료일자, 출산형태(다태아여부), 출생순위, 아프가점수, 태아혈액검사일자, 분만전 모의 이송여부, 임신 중 의학적 위험요소, 임신 중 다른 위험요소, 검진절차, 분만시 문제, 분만방법, 영아의 이송여부, 신생아의 비정상 건강상태, 선천적 예외 아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출생신고 항목 중에는 보건의료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의 신고체계가 의료기관에 의한 신고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출생신고서는 <표 2-3-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관련 항목으로는 직업, 주소(본적), 출생장소, 결혼전후 성(모), 모의 재혼 여부, 국민건강보험번호, 모의 이전 자녀(출생자녀수, 사산아수), 혼인 중 출산의 경우 결혼일자 등이다. 아동관련 항목으로는 성별과 출생일자, 출생장소, 몸무게, 다태아여부, 사망아(수) 그리고 출생아(수)가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의 출생신고항목으로는 부모와 관련해서 연령(출생일자), 주소(본적), 출생장소, 결혼전/후 성(모), 임신기간(주수) 등이 그리고 아동과 관련해서는 성별, 출생일자, 출생장소, 시설/병원이름, 몸무게, 다태아여부, 출생순위, 사망아(수), 출생아(수), 조력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2-3-4).

호주의 출생신고서는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3-5).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여성의 인적사항, 임신력, 그리고 출생아에 관한 사항이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에 관한 자료는 건강보험시스템에 의해 수집되고 있다. 병·의원은 관련비용을 건강보험당국에 통보하여 지불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임신, 인공임신중절(사산 포함) 및 출산에 관한 개별신고서 3매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신고항목으로는 부모에 관한 연령(출생일자), 직업, 주소, 출생장소, 결혼일자, 태생, 결혼전/후 성(모), 임신기간(주수), 아이와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

다. 아동관련 항목으로는 성별, 출생일자, 출생장소, 출생시간, 생존여부, 시설/병원 이름, 몸무게, 조력자, 다른 자녀의 세부사항(이름, 성별, 출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프랑스의 출생신고서에는 부모관련 항목으로 연령(출생일자), 직업, 주소, 출생장소, 결혼일자, 최종출생아출산일자, 국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표 2-3-6). 아동관련 항목으로는 성별, 출생일자, 출생장소, 다태아여부, 출생아(수), 조력자, 법률상 신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자의 성명	성	이름	부모와관계	<input type="checkbox"/> 적출자 <input type="checkbox"/> 적출이 아닌 자 <input type="checkbox"/>
(2)	출생한	출생일자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오전 <input type="checkbox"/> 오후	시
(3)	자	출생장소	번지	번	지
(4)		주소(주민등록 곳)	번 호	세대주의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5)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부 년 월 일(만 세)	모 년 월 일(만 세)	
(6)		본적(외국인의 경 우국적만 기재)	번지 번	호주 성명	
(7)	출생한	동거를 시작한 날	년 월 (결혼식을 올렸을 때와 동거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재)		
(8)	자 의 부모	자녀가 태어났을 때 세대의 주요 업무와 부모의 직업	<input type="checkbox"/> 1. 농업만 또는 농업 과 기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 <input type="checkbox"/> 2. 자유업, 상공업, 서비스업 등을 개인으로 경영하고 있는 세대 <input type="checkbox"/> 3. 기업,개인 상점 등(관공서는 제외) 상용 근로 세대(근무처 종업원 1~99명) <input type="checkbox"/> 4. 3에 적용되지 않는 상용 근로자 세대 수 및 회사단체의 임원 세대 <input type="checkbox"/> 5. 1부터 4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업무를 하고 있는 세대 <input type="checkbox"/> 6.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세대		
(9)			(인구조사를 실시한 년의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경우만 기재) 부의 직업		
	기타				
	신고인	<input type="checkbox"/> 1.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2.법정대리인 <input type="checkbox"/> 3.동거자 <input type="checkbox"/> 4.의사 <input type="checkbox"/> 5.조산부 <input type="checkbox"/> 6.기타 입회인 <input type="checkbox"/> 7.공설소의 장			
		주소	번지	번	호
		본적	번지	호주 성명	
		서명	인	년	월 일생
	사건부 번호				
	자의 성명	성별	1. 남	2. 여	기입 요령
	출생한 시각	년 월 일	오전	시	분
	출생한 곳 및 종별	출생한 종별	1. 병원 2. 진료서 3. 조산원 4.자택 5. 기타		
		출생한 곳	번지 번	호	
		(출생곳종별1~3)시설명칭			
(11)	체중 및 신장	체중	그램	신장	센티미터
(12)	단태· 다태	1. 단태	2. 다태(	자 중 제	자)
(13)	모의 성명				
		임신주수	만 주 일		
(14)	모 출산 자녀	출생자(위 출생자 및 출생 후 사망자를 포함) 명 사산아(임신 만22주 이후) 태			
(15)	1. 의사 2. 조산부 3. 기타	상기와 같이 증명합니다. (주소) 번지 번 호 (성명)			

〈표 2-3-2〉 미국의 출생신고서(콜로라도주)

영아	1. 이름		2. 출생일자과 시간	
	3. 성별	4. 출생지역 (시, 읍, 지역)		5. 출생 county
조력자	6. 출생 장소 <input type="checkbox"/> 병원 <input type="checkbox"/> 자치출산센터 <sup>45)</sup> <input type="checkbox"/> 진료소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7. 시설이름	
	8. 앞서 말한 바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명▶		9. 서명 일자	10. 조력자 이름과 직위이름 <input type="checkbox"/> 의사 <input type="checkbox"/> D.O. <sup>46)</sup> <input type="checkbox"/> 공인간호·조산원 <sup>47)</sup> <input type="checkbox"/> 공인조산사 <sup>48)</sup> <input type="checkbox"/> 기타
	11. 증명인의 이름과 직위 이름 <input type="checkbox"/> 의사 <input type="checkbox"/> D.O. <input type="checkbox"/> 공인간호·조산원 <input type="checkbox"/> 공인조산사 <input type="checkbox"/> 병원행정요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조력자의 주소	
	13. 등록자 서명 ▶		14. 등록원에 의한 일자기록	
모	15. 이름		16. 출생일자	17. 출생장소
	18a. 주	18 b. 군	18.c 도시·읍(지 역)	18d. 우편번호
	18e. 거리와 번호		18f. Inside City Limits?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부	20. 이름		21. 출생일자	22. 출생장소
	23. 앞서 말한 바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부모나 신고인의 서명 ▶		24. 아이와의 관계	
의학· 보건을 위한 정보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능)				
부	25. 인종: 미국인, 인디언, 흑인, 백인, 기타		26. 히스패닉 태생 인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7. 최종졸업학교
	28. 사회보장 번호			
모	29. 인종: 미국인, 인디언, 흑인, 백인, 기타		30. 히스패닉 태생 인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1. 최종졸업학교
	32. 사회보장 번호			
	33. 임신력		34. 모 결혼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5. 지난 월경 시작 일자
	출생아 (현재아 불포함)		기타임신 결과 (자연유산, 인공유산 등)	36. 산전관리 시작 달
	33a. 생존아수 <input type="checkbox"/> 없음	34b. 사망아수 <input type="checkbox"/> 없음	33d. 수 <input type="checkbox"/> 없음	38. 출생아 몸무게
	33c. 최종 출생아 출산 일자		33e. 최종 임신 종료 일자	40a. 출산형태 단태아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input type="checkbox"/> 세쌍둥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41. 아프가 점수		42. 태아 혈액검사 일자 <input type="checkbox"/> 매독 <input type="checkbox"/> HIV <input type="checkbox"/> B형 감염	43a. 분만 전 모의 이송여부(예이면, 이송 시 설명 기입)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41a. 1분	41b. 5분	43b. 영아의 이송여부 (예이면, 이송 시 설명 기입)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44a. 임신 중 의학적 위험 요소		46. 분만시 문제	49. 선천적 예외 아동

01 <input type="checkbox"/> 빈혈증 02 <input type="checkbox"/> 심장병 03 <input type="checkbox"/> 급성, 만성 폐질환 04 <input type="checkbox"/> 임신 중 당뇨병 05 <input type="checkbox"/> 기존의 당뇨병 06 <input type="checkbox"/> 음부포진 07 <input type="checkbox"/> 수갈증 08 <input type="checkbox"/> 이상 혈색소증 09 <input type="checkbox"/> 만성 고혈압 10 <input type="checkbox"/> 임신관련 고혈압 11 <input type="checkbox"/> 경련, 자간증 12 <input type="checkbox"/> 무력경관 13 <input type="checkbox"/> 이전의 아이가 4000그램 이상 14 <input type="checkbox"/> 이전의 아이가 조산아 또는 미숙아 15 <input type="checkbox"/> 신장병 16 <input type="checkbox"/> RH 부적응증 17 <input type="checkbox"/> 자궁출혈 00 <input type="checkbox"/> 없음 18 <input type="checkbox"/> 기타	01 <input type="checkbox"/> 발열 ▶ 38°C 02 <input type="checkbox"/> 태변 03 <input type="checkbox"/> 조기양수파열 04 <input type="checkbox"/> 태반조기박리 05 <input type="checkbox"/> 전치태반 06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출혈 07 <input type="checkbox"/> 발작 08 <input type="checkbox"/> 단기출산고(3시간) 09 <input type="checkbox"/> 장기출산고(20시간) 10 <input type="checkbox"/> 진통부전 11 <input type="checkbox"/> 이상태위 12 <input type="checkbox"/> 만곡 13 <input type="checkbox"/> 자궁탈수 14 <input type="checkbox"/> 마취문제 15 <input type="checkbox"/> 태아위험 00 <input type="checkbox"/> 없음 16 <input type="checkbox"/> 그 외	01 <input type="checkbox"/> 무뇌증 02 <input type="checkbox"/> 수막탈출증 03 <input type="checkbox"/> 뇌수종 04 <input type="checkbox"/> 이상 소두 05 <input type="checkbox"/> 신경계 이상 06 <input type="checkbox"/> 흉부이상 07 <input type="checkbox"/> 순환계 이상 08 <input type="checkbox"/> 직장폐쇄증 09 <input type="checkbox"/> 기관 식도 누 10 <input type="checkbox"/> 식도 폐쇄증 11 <input type="checkbox"/> 위장 이상 12 <input type="checkbox"/> 생식기 기형 13 <input type="checkbox"/> 신부전증 14 <input type="checkbox"/> 생식기 이상 15 <input type="checkbox"/> 구개 16 <input type="checkbox"/> 다지증, 무지증 17 <input type="checkbox"/> 굽은 다리 18 <input type="checkbox"/> 횡경막 변형 19 <input type="checkbox"/> 근육결 이상 20 <input type="checkbox"/> 다운 증후군 21 <input type="checkbox"/> 염색체 이상 00 <input type="checkbox"/> 없음 22 <input type="checkbox"/> 그 외
44b. 임신 중 다른 위험 요소 임신 중 흡연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하루 당 핀 담배 수 임신 중 알코올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일주일에 몇 번 알코올 임신 중 불어난 몸무게	47. 분만 방법 01 <input type="checkbox"/> 질식분만 02 <input type="checkbox"/>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05 <input type="checkbox"/> 최초의 제왕절개 04 <input type="checkbox"/> 반복된 제왕절개 05 <input type="checkbox"/> 겸자분만 06 <input type="checkbox"/> 진공분만	
45. 검진절차 01 <input type="checkbox"/> 양수천자 02 <input type="checkbox"/> 전자태아관찰 03 <input type="checkbox"/> 유도분만 04 <input type="checkbox"/> 촉진분만 05 <input type="checkbox"/> Tocolysis 06 <input type="checkbox"/> 초음파 00 <input type="checkbox"/> 07 <input type="checkbox"/> 기타	48. 신생아의 비정상 건강상태 01 <input type="checkbox"/> 빈혈증 02 <input type="checkbox"/> 분만 상해 03 <input type="checkbox"/> 태아알코올증후군 04 <input type="checkbox"/> 유리막증 05 <input type="checkbox"/> 태변흡인증후군 06 <input type="checkbox"/> 인공호흡<30분 07 <input type="checkbox"/> 인공호흡≥30분 08 <input type="checkbox"/> 발작 00 <input type="checkbox"/> 없음 09 <input type="checkbox"/> 기타	50. 부모가 아이를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45) Freestanding birthing Center  
46)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47) C.N.M. (Certified Nurse Midwife)  
48) Registered Midwife

〈표 2-3-3〉 영국의 출생신고서

출생	등록 번호	기재 번호
등록지역 구역(sub-district)	구역 & S.Dist.Nos.	행정지역
아이 1. 출생일자와 장소		
2. 이름과 성		3. 성별
부 3. 이름과 성		
4. 출생 장소	6. 직업	
모 7. 이름과 성		
8. 출생 장소	8. 직업	
9. 결혼 전 성	9. 결혼 후 성	
10. 주소( 아이 출생 장소와 다를 경우)		
신고인 11. 이름과 성 (부모가 아닐 경우) 12. 직업		
13. 주소 (위의 10번과 다를 경우)		
14. 앞서 말한바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신고인 서명
15. 등록일자	16. 등록원 서명	



국민건강보험 번호
-----------

출생	인적조회 번호	구역&SD Nos.	등록번호
Z		등록날짜	기재번호
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5px;"></div> 그래프	F*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 5px;"></div> 명칭	상세 사항 1. 부의 이름이 등록부(신고서)에 기입된 경우: 부의 출생일자 일, 월, 년 2. 모든 경우: 모의 출생일자 일, 월, 년 3. 혼인 중 출산의 경우 (1) 결혼 일자 월, 년 (2) 모는 재혼인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모의 이전 자녀 ( 현남편 또는 전남편 모두 포함) - 출생 자녀수 (사망아포함) <input type="checkbox"/> - 사산아 수 <input type="checkbox"/>	
(i)	(ii)		
(iii)	(iv)		
G(a) 부			
(va)			
H(a)*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 쌍둥이, 세쌍둥이, 등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라면, (a)와 (b)를 완성하라 (a) 모의 출생아와 사산아의 합계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G(b) 모		출생아 (b) 출생 등록 번호	
(va)		사산아 (b)출생 등록 번호	
H(b)*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vi)	
우편번호		(vii)	

〈표 2-3-4〉 캐나다의 출생신고서(온타리오주)

아이의 성	1.		2. 성별		
이름					
생년월일	3. 월, 일, 년		4. 병원 이름		
출생장소	5. 도시, 읍, 면		시, 군	담당자 기입	
부모	부		모		
이름	6. 성		성		
	이름		출생 성 (결혼 전 성)		
	출생 성		이름		
	다른 성		다른 성		
출생장소	7. 도시·읍·마을		10. 도시·읍·마을		
	주(시,도)·국가	담당자 기입	주(시,도)·국가	담당자 기입	
생년월일	8. 월	일, 년	나이	8. 월	
통계를 위한 모 거주지	12. 주소		우편번호	담당자기입	
	13. 주소 (위와 다를 경우) 우체국 또는 지방 우편 배달구역이 있는 경우			우편번호	
기타	14. 임신기간	15. 자녀 수	16. 출생아 몸무게	17. 출생형태	18. 쌍둥이, 세 쌍둥이 일 경우 출생 순위
		출생아 수		사산아 수	
조력자	19. 출산 조력자의 이름과 주소			의사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신고인 증명	20. 앞서 말한바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일	월	년
	20. 우리는 아이의 성이 목록 1에서 보여지는 바에 동의합니다.	모 서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부 서명		
		신고인 서명		
21. 이 부분을 작성하기 전에 뒤 면의 (E) 참조. <input type="checkbox"/> 선택이름이 아이의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전통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표시				

서명하기 전에 참고

등록원 증명	등록원 서명		
	등록 번호	코드 번호	날짜: 월, 일, 년
담당자 기입			

## 〈표 2-3-5〉 호주의 출생신고서

아이의 세부사항 (부모 기입)				
성	이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아이의 세부사항 (병원 또는 담당의사 기입)				
출생일자	출생시간	성별	다수 출생이라면	몸무게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am/pm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그램
출생아는 살아있었는가? 죽었다면 임신기간				
<input type="text"/> 예 <input type="text"/> 아니오		<input type="text"/> 주		
출생장소(병원이름, 다른 장소라면 주소)				
<input type="text"/>				
의사, 간호사 또는 조산사		출생시 다른 참고인		
<input type="text"/> 의사·간호사·조산사		<input type="text"/>		
세부사항 ( 모 <input type="checkbox"/> 부모 <input type="checkbox"/> ) 아이 출생시				
성	결혼 전 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름	출생일자	직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출생장소		출생시 거주지 주소		
<input type="text"/> 도시·읍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나라		<input type="text"/>		
에보리지널 또는 토레스 해협 섬 태생 (통계목적)				
<input type="checkbox"/> 둘다 아님 <input type="checkbox"/> 에보리지널 태생 <input type="checkbox"/> 토레스해협 섬태생 <input type="checkbox"/> 에보리지널과 토레스해협 섬태생				
주간에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서명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결혼 또는 동거관계의 세부사항				
동거관계안에 부모가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결혼일자		결혼장소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도시·읍 <input type="text"/> 나라		
이런 관계에서 다른 아이들의 세부사항				
사산아와 입양아를 포함하여 출생순서대로 기입하라,				
사망아일 경우 출생일자 다음에 'd'를 기입하라.				

이름	출생일자	남·여
	/ /	
	/ /	
	/ /	

모의 아이들의 세부사항 / 이런 관계가 아닌 부모

출생순서대로 기입하라, 사망아일 경우 출생일자 다음에 'd'를 기입하라  
 '나는 이 정보가 출생증명서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 ☐ 아니오 ☐

이름	출생일자	남·여
	/ /	
	/ /	
	/ /	

부의 아이들의 세부사항 / 이런 관계가 아닌 부모

출생순서대로 기입하라, 사망아일 경우 출생일자 다음에 'd'를 기입하라  
 '나는 이 정보가 출생증명서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 ☐ 아니오 ☐

이름	출생일자	남·여
	/ /	
	/ /	
	/ /	

정보의 세부사항 / 이 양식을 완성한 부모  
 앞서 말한바가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성 이름

직업 아이와 관계 주간에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현재 거주지 주소 서명

도시·읍

나라

〈표 2-3-6〉 프랑스의 출생신고서

도 _____ 꼬뮌느(1) _____ 꼬뮌느(2) _____ 구역 _____ 출생일자 _____ 일 _____ 월 _____ 년	출생신고번호 _____																																	
<b>A. 아기 관련 정보</b>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성</td> <td style="width: 30%;">이름</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성별</td> <td>남 <input type="checkbox"/> 1</td> <td>여 <input type="checkbox"/> 2</td> </tr> <tr> <td>법률상 신분</td> <td>합법적 <input type="checkbox"/> 1</td> <td>자연적 <input type="checkbox"/> 2</td> </tr> <tr> <td></td> <td>인지 안됨 <input type="checkbox"/> 2</td> <td></td> </tr> <tr> <td></td> <td>부에 의해 인지 <input type="checkbox"/> 3</td> <td></td> </tr> <tr> <td></td> <td>모에 의해 인지 <input type="checkbox"/> 4</td> <td></td> </tr> <tr> <td></td> <td>부모에 의해 인지 <input type="checkbox"/> 5</td> <td></td> </tr> <tr> <td></td> <td>익명의 출생 <input type="checkbox"/> 6</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3,4,5번을 선택했을 때 다음을 완성하라)</p> <p>부 인지    일    월    년                    모 인지    일    월    년</p>		성	이름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1	여 <input type="checkbox"/> 2	법률상 신분	합법적 <input type="checkbox"/> 1	자연적 <input type="checkbox"/> 2		인지 안됨 <input type="checkbox"/> 2			부에 의해 인지 <input type="checkbox"/> 3			모에 의해 인지 <input type="checkbox"/> 4			부모에 의해 인지 <input type="checkbox"/> 5			익명의 출생 <input type="checkbox"/> 6										
성	이름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1	여 <input type="checkbox"/> 2																																
법률상 신분	합법적 <input type="checkbox"/> 1	자연적 <input type="checkbox"/> 2																																
	인지 안됨 <input type="checkbox"/> 2																																	
	부에 의해 인지 <input type="checkbox"/> 3																																	
	모에 의해 인지 <input type="checkbox"/> 4																																	
	부모에 의해 인지 <input type="checkbox"/> 5																																	
	익명의 출생 <input type="checkbox"/> 6																																	
<b>B. 모 관련 정보</b>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성</td> <td style="width: 30%;">이름</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생년월일</td> <td>일    월    년</td> <td></td> </tr> <tr> <td>장소</td> <td>꼬뮌느</td> <td></td> </tr> <tr> <td></td> <td>도 또는 지방</td> <td></td> </tr> <tr> <td>직업</td> <td>직업</td> <td></td> </tr> <tr> <td></td> <td>종사상지위    공공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td> <td></td> </tr> <tr> <td>국적</td> <td>프랑스 <input type="checkbox"/></td> <td></td> </tr> <tr> <td></td> <td>외국 <input type="checkbox"/> -----&gt; 나라이름</td> <td></td> </tr> <tr> <td>거주지</td> <td>꼬뮌느</td> <td></td> </tr> <tr> <td></td> <td>도 또는 지방</td> <td></td> </tr> <tr> <td></td> <td>거리 번호</td> <td></td> </tr> </table>		성	이름		생년월일	일    월    년		장소	꼬뮌느			도 또는 지방		직업	직업			종사상지위    공공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국적	프랑스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 나라이름		거주지	꼬뮌느			도 또는 지방			거리 번호	
성	이름																																	
생년월일	일    월    년																																	
장소	꼬뮌느																																	
	도 또는 지방																																	
직업	직업																																	
	종사상지위    공공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국적	프랑스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 나라이름																																	
거주지	꼬뮌느																																	
	도 또는 지방																																	
	거리 번호																																	
<b>C. 부 관련 정보</b>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성</td> <td style="width: 30%;">이름</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생년월일</td> <td>일    월    년</td> <td></td> </tr> <tr> <td>장소</td> <td>꼬뮌느</td> <td></td> </tr> <tr> <td></td> <td>도 또는 지방</td> <td></td> </tr> </table>		성	이름		생년월일	일    월    년		장소	꼬뮌느			도 또는 지방																						
성	이름																																	
생년월일	일    월    년																																	
장소	꼬뮌느																																	
	도 또는 지방																																	

직업	직업	
국적	종사자지위	공공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임금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프랑스 <input type="checkbox"/>	
	외국 <input type="checkbox"/>	-----> 나라이름

D. 부모 결혼일자

일자	일	월	년
장소	프랑스 대도시		
	Dom		
	Tom		
	다른 지역		

E. 기타 정보

출생상태	전문화된 기관에서	<input type="checkbox"/>
	거주지 또는 다른 장소에서	
	조력자와 함께 (의사 또는 조산사)	<input type="checkbox"/>
	조력자 없이	<input type="checkbox"/>
출생형태	단태아 출산	<input type="checkbox"/>
	다수 출산 -----쌍둥이	<input type="checkbox"/>
	세쌍둥이	<input type="checkbox"/>
	네쌍둥이 또는 그 이상	<input type="checkbox"/>
모는 다른 출생아가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 명수
	이전의 출생아 출산 일자	일 월 년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제 3 절 출생통계 작성체계

#### 1. UN 권고

주민등록 절차의 완전성, 정확성, 시의성은 인구 동태 통계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등재의 완전성은 개별 보고지역과, 인구 내 중요 인종집단이나 하위 문화 집단을 위해 점검 되어야 한다. 출산 보고와 부합하지 않는 유아 사망 보고도 점검되어야 한다. 낮은 생존력 프로필을 지닌 유아를 나타내는 출생 보고서를 사망 기록에 등재 할지에 결정해야 한다. 당해년도부터 다음해까지 보고된 다수 발생 사건에서 다양한 변이를 설명하려는 노력도 추구되어야 한다. 병원기록 대비 출생이나 사망 등재의 일치는 등재 완전성과 자료-항목의 정확성 척도를 나타낼 수 있다.

통계 목적을 위한 자료수집에서 정확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각의 항목은 명료하고 단순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통계 목적에서 고안된 항목의 수집을 담당하는 호적공무원과 의료담당직원은 자료의 의미와 사용과 관련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모호하거나 누락(분실)된 자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더 나은 정보를 모음으로써,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들에게 교육적 도구로 기능함으로써 정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등재의 시의성을 점검하는 법적 규제는 사건 발생일과 등재 일을 비교하여 수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지정된 기한 내 보고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등재에 도움이 되며 결과로 생긴 인구동태통계에도 도움이 된다. 완전한 통계 보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 등재 지역마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기적 훈련, 호적공무원과 의료담당직원에게 안내서를 제공해야하며, 이와 함께 빈 보고 서신(기록 전의 비어 있는 보고서)을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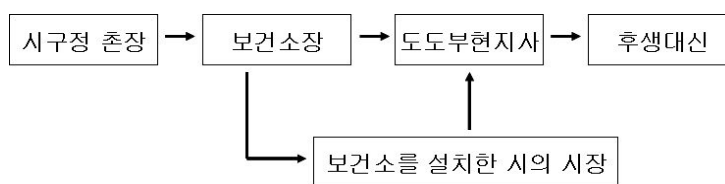
일본 중앙정부의 통계행정기구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통계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앙기구로서 여기에는 총무성 통계국, 내각부 경제사회총

합연구소, 경제산업부 정책국 통계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지방통계기구로서 여기에는 각 부성의 지자체의 통계주관과, 교육위원회의 보건·사회복지통계 주관과 등이 있다. 셋째는 각 정부부처의 일반 정책·행정 부서 가운데서 통상적인 업무와 병행하여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내각부 정책총괄과, 국민생활국의 소비자 조정과, 경찰청의 형사기획과, 교통기획과 등 수많은 부·과가 포함된다(이재형, 2004).

일본의 출생신고는 민법과 호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출생통계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으로는 후생노동성 대신관방 통계정보부이며, 중앙통계기관으로 총무성 통계국 및 통계심의회에서는 조정 기능을 가진다. 지방통계기관으로는 지자체의 주관과 및 시구청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구동태조사출생표(届書)는 부 또는 모, 동거인, 입회 의사, 조산부, 기타 입회자가 의무를 가지고 발생일 다음 날로부터(발생 익일부터) 7일 이내 시·구·정 촌장에 신고한다. 시·구·정 촌장은 접수된 신고의 내용을 기초하여 인구동태조사출생표를 작성한다. 시·구·정 촌장은 작성한 인구동태조사출생표를 관할구역 보건소(장)에 송부한다. 보건소장은 시·구·정 촌장이 제출한 조사표를 취합하여, 매월 도도부현 지사에게 송부한다. 한편, 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보건소장이 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심사하여, 후생대신에게 송부한다.

[그림 2-3-1] 일본의 인구동태조사출생표 수집체계





### 3. 미국

미국의 동태에 대한 기록과 통계는 지방, 주정부(state) 그리고 연방국(federal agencies)으로 분리된 것을 통합한 시스템에서 나온다.<sup>49)</sup> 생애 기록의 등록과 보존을 위한 법률상의 의무는 정부에 모든 수준의 공무원(official)과 개인(private citizens)에게 부과된다. 또한 통계 서비스 의무는 모두 세 단계에서 정부기관에 법률적으로 부과된다.

우선 내과 의사 또는 다른 전문적인 참석자는 부모와 상담하여 완전한 증명서(U.S. standard certificate of birth)를 완성한다. 출생이 발생하면 작성된 신고서를 선거구의 지방 호적사무원(등록관, local registrar)에게 정식으로 제출한다. 출생신고기간은 출생 후 24시간부터 10일 이내까지 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호적사무원은 지방의 사용목적을 위해 신고서의 색인 또는 원장 기입과 사본을 만든다. 그리고 지방 보건부 또는 정부 호적사무원에게 신고서를 송부한다. 시 또는 군 보건부(Health Department)에서는 신고서를 프로그램 개발, 사업효과 측정, 전염병 사후점검, 의료·보육서비스 등 분야에 활용한다. 또한 주(State) 호적사무원에게 사례 보고서와 신고서를 발송한다.

주 보건국 인구동태통계국(State Health Department Bureau of Vital Statistics)에서는 불완전하거나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보를 재조사 한다. 출처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신고서 사본을 파일 형태로 반영구적으로 보관한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관청 혹은 집단과 보건부의 사용을 위해서 주(State)의 출생통계를 작성한다. 출생, 죽음 그리고 영아 사망 증명서의 필름 사본과 복사본을 준비한다. 그리고 출생 통계의 전국적인 부서에 전송하기 위한 신고해야할 질병기록과 이혼, 결혼의 기록을 요약한다.

연방정부 보건부 인구동태통계국(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Office of Vital Statistics)에서는 민간 수요자와 공무원을 위해서 전국적인 출생, 죽음, 영아사망, 결

49) "U.S. Vital Statics System: Major Activities and Developments, 1950-9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97.

혼, 이혼과 신고해야 하는 질병을 발표하고 대비한다. 공공보건과 사회 문제를 설명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표한다. 출생신고 관련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 제 4 절 출생통계 활용

### 1. UN 권고

신고 항목(주제와 제목)은 국가나 국제적 기준 모두를 부합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 목표가 국가 경험과 관습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준은 양립할 수 있다. 때때로 국가는 국제 비교 목표에 부합될 필요보다 더 자세히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에 자료는 국제 목표에 적합한 범주로 축약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다. 인구동태 통계 생성을 위해 조사된 항목은 수집력(capability of collection)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조사한다. 한 항목에서 유의미한 질의 자료 수집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후 그 항목은 제외한다. 민감하거나 복잡한 이슈와 관계된 일부 문제는 종종 피할 수 있다. 적절한 기밀 보호책을 응답자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때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 지역에 걸쳐 교정(editing)과 제표(출생통계표 작성)를 위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분산자료처리방식을 채택할 경우 다수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능률성 문제가 크지 않다면, 교정과 제표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는 국가의 등록체계가 중앙집중화 또는 지방분권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방 분권화된 구조에서는 출생통계자료가 지방에서 처리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국가인구동태 통계를 생산하는 중앙기관에서도 처리된다.

통계보고서에 대한 통제는 자료의 시의성과 완전성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산된 보고서들은 시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sup>50)</sup> 즉 컴퓨터는 현장 사무실이나 공급자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직접 취급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제

50) *Handbook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s: Managem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para. 525.

고할 수 있다. 지방의 호적공무원들은 본부(본국)에 적시에 발생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는가? 병원 측은 출생자료를 호적공무원에게 제 때 넘겨주고 있는가? 보고에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고, 마스터 파일에 그것들을 입력함으로써, 월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진행상황은 그러한 절차들의 시의성을 평가하게 해준다. 호적공무원, 병원 혹은 그 외에 반환된 보고서들은 종종 시의성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 내부 제도에 대한 재고 없이, 보고서의 시의성은 종종 다른 필적하는 사안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sup>51)</sup>

## 2. 각국 사례

일본에서는 출생신고시 부모(또는 신고자)에게 모자건강수첩 교부와 함께 출생과 관련한 수속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신고는 사회보험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의 기본이 된다. <표 2-3-7>는 실제 일본에서 출생신고시 부모 등에게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다.

<표 2-3-7> 출생신고시 가입 안내 내용: 일본 사례

수속명	내용	수속에 필요한 것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가입 수속	◦ 인감, 모자수첩, 국민건강보험증
출산육아일시금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다른 사회보험 등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인감, 모자수첩, 국민건강보험증
예방접종수첩	◦ 유아건강카드를 만들어, 예방접종수첩 교부	◦ 모자건강수첩, 유아 일반건강진단 진찰표
아동수당	◦ 출생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 수속(※공무원은 각 직장에서 수속)	◦ 청구자 명의의 계좌, 건강보험증
유아등 의료비 수급 자격증	◦ 관할 행정구역 내 주소를 가진 유아 ※ 부모의 소득 제한 없음	◦ 건강보험증, 인감

51) *Handbook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 Managem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paras. 628 and 629.

호주의 경우 지방정부 보건당국에서는 신고서에 의거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를 작성,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한편,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한정 제공하여 참고 자료로 이용케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별 개별보고서는 모두 익명(번호)으로 처리된다.<sup>52)</sup> 자료 처리 과정은 엄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코딩단계에서 독립적으로 두 번 실시하여 대조작업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여 사후적으로 정정한다. 그리고 항목간 연관관계를 체크하여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병원이나 의원에 회송하여 정정토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최종적인 단계로 일종의 최소자료세트(minimum data set) 기준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집계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며, 중앙정부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

52)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Department of Human Service의 Public Health Division의 Victorian Perinatal Data Collection Unit에서 담당하고 있다.

## 제 4 장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 개선방안

### 제 1 절 출생신고체계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출생신고서에서 출발한다. 읍·면·동, 시·구 단위에서 출생신고서 접수와 함께 정보를 전산입력하면서 출생통계 작성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신고체계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어 관련 정책 입안이나 학술연구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개월 이후에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통계의 정확성이나 집계·발표 시점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국민의 신고에 의한 통계생산의 한계성으로, 부분적인 정보의 누락·왜곡 가능성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와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제시한 일부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면 <표 2-4-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인 신고의무자는 부모로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와 통합형태)와 함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다. 미국에서 출생신고는 내과 의사, 조산사 등 출산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부모와 상담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하되, 출산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신고의무자가 된다. 영국에서 출생신고는 혼인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부모가 일차적인 신고의무자가 되며, 다만 모 또는 부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이나 등록기관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절충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보건국 또는 병원 등 등록기관에 출생관련 정보를 통보하는 의무가 있으며, 가정에서 출산 시 지역보건국은 의사, 조산사 등을 파견하여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요컨대, 일부 국가의 사례이지만 대체적으로 모·부 또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인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다만 일차적인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

료기관 또는 모·부를 이차적인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기도 한다. 결국 UN도 권고하였듯이 출생 신고는 보건의료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의료기관에 의한 신고시스템이 보다 강점을 가지나, 각국의 여러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이 제기된다.<sup>53)</sup>

〈표 2-4-1〉 외국의 출생신고시스템 형태 비교

구분	신고의무자	비고
UN(2002)	①병원에서 출산한 경우는 병원의 대표, ②모, ③부, ④ 분만출석자, ⑤엄마와 가장 가까운 친척, ⑥그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진 다른 성인 등	출생은 발생 병원/의료기관에서 보고 필요(담당내과/의사의 의학증명서와 보고자 신고가 서로 연계 특징)
일본	부·모 <서면신고의 경우> i) 적출자 출생신고 경우 ①부 또는 모(출생전이혼시 모), ②동거자, ③출산 입회 의사, 조산부, 그외 입회자 순 ii) 적출이 아닌 경우 ① 모, ②동거자, ③출산에 입회한 의사, 조산부, 그 외의 입회자 등 순	출생신고의무자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와 통합형태) 이외 출생신고관련 사항을 기입하여 출생신고서 작성
미국	i) 내과/의사, 조산사 등 출산과정 참여 전문가가 부모와 상담하여 표준출생신고서(U.S. standard certificate of birth) 작성·제출 ii) 출산관련전문가가 없는 경우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	The Model State Vital Statistics Act
영국	i) 혼인 중인 경우 부 또는 모 ii) 혼인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부에 관한 정보의 기입 여부에 따라 신고방법 상이 iii)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기관이 출산장소 소유자, 출산장소에 있었던 사람, 아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통해 등록 주관 iv) 이외 지역보건국 또는 병원에서 등록소에 출생관련 정보(주로 의료관련) 통보 v) 가정에서 출산 경우, 지역보건국에서 의사, 조산사 등을 파견하여 관련정보 파악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자료: United Nations, Handbook on Training i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s, New York, 2002; "U.S. Vital Statics System: Major Activities and Developments, 1950-9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Health Satistics, 1997; ENGLAND, the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Regulations 1987(as amended), the Registration of Births and Deaths (Welsh Language) Regulations 1987(as amended).

53) 유엔은 출생이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국의 법은 그 시설의 책임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UN, 2002).

그러면,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2-4-2).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나, 이들 모두 병의원에 의한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병의원에 의한 신고 자료가 보다 정밀하고 보다 많은 보건의료학적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병의원에 의한 신고시스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 병의원에 의한 신고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의료기관의 협조와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준비 작업을 할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상 외국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화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출생아 대부분이 의료기관 등 시설에서 분만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출생신고는 등록의 목적도 중요하나 사회정책이나 국민의 평생건강 관리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적인 목적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정밀한 출생신고 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면서 직접 출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의무를 갖은 것이 어떠한 당연할 수 있다. 이는 고객에 대한 일정한 부가서비스로도 간주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모든 병의원 및 조산소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출산에 대해 일정 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제도화 한다. 물론 의료기관은 일차적 보고자인 부모에게 출생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를 연계하는 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스템은 이용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통계생산의 정확성에도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 신고체계를 구축한다면 영아 사망 출생기록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의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화, 의료기관 협조,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이력 훈련 등 많은 작업이 사전적으로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부·모에 의한 신고시스템에서 의료기관에 의한 신고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2-4-2〉 우리나라 출생신고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국내 일부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	출생신고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아 건강 등과 관련하여 향후 병의원에 의한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필요</li> </ul>
B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처럼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다고 가정하고, 병원에서 직접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국민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계이므로 신고지연과 누락, 왜곡 신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음.</li> <li>병원, 조산소 등에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출생신고서를 다룰 수는 없음. 그러나 일차적으로 병원이나 조산소 등에서 부모이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아의 출생일시, 출생장소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웹상으로 보고토록 하고 나중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지연, 누락, 왜곡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li> </ul>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원, 의사 및 조산원에게 법적 신고의무 부여</li> <li>지연신고에 대한 불이익 홍보</li> <li>영아 사망아의 출생기록 비교로 출생아수와 영아사망수를 정확하게 연계확인으로 출생과 영아사망의 누락방지</li> <li>1인1적제의 전환과 맞추어 신고서 양식을 바꾸고, 신고제도도 바꾸는 것이 좋음</li> </ul>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자료와의 대조를 통한 출생신고자료의 질적 수준 개선이 가능할 것임.</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 미신고시 사망의 경우 사망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호적등에는 반영하지 않음.</li> <li>출생 신고 시 의료보험 등 각종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배려</li> <li>미혼모 등의 출생누락을 방지하고 아버지가 불분명해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 고려</li> <li>병원 등의 출생신고 의무부과방안 강구</li> <li>우리나라의 출생신고는 주로 호적법에 의거하여 행해지며 통계업무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등 2원화되어 있음. 이에 반하여 선진외국은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통계에 대한 관심이 각별함.</li> </ul>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통계의 지연 혹은 포함된 정보의 제한 등은 모두 출생신고체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함.</li> <li>가장 좋은 신고체계의 개선은 다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생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따로 출생신고부서를 두고 이를 전산으로 입력 관리하는 방법일 것임.</li> <li>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고, 다른 통계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반대에 막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li> <li>이를 위한 예산과 의료기관의 협조도 필요할 것임. 수년간의 준비작업이 시급한 실정임.</li> <li>만일 이것이 마련된다면 지금처럼 영아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해 따로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가동할 필요 없이 전산 작업으로 바로 출생과 사망통계를 이용한 영아사망률 산출 가능</li> </ul>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병의원 및 조산소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24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제정을 통하여 출생신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li> <li>이러한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초 자치 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동시에 자료가 수집되도록 행정조직망을 개편 운영하도록 함.</li> </ul>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둘째, 단기적인 방안으로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부 또는 모 등의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서를 작성·신고하고, 후에 논의할 시의성의 문제와 신고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사실 출생통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관되어있는 수많은 환경을 동시에 개선해야만 하고, 이것은 단시일 내에 완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결국 큰 틀에서 현재의 신고체계를 유지할 경우 신고체계개선사항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신고체계를 유지하면서 통계발표시기와 신고항목 개선 내용을 부분적으로 신고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이 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 제 2 절 출생통계 내용 개선방안

출생통계는 등록목적과는 달리 제 영역에서의 정책 수립-모니터링-평가-환류, 학술 연구, 국제비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현재의 항목이 변화된 사회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때, 그 유용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신고항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표 2-4-3>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프랑스에서 출생신고에 사용하고 있는 신고서 상 항목을 정리·비교한 것이다. 각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앞서 제3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항목자체만을 비교하기로 한다. 우선 항목들의 속성을 기준으로 크게 부모관련 항목, 아동관련 항목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신고항목을 살펴보면, 부모관련 항목들은 주로 인구사회학적 기본속성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연령, 결혼연령, 교육, 직업)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적인 항목은 임신기간에 불과하다. 아동관련 항목들로는 성별, 출생일자, 출생장소, 체중, 다태아 여부, 출생순위, 사망아(수), 출생아(수), 호주와의관계, 혼인중·외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신고항목 종류는 일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의한 신고시스

템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턱 없이 적으며, 나머지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비교대상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신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은 부모관련 항목으로서 결혼전후 성(性), 모의 재혼여부(영국), 최종출생아의 출생일자(미국, 프랑스), 인종(미국), 국적 또는 출생장소(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태생(미국, 호주)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보건의료적인 정보(사회보장번호, 아이와의 관계, 임신력, 최종임신 종료일자, 지난월경시작일자, 산전관리 시작 달, 산전관리횟수, 아프가점수, 태아혈액검사일자, 분만 전 모의 이송여부, 임신 중 의학적 위험요소, 임신 중 다른 위험요소, 검진절차, 분만시 문제, 분만방법)는 우리나라 신고서 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2-4-3〉 출생신고항목 국제 비교

영역	항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부모 관련	연령(출생일자)	○	○	○		○	○	○
	직업	○	○		○		○	○
	주소(거주지)	○	○	○	○	○	○	○
	학력	○		○				
	출생장소(국적)		○	○	○	○	○	○
	결혼일자	○	○		○		○	○
	태생			○			○	
	결혼전/후 성(모)				○	○	○	
	모의 결혼여부		○	○	○			○
	모의 재혼여부				○			
	임신기간(주수)	○	○	○		○	○	
	최종출생아 출산일자			○				○
	아이와의 관계			○			○	
	인종			○				
	국민건강보험번호				○			
	사회보장번호			○				
	임신결과(유산)			○				
	임신력			○				
	최종임신종료일자			○				
	지난월경시작일자			○				
	산전관리시작달			○				
	산전관리횟수			○				

영역	항목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아프가접수			○				
	태아혈액검사일자			○				
	분만 전 모의 이송여부			○				
	임신 중 의학적 위험요소			○				
	임신 중 다른 위험요소			○				
	검진절차			○				
	분만시 문제			○				
	분만방법			○				
아동 관련	성별	○	○	○	○	○	○	○
	출생일자	○	○	○	○	○	○	○
	출생장소	○	○	○	○	○	○	○
	출생시간	○	○	○			○	
	시설/병원이름		○	○		○	○	
	몸무게	○	○	○	○	○	○	
	다태아여부	○	○	○	○	○		○
	출생순위	○	○	○		○		
	사망아(수)	○	○	○	○	○		
	출생아(수)	○	○	○	○	○		○
	조력자		○	○		○	○	○
	법률상신분		○					○
	호주와의관계	○	○					
	혼인중/외 출생자	○	○		○			
	영아의이송여부			○				
	신생아의 비정상 건강상태			○				
	선천적 예외 아동			○				
	다른 자녀의 세부사항						○	
일반 사항	신고인	○	○		○	○	○	
	등록자			○	○	○		

자료: 앞서 제3장 외국사례 고찰에서 이용한 자료원과 동일.

아동관련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신고서 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항목들로는 조력자(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다른 자녀의 세부사항(호주), 신생아의 비정상 건강상태(미국), 선천적 이상 아동(미국) 등이다. 요컨대, 우리나라 출생신고서 상 아동관련 항목은 다른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으나, 부모관련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외국사례의 시사점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서 상에서 부모관련 항목들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출생신고항목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다. 전문가들이 새로이 추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앞선 비교대상 국가들의 출생신고서에 포함된 항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표 2-4-4). 그러한 항목들로는 부모관련 항목 중 부모의 국적과 인종, 첫 산전진찰시기, 진찰회수, 임신결과(인공유산, 자연유산), 임신방법(자연임신, 인공수정 등), 출산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 산모의 건강상태 등이다. 출생아 관련사항으로는 기존 자녀의 상세사항(출생순위, 성, 출생시기), 출생아 이상발견 여부 등 건강상태이다.

〈표 2-4-4〉 전문가들이 제시한 출생신고 추가항목

전문가	출생신고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중·혼인의 출생여부 문항 삭제</li> <li>-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 타당</li> </ul> <p>[항목 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아 이상발견 여부 항목 추가</li> </ul>
B	<p>[항목 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국적 추가</li> <li>- 외국인 부·모 증가 반영</li> <li>- 본적란에 외국인 부·모의 국적 표기가 되어 있으나, 분명한 기입을 위해 별도란 설계 필요</li> <li>◦ 출생장소(주택, 병원, 기타)와 달리, 외국 출생 여부 및 국가명 기입</li> <li>◦ 부모의 몇 번째 결혼 추가</li> <li>- 이혼과 재혼도 늘고 있지만, 농촌 저학력, 저위신 직업의 남성들은 만혼도 많음. 출산력 분석에 부모결혼정보도 중요하므로 신고대상 자녀 출산시 부모의 몇 번째 결혼 표기 필요</li> <li>◦ 현 출산아의 부모 사이에 태어난 모든 자녀의 출생순위 및 출생시기</li> </ul> <p>[항목 변경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은 신고자료에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어 조사항목에 포함해도 자료로 가치 기대 곤란.</li> <li>◦ 최종졸업학교 기입시 작성지침에 재학·중퇴는 그 이하의 학력에 표시 지침. 그러나 뒷면의 지침대로 작성여부 확인 곤란. 따라서 최종졸업학교의 선택지에 상세 구분 필요</li> <li>(1) 무학</li> <li>(2) 초등졸업, 중학중퇴, 중학재학</li> <li>(3) 중등졸업, 고등중퇴, 고등재학</li> <li>(4) 고등졸업, 대학중퇴, 대학재학</li> <li>(5) 대학졸업 이상</li> </ul>
C	<p>[항목 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인종</li> <li>◦ 첫 산전진찰 시기(임신 몇주), 진찰회수</li> </ul>

전문가	출생신고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의 신장, 임신 전 체중 및 출산직전 체중</li> <li>◦ 산모의 임신 및 분만 합병증 등 건강상태</li> <li>◦ 출산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 등)</li> <li>◦ 신생아 임신주수, 출생체중, 선천성 기형</li> </ul>
D	<p>[항목 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국적</li> <li>◦ 부모의 출생지</li> <li>◦ 부모의 사용언어(외국 출생의 경우)</li> <li>◦ 부모의 혼인상태</li> </ul>
E	<p>[항목 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과거 국적, 인종, 입국시기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외국인 배우자에 의한 출생아수 파악</li> <li>◦ 모의 과거 출생아수와 생존아수를 성별로 파악 .</li> <li>◦ 출생을 전후한 시기, 부부의 경제활동상황의 변화에 관한 정보 포함</li> <li>◦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아수 규모 파악</li> </ul>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중·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li> </ul> <p>[항목 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 등)</li> <li>◦ 임신방법(자연임신, 인공수정 등)</li> </ul>
G	<p>[항목 추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아의 출생당시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로 미국에서는 APGAR score를 많이 사용. 이것은 출생아의 출생 당시 건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 지금까지 우리는 출생 시 체중과 임신주수로만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는데, 이보다 더욱 정확한 측정지표가 바로 APGAR score.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delivery에 간여한 의료진이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출생증명서에 함께 기재되도록 유도하고, 또 출생신고서 작성 시 같이 기입되면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li> <li>◦ 인공임신중절 및 자연유산 경력에 대한 문항 첨가</li> <li>◦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관한 질문항목 첨가</li> </ul>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적의 경우에는 앞선 외국사례에서 비교대상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련 사항은 대부분 의료기관신고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출생신고서에만 포함되어 있다. 한편, 비교대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 전문가들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신고항목들로는 산모의 신장, 임신 전 체중, 출산직전 체중, 유산 경력, APGAR score, 부모의 결혼차수(횟수)와 혼인상태(초혼, 재혼), 입국시기, 사용언어, 성별 출생아수 및 생존아수, 부모의 출생순위, 출산전후 경제활동상태 변화 등이다. 이외 의견으로 최종학교의 졸업·재학·중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서 상 선택지로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항목 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혼인중·외’의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출생신고항목에 대한 논의에서 최근의 저출산현상 추이와 그 원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로는 출산을 변동 추이는 통계청에서 작성·공표하고 있는 출생통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은 저출산현상의 원인들을 일차적으로 출생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은 실제 통계청 자체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생신고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최근 저출산현상의 원인들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현상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인구학적 요인(유배우출산율과 초혼연령)의 변동에 기인한다. 출산 대부분이 법률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초혼연령 상승은 가임(출산가능)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고령임신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불임 및 임신소모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을 감소시킨다. 기혼여성의 자녀수 감소(유배우출산율 저하)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인구학적 요인은 개인의 가치관(자녀관, 결혼관)과 경제·사회현상의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 변화로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보편적인 구속이자 의무가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녀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반드시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보편적 자녀관이 크게 퇴색되고, 자녀효용 측면에서 노후보장, 가문계승 등의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된 반면, 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종래 자녀중심의 가족관이 부부중심으로 변환하고 있는 점도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우선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은 미혼남녀의 결혼을 지연시키고 부부의 출산의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과 고비용의 사회구조는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저출산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남편1인생계부양가족모형에서 부부2인생계부양가족모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이 지속되고, 사

회적으로는 보육인프라가 부족하고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여성은 일-가정 양립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위협적인 환경요소의 증가와 만혼 및 고령출산으로 인한 출산건강 수준의 저하도 저출산원인이 되고 있다. 전체 임신 중 약 1/3이 자연유산, 사산, 인공유산 등에 의해 소모되고 있으며, 원발성 및 속발성 불임증으로 인하여 원하면서도 출산을 할 수 없는 불임부부들이 상당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현상 이외에도 최근의 사회현상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조류 아래에서 아시아지역의 빈곤한 여성들의 한국사회로의 유입 희망은 한국사회 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국제결혼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남성들이 결혼중개업체 등을 매개로 외국인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아들이고자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동남아, 러시아, 몽고 등 아시아 저개발국의 여성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코리아 드림’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이와 같이, 국내의 수요와 국외의 공급이 일치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결혼은 1991년 663건에서 1995년에 1만건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2년까지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며 5천건~1만건 수준에서 변동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 다시 2만건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05~2006년에는 연 3만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여성과 외국인남성간의 국제결혼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처음으로 1만건을 상회하였으며, 2006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9천여 건으로 여전히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사례와 국내 전문가의 의견 이외에도 최근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세계화 추이에 따른 국제이동 증가 등을 종합하여, 출생신고항목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국적을 새로운 출생신고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제결혼가정의 출산력이 내국인의 출산력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분석은 향후 출산

을 변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모의 국적별로 출생아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고용, 보건, 복지, 사회보장, 교육 등 제 영역에서의 정책 수립 등에 긴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비교대상 국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국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부모의 사용언어 또는 모국어, 입국시기, 인종 등을 새로운 출생신고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제기하고 있으나,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추가하는 것은 출생신고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뿐 출산수준이나 분포에 대한 분석 측면에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 출생신고서에 포함된 학력 항목을 더욱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교를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석사, 박사)으로 세분화할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저학력에서 고학력으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무학이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저학력 층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대신 고등학교 이상 고학력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출산행태는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출산을 변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다 정교한 학력 측정을 위하여 중퇴, 졸업 등 교육상태를 선택지 형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생신고항목으로 부모의 혼인상태(초혼, 재혼)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 변화 중 가장 뚜렷한 것은 다양한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가족은 이혼, 재혼, 동거, 미혼모 등의 증가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이들 다양한가족은 출산이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다양한가족의 출산 수준 및 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 다양한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생신고서에서 재혼 여부의 항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또 다른 인구동태신고로서 결혼신고서에서도 재혼여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출생신고항목으로 이전에 모가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한 여성을 기준으로 한 출산력은 총자녀수(생존아와 사망아로 구분하기도 한다)로 측정될 수 있다. 출산템포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녀간 출산시기 간격과 각 자녀의 성별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에서는 이전 자녀의 상세한 정보를 출생신고서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최종아의 출산시기를 출생신고항목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국내 전문가들은 산전진찰시기, 진찰회수, 임신결과(인공유산, 자연유산), 임신방법(자연임신, 인공수정 등), 출산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 산모의 건강상태, 출생아 이상발견 여부 등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미국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신고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우리나라 출생신고시스템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관신고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산모나 출생아의 건강상태에 관한 항목들을 출생신고항목으로 도입하는 과제는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항목 중 평생건강관리라는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항목들은 출생신고서에의 부착이 의무화되고 있는 출생증명서 상 항목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언급하자면, 출생등록의 목적도 중요하나 국민의 평생건강관리 차원에서 출생신고의 보건의료적인 목적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비교대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 전문가들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산모의 신장, 임신 전 체중, 출산직전 체중, 유산 경력, APGAR score 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소득수준, 출산 전후 경제활동상태 변화 등 사회경제적 현상에 관한 항목에 관한 논의이다. 이들은 출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간의 관계성 파악에 매우 중요한 항목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은 정밀한 표본조사에서조차 파악할 수 없는 항목으로 출생신고서의 항목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 경제활동상태 변화는 출생신고항목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출생신고서에서도 부모의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취업여성일지라도 출산 전후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이 높아, 신고서 상 신고당시 직업만으로 경제활동과 출산력간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출생신고항목으로 다소 이

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활동상태를 출산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제 3 절 출생통계 활용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주로 출생통계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출생통계의 활용가능 시기는 다른 통계와 마찬가지로 공표시기로 간주할 수 있다. 출생통계는 출산을 변동 추이와 원인 분석에 활용되어 각종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또한 출생아수(지역, 연령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는 국가 정책(또는 사업)의 대상을 설정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출생통계의 이용가능 시기가 빨라질수록 그만큼 유용성은 더 커지게 된다.

출생통계는 연간기준(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출생에 대해)으로 작성되고 있다. 앞선 현황분석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는 특정연도 출생통계(2006년의 경우)의 잠정치를 익년 5월에 발표하고, 확정치를 8월에 공표하고 있다. 상세 자료의 이용가능 시기는 그 후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발표 시기 또는 이용가능 시기를 현재보다 더 단축할 수 없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각국에서 출생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시기는 <표 2-4-5>에 제시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출생통계의 잠정치는 대략 1년이 지나서 발표하고 있으며, 확정치는 1년 6월~2년 사이에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국에서 2006년 출생아수는 2007년 5월에 집계가 완료되며, 그 확정치는 동년 12월에 발표되었다. 이 때 최종 집계에 포함되는 출생은 2007년 2월 25일까지 신고(등록)된 경우로 한정(cut-off date)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잠정치를 발표하지 않고 바로 확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2005년 합계출산율은 약 1년 9개월 후인 2007년 9월에 발표하였으며, 2006.7.1~2007.6.30까지 출생아수는 2007년 9월 27일에 발표하였다. 호주도 잠정치 발

표 없이 익년 10월에 바로 확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출생통계를 2007년 1월에는 잠정치를 그리고 5월에는 확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월 출생통계를 대략 3개월이 지난 후에 월보 또는 속보 형태로 발표하고 있으며, 연간 자료로는 추정치의 경우 익년 1월 그리고 확정치인 경우에는 익년 9월에 각각 발표하고 있다.

〈표 2-4-5〉 각 국의 출생 통계 발표 시기

구분	자료 년도	잠정치 발표시기	확정치 발표시기	비고
미국	2004	2005. 12. 29	2006. 9. 29	
	2005	2006. 12. 28	2007. 12. 5	
	2006	2007. 12. 5	-	
영국	2006	분기별 발표	2007.12(*2007.5월집계)	2007.2.25 신고건수까지 포함
캐나다	2004(TFR)	-	2006. 7. 31	
	2005(TFR)	-	2007. 9. 20	
	2006. 7.1~2007. 6.30	-	2007. 9. 27	출생아수
호주	2005	-	2006.10.17	
	2006	-	2007.10.29	
프랑스	2006	2007. 1. 16	2007. 5	
일본	2006	2007. 1. 1(추계치)	2007. 9. 7	
	2007. 1월	2007. 3. 22	-	
	2월	4. 23	-	
	3월	5. 22	-	
	4월	6. 20	-	
	5월	7. 23	-	월보 또는 속보형태
	6월	8. 22	-	
	7월	9. 21	-	
	8월	10. 23	-	
	9월	11. 21	-	
한국	2006	2007. 5	200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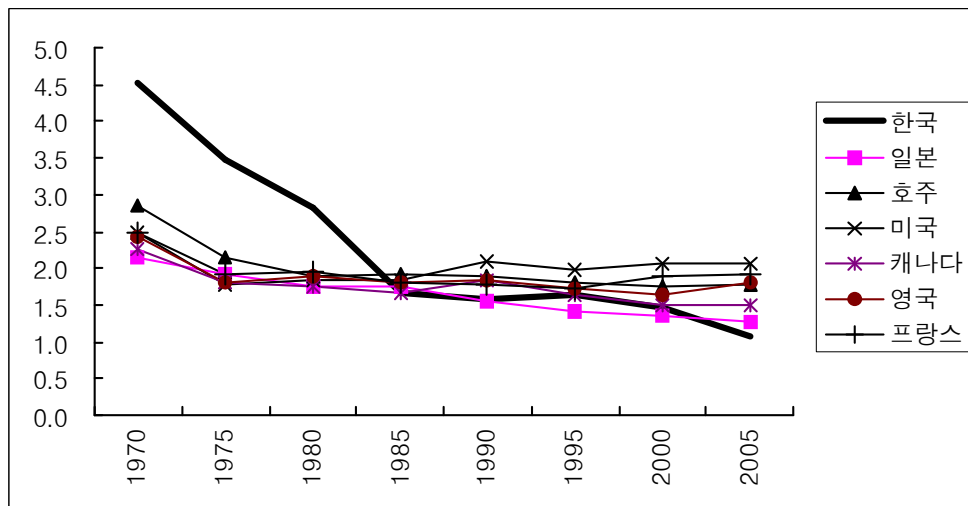
자료: 미국 <http://www.cdc.gov/nchs>, 영국 <http://www.statistics.gov.uk/>, 캐나다 <http://www.statcan.ca>,  
호주 <http://www.abs.gov.au/>, 프랑스 [http://www.insee.fr/fr/home/home\\_page.asp](http://www.insee.fr/fr/home/home_page.asp),  
일본 <http://www.mhlw.go.jp/>, 한국 <http://www.nso.go.kr/>

이상 일부 주요국가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출생통계의 발표시기는 연간 확정자료 기준으로 대부분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분기별로 출생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별 출생통계를 발표하고, 익년 초에는 연간 출생의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월별이나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잠정치는 일본(익년 초)보다 늦고 확정치는 프랑스(익년 5월)보다 늦다.

여기에서 국가간 출생통계의 시급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1970년 이래 합계출산율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4-1]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 추이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4-1] 국가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비교



자료원: World Bank, 2007 The World Bank Group(HNPStats).  
통계청, KOSIS.

유럽국가와 영미계 다문화국가들의 경우 최근의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빠르게 출생통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센서스는 주로 10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과거부터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매 5년마다 실시하여 왔던 사례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출생통계의 발표시기(또는 활용가능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표 2-4-6). 법적으로 출생신고는 발생 후 1개 월 내로 12월 발생건수에 한해서는 익년 1월까지는 법적으로 기한 내 신고로 간주된다. 2001~2005년 기간에 출생아수 집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익년 2~4월까지(cut-off date) 지연하여 신고한 건수는 5,000건 미만으로 전체 출생아수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를 합계출산율로 환산해 보면 0.01 미만으로 나타난다. 물론 더욱 정밀한 통계는 기본적으로 대국민 신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할 경우에는 좀 더 시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 수립, 집행,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출생통계 발표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한다.

〈표 2-4-6〉 인구동태신고시스템 상 신고누적기간에 따른 출생아수 차이

(단위: 명, %)

구분	출생 발생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A. 최종 출생아수(명)	636,780	557,228	494,625	493,471	476,052	438,062
B. 익년 2~4월까지 지연신고 건수	4,670	4,322	3,928	4,257	3,730	3,439
C. 2~4월 지연신고 건수의 증감(B)	-	-348	-394	329	-527	-291
D. $B \div A \times 100(\%)$	0.7	0.8	0.8	0.9	0.8	0.8
E. 합계출산율(지연신고분 제외)	1.4614	1.2927	1.1627	1.1768	1.1523	1.0752
F. 합계출산율(통계청 발표 확정치)	1.4722	1.3028	1.1721	1.1870	1.1614	1.0837
G. $(100 - \text{지연신고제외추정치}) \div \text{확정치} \times 100$	0.7	0.8	0.8	0.9	0.8	0.8
H. 합계출산율차이(확정치-지연신고제외시)	0.0108	0.0101	0.0093	0.0102	0.0091	0.0085

자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내부자료, 2007.

첫째, 현재 출생통계에 반영하고 있는 4월(cut-off date)까지 지연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되, 출생통계 잠정결과의 발표시기를 현재 익년 5월에서 익년 2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출생통계는 잠정치의 경우 총 14개월 동안의 신고건수

를 취합하고 16개월 분을 추정하여 5월에 발표한다. 그리고 확정치는 16개월 신고건수를 취합하여 자료 보완절차를 거치고 8월에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익년 2월에 잠정치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익년 1월까지의 지연신고 건수만 취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익년 2~4월 지연신고 분까지 감안한 확정치와 익년 1월(작년말 출생아의 법적 신고기한인 1개월 이내)까지 신고한 건수간 차이는 0.8% 내외에 불과하고 합계출산율 0.01 미만에 해당함으로 전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이 때 추가로 전년도 확정치와 잠정치간 차이(비율 등을 적용하여)를 미리 더하여 발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후 4월까지 지연신고 출생건수를 합하여 익년 8월 이전에 확정치를 발표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출생통계에 반영되고 있는 지연신고 건수를 익년 2월(cut-off date)까지로 제한하여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14개월 신고분만 취합하여 발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 자료처리 및 분석을 감안하면 연간출생통계의 잠정치는 3월 중에 발표하여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치는 cut-off date를 다소 연장하는 수준에서 추가 신고건수를 합하여 이후 발표하도록 한다.

셋째, 현행 출생통계 작성 및 발표시기 등을 그대로 유지하되, 외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월별(일본 사례) 또는 분기별(영국 사례)로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연간기준의 출생통계의 잠정치나 확정치는 현행대로 유지하며, 다만 외부 이용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 자료를 통해 필요한 분석 및 정책(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다소 다른 차원이긴 하나 상세자료는 익년 연말경에 보고서(paper-print)로 발간하는 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잠정치와 확정치의 상세자료(지역, 연령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생아수 등)를 전산자료형태(digital)로 보고서 발간 전에 KOSIS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 설정과 이에 따른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을 산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통계는 합목적성, 정확성, 시의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는 출생통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출생이 국가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향후 경기, 교육, 고용, 사회보장 등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생통계 체계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생통계가 지켜야할 기본원칙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생통계의 합목적성은 출생신고 내용(항목)을 기준으로, 출생통계의 정확성은 신고체계를 기준으로, 그리고 출생통계의 시의성은 발표시기를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입한 주된 방법들은 국내외 문헌 고찰, 출생신고접수기관 현장방문, 그리고 전문가의견조사이다.

분석 결과로 도출된 우리나라 출생통계시스템의 한계성들은 출생통계체계의 다원화 구조에 따른 복잡성, 일반국민의 직접신고체계 도입에 따른 비전문성 및 부정확성, 출생신고 항목의 종류 및 개수의 제약으로 인한 합목적성 또는 활용도 미흡, 그리고 발표시기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신고체계, 신고항목 및 발표시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신고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현 부모에 의한 직접신고체계를 의료기관에 의한 신고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절충안으로는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이 신고하고 이차적으로 부모가 보완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고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회현상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은 더욱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결혼 등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부모의 국적이나 언어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규모를 파악하고 출산행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고 향후 고용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이민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력항목 중 고학력(대학교 이상)을 전문대, 대학, 대학원(석·박사)으로

세분화 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행태 변화의 분석을 통해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가임력과 출산력 측정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끝으로, 출생통계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는 익년 초에 잠정결과를 발표하고, 더 정확한 수치는 추후 확정치로 발표하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생통계의 시의성을 제고하여 합목적성을 증가시키면서 이에 기반한 정책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출생통계 개선방안들은 어느 특정 기관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일정한 한계성이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출생통계를 생산하는 국가시스템은 다원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방대한 민간조직의 협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신고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일이 쉽지 않으며,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출생통계체계의 개선 노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인력, 예산 등 인프라 구비에 충분한 지원과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선영,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 2006, pp. 119-149.
- 김두섭·강남준,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나남출판, 2000.
- 김두섭, 「IMF경제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2007a, pp. 67-95.
- \_\_\_\_\_, 『IMF경제위기와 저출산』, 집문당, 2007b.
- 김영범, 「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사회학』 35(1), 2001, pp. 31-58.
- 김영범, 「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사회학』 35(1): 31-58, 2001.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 김현정, 「자녀 양육비 결정 요인 및 영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매일경제, 「7쌍 중 1쌍이 불임부부 건보라도 적용됐으면」, 2005년 4월 12일.
- 문무경, 『스웨덴의 육아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 문숙재·김성희, 「자녀교육과 양육비용의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5, pp. 302-313.
- 박경숙·김영혜,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서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2003, pp. 63-90.
- 보건복지부, 「2006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2006.
- 보건복지부, 「금년 상반기 중 신생아 수 증가폭, 작년의 2배 이상 늘어」, 보도자료, 2007년 8월 14일.

- 안주엽, 「경기변동과 청년층 실업률」, 『매월노동동향』 2002년 2월, 2002, pp. 1-23.
- 윤홍식, 「OECD 국가들의 남성 돌봄 노동 참여 지원정책과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부모부성휴가를 중심으로」, 『남성의 돌봄노동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5.
- \_\_\_\_\_, 「아동양육 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쟁점: 산전후휴가육아휴직남성의 양육 참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편.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 집, 2007, pp. 241-274.
- 이삼식, 「저출산, 탈산업사회의 부산물인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반응인가」, 『신진리포트』, 신진보연대, 2007 봄, pp. 318-331.
-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삼식 외,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성용,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2006, pp. 111-137.
- 이재형,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장혜경, 「외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사례」, 『국회도서관보』 42(12), 2005, pp. 13-23.
- 장혜경, 「외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사례」, 국회도서관보 제42(12): 13-23, 2005.
- 중앙일보, 「서울시 신생아 출산 6년 만에 늘었다」, 2007년 1월 19일.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총괄, 출생, 사망 편), 2006.
- Atoh, Makato, 「先進諸國の 少子女化の 動向と少子女對策に關る比較研究」, 『人口問題研究』 59(1), 2003, pp. 1-6.
- Oyama(大山昌子), 「子どもの 養育・教育費用 出生率 低下」, 『人口學研究』 35, 2004, pp. 45-57.
- Yamagami(山上俊彦), 「出産 育兒 と女子就業 との兩立可能性」 『季刊 社會保障研究』 35(1) pp. 52-64, 1999.

- Andersson, G., "The impact of labour force participation on childbearing behaviour: procyclical fertility in Sweden during the 1980s and 1990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6, 2000, pp. 293-333.
- \_\_\_\_\_, "A study on policies and practices in selected countries that encourage childbirth: The case of Sweden,"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2005-005*, 2005.
- Andersson, G., A.Z. Duvander and K. Hank, "Do Child Care Characteristics Influence Continued Childbearing in Sweden? An Investigation of the Quantity, Quality, and Price Dimension,"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2003-013*, 2003.
- Becker, G. S.,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1.
- \_\_\_\_\_,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in Developed Countries*, NB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0.
- Becker, G.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in Developed Countries*, NB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Becker, G.S. and Lewis H.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79-299.
- Becker, G.S. and Lewis H.G.,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1973, pp. 279-299.
- Butz, W.P. and Ward, M.P. (1979). The Emergence of Countercyclical U.S. Fer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737-60.
- Butz, W.P. and Ward, M.P., "The Emergence of Countercyclical U.S. Fer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979, pp. 737-60.
- Chesnais, J.-C., "Population Movement and Policy in France 1750-2005," 『OECD 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_\_\_\_\_, *Population History and Policy in Fra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2005, Seoul.
- Cunha, F., J. Heckman, L. Lochner, and D. Masterov,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IZA,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DP No. 1675, 2005.
- d'Addio, A. and M. d'Ercore,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The Role of Policy," 『OECD 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Demeny, Paul, *Population Policy: A Concise Summary. Policy Research Division Working Paper No. 173*, Population Council, 2003.
- Erikson, R. and J. Goldthorpe, *The constant flux*,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90.
- \_\_\_\_\_, "A new gender contract," pp. 67-95, in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edited by Esping-Andersen, G., D. Gallie, A. Hemerijck, and J. My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Education and equal life-chances: Investing in children." pp. 147-163. in *Soc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dic countries*, edited by Kangas, O. & J. Palm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05.
- Gauthier A.H., "The Impact of Public Policies on Families and Demographic Behavior," Sleebos, Joelle 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2003.
- Gauthier A.H., and Hatzius J.,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1997, pp. 295-306.
- Grant, J., S. Hoorens, S. Sivadasan, M. Loo, J. DaVanzo, L. Hale, S. Gibson, and W. Buzz,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Rand, 2004.

- Hammel, E. A., "A theory of culture for demograph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3), 1990, pp. 455-485.
- Hank, K. and M. Kreyenfeld, *Childcare and fertility in (Western)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2001.
- Heer, David M,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mography* 3(2), 1966, pp. 423-44.
- Hiilamo, H., "Changing family policy in Sweden and Finland during the 1990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1), 2004, pp. 21-40.
- Hoem, B. and Hoem, J.M., "Sweden's family policie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2, 1996, p. 122.
- Hoorens, S., A. Parkison, and J. Gran, "Sweden's Varying Success in Offsetting Low Fertility," 『OECD 주요국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Kim, Minja,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Workshop on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Policies*, 2005.
- Kohler H.-P., "Social interaction and fluctuations in birth rates," *Population Studies* 54(2), 2000, pp. 223-238.
- Lesthaeghe, Ron & Johan Surkyn,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1988, pp. 1-45.
- Naohiro Ogawa, "Japan's Changing Fertility Mechanisms and Its Policy Responses,"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0(1), 2003.
- Robert D. Retherford and Naohiro Ogawa, "Japan's Baby Bust: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118, April, 2005.
- Savit, Y. and H. Blossfeld, *Persistent inequality*, Boulder: Col.: Westview Press, 1993.
- Stanfors, M. and Svensson L., *Education, career opportunities and changing patterns of fertility: a study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in 20th century Sweden*, In, 2003.

Stijin Hoorens, Andrew Parkinson, and Jonathan Grant, *Sweden's Varying Success in Offsetting Low Fertility*, Rand Europe.

Suzuki, T., "Fertility Decline and Policy Development in Japan," 『OECD 주요국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부록 1〕 2006년 출산동향조사 결과분석표

〈부표 1-1〉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산순위

(단위: 명, %)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계
전체	46.3	42.7	9.8	1.2	100.0(1,903)
지역***					
시부	48.1	41.8	9.1	1.0	100.0(1,642)
군부	35.3	47.5	14.9	2.4	100.0( 255)
연령***					
20~24세	73.2	23.2	3.6	-	100.0( 56)
25~29세	66.0	30.0	3.6	-	100.0( 468)
30~34세	43.3	48.8	7.0	0.8	100.0( 909)
35~39세	28.3	48.9	21.1	1.8	100.0( 399)
40세 이상	31.3	25.0	31.3	12.5	100.0( 64)
결혼년도***					
2001년 이전	6.7	55.3	34.5	3.5	100.0( 432)
2001년	11.3	78.6	8.3	1.8	100.0( 168)
2002년	19.5	75.9	4.1	0.5	100.0( 220)
2003년	40.4	57.3	2.4	-	100.0( 255)
2004년	76.4	22.3	1.3	-	100.0( 301)
2005년	88.2	10.9	0.5	0.5	100.0( 432)
2006년	91.4	8.6	-	-	100.0( 70)
2007년	83.3	-	16.7	-	100.0( 6)
학력***					
중졸이하	37.8	33.3	24.4	4.4	100.0( 45)
고등학교	38.3	44.5	15.5	1.7	100.0( 755)
대학(교)	52.0	42.0	5.4	0.6	100.0( 997)
대학원이상	55.0	41.3	3.8	-	100.0( 80)

주: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출산순위

(단위: 명, %)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계
취업여부***					
취업	54.2	37.0	7.6	1.2	100.0( 513)
비취업	43.4	44.8	10.7	1.2	100.0(1,389)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53.0	42.6	4.3	-	100.0( 115)
준전문가	55.3	35.1	9.6	-	100.0( 94)
사무종사자	63.5	32.4	4.1	-	100.0( 170)
서비스종사자	54.2	43.8	-	2.1	100.0( 48)
판매종사자	34.1	39.0	24.4	2.4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37.8	35.6	17.8	8.9	100.0( 45)
무직	43.4	44.8	10.7	1.2	100.0(1,389)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37.6	45.0	16.5	0.9	100.0( 109)
상용근로자	59.6	35.1	5.0	0.3	100.0( 322)
임시일용근로자	55.6	33.3	6.2	4.9	100.0( 81)
무직	43.4	44.8	10.7	1.2	100.0(1,389)
가구소득					
60%미만	45.2	42.7	10.9	1.2	100.0( 815)
60~80%미만	44.4	44.0	10.9	0.8	100.0( 257)
80~100%미만	42.7	48.0	7.9	1.3	100.0( 302)
100~150%미만	50.5	40.9	8.0	0.6	100.0( 323)
150%이상	51.4	38.5	10.1	-	100.0( 109)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 2006년 출산가구의 경제적 특성별 출산순위(계속)

(단위: 명, %)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계
<b>취업상태변화***</b>					
유직-무직	65.6	28.7	4.9	0.8	100.0( 607)
유직-유직	55.3	35.7	8.1	0.9	100.0( 470)
무직-유직	41.9	51.2	2.3	4.7	100.0( 43)
무직-무직	26.2	57.3	15.1	1.4	100.0( 782)
<b>직업변화***</b>					
전문가등-전문가등	53.9	38.9	7.3	-	100.0( 19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64.6	31.1	4.3	-	100.0( 161)
서비스판매업종사자등-서비스판매업종사자등	41.2	39.2	16.7	2.9	100.0( 102)
무직-무직	26.2	57.3	15.1	1.4	100.0( 782)
전문가등-무직	64.7	32.1	2.3	0.9	100.0( 215)
사무종사자-무직	74.7	24.2	1.0	-	100.0( 194)
서비스판매업종사자등-무직	57.6	29.3	11.6	1.5	100.0( 198)
직종간이동	71.4	21.4	-	7.1	100.0( 14)
무직-유직	41.9	51.2	2.3	4.7	100.0( 43)
비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33.3	46.4	19.0	1.2	100.0( 84)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	60.1	34.6	5.2	0.0	100.0( 306)
임시일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	56.9	33.3	7.8	2.0	100.0( 51)
무직-무직	26.2	57.3	15.1	1.4	100.0( 782)
<b>종사상지위변화***</b>					
비임금근로자-무직	42.1	43.9	10.5	3.5	100.0( 57)
상용근로자-무직	70.9	26.1	2.4	0.7	100.0( 422)
임시일용근로자-무직	58.3	30.7	11.0	-	100.0( 127)
무직-지위획득	42.9	50.0	2.4	4.8	100.0( 42)
비임금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	60.0	-	20.0	20.0	100.0( 5)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	66.7	33.3	-	-	100.0( 9)
기타	66.7	20.0	6.7	6.7	100.0( 15)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 직전출생아의 성구성별 최종출산아의 성별

(단위: 명, %)

이전 자녀수	성 구성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1명	남	-	45.8	-	-
	여	-	54.2	-	-
2명	남남	-	-	24.1	-
	남여	-	-	17.6	-
	여남	-	-	22.5	-
	여여	-	-	35.8	-
3명	남남남	-	-	-	9.1
	여남남	-	-	-	9.1
	남여여	-	-	-	13.6
	여여남	-	-	-	22.7
	여남여	-	-	-	13.6
	여여여	-	-	-	22.7
4명	남여여남	-	-	-	4.5
	여여여여	-	-	-	4.5
계		-	100.0(813)	100.0(187)	100.0(2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 2006년 출산여성의 직전아 출산시기

(단위: 명, %)

직전 출생아 출생연도***	출산순위 이행		
	첫째아→둘째아	둘째아→셋째아	셋째아→넷째아이상
2000년 이전	9.1	34.1	22.7
2000년	7.0	7.5	9.1
2001년	8.6	8.1	-
2002년	14.2	17.9	-
2003년	25.5	15.6	18.2
2004년	28.6	13.3	31.8
2005년	5.0	1.2	-
2006년	2.0	2.3	18.2
계	100.0(745)	100.0(173)	100.0(2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6〉 2006년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대체로		별로	전혀	계
	찬성	찬성	찬성안함	찬성안함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게하게 해준다	55.5	39.3	4.9	0.3	100.0(1,894)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40.2	44.9	14.0	0.9	100.0(1,87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1	15.9	60.0	22.0	100.0(1,847)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29.4	42.4	24.0	4.1	100.0(1,88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6.7	19.7	47.9	25.6	100.0(1,88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7〉 자녀가치관과 2006년 출산행태

(단위: 명, %)

구분	태도	계획된 연기중 중단중			계	$\chi^2$
		출산	출산	출산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게하게 해준다	찬성	83.2	10.4	6.4	100.0(1,779)	3.13
	반대	77.4	11.8	10.8	100.0( 93)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찬성	83.3	10.8	5.9	100.0(1,579)	9.22**
	반대	81.0	8.4	10.6	100.0( 27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찬성	85.6	10.7	3.7	100.0( 327)	5.28†
	반대	82.5	10.4	7.1	100.0(1,501)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찬성	83.4	10.3	6.3	100.0(1,339)	1.12
	반대	81.5	11.0	7.4	100.0( 52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찬성	84.7	10.2	5.1	100.0( 491)	2.67
	반대	82.2	10.6	7.2	100.0(1,368)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8〉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전체	55.5	39.3	4.9	0.3	100.0(1,894)
지역 †					
시부	56.7	38.3	4.8	0.2	100.0(1,636)
군부	48.0	46.4	5.2	0.4	100.0( 252)
부인연령					
20~24세	58.2	32.7	9.1	-	100.0( 55)
25~29세	54.1	40.1	5.6	0.2	100.0( 464)
30~34세	55.7	40.3	3.5	0.4	100.0( 908)
35~39세	57.5	36.2	6.3	-	100.0( 398)
40세 이상	48.4	45.3	6.3	-	100.0( 64)
출산순위					
첫째아	57.3	37.0	5.5	0.2	100.0( 874)
둘째아	54.2	41.6	3.8	0.4	100.0( 812)
셋째아	52.7	40.9	6.5	-	100.0( 186)
넷째아이상	59.1	36.4	4.5	-	100.0( 22)
학력					
중졸이하	48.9	44.4	6.7	-	100.0( 45)
고등학교	53.3	40.9	5.6	0.3	100.0( 749)
대학(교)	57.5	38.3	4.0	0.2	100.0( 996)
대학원이상	53.8	40.0	6.3	-	100.0( 80)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9〉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취업여부					
취업	56.7	38.6	4.5	0.2	100.0( 513)
비취업	55.1	39.6	5.0	0.3	100.0(1,380)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58.3	38.3	3.5	-	100.0( 115)
준전문가	52.1	41.5	6.4	-	100.0( 94)
사무종사자	59.4	35.3	4.7	0.6	100.0( 170)
서비스종사자	54.2	41.7	4.2	-	100.0( 48)
판매종사자	48.8	46.3	4.9	-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62.2	35.6	2.2	-	100.0( 45)
무직	55.1	39.6	5.0	0.3	100.0(1,380)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56.0	40.4	3.7	-	100.0( 109)
상용근로자	58.7	36.0	5.0	0.3	100.0( 322)
임시일용근로자	50.6	45.7	3.7	-	100.0( 81)
무직	55.1	39.6	5.0	0.3	100.0(1,380)
가구소득 †					
60%미만	52.7	40.5	6.6	0.2	100.0( 808)
60~80%미만	51.8	44.7	3.5	-	100.0( 257)
80~100%미만	60.9	35.4	3.3	0.3	100.0( 302)
100~150%미만	60.7	35.3	3.7	0.3	100.0( 323)
150%이상	53.2	43.1	3.7	-	100.0( 109)

주: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0〉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전체	40.2	44.9	14.0	0.9	100.0(1,874)
지역					
시부	40.7	44.7	13.8	0.7	100.0(1,618)
군부	36.8	46.0	15.6	1.6	100.0( 250)
부인연령*					
20~24세	48.1	42.3	9.6	-	100.0( 52)
25~29세	45.6	39.3	14.3	0.9	100.0( 463)
30~34세	38.5	46.8	14.2	0.6	100.0( 896)
35~39세	39.2	44.5	14.5	1.8	100.0( 393)
40세 이상	26.6	62.5	10.9	-	100.0( 64)
출산순위					
첫째아	42.3	42.8	14.0	0.9	100.0( 865)
둘째아	37.3	47.1	14.6	1.0	100.0( 804)
셋째아	41.3	45.7	13.0	-	100.0( 184)
넷째아이상	52.4	42.9	4.8	-	100.0( 21)
학력 **					
중졸이하	27.3	61.4	9.1	2.3	100.0( 44)
고등학교	43.2	42.8	13.4	0.5	100.0( 738)
대학(교)	39.0	45.0	15.2	0.8	100.0( 987)
대학원이상	32.5	53.8	10.0	3.8	100.0( 8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1〉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취업여부					
취업	39.0	45.5	14.5	1.0	100.0( 510)
비취업	40.6	44.7	13.9	0.8	100.0(1,363)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39.1	49.6	10.4	0.9	100.0( 115)
준전문가	34.0	53.2	11.7	1.1	100.0( 94)
사무종사자	36.5	46.5	16.5	0.6	100.0( 170)
서비스종사자	40.4	38.3	19.1	2.1	100.0( 47)
판매종사자	42.5	40.0	17.5		100.0( 40)
단순노무종사자등	54.5	27.3	15.9	2.3	100.0( 44)
무직	40.6	44.7	13.9	0.8	100.0(1,363)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47.2	38.0	13.9	0.9	100.0( 108)
상용근로자	38.0	47.7	13.7	0.6	100.0( 321)
임시일용근로자	32.5	47.5	17.5	2.5	100.0( 80)
무직	40.6	44.7	13.9	0.8	100.0(1,363)
가구소득					
60%미만	42.3	43.6	13.5	0.6	100.0( 800)
60~80%미만	39.6	44.3	14.9	1.2	100.0( 255)
80~100%미만	40.1	46.1	12.5	1.3	100.0( 297)
100~150%미만	37.8	45.9	15.3	0.9	100.0( 320)
150%이상	35.8	45.9	17.4	0.9	100.0( 109)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2〉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전체	2.1	15.9	60.0	22.0	100.0(1,847)
지역					
시부	2.1	15.4	60.0	22.5	100.0(1,594)
군부	2.4	17.8	60.7	19.0	100.0( 247)
부인연령 ***					
20~24세	15.1	22.6	47.2	15.1	100.0( 53)
25~29세	2.9	22.1	57.2	17.9	100.0( 453)
30~34세	1.2	14.3	61.0	23.4	100.0( 883)
35~39세	1.5	11.2	62.8	24.5	100.0( 392)
40세 이상	1.6	14.8	60.7	23.0	100.0( 61)
출산순위					
첫째아	2.9	14.8	60.1	22.1	100.0( 849)
둘째아	1.3	16.0	60.5	22.3	100.0( 794)
셋째아	1.6	19.1	59.6	19.7	100.0( 183)
넷째아이상	4.8	23.8	47.6	23.8	100.0( 21)
학력 *					
중졸이하	2.4	19.5	56.1	22.0	100.0( 41)
고등학교	2.9	19.2	58.3	19.6	100.0( 729)
대학(교)	1.5	13.7	60.6	24.2	100.0( 974)
대학원이상	1.3	8.8	68.8	21.3	100.0( 80)

주: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3〉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취업여부 **					
취업	2.0	11.1	62.4	24.5	100.0( 503)
비취업	2.2	17.6	59.1	21.1	100.0(1,343)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0.9	17.5	60.5	21.1	100.0( 114)
준전문가	2.2	9.7	63.4	24.7	100.0( 93)
사무종사자	1.2	9.1	65.5	24.2	100.0( 165)
서비스종사자	2.1	10.4	58.3	29.2	100.0( 48)
판매종사자	5.0	2.5	60.0	32.5	100.0( 40)
단순노무종사자등	4.7	14.0	60.5	20.9	100.0( 43)
무직	2.2	17.6	59.1	21.1	100.0(1,343)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1.9	7.5	58.5	32.1	100.0( 106)
상용근로자	1.6	11.7	63.4	23.3	100.0( 317)
임시일용근로자	3.8	13.9	63.3	19.0	100.0( 79)
무직	2.2	17.6	59.1	21.1	100.0(1,343)
가구소득 ***					
60%미만	2.8	19.8	57.7	19.7	100.0( 782)
60~80%미만	1.2	13.9	62.9	21.9	100.0( 251)
80~100%미만	1.3	15.4	58.7	24.5	100.0( 298)
100~150%미만	0.6	9.5	65.2	24.7	100.0( 316)
150%이상	1.8	9.2	65.1	23.9	100.0( 109)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4〉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전체	29.4	42.4	24.0	4.1	100.0(1,885)
지역					
시부	29.5	42.3	24.0	4.1	100.0(1,626)
군부	29.6	42.3	23.7	4.3	100.0( 253)
부인연령					
20~24세	33.3	35.2	25.9	5.6	100.0( 54)
25~29세	32.9	39.1	23.4	4.5	100.0( 465)
30~34세	27.1	42.5	26.5	3.9	100.0( 901)
35~39세	29.0	46.5	20.5	4.0	100.0( 396)
40세 이상	36.5	46.0	12.7	4.8	100.0( 63)
출산순위 **					
첫째아	28.9	39.9	26.8	4.5	100.0( 873)
둘째아	27.6	44.8	23.0	4.6	100.0( 804)
셋째아	38.2	44.1	16.7	1.1	100.0( 186)
넷째아이상	45.5	45.5	9.1	-	100.0( 22)
학력 ***					
중졸이하	54.5	29.5	11.4	4.5	100.0( 44)
고등학교	34.0	42.3	19.7	4.0	100.0( 750)
대학(교)	25.6	43.1	27.2	4.2	100.0( 987)
대학원이상	17.7	44.3	31.6	6.3	100.0( 79)

주: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취업여부					
취업	30.0	39.3	26.2	4.5	100.0( 507)
비취업	29.3	43.6	23.2	4.0	100.0(1,377)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26.5	40.7	29.2	3.5	100.0( 113)
준전문가	23.7	40.9	29.0	6.5	100.0( 93)
사무종사자	26.9	38.9	29.3	4.8	100.0( 167)
서비스종사자	37.5	39.6	20.8	2.1	100.0( 48)
판매종사자	46.3	29.3	14.6	9.8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40.0	42.2	17.8	-	100.0( 45)
무직	29.3	43.6	23.2	4.0	100.0(1,377)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42.6	35.2	16.7	5.6	100.0( 108)
상용근로자	26.2	39.4	29.3	5.0	100.0( 317)
임시일용근로자	27.2	44.4	27.2	1.2	100.0( 81)
무직	29.3	43.6	23.2	4.0	100.0(1,377)
가구소득 **					
60%미만	31.3	43.7	20.3	4.7	100.0( 806)
60~80%미만	33.3	40.0	23.1	3.5	100.0( 255)
80~100%미만	25.9	43.5	27.6	3.0	100.0( 301)
100~150%미만	23.2	43.6	27.9	5.3	100.0( 319)
150%이상	29.4	35.8	30.3	4.6	100.0( 109)

주: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전체	6.7	19.7	47.9	25.6	100.0(1,880)
지역 **					
시부	6.4	20.0	49.1	24.5	100.0(1,624)
군부	8.8	17.6	40.0	33.6	100.0( 250)
부인연령 ***					
20~24세	9.6	25.0	46.2	19.2	100.0( 52)
25~29세	10.6	23.7	44.6	21.1	100.0( 464)
30~34세	5.0	17.4	48.8	28.8	100.0( 897)
35~39세	5.3	18.6	51.0	25.1	100.0( 398)
40세 이상	9.5	25.4	41.3	23.8	100.0( 63)
출산순위 *					
첫째아	6.7	18.8	49.9	24.5	100.0( 865)
둘째아	5.6	19.5	47.6	27.4	100.0( 807)
셋째아	9.7	25.3	40.3	24.7	100.0( 186)
넷째아이상	22.7	18.2	45.5	13.6	100.0( 22)
학력 ***					
중졸이하	27.3	18.2	36.4	18.2	100.0( 44)
고등학교	8.6	22.5	44.4	24.5	100.0( 746)
대학(교)	4.4	17.6	51.8	26.2	100.0( 987)
대학원이상	3.8	15.4	46.2	34.6	100.0( 78)

주: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정도(계속)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안함	전혀찬성안함	계
취업여부					
취업	6.7	17.3	47.5	28.5	100.0( 509)
비취업	6.7	20.7	48.0	24.6	100.0(1,370)
직업 †					
고위임직전문가	3.5	16.7	56.1	23.7	100.0( 114)
준전문가	4.3	12.9	47.3	35.5	100.0( 93)
사무종사자	5.3	17.2	48.5	29.0	100.0( 169)
서비스종사자	12.5	14.6	41.7	31.3	100.0( 48)
판매종사자	12.2	26.8	31.7	29.3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13.6	22.7	43.2	20.5	100.0( 44)
무직	6.7	20.7	48.0	24.6	100.0(1,370)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9.2	18.3	38.5	33.9	100.0( 109)
상용근로자	4.4	16.6	50.8	28.2	100.0( 319)
임시일용근로자	12.5	18.8	46.3	22.5	100.0( 80)
무직	6.7	20.7	48.0	24.6	100.0(1,370)
가구소득 ***					
60%미만	8.0	22.3	45.9	23.7	100.0( 801)
60~80%미만	7.8	17.6	46.7	27.8	100.0( 255)
80~100%미만	6.3	20.3	50.2	23.3	100.0( 301)
100~150%미만	3.1	12.7	54.0	30.1	100.0( 322)
150%이상	1.9	15.9	48.6	33.6	100.0( 107)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8〉 2006년 출산여성의 기대자녀수 변화별 출산순위

(단위: 명, %)

구분	출산순위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전체	46.3	42.7	9.8	1.2	100.0(1,903)
기대자녀수변화***					
0~증가	67.9	25.0	7.1	-	100.0( 28)
1~유지	99.2	0.8			100.0( 124)
1~증가	26.3	67.7	5.4	0.5	100.0( 186)
2~감소	100.0	-	-	-	100.0( 111)
2~유지	47.3	52.7	-	-	100.0( 812)
2~증가	3.5	22.0	68.8	5.7	100.0( 141)
3명이상~감소	41.0	55.3	3.0	0.8	100.0( 266)
3명이상~유지	26.2	36.3	37.5	-	100.0( 168)
3명이상~증가	-	-	23.1	76.9	100.0( 13)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19〉 2006년 출산여성의 기대자녀수 변화별 출산유형

(단위: 명, %)

구분	출산유형			계
	계획출산	연기중출산	중단중출산	
전체	83.0	10.4	6.5	100.0(1,880)
기대자녀수변화***				
0~증가	75.0	4.2	20.8	100.0( 24)
1~유지	91.1	8.1	0.8	100.0( 123)
1~증가	71.4	7.0	21.6	100.0( 185)
2~감소	88.2	11.8	-	100.0( 110)
2~유지	87.6	11.6	0.9	100.0( 805)
2~증가	58.6	1.4	40.0	100.0( 140)
3명이상~감소	84.5	13.6	1.9	100.0( 264)
3명이상~유지	86.7	12.1	1.2	100.0( 165)
3명이상~증가	53.8	-	46.2	100.0( 13)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0〉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이외 다른사람	계
전체 연령†	41.8	36.5	17.7	0.5	0.1	3.4	100.0(1,899)
20~24세	36.4	38.2	23.6	-	-	1.8	100.0( 55)
25~29세	35.0	38.7	22.2	0.6	-	3.4	100.0( 468)
30~34세	43.0	36.4	16.4	0.4	0.1	3.6	100.0( 907)
35~39세	47.4	36.3	13.3	0.5	-	2.5	100.0( 399)
40세 이상	44.4	23.8	25.4	-	-	6.3	100.0( 63)
출산순위***							
첫째아	35.9	37.9	21.6	0.3	-	4.2	100.0( 879)
둘째아	46.2	36.2	14.0	0.6	0.1	2.8	100.0( 812)
셋째아	49.2	33.2	15.0	0.5	-	2.1	100.0( 187)
넷째아이상	52.4	23.8	23.8	-	-	-	100.0( 21)
학력***							
중졸이하	53.3	22.2	22.2	-	-	2.2	100.0( 45)
고등학교	45.7	36.0	16.4	0.3	-	1.6	100.0( 752)
대학(교)	38.7	38.5	18.0	0.6	0.1	4.1	100.0( 997)
대학원이상	37.5	27.5	21.3	1.3	-	12.5	100.0( 8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1〉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가사분담 형태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이외 다른사람	계
취업여부***							
취업	26.2	30.9	31.3	1.0	0.2	10.5	100.0(512)
비취업	47.6	38.7	12.7	0.3	-	0.7	100.0(1,386)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21.7	38.3	25.2	1.7	-	13.0	100.0(115)
준전문가	23.4	30.9	33.0	2.1	-	10.6	100.0(94)
사무종사자	23.5	30.6	32.9	0.6	0.6	11.8	100.0(170)
서비스종사자	35.4	16.7	39.6	-	-	8.3	100.0(48)
판매종사자	35.0	20.0	37.5	-	-	7.5	100.0(40)
단순노무종사자등	35.6	37.8	22.2	-	-	4.4	100.0(45)
무직	47.6	38.7	12.7	0.3	-	0.7	100.0(1,386)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37.6	21.1	33.0	-	-	8.3	100.0(109)
상용근로자	20.8	32.6	32.0	1.2	0.3	13.1	100.0(322)
임시일용근로자	31.3	37.5	26.3	1.3	-	3.8	100.0(80)
무직	47.6	38.7	12.7	0.3	-	0.7	100.0(1,386)
근무시간***							
0~4시간 이하	51.0	37.3	11.8	-	-	-	100.0(51)
5~7시간	31.6	22.8	35.1	-	-	10.5	100.0(57)
8시간	23.4	32.9	29.3	0.9	0.5	13.1	100.0(222)
9시간 이상	20.2	29.8	37.6	1.7	-	10.7	100.0(178)
가구소득***							
60%미만	46.4	37.2	15.1	0.1	0.1	1.0	100.0(812)
60~80%미만	40.9	37.7	17.1	1.6	-	2.7	100.0(257)
80~100%미만	48.3	34.1	14.9	0.3	-	2.3	100.0(302)
100~150%미만	32.8	37.2	22.9	0.6	-	6.5	100.0(323)
150%이상	24.8	29.4	27.5	0.9	-	17.4	100.0(109)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2〉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육아분담 형태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의 다른사람	계
전체	27.5	40.5	21.6	0.6	0.1	9.8	100.0(1,900)
연령							
20~24세	21.8	38.2	30.9	1.8	-	7.3	100.0( 55)
25~29세	23.1	39.1	26.9	0.6	-	10.3	100.0( 468)
30~34세	28.6	40.3	20.4	0.4	0.1	10.1	100.0( 908)
35~39세	30.1	44.1	16.8	0.5	-	8.5	100.0( 399)
40세 이상	30.2	34.9	20.6	1.6	-	12.7	100.0( 63)
출산순위***							
첫째아	21.2	41.2	22.9	0.3	-	14.4	100.0( 879)
둘째아	33.0	40.0	20.0	0.9	0.1	6.1	100.0( 813)
셋째아	33.2	40.1	21.4	0.5	-	4.8	100.0( 187)
넷째아이상	28.6	38.1	28.6	-	-	4.8	100.0( 21)
학력***							
중졸이하	31.1	40.0	20.0	-	-	8.9	100.0( 45)
고등학교	30.9	41.7	21.0	0.7	-	5.7	100.0( 753)
대학(교)	25.0	40.8	21.9	0.6	0.1	11.6	100.0( 997)
대학원이상	22.5	26.3	22.5	-	-	28.8	100.0( 8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3〉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육아분담 형태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이외 다른사람	계
취업여부***							
취업	15.8	23.8	25.8	0.8	0.2	33.6	100.0 (512)
비취업	31.8	46.7	20.0	0.5	-	1.0	100.0(1,387)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12.2	23.5	27.8	0.9	-	35.7	100.0( 115)
준전문가	16.0	24.5	31.9	1.1	-	26.6	100.0( 94)
사무종사자	12.9	20.0	21.2	0.6	0.6	44.7	100.0( 170)
서비스종사자	22.9	25.0	27.1	-	-	25.0	100.0( 48)
판매종사자	22.5	17.5	35.0	2.5	-	22.5	100.0( 40)
단순노무종사자등	22.2	42.2	15.6	-	-	20.0	100.0( 45)
무직	31.8	46.7	20.0	0.5	-	1.0	100.0(1,387)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20.2	27.5	29.4	0.9	-	22.0	100.0( 109)
상용근로자	11.8	19.9	26.4	0.9	0.3	40.7	100.0( 322)
임시일용근로자	25.0	35.0	18.8	-	-	21.3	100.0( 80)
무직	31.8	46.7	20.0	0.5	-	1.0	100.0(1,387)
근무시간***							
0~4시간 이하	31.4	35.3	23.5	-	-	9.8	100.0( 51)
5~7시간	19.3	33.3	28.1	-	-	19.3	100.0( 57)
8시간	13.5	20.7	23.9	0.5	0.5	41.0	100.0( 222)
9시간 이상	12.4	21.9	27.5	1.7	-	36.5	100.0( 178)
가구소득***							
60%미만	30.3	45.5	20.8	0.5	0.1	2.8	100.0( 813)
60~80%미만	32.3	39.7	21.8	0.8	-	5.4	100.0( 257)
80~100%미만	29.1	41.1	20.5	0.3	-	8.9	100.0( 302)
100~150%미만	20.4	34.7	20.7	0.6	-	23.5	100.0( 323)
150%이상	19.3	22.9	22.0	1.8	-	33.9	100.0( 109)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4〉 부부간 가사분담에 따른 2006년 출산 이행

(단위: 명, %)

구분	2006년 출생아의 출산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부부간 가사 분담 정도				
부인전가-부인전가	-	78.1	81.5	71.4
부인전가-부부분담	-	2.8	4.3	9.5
부인전가-타인의뢰	-	0.5	0.0	0.0
부부분담-부인전가	-	4.2	0.5	4.8
부부분담-부부분담	-	11.7	10.9	14.3
타인의뢰-부인전가	-	0.5	0.5	-
타인의뢰-부부분담	-	0.1	-	-
타인의뢰-타인의뢰	-	2.1	2.2	-
계	-	100.0(795)	100.0(184)	100.0(2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5〉 2006년 출산여성의 성역할가치관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않지도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 은 힘들어진다	40.7	38.6	16.4	4.2	0.2	100.0(1,893)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 학 아동에게 나쁘다	15.7	57.7	16.9	9.4	0.3	100.0(1,888)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 만큼 중요하다	31.0	56.8	9.0	3.1	0.1	100.0(1,886)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 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1.9	18.8	22.6	51.9	4.8	100.0(1,890)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4.1	60.5	24.4	10.6	0.3	100.0(1,891)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2.2	32.3	30.0	33.3	2.2	100.0(1,891)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2.5	46.0	21.0	29.3	1.2	100.0(1,888)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 중하기 어렵다	4.4	49.7	19.8	25.2	0.9	100.0(1,82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6〉 성역할가치관과 2006년 출산행태

(단위: 명, %)

구분	태도	계획된 출산	연기중 출산	중단 중출산	계	$\chi^2$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 어진다	찬성	83.6	9.4	7.0	100.0(1,488)	10.87*
	중립	81.2	14.5	4.3	100.0( 303)	
	반대	79.3	14.6	6.1	100.0( 82)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 동에게 나쁘다	찬성	83.1	9.8	7.1	100.0(1,372)	6.27
	중립	83.5	12.4	4.1	100.0( 315)	
	반대	80.7	12.7	6.6	100.0( 181)	
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 만큼 중 요하다	찬성	83.2	10.2	6.6	100.0(1,640)	2.19
	중립	83.2	11.4	5.4	100.0( 167)	
	반대	79.7	15.3	5.1	100.0( 59)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찬성	82.2	9.7	8.1	100.0( 383)	2.10
	중립	83.2	10.4	6.4	100.0( 423)	
	반대	83.1	10.8	6.1	100.0(1,064)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찬성	82.5	10.3	7.2	100.0(1,209)	3.81
	중립	83.7	10.2	6.1	100.0( 459)	
	반대	83.7	12.3	3.9	100.0( 203)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찬성	78.7	12.3	9.0	100.0( 644)	14.74**
	중립	84.7	9.8	5.5	100.0( 561)	
	반대	85.7	9.3	5.0	100.0( 666)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찬성	79.2	10.9	9.8	100.0( 906)	31.56**
	중립	86.7	9.4	3.8	100.0( 392)	
	반대	86.1	10.5	3.3	100.0( 570)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찬성	80.2	11.2	8.6	100.0( 974)	17.07**
	중립	85.7	10.4	3.9	100.0( 357)	
	반대	86.8	8.7	4.5	100.0( 47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7〉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모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출산전부터 동거	출산후부터 동거	모두비동거	계
전체	12.2	4.9	82.9	100.0(1,897)
연령***				
20~24세	35.2	3.7	61.1	100.0( 54)
25~29세	12.6	6.0	81.4	100.0( 467)
30~34세	9.5	5.0	85.6	100.0( 908)
35~39세	14.3	3.5	82.2	100.0( 398)
40세 이상	14.3	6.3	79.4	100.0( 63)
출산순위*				
첫째아	11.7	6.4	81.9	100.0( 877)
둘째아	11.6	3.3	85.1	100.0( 812)
셋째아	16.0	4.3	79.7	100.0( 187)
넷째아이상	19.0	9.5	71.4	100.0( 21)
학력***				
중졸이하	27.9	2.3	69.8	100.0( 43)
고등학교	13.9	3.6	82.5	100.0( 754)
대학(교)	10.2	5.6	84.2	100.0( 995)
대학원이상	8.8	10.0	81.3	100.0( 8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8〉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부모 동거 여부

(단위: 명, %)

구분	출산전부터 동거	출산후부터 동거	모두비동거	계
취업여부***				
취업	16.0	8.6	75.4	100.0( 512)
비취업	10.8	3.5	85.7	100.0(1,384)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14.8	9.6	75.7	100.0( 115)
준전문가	13.8	8.5	77.7	100.0( 94)
사무종사자	15.3	9.4	75.3	100.0( 170)
서비스종사자	14.9	6.4	78.7	100.0( 47)
판매종사자	19.5	9.8	70.7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24.4	4.4	71.1	100.0( 45)
무직	10.8	3.5	85.7	100.0(1,384)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8.5	4.6	76.9	100.0( 108)
상용근로자	15.8	9.6	74.5	100.0( 322)
임시일용근로자	13.6	9.9	76.5	100.0( 81)
무직	10.8	3.5	85.7	100.0(1,384)
가구소득**				
60%미만	12.5	4.8	82.7	100.0( 809)
60~80%미만	10.1	1.9	87.9	100.0( 257)
80~100%미만	8.9	3.3	87.7	100.0( 302)
100~150%미만	13.0	9.0	78.0	100.0( 323)
150%이상	15.6	5.5	78.9	100.0( 109)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29〉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모의 육아도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매우 도와줌	약간 도와줌	별로 도움 안줌	전혀 도움 안줌	계
전체	23.6	20.8	9.7	45.9	100.0(1,898)
연령***					
20~24세	31.5	25.9	20.4	22.2	100.0( 54)
25~29세	24.4	24.1	10.7	40.8	100.0( 468)
30~34세	24.7	20.7	8.3	46.4	100.0( 908)
35~39세	20.4	16.1	11.6	52.0	100.0( 398)
40세 이상	17.5	22.2	1.6	58.7	100.0( 63)
출산순위***					
첫째아	30.0	20.2	8.3	41.5	100.0( 877)
둘째아	19.1	22.3	10.7	48.0	100.0( 813)
셋째아	13.4	17.6	11.2	57.8	100.0( 187)
넷째아이상	23.8	19.0	14.3	42.9	100.0( 21)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0〉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부모의 육아도움 여부

(단위: 명, %)

구 분	매우 도와줌	약간 도와줌	별로도움안줌	전혀도움안줌	계
취업여부***					
취업	55.1	13.3	5.3	26.4	100.0( 512)
비취업	12.0	23.5	11.3	53.1	100.0(1,385)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56.5	9.6	7.8	26.1	100.0( 115)
준전문가	51.1	18.1	4.3	26.6	100.0( 94)
사무종사자	65.9	11.8	4.1	18.2	100.0( 170)
서비스종사자	48.9	8.5	6.4	36.2	100.0( 47)
판매종사자	36.6	19.5	7.3	36.6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42.2	17.8	2.2	37.8	100.0( 45)
무직	12.0	23.5	11.3	53.1	100.0(1,385)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45.4	13.9	3.7	37.0	100.0( 108)
상용근로자	61.5	11.8	5.0	21.7	100.0( 322)
임시일용근로자	43.2	18.5	8.6	29.6	100.0( 81)
무직	12.0	23.5	11.3	53.1	100.0(1,385)
근무시간*					
0~4시간 이하	31.4	21.6	5.9	41.2	100.0( 51)
5~7시간	47.4	19.3	3.5	29.8	100.0( 57)
8시간	61.7	12.2	4.5	21.6	100.0( 222)
9시간 이상	57.3	10.7	6.2	25.8	100.0( 178)
가구소득***					
60%미만	16.7	22.1	11.2	50.2	100.0( 810)
60~80%미만	18.7	20.6	10.1	50.6	100.0( 257)
80~100%미만	19.9	19.9	6.3	54.0	100.0( 302)
100~150%미만	40.2	18.9	7.4	33.4	100.0( 323)
150%이상	45.0	19.3	10.1	25.7	100.0( 109)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1〉 부모의 지원에 따른 2006년 출산 이행

(단위: 명, %)

구분	2006년 출생아의 출산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부모 육아도움 정도				
도움-도움	-	38.8	27.9	33.3
도움-비도움	-	7.0	5.5	9.5
비도움-도움	-	2.1	3.3	9.5
비도움-비도움	-	52.1	63.4	47.6
계	-	100.0(797)	100.0(183)	100.0(21)
부모 동거 여부				
동거-동거	-	11.4	16.4	19.0
동거-비동거	-	5.0	4.9	0.0
비동거-동거	-	3.0	3.8	9.5
비동거-비동거	-	80.5	74.9	71.4
계	-	100.0(795)	100.0(183)	100.0(2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2〉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계획출산 여부

(단위: %, 명)

구 분	계획출산	연기중출산	중단중출산	계(n)
전체	83.0	10.4	6.5	100.0(1,880)
지역***				
시부	84.0	9.7	6.4	100.0(1,622)
군부	77.4	14.7	7.9	100.0( 252)
연령***				
20~24세	79.6	20.4	-	100.0( 54)
25~29세	81.2	16.6	2.2	100.0( 463)
30~34세	85.0	9.9	5.1	100.0( 903)
35~39세	82.2	4.3	13.5	100.0( 394)
40세 이상	75.4	3.3	21.3	100.0( 61)
출산순위***				
첫째아	89.0	10.6	0.3	100.0( 874)
둘째아	82.5	11.4	6.0	100.0( 795)
셋째아	60.7	5.5	33.9	100.0( 183)
넷째아이상	54.5	0.0	45.5	100.0( 22)
결혼연도***				
2001년이전	77.3	2.8	19.9	100.0( 423)
2001년	82.5	7.2	10.2	100.0( 166)
2002년	81.7	13.7	4.6	100.0( 219)
2003년	87.4	10.2	2.4	100.0( 254)
2004년	89.0	9.3	1.7	100.0( 300)
2005년	85.7	14.3	-	100.0( 428)
2006년	67.2	32.8	-	100.0( 67)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3〉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상태변화별 계획출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획출산	연기중출산	중단중출산	계
부모 도움 여부***				
도움-도움	78.5	13.5	8.0	100.0(362)
도움-비도움	86.4	9.1	4.5	100.0( 66)
비도움-도움	70.8	4.2	25.0	100.0( 24)
비도움-비도움	76.5	8.4	15.1	100.0(537)
기대자녀수 변화***				
0~증가	75.0	4.2	20.8	100.0( 24)
1~유지	91.1	8.1	0.8	100.0(123)
1~증가	71.4	7.0	21.6	100.0(185)
2~감소	88.2	11.8	-	100.0(110)
2~유지	87.6	11.6	0.9	100.0(805)
2~증가	58.6	1.4	40.0	100.0(140)
3명이상~감소	84.5	13.6	1.9	100.0(264)
3명이상~유지	86.7	12.1	1.2	100.0(165)
3명이상~증가	53.8	-	46.2	100.0( 13)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4〉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상태 변화별 계획출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획출산	연기중출산	중단중출산	계(n)
출산전후 생활변동***				
유직-무직	85.2	11.6	3.2	100.0(601)
유직-유직	82.1	11.5	6.4	100.0(468)
무직-유직	87.8	7.3	4.9	100.0( 41)
무직-무직	81.7	9.0	9.4	100.0(769)
출산전후 직업변동***				
전문가등-전문가등	82.9	10.4	6.7	100.0(19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84.4	11.9	3.8	100.0(160)
서비스등-서비스등	78.2	10.9	10.9	100.0(101)
전문가등-무직	88.3	9.9	1.9	100.0(213)
사무종사자-무직	83.9	15.1	1.0	100.0(192)
서비스등-무직	83.2	10.2	6.6	100.0(196)
직종간이동	71.4	28.6	-	100.0( 14)
출산전후 지위변동**				
비임금-비임금	81.9	8.4	9.6	100.0( 83)
상용근로-상용근로	83.9	11.5	4.6	100.0(305)
임시일용-임시일용	78.4	11.8	9.8	100.0( 51)
비임금-무직	85.7	7.1	7.1	100.0( 56)
상용근로자-무직	85.4	12.4	2.1	100.0(419)
임시일용-무직	84.8	10.4	4.8	100.0(125)
비임금-임시일용	80.0	0.0	20.0	100.0( 5)
상용-임시일용	66.7	22.2	11.1	100.0( 9)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5〉 2006년 출산중단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중단이유

(단위: 명, %)

구분	소득불안정	양육비부담	일-가정양립 부담	건강문제	기타	계
전체	14.3	45.4	17.6	10.9	11.8	100.0(119)
부인연령						
20~24세	-	-	-	-	-	-
25~29세	25.0	25.0	16.7	33.3	-	100.0( 9)
30~34세	33.3	-	-	33.3	33.3	100.0( 44)
35~39세	15.2	43.5	17.4	10.9	13.0	100.0( 53)
40세 이상	12.9	48.6	18.6	10.0	10.0	100.0( 12)
출산순위						
첫째아	-	50.0	-	50.0	-	100.0( 3)
둘째아	21.1	50.9	12.3	5.3	10.5	100.0( 46)
셋째아	7.7	42.3	23.1	13.5	13.5	100.0( 70)
학력 *						
중졸이하	-	25.0	50.0	-	25.0	100.0( 4)
고등학교	-	50.0	50.0	-	-	100.0( 57)
대학(교)	16.7	-	66.7	16.7	-	100.0( 52)
대학원이상	-	25.0	25.0	50.0	-	100.0( 2)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6〉 2006년 출산중단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중단이유(계속)

(단위: 명, %)

구분	소득불안정	양육비부담	일-가정양립 부담	건강문제	기타	계
취업여부**						
취업	13.3	26.7	40.0	13.3	6.7	100.0(30)
비취업	14.6	51.7	10.1	10.1	13.5	100.0(89)
직업 **						
고위임직전문가	-	25.0	50.0	-	25.0	100.0( 4)
준전문가	-	50.0	50.0	-	-	100.0( 8)
사무종사자	16.7	-	66.7	16.7	-	100.0( 6)
서비스종사자	-	25.0	25.0	50.0	-	100.0( 4)
판매종사자	50.0	50.0	-	-	-	100.0( 4)
단순노무종사자등	25.0	-	25.0	25.0	25.0	100.0( 4)
무직	14.6	51.7	10.1	10.1	13.5	100.0(89)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	37.5	25.0	25.0	12.5	100.0( 8)
상용근로자	6.7	20.0	60.0	6.7	6.7	100.0(15)
임시일용근로자	42.9	28.6	14.3	14.3	-	100.0( 7)
무직	14.6	51.7	10.1	10.1	13.5	100.0(89)
가구소득**						
60%미만	22.0	54.2	5.1	8.5	10.2	100.0(59)
60~80%미만	5.6	50.0	27.8	5.6	11.1	100.0(18)
80~100%미만	13.3	53.3	20.0	6.7	6.7	100.0(15)
100~150%미만	-	18.8	37.5	18.8	25.0	100.0(16)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7〉 2006년 출산연기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연기이유

(단위: 명, %)

구분	소득 불안정	양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부담	자녀터울	혼전	건강	기타	계
전체	18.9	5.4	33.0	19.5	13.0	2.2	8.1	100.0(185)
부인연령 *								
20~24세	10.0	-	20.0	10.0	40.0	10.0	10.0	100.0( 10)
25~29세	18.9	6.8	35.1	12.2	18.9	0.0	8.1	100.0( 74)
30~34세	21.4	4.8	29.8	28.6	6.0	2.4	7.1	100.0( 84)
35~39세	13.3	6.7	53.3	13.3	0.0	6.7	6.7	100.0( 15)
40세 이상	-	-	-	-	50.0	-	50.0	100.0( 2)
출산순위 ***								
첫째아	24.7	1.1	39.3	-	25.8	1.1	7.9	100.0( 89)
둘째아	12.8	9.3	27.9	38.4	1.2	3.5	7.0	100.0( 86)
셋째아	20.0	10.0	20.0	30.0	-	-	20.0	100.0( 10)
학력 †								
중졸이하	50.0	-	16.7	16.7	-	-	16.7	100.0( 6)
고등학교	26.9	10.3	23.1	19.2	14.1	2.6	3.8	100.0( 78)
대학(교)	11.0	2.2	42.9	18.7	13.2	2.2	9.9	100.0( 91)
대학원이상	11.1	-	22.2	33.3	11.1	-	22.2	100.0( 9)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8〉 2006년 출산연기중 출산한 여성의 이전출산 연기이유(계속)

(단위: 명, %)

구분	소득불안 정	양육비부 담	일-가정양 립부담	자녀터울	혼전	건강	기타	계
취업여부								
취업	17.0	5.7	43.4	18.9	7.5	0.0	7.5	100.0( 53)
비취업	19.7	5.3	28.8	19.7	15.2	3.0	8.3	100.0(132)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18.2	0.0	54.5	27.3	0.0	0.0	0.0	100.0( 11)
준전문가	0.0	9.1	45.5	27.3	18.2	0.0	0.0	100.0( 11)
사무종사자	25.0	10.0	40.0	5.0	10.0	0.0	10.0	100.0( 20)
서비스종사자	0.0	0.0	50.0	25.0	0.0	0.0	25.0	100.0( 4)
판매종사자	33.3	0.0	33.3	33.3	0.0	0.0	0.0	100.0( 3)
단순노무종사자등	25.0	0.0	25.0	25.0	0.0	0.0	25.0	100.0( 4)
무직	19.7	5.3	28.8	19.7	15.2	3.0	8.3	100.0(132)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0.0	0.0	60.0	30.0	0.0	0.0	10.0	100.0( 10)
상용근로자	14.7	8.8	47.1	11.8	8.8	0.0	8.8	100.0( 34)
임시일용근로자	44.4	0.0	11.1	33.3	11.1	0.0	0.0	100.0( 9)
무직	19.7	5.3	28.8	19.7	15.2	3.0	8.3	100.0(132)
가구소득								
60%미만	18.8	9.4	21.9	37.5	3.1	0.0	9.4	100.0( 32)
60~80%미만	17.2	3.4	31.0	17.2	17.2	3.4	10.3	100.0( 29)
80~100%미만	15.6	0.0	53.1	15.6	9.4	0.0	6.3	100.0( 32)
100~150%미만	0.0	0.0	66.7	0.0	16.7	0.0	16.7	100.0( 6)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39〉 2006년 출산여성의 경기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구분	경기인식			계(n)
	좋았음	보통이었음	안좋았음	
전체	1.8	40.8	57.4	100.0(1,821)
연령**				
20~24세	3.8	50.0	46.2	100.0( 52)
25~29세	1.6	48.0	50.5	100.0( 444)
30~34세	1.7	39.2	59.0	100.0( 874)
35~39세	2.1	37.3	60.6	100.0( 383)
40세 이상	-	25.8	74.2	100.0( 62)
출산순위***				
첫째아	1.6	46.2	52.3	100.0( 834)
둘째아	2.0	37.5	60.5	100.0( 784)
셋째아	1.7	32.6	65.7	100.0( 181)
넷째아 이상	0.0	22.7	77.3	100.0( 22)
경제활동상태				
취업	1.8	43.9	54.3	100.0( 492)
비취업	1.7	39.7	58.6	100.0(1,329)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2.8	51.4	45.9	100.0( 109)
준전문가	-	42.9	57.1	100.0( 91)
사무종사자	2.5	45.1	52.5	100.0( 162)
서비스종사자	-	47.8	52.2	100.0( 46)
판매종사자	2.6	28.2	69.2	100.0( 39)
단순노무종사자등	2.2	33.3	64.4	100.0( 45)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	30.5	69.5	100.0( 105)
상용근로자	2.6	47.4	50.0	100.0( 306)
임시일용근로자	1.3	47.5	51.3	100.0( 80)
가구소득**				
60%미만	1.0	36.6	62.4	100.0( 784)
60~80%미만	2.0	40.3	57.7	100.0( 248)
80~100%미만	1.3	40.6	58.1	100.0( 298)
100~150%미만	3.3	43.6	53.1	100.0( 305)
150%이상	2.0	55.0	43.0	100.0( 10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0〉 경기 상황이 2006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여부

(단위: 명, %)

구 분	큰 영향 미침	다소 영향 미침	영향 없음	계(n)
전체	1.3	14.9	83.8	100.0(1,881)
부인연령				
20세~24세	2.0	20.0	78.0	100.0( 50)
25세~29세	1.3	16.5	82.2	100.0( 461)
30~34세	1.6	14.0	84.5	100.0( 903)
35~39세	0.5	14.4	85.1	100.0( 397)
40세이상	-	15.6	84.4	100.0( 64)
출산순위				
첫째아	1.5	14.0	84.5	100.0( 866)
둘째아	1.4	15.5	83.1	100.0( 807)
셋째아	-	16.1	83.9	100.0( 186)
넷째아 이상	-	18.2	81.8	100.0( 22)
취업여부*				
취업	0.6	12.2	87.2	100.0( 508)
비취업	1.5	15.9	82.6	100.0(1,372)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1.8	9.6	88.6	100.0( 114)
준전문가	-	8.5	91.5	100.0( 94)
사무종사자	-	9.0	91.0	100.0( 167)
서비스종사자	-	16.7	83.3	100.0( 48)
판매종사자	2.4	12.2	85.4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0.0	34.1	65.9	100.0( 44)
무직	1.5	15.9	82.6	100.0(1,372)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	16.5	83.5	100.0( 109)
상용근로자	0.6	9.1	90.3	100.0( 318)
임시일용근로자	1.3	18.8	80.0	100.0( 80)
무직	1.5	15.9	82.6	100.0(1,372)
가구소득***				
60%미만	2.0	19.1	79.0	100.0( 808)
60~80%미만	1.2	18.5	80.3	100.0( 254)
80~100%미만	1.0	11.3	87.7	100.0( 300)
100~150%미만	0.3	7.7	92.0	100.0( 323)
150%이상	-	7.4	92.6	100.0( 108)

주: 1) 가구소득은 '07년 2분기 도시가구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346만8천원)기준

2) 고위전문가(고위임직·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종사자 등(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임업·농림업직,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자)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1〉 2006년 출산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책 영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정책 유형					없었음	계(n)
		보육교육 비지원	사회보험 확대	건강관리 지원	양립환경 조성	기타		
전체	4.3	1.2	0.2	0.1	2.1	0.7	95.7	100.0(1,894)
출산여성연령**								
20~24세	-	-	-	-	-	-	100.0	100.0( 53)
25~29세	3.7	0.6	-	-	2.4	0.6	96.4	100.0( 466)
30~34세	3.9	1.0	-	0.1	2.1	0.7	96.1	100.0( 907)
35~39세	5.8	1.8	0.8	-	2.3	1.0	94.2	100.0( 398)
40세 이상	7.8	3.1	1.6	1.6	-	1.6	92.2	100.0( 64)
출산순위***								
첫째아	3.9	0.5	0.2	0.1	2.9	0.2	96.1	100.0( 874)
둘째아	4.0	1.5	0.1	0.1	1.6	0.6	96.1	100.0( 811)
셋째아	7.0	3.2	0.5	-	0.5	2.7	93.0	100.0( 187)
넷째아이상	9.1	-	-	-	-	9.1	90.9	100.0( 22)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2〉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정책 영향

(단위: %, 명)

구분	있음	보육교육 비지원	사회보험 확대	건강관리 지원	양립환경 조성	기타	없었음	계(n)
현 취업여부***								
취업	10.0	1.8	-	-	7.2	1.0	90.0	100.0( 511)
비취업	2.2	0.9	0.3	0.1	0.1	0.7	97.8	100.0(1,382)
출산전후 취업변동***								
유직-무직	1.8	0.5	0.3	0.2	0.3	0.5	98.2	100.0( 605)
유직-유직	10.5	1.5	-	-	7.9	1.1	89.6	100.0( 469)
무직-유직	4.8	4.8	-	-	-	-	95.2	100.0( 42)
무직-무직	2.4	1.3	0.3	0.1	-	0.8	97.6	100.0( 777)
현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10.4	-	-	-	10.4	-	89.6	100.0( 115)
준전문가	4.3	2.1	-	-	2.1	-	95.7	100.0( 94)
사무종사자	16.1	2.4	-	-	13.0	0.6	84.0	100.0( 169)
서비스종사자	6.3	-	-	-	2.1	4.2	93.8	100.0( 48)
판매종사자	7.3	4.9	-	-	-	2.4	92.7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4.5	2.3	-	-	-	2.3	95.5	100.0( 44)
출산전후 직업변동***								
전문가등-전문가등	8.3	1.0	-	-	7.3	-	91.7	100.0( 193)
사무종사자-사무종사자	16.4	1.9	-	-	13.8	0.6	83.8	100.0( 160)
서비스등-서비스등	6.9	2.0	-	-	1.0	3.9	93.1	100.0( 102)
전문가등-무직	1.9	0.5	0.5	-	0.5	0.5	98.1	100.0( 214)
사무종사자-무직	2.1	0.5	0.5	-	0.5	0.5	97.9	100.0( 194)
서비스등-무직	1.5	0.5	-	0.5	-	0.5	98.5	100.0( 197)
직종간이동	-	-	-	-	-	-	100.0	100.0( 14)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2〉 2006년 출산여성의 경제적 특성별 정책 영향(계속)

(단위: %, 명)

구분	있음	보육교육 비지원	사회보험 확대	건강관리 지원	양립환경 조성	기타	없었음	계(n)
현 중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6.4	3.7	-	-	-	2.8	93.6	100.0( 109)
상용근로자	13.4	1.2	-	-	11.5	0.6	86.6	100.0( 321)
임시일용근로자	1.3	1.3	-	-	-	-	98.8	100.0( 80)
출산전후 지위변동***								
비임금-비임금	7.1	3.6	-	-	-	3.6	92.9	100.0( 84)
상용근로-상용근로	13.8	1.0	-	-	12.1	0.7	86.2	100.0( 305)
임시일용-임시일용	2.0	2.0	-	-	-	-	98.0	100.0( 51)
비임금-무직	1.8	-	-	1.8	-	-	98.2	100.0( 56)
상용근로자-무직	1.7	0.5	0.5	-	0.5	0.2	98.3	100.0( 422)
임시일용-무직	2.4	0.8	-	-	-	1.6	97.6	100.0( 126)
비임금-임시일용	-	-	-	-	-	-	100.0	100.0( 5)
상용-임시일용	-	-	-	-	-	-	100.0	100.0( 9)
가구소득 수준***								
60%미만	2.8	1.5	0.2	0.1	0.2	0.7	97.2	100.0( 811)
60~80%미만	3.1	0.4	-	0.4	0.8	1.6	96.9	100.0( 257)
80~100%미만	2.7	1.0	-	-	1.0	0.7	97.3	100.0( 301)
100~150%미만	7.5	0.9	0.3	-	5.9	0.3	92.6	100.0( 323)
150%이상	14.7	0.9	0.9	-	11.9	0.9	85.3	100.0( 109)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3〉 2006년 출산여성의 정책적 영향 여부별 기대자녀수 변화

(단위: %, 명)

구분	기대자녀수 변화									계(n)
	0명~ 증가	1명~ 유지	1명~ 증가	2명~ 감소	2명~ 유지	2명~ 증가	3명이상 ~감소	3명이상 ~유지	3명이상 ~증가	
전체	1.5	6.7	10.1	6.0	43.9	7.6	14.4	9.1	0.7	100.0
정책 영향있음	1.3	6.3	8.9	7.6	43.0	13.9	10.1	7.6	1.3	100.0(79)
정책 영향없음	1.5	6.8	10.2	6.0	43.7	7.4	14.7	9.2	0.7	100.0(1,761)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4〉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구 분	매우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반대	계(n)
전체	4.4	33.5	42.6	18.3	1.2	100.0(1,871)
부인연령						
20~24세	-	35.2	46.3	18.5	-	100.0( 54)
25~29세	4.1	34.2	41.6	19.5	0.6	100.0( 462)
30~34세	4.1	31.3	43.6	19.6	1.3	100.0( 892)
35~39세	5.1	36.9	41.7	14.8	1.5	100.0( 393)
40세 이상	10.9	37.5	35.9	12.5	3.1	100.0( 64)
총자녀수						
첫째아	3.7	33.1	43.3	18.2	1.6	100.0( 861)
둘째아	4.9	33.0	42.5	18.7	1.0	100.0( 804)
셋째아이상	5.8	36.9	39.8	17.0	0.5	100.0( 206)
부인학력						
중졸이하	7.0	32.6	51.2	7.0	2.3	100.0( 43)
고등학교	3.6	33.4	42.7	18.6	1.6	100.0( 740)
대학(교)	4.8	33.2	42.6	18.6	0.8	100.0( 984)
대학원이상	7.5	40.0	35.0	15.0	2.5	100.0( 80)
취업여부*						
취업	5.1	39.3	38.5	16.4	0.8	100.0( 507)
비취업	4.2	31.3	44.2	19.0	1.4	100.0(1,363)
직업						
고위전문가	7.8	36.5	40.0	15.7	-	100.0( 115)
준전문가	8.7	39.1	37.0	15.2	-	100.0( 92)
사무종사자	3.6	41.3	35.9	18.0	1.2	100.0( 167)
서비스종사자	2.1	38.3	44.7	12.8	2.1	100.0( 47)
판매종사자	4.9	41.5	31.7	19.5	2.4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	37.8	46.7	15.6	-	100.0( 45)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6.4	38.5	36.7	18.3	-	100.0( 109)
상용근로자	5.3	39.3	37.4	17.0	0.9	100.0( 318)
임시일용근로자	2.5	39.2	45.6	11.4	1.3	100.0( 79)
가구소득*						
60%미만	3.5	30.6	44.8	19.8	1.3	100.0( 797)
60~80%미만	3.1	33.1	39.0	22.0	2.8	100.0( 254)
80~100%미만	5.0	37.8	40.1	16.7	0.3	100.0( 299)
100~150%미만	5.3	36.9	41.9	15.0	0.9	100.0( 320)
150%이상	9.2	38.5	33.9	17.4	0.9	100.0( 109)

주: 1) 가구소득은 '07년 2분기 도시가구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346만8천원)기준

2) 고위전문가(고위임직·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종사자 등(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임업직,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자)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5〉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2006년 출산결정에 미친 영향  
(단위: 명, %)

구 분	큰 영향 미침	다소 영향 미침	영향 없음	계(n)
전체	0.5	10.1	89.4	100.0(1,882)
부인연령	-	11.5	88.5	100.0( 52)
20~24세	-	11.5	88.5	100.0( 463)
25~29세	0.4	7.8	91.8	100.0( 902)
30~34세	0.4	10.3	89.2	100.0( 395)
35~39세	0.3	11.4	88.4	100.0( 64)
40세 이상	3.1	15.6	81.3	100.0( 868)
첫째아	0.2	8.2	91.6	100.0( 806)
둘째아	0.2	9.6	90.2	100.0( 208)
셋째아이상	2.4	20.2	77.4	100.0( 42)
부인학력	-	16.7	83.3	100.0( 742)
중졸이하	-	16.7	83.3	100.0( 994)
고등학교	0.8	10.5	88.7	100.0( 80)
대학(교)	0.3	9.9	89.8	100.0( 508)
대학원이상	0.2	11.0	88.8	100.0(1,373)
취업여부*	0.2	11.0	88.8	100.0( 115)
취업	0.6	9.8	89.7	100.0( 94)
비취업	0.9	12.2	87.0	100.0( 168)
직업	-	13.8	86.2	100.0( 47)
고위전문가	-	7.7	92.3	100.0( 41)
준전문가	-	12.8	87.2	100.0( 43)
사무종사자	-	12.2	87.8	100.0( 106)
서비스종사자	-	11.6	88.4	100.0( 321)
판매종사자	-	13.2	86.8	100.0( 80)
단순노무종사자등	-	9.3	90.3	100.0( 803)
종사상지위	-	15.0	85.0	100.0( 257)
비임금근로자	0.3	9.3	90.3	100.0( 302)
상용근로자	-	9.0	91.0	100.0( 322)
임시일용근로자	-	3.7	94.5	100.0( 109)
가구소득*	0.6	10.5	88.9	100.0( 803)
60%미만	0.8	12.1	87.2	100.0( 257)
60~80%미만	-	10.6	89.4	100.0( 302)
80~100%미만	-	9.0	91.0	100.0( 322)
100~150%미만	-	3.7	94.5	100.0( 109)
150%이상	1.8	3.7	94.5	100.0( 109)

주: 1) 가구소득은 '07년 2분기 도시가구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346만8천원)기준

2) 고위전문가(고위임직·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서비스종사자 등(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임업직,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자)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6〉 2006년 출산아 양육 관련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기타	계
전체	8.7	0.4	34.9	19.6	0.2	9.3	1.6	10.8	0.5	1.6	2.2	0.9	0.1	0.3	6.6	2.5	100.0(1,892)
지역**																	
시부	8.0	0.4	34.8	20.7	0.2	9.1	1.7	11.3	0.5	1.5	2.2	0.9	0.1	0.2	6.2	2.1	100.0(1,640)
군부	12.7	0.4	35.3	11.5	-	10.3	1.2	7.5	0.4	2.4	2.0	1.2	-	0.8	9.5	4.8	100.0( 252)
연령***																	
20~24세	16.4	1.8	29.1	12.7	-	3.6	-	16.4	-	1.8	1.8	1.8	-	1.8	9.1	3.6	100.0( 55)
25~29세	10.5	0.2	39.2	15.8	0.2	7.3	1.7	10.1	-	1.3	2.1	0.9	-	0.4	7.1	3.2	100.0( 467)
30~34세	7.2	0.3	34.6	20.6	0.2	10.0	1.8	11.9	0.1	1.8	2.4	0.7	0.1	0.0	6.6	1.8	100.0( 908)
35~39세	8.3	0.5	31.9	22.9	-	10.3	1.3	9.0	1.3	1.5	2.0	1.5	0.0	0.3	6.0	3.3	100.0( 398)
40세 이상	12.5	-	29.7	20.3	-	12.5	3.1	6.3	4.7	3.1	-	-	1.6	1.6	3.1	1.6	100.0( 64)
출산순위***																	
첫째아	7.5	0.6	28.4	23.6	0.1	10.0	2.2	12.3	0.2	2.8	1.8	-	-	0.5	7.1	3.0	100.0( 878)
둘째아	8.4	0.1	39.6	17.1	0.2	9.0	1.5	10.5	0.2	0.6	2.8	1.6	0.2	0.1	5.7	2.2	100.0( 811)
셋째아	13.4	0.5	44.4	13.4	-	6.4	-	6.4	2.1	0.5	1.1	2.1	-	-	8.0	1.6	100.0( 187)
넷째아 이상	27.3	-	40.9	4.5	-	13.6	-	-	4.5	-	-	-	-	-	9.1	-	100.0( 22)

주: ①소득 부족 또는 소득불안정, ②실업이나 고용불안정, ③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④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⑤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때문에, ⑥일과 가정(자녀양육)을 모두 돌볼 수 없어서, ⑦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⑧더 많은 부부생활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자아 성취 시간 부족), ⑨나이가 많아서, 기타, ⑩육아 정보 또는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불안함, 두려움 등), ⑪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점(수면부족, 육체적 피로 등), ⑫큰아이에게 소홀해지는 것, ⑬부모의 건강이 안 좋아서, ⑭부모가 외국인이어서.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7〉 2006년 출산아 양육 관련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기 타	계
취업여부***																	
취업	3.3	0.6	21.3	32.6	0.2	27.9	0.8	3.5	-	1.2	1.2	0.2	-	-	4.3	2.9	100.0( 512)
비취업	10.7	0.3	39.9	14.8	0.1	2.3	1.9	13.5	0.6	1.8	2.5	1.2	0.1	0.4	7.4	2.3	100.0(1,385)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2.6	0.9	16.5	36.5	-	23.5	2.6	3.5	-	1.7	1.7	-	-	-	5.2	5.2	100.0( 115)
준전문가	1.1	1.1	27.7	33.0	-	26.6	-	4.3	-	1.1	1.1	-	-	-	2.1	2.1	100.0( 94)
사무종사자	0.6	-	19.5	35.5	0.6	32.5	-	3.6	-	1.2	1.8	-	-	-	1.8	3.0	100.0( 169)
서비스종사자	4.2	-	16.7	31.3	-	31.3	-	4.2	-	2.1	-	-	-	-	10.4	-	100.0( 48)
판매종사자	9.8	2.4	29.3	26.8	-	19.5	2.4	2.4	-	-	-	-	-	-	7.3	-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 등	13.3	-	24.4	17.8	-	28.9	-	2.2	-	-	-	2.2	-	-	6.7	4.4	100.0( 45)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2.8	-	29.4	23.9	-	24.8	0.9	2.8	-	1.8	0.9	0.9	-	-	9.2	2.8	100.0( 109)
상용근로자	2.2	0.3	17.1	35.5	0.3	31.2	0.6	4.0	-	0.9	1.2	-	-	-	3.1	3.4	100.0( 321)
임시일용근로자	8.6	2.5	25.9	33.3	-	19.8	1.2	2.5	-	1.2	1.2	-	-	-	2.5	1.2	100.0( 81)
가구소득***																	
60%미만	14.8	0.5	42.9	14.8	0.1	3.7	1.2	8.0	0.2	1.8	2.1	0.5	0.1	0.6	6.2	2.5	100.0( 813)
60~80%미만	8.2	-	38.1	16.3	-	8.6	1.9	11.3	1.6	1.6	1.9	1.6	-	-	6.2	2.7	100.0( 257)
80~100%미만	3.3	0.7	32.5	21.2	0.3	7.3	3.3	17.9	0.3	1.7	1.7	1.7	0.3	-	6.0	2.0	100.0( 302)
100~150%미만	0.9	-	21.4	30.7	0.3	20.4	1.5	12.1	-	1.5	3.4	0.6	-	-	5.3	1.9	100.0( 323)
150%이상	0.9	0.9	11.9	33.0	-	26.6	0.9	6.4	1.8	-	1.8	0.9	-	-	9.2	5.5	100.0( 109)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 〈부표 1-48〉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지 않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전체	40.7	38.6	16.4	4.2	0.2	100.0(1,893)
지역 **						
시부	41.9	38.5	15.6	3.8	0.1	100.0(1,637)
군부	32.8	38.4	21.6	6.8	0.4	100.0( 250)
연령 ***						
20~24세	32.7	27.3	30.9	7.3	1.8	100.0( 55)
25~29세	35.4	37.8	21.2	5.4	0.2	100.0( 466)
30~34세	41.2	41.2	14.3	3.2	-	100.0( 907)
35~39세	46.9	34.8	13.1	5.0	0.3	100.0( 397)
40세 이상	39.7	39.7	17.5	3.2	-	100.0( 63)
출산순위						
첫째아	38.1	38.8	18.2	4.6	0.3	100.0( 877)
둘째아	43.3	38.4	14.2	4.1	-	100.0( 809)
셋째아	41.6	38.4	17.3	2.7	-	100.0( 185)
넷째아이상	40.9	36.4	13.6	9.1	-	100.0( 22)
학력 †						
중졸이하	31.1	37.8	26.7	4.4	-	100.0( 45)
고등학교	36.3	40.1	18.7	4.7	0.3	100.0( 749)
대학(교)	44.4	36.8	14.8	3.9	0.1	100.0( 995)
대학원이상	37.5	46.3	11.3	5.0	-	100.0( 8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49〉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계속)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 지도않다	그렇지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취업여부						
취업	38.9	40.2	15.0	5.7	0.2	100.0( 512)
비취업	41.3	38.0	16.9	3.7	0.1	100.0(1,380)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38.3	42.6	13.9	4.3	0.9	100.0( 115)
준전문가	43.6	36.2	12.8	7.4	-	100.0( 94)
사무종사자	36.1	43.8	16.0	4.1	-	100.0( 169)
서비스종사자	47.9	37.5	10.4	4.2	-	100.0( 48)
판매종사자	36.6	43.9	17.1	2.4	-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33.3	28.9	22.2	15.6	-	100.0( 45)
무직	41.3	38.0	16.9	3.7	0.1	100.0(1,380)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44.0	31.2	18.3	6.4	-	100.0( 109)
상용근로자	36.4	43.6	14.0	5.6	0.3	100.0( 321)
임시일용근로자	42.0	38.3	14.8	4.9	-	100.0( 81)
무직	41.3	38.0	16.9	3.7	0.1	100.0(1,380)
가구소득 *						
60%미만	37.3	37.9	18.9	5.6	0.2	100.0( 809)
60~80%미만	40.9	37.0	17.9	3.9	0.4	100.0( 257)
80~100%미만	43.7	38.7	15.6	2.0	-	100.0( 302)
100~150%미만	46.4	39.3	9.9	4.3	-	100.0( 323)
150%이상	37.6	40.4	18.3	3.7	-	100.0( 109)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0〉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지도 않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전체	15.7	57.7	16.9	9.4	0.3	100.0(1,888)
지역						
시부	16.0	58.1	16.5	9.1	0.2	100.0(1,633)
군부	14.1	54.6	19.7	10.8	0.8	100.0( 249)
연령						
20~24세	15.1	54.7	18.9	11.3	-	100.0( 53)
25~29세	14.0	58.3	17.0	10.5	0.2	100.0( 465)
30~34세	16.3	56.6	18.3	8.5	0.2	100.0( 906)
35~39세	16.7	58.7	14.4	9.4	0.8	100.0( 395)
40세 이상	12.7	63.5	11.1	12.7	-	100.0( 63)
출산순위 *						
첫째아	13.0	58.8	19.0	8.9	0.2	100.0( 872)
둘째아	17.9	55.9	16.2	9.4	0.5	100.0( 808)
셋째아	18.3	61.3	10.2	10.2	-	100.0( 186)
넷째아이상	18.2	45.5	13.6	22.7	-	100.0( 22)
학력 **						
중졸이하	15.9	36.4	22.7	25.0	-	100.0( 44)
고등학교	15.5	58.2	15.9	9.9	0.4	100.0( 747)
대학(교)	16.1	59.0	16.7	7.9	0.3	100.0( 992)
대학원이상	11.3	48.8	26.3	13.8	-	100.0( 80)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1〉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계속)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 지도않다	그렇지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취업여부 ***						
취업	11.4	56.4	18.2	13.5	0.6	100.0( 511)
비취업	17.3	58.1	16.4	7.9	0.2	100.0(1,376)
직업 **						
고위임직전문가	11.4	50.0	21.9	16.7	-	100.0( 114)
준전문가	13.8	54.3	18.1	12.8	1.1	100.0( 94)
사무종사자	10.1	60.9	18.3	10.7	-	100.0(169)
서비스종사자	8.3	62.5	14.6	12.5	2.1	100.0( 48)
판매종사자	12.2	53.7	22.0	9.8	2.4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13.3	55.6	8.9	22.2	-	100.0( 45)
무직	17.3	58.1	16.4	7.9	0.2	100.0(1,376)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12.8	54.1	17.4	14.7	0.9	100.0( 109)
상용근로자	10.6	57.8	18.1	13.1	0.3	100.0( 320)
임시일용근로자	12.3	54.3	19.8	12.3	1.2	100.0( 81)
무직	17.3	58.1	16.4	7.9	0.2	100.0(1,376)
가구소득						
60%미만	15.6	57.1	17.2	9.9	0.1	100.0( 806)
60~80%미만	16.0	57.8	18.0	7.4	0.8	100.0( 256)
80~100%미만	14.2	62.3	15.2	7.9	0.3	100.0( 302)
100~150%미만	15.5	59.3	14.6	10.6	-	100.0( 322)
150%이상	16.7	50.9	19.4	12.0	0.9	100.0( 108)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 〈부표 1-52〉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지도 않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전체	31.0	56.8	9.0	3.1	0.1	100.0(1,886)
지역 *						
시부	31.9	56.6	8.3	3.0	0.1	100.0(1,631)
군부	25.3	57.8	13.3	3.6	-	100.0( 249)
연령 ***						
20~24세	22.6	49.1	24.5	3.8	-	100.0( 53)
25~29세	32.0	55.3	8.4	4.1	0.2	100.0( 463)
30~34세	32.3	57.1	8.3	2.2	0.1	100.0( 905)
35~39세	31.1	59.1	6.8	3.0	-	100.0( 396)
40세 이상	15.9	54.0	22.2	7.9	-	100.0( 63)
출산순위						
첫째아	30.2	56.3	10.0	3.3	0.2	100.0( 872)
둘째아	32.7	56.8	7.7	2.8	-	100.0( 808)
셋째아	28.8	58.7	9.8	2.7	-	100.0( 184)
넷째아이상	22.7	59.1	13.6	4.5	-	100.0( 22)
학력 **						
중졸이하	15.9	52.3	25.0	6.8	-	100.0( 44)
고등학교	27.7	59.3	9.8	3.1	0.1	100.0( 747)
대학(교)	33.8	55.5	7.8	2.8	0.1	100.0( 990)
대학원이상	33.8	56.3	8.8	1.3	-	100.0( 8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3〉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계속)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 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 지도않다	그렇지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취업여부 ***						
취업	24.7	64.5	6.1	4.7	-	100.0( 510)
비취업	33.4	53.9	10.1	2.5	0.1	100.0(1,375)
직업 **						
고위임직전문가	27.8	67.0	4.3	0.9	-	100.0( 115)
준전문가	21.5	66.7	5.4	6.5	-	100.0( 93)
사무종사자	29.8	60.7	5.4	4.2	-	100.0( 168)
서비스종사자	20.8	64.6	8.3	6.3	-	100.0( 48)
판매종사자	22.0	58.5	12.2	7.3	-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11.1	73.3	6.7	8.9	-	100.0( 45)
무직	33.4	53.9	10.1	2.5	0.1	100.0(1,375)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22.9	63.3	7.3	6.4	-	100.0( 109)
상용근로자	26.3	64.7	4.4	4.7	-	100.0( 320)
임시일용근로자	21.3	65.0	11.3	2.5	-	100.0( 80)
무직	33.4	53.9	10.1	2.5	0.1	100.0(1,375)
가구소득						
60%미만	28.6	57.4	10.5	3.4	0.1	100.0( 803)
60~80%미만	31.5	56.4	8.9	2.7	0.4	100.0( 257)
80~100%미만	35.5	55.8	7.6	1.0	-	100.0( 301)
100~150%미만	32.8	56.3	7.1	3.7	-	100.0( 323)
150%이상	28.4	61.5	5.5	4.6	-	100.0( 109)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4〉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지도 않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전체	1.9	18.8	22.6	51.9	4.8	100.0(1,890)
지역						
시부	1.9	18.5	22.6	52.0	5.0	100.0(1,636)
군부	2.0	20.6	22.2	51.6	3.6	100.0( 248)
연령						
20~24세	3.8	24.5	18.9	47.2	5.7	100.0( 53)
25~29세	1.9	18.5	23.1	51.5	5.0	100.0( 464)
30~34세	1.7	16.9	21.4	54.9	5.2	100.0( 907)
35~39세	2.0	21.2	24.2	48.9	3.8	100.0( 397)
40세 이상	3.2	28.6	30.2	33.3	4.8	100.0( 63)
출산순위 **						
첫째아	1.5	19.0	21.0	53.6	4.9	100.0( 872)
둘째아	2.2	16.4	23.7	52.8	4.8	100.0( 810)
셋째아	2.7	26.3	27.4	38.7	4.8	100.0( 186)
넷째아이상	-	31.8	4.5	63.6	-	100.0( 22)
학력 ***						
중졸이하	4.5	34.1	25.0	36.4	-	100.0( 44)
고등학교	3.1	24.4	21.7	47.5	3.3	100.0( 750)
대학(교)	1.0	14.8	23.7	54.9	5.5	100.0( 991)
대학원이상	-	6.3	17.5	65.0	11.3	100.0( 80)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5〉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계속)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 지도않다	그렇지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취업여부 ***						
취업	1.2	12.5	16.6	61.6	8.0	100.0( 511)
비취업	2.2	21.0	24.8	48.3	3.6	100.0(1,378)
직업 ***						
고위임직전문가	1.9	18.7	22.6	51.9	4.8	100.0( 115)
준전문가		13.0	74.8	7.8	100	100.0( 94)
사무종사자	1.1	10.6	16.0	59.6	12.8	100.0( 169)
서비스종사자	0.6	12.4	16.0	65.1	5.9	100.0( 48)
판매종사자	4.2	20.8	20.8	45.8	8.3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2.4	17.1	17.1	53.7	9.8	100.0( 44)
무직	2.3	25.0	25.0	43.2	4.5	100.0(1,378)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2.2	21.0	24.8	48.3	3.6	100.0( 109)
상용근로자	1.8	15.6	18.3	54.1	10.1	100.0( 321)
임시일용근로자	0.9	10.9	15.9	65.1	7.2	100.0( 80)
무직	1.3	15.0	17.5	58.8	7.5	100.0(1,378)
가구소득 ***						
60%미만	2.2	21.0	24.8	48.3	3.6	100.0( 806)
60~80%미만	2.4	22.7	23.0	49.1	2.9	100.0( 257)
80~100%미만	1.6	16.0	24.1	52.5	5.8	100.0( 301)
100~150%미만	1.7	18.9	25.2	50.2	4.0	100.0( 323)
150%이상	1.9	13.6	18.9	57.6	8.0	100.0( 109)

주: † p <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6〉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한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지도 않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전체	4.1	60.5	24.4	10.6	0.3	100.0(1,891)
지역						
시부	4.4	60.1	25.1	10.1	0.3	100.0(1,636)
군부	2.4	62.7	20.9	14.1	-	100.0( 249)
연령						
20~24세	1.9	66.7	25.9	5.6	-	100.0( 54)
25~29세	6.2	58.9	22.8	11.6	0.4	100.0( 465)
30~34세	4.0	61.2	23.7	11.0	0.1	100.0( 908)
35~39세	2.8	60.8	27.1	8.9	0.5	100.0( 395)
40세 이상	1.6	57.1	28.6	12.7	-	100.0( 63)
출산순위						
첫째아	3.9	62.1	23.6	10.1	0.3	100.0( 874)
둘째아	4.7	57.4	25.3	12.4	0.2	100.0( 809)
셋째아	2.7	65.6	25.8	5.9	-	100.0( 186)
넷째아이상	4.5	72.7	13.6	9.1	-	100.0( 22)
학력						
중졸이하	2.2	66.7	24.4	6.7	-	100.0( 45)
고등학교	4.5	61.1	24.4	9.6	0.3	100.0( 749)
대학(교)	3.7	59.8	24.8	11.4	0.3	100.0( 992)
대학원이상	3.8	61.3	22.5	12.5	-	100.0( 8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7〉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한다(계속)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 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 지도않다	그렇지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취업여부 ***						
취업	4.3	67.7	20.2	7.4	0.4	100.0( 511)
비취업	4.1	57.9	26.0	11.8	0.2	100.0(1,379)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4.3	63.5	19.1	13.0	-	100.0( 115)
준전문가	3.2	67.0	26.6	3.2	-	100.0( 94)
사무종사자	4.7	68.0	17.8	8.9	0.6	100.0( 169)
서비스종사자	6.3	68.8	16.7	6.3	2.1	100.0( 48)
판매종사자	4.9	70.7	22.0	2.4	-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2.3	75.0	20.5	2.3	-	100.0( 44)
무직	4.1	57.9	26.0	11.8	0.2	100.0(1,379)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5.6	67.6	20.4	5.6	0.9	100.0( 108)
상용근로자	3.7	69.5	17.8	8.7	0.3	100.0( 321)
임시일용근로자	4.9	60.5	29.6	4.9	-	100.0( 81)
무직	4.1	57.9	26.0	11.8	0.2	100.0(1,379)
가구소득						
60%미만	3.6	60.1	25.6	10.5	0.1	100.0( 808)
60~80%미만	5.1	61.7	22.3	10.5	0.4	100.0( 256)
80~100%미만	3.3	59.9	27.2	8.6	1.0	100.0( 302)
100~150%미만	5.0	60.9	22.4	11.8	-	100.0( 322)
150%이상	3.7	61.5	23.9	11.0	-	100.0( 109)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8〉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지도 않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전체	2.2	32.3	30.0	33.3	2.2	100.0(1,891)
지역						
시부	2.3	32.2	29.6	33.7	2.2	100.0(1,636)
군부	1.2	32.5	32.9	30.9	2.4	100.0( 249)
연령 **						
20~24세	-	20.4	38.9	38.9	1.9	100.0( 54)
25~29세	1.5	25.8	32.0	38.0	2.8	100.0( 466)
30~34세	2.1	34.3	30.2	31.7	1.8	100.0( 905)
35~39세	3.8	35.8	27.5	30.5	2.5	100.0( 397)
40세 이상	-	42.9	20.6	33.3	3.2	100.0( 63)
출산순위 ***						
첫째아	2.3	27.2	28.4	39.5	2.6	100.0( 874)
둘째아	2.1	35.2	33.1	28.0	1.6	100.0( 810)
셋째아	2.2	41.1	25.9	27.6	3.2	100.0( 185)
넷째아이상	-	54.5	13.6	31.8	-	100.0( 22)
학력 ***						
중졸이하	-	42.2	22.2	26.7	8.9	100.0( 45)
고등학교	2.4	31.8	30.3	34.2	1.3	100.0( 749)
대학(교)	2.1	32.7	31.0	32.0	2.2	100.0( 992)
대학원이상	2.5	26.3	18.8	45.0	7.5	100.0( 80)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59〉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계속)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 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 지도않다	그렇지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취업여부 ***						
취업	1.6	26.6	28.6	40.5	2.7	100.0( 511)
비취업	2.4	34.4	30.5	30.7	2.0	100.0(1,379)
직업 *						
고위임직전문가	0.9	20.9	33.9	39.1	5.2	100.0( 115)
준전문가	1.1	25.5	23.4	46.8	3.2	100.0( 94)
사무종사자	1.2	29.0	26.0	41.4	2.4	100.0( 169)
서비스종사자	2.1	25.5	31.9	40.4	-	100.0( 47)
판매종사자	4.9	39.0	26.8	29.3	-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2.2	24.4	33.3	37.8	2.2	100.0( 45)
무직	2.4	34.4	30.5	30.7	2.0	100.0(1,379)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2.8	24.1	27.8	41.7	3.7	100.0( 108)
상용근로자	1.2	27.1	27.1	41.7	2.8	100.0( 321)
임시일용근로자	1.2	28.4	35.8	33.3	1.2	100.0( 81)
무직	2.4	34.4	30.5	30.7	2.0	100.0(1,379)
가구소득 ***						
60%미만	2.7	33.4	30.8	31.8	1.4	100.0( 806)
60~80%미만	2.7	31.1	29.6	33.5	3.1	100.0( 257)
80~100%미만	1.7	35.8	32.5	29.1	1.0	100.0( 302)
100~150%미만	1.9	29.4	29.7	35.6	3.4	100.0( 323)
150%이상	-	28.4	22.9	40.4	8.3	100.0( 109)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 〈부표 1-60〉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지도 않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전체	2.5	46.0	21.0	29.3	1.2	100.0(1,888)
지역 †						
시부	2.6	45.5	20.5	30.1	1.3	100.0(1,635)
군부	2.0	49.8	24.7	23.5	-	100.0( 247)
연령 *						
20~24세	3.8	34.0	20.8	41.5	-	100.0( 53)
25~29세	1.3	41.9	20.6	34.6	1.5	100.0( 465)
30~34세	2.5	46.3	21.5	28.6	1.0	100.0( 905)
35~39세	3.8	52.3	18.9	24.0	1.0	100.0( 396)
40세 이상	1.6	46.0	28.6	20.6	3.2	100.0( 63)
출산순위 **						
첫째아	2.8	40.9	20.8	33.9	1.6	100.0( 870)
둘째아	2.1	49.0	22.0	26.2	0.7	100.0( 810)
셋째아	2.7	56.5	18.8	21.0	1.1	100.0( 186)
넷째아이상	4.5	50.0	13.6	31.8	-	100.0( 22)
학력						
중졸이하	2.2	46.7	17.8	28.9	4.4	100.0( 45)
고등학교	2.5	46.2	21.6	28.9	0.8	100.0( 747)
대학(교)	2.4	45.8	20.8	29.9	1.1	100.0( 991)
대학원이상	2.5	45.0	21.3	27.5	3.8	100.0( 80)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 〈부표 1-61〉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계속)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 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 지도않다	그렇지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취업여부						
취업	2.7	50.0	18.8	27.1	1.4	100.0( 51)0
비취업	2.4	44.5	21.9	30.1	1.1	100.0(1,377)
직업						
고위임직전문가	1.7	40.9	25.2	27.8	4.3	100.0( 115)
준전문가	1.1	53.2	21.3	24.5	-	100.0( 94)
사무종사자	4.2	54.8	14.3	26.2	0.6	100.0( 168)
서비스종사자	2.1	54.2	14.6	29.2	-	100.0( 48)
판매종사자	4.9	41.5	19.5	34.1	-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2.3	52.3	18.2	25.0	2.3	100.0( 44)
무직	2.4	44.5	21.9	30.1	1.1	100.0(1,377)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3.7	45.4	19.4	29.6	1.9	100.0( 108)
상용근로자	2.8	51.9	17.5	26.6	1.3	100.0( 320)
임시일용근로자	1.2	49.4	23.5	24.7	1.2	100.0( 81)
무직	2.4	44.5	21.9	30.1	1.1	100.0(1,377)
가구소득						
60%미만	2.6	46.3	21.5	28.9	0.7	100.0( 806)
60~80%미만	2.0	45.7	21.9	28.1	2.3	100.0( 256)
80~100%미만	2.6	46.7	22.5	27.8	0.3	100.0( 302)
100~150%미만	2.8	43.7	20.4	31.3	1.9	100.0( 323)
150%이상	2.8	50.0	15.7	28.7	2.8	100.0( 108)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 〈부표 1-62〉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지도 않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전체	4.4	49.7	19.8	25.2	0.9	100.0(1,821)
지역 †						
시부	4.3	48.6	20.6	25.5	1.0	100.0(1,573)
군부	5.4	57.0	14.5	22.7	0.4	100.0( 242)
연령 †						
20~24세	7.7	48.1	13.5	30.8	-	100.0( 52)
25~29세	3.6	48.2	20.7	25.5	2.0	100.0( 440)
30~34세	4.8	50.0	18.9	25.6	0.7	100.0( 882)
35~39세	4.5	51.2	19.8	24.5	-	100.0( 379)
40세 이상	3.2	47.6	33.3	14.3	1.6	100.0( 63)
출산순위 ***						
첫째아	4.4	44.3	20.3	29.6	1.4	100.0( 838)
둘째아	4.3	54.5	19.4	21.4	0.4	100.0( 782)
셋째아	5.0	55.6	20.0	18.9	0.6	100.0( 180)
넷째아이상	4.8	38.1	14.3	42.9	-	100.0( 21)
학력						
중졸이하	6.8	56.8	18.2	18.2	-	100.0( 44)
고등학교	3.9	52.1	19.9	23.2	0.8	100.0( 714)
대학(교)	4.5	48.6	20.0	26.1	0.8	100.0( 963)
대학원이상	6.5	35.1	19.5	36.4	2.6	100.0( 77)

주: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 p &lt;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표 1-63〉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계속)

(단위: 명, %)

구 분	매우그렇 다	그렇다	그렇지도 그렇지않 지도않다	그렇지않 다	전혀그렇 지않다	계
취업여부 ***						
취업	2.7	33.1	23.1	39.1	2.0	100.0( 511)
비취업	5.1	56.1	18.6	19.7	0.5	100.0(1,309)
직업 ***						
고위임직전문가	1.7	18.3	31.3	44.3	4.3	100.0( 115)
준전문가	4.3	38.3	17.0	39.4	1.1	100.0( 94)
사무종사자	1.8	39.1	20.1	37.3	1.8	100.0( 169)
서비스종사자	2.1	31.3	29.2	37.5	-	100.0( 48)
판매종사자	4.9	36.6	19.5	39.0	-	100.0( 41)
단순노무종사자등	4.5	36.4	22.7	34.1	2.3	100.0( 44)
무직	5.1	56.1	18.6	19.7	0.5	100.0(1,309)
종사상지위 ***						
비임금근로자	4.6	34.3	19.4	38.9	2.8	100.0( 108)
상용근로자	2.2	31.2	23.4	41.1	2.2	100.0( 321)
임시일용근로자	2.5	38.3	27.2	32.1	-	100.0( 81)
무직	5.1	56.1	18.6	19.7	0.5	100.0(1,309)
가구소득 ***						
60%미만	4.3	54.2	18.8	22.4	0.4	100.0( 768)
60~80%미만	5.2	55.2	18.0	20.4	1.2	100.0( 250)
80~100%미만	5.6	49.3	21.9	22.6	0.7	100.0( 288)
100~150%미만	4.1	41.1	19.9	32.6	2.2	100.0( 316)
150%이상	1.9	31.5	23.1	42.6	0.9	100.0( 108)

주: † p &lt;0.1, \* p &lt;0.05, \*\* p &lt;0.01, \*\*\* p &lt;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6년 전국 출산동향조사」의 결과임.

〔부록 2〕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표

부록 2-1 (일반가구용) P.311~318

부록 2-2 (2006년 출산가구용) P.319~326

부록	312	부록	313	부록	314	부록	315	부록	316	부록	317	부록	318
부록	319	부록	320	부록	321	부록	322	부록	323	부록	324	부록	325
부록	326	부록	327	부록	328	부록	329	부록	330	부록	331	부록	332